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120-01

■ 정책보고서 2013-56

2013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김승권 · 김태완 · 이소라

【책임연구자】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매뉴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가족변화 관련 복지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공저)

【공동연구진】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소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발간사 <<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며, 효과성 및 효율성이 높은 복지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이라 하겠다.

2006~2008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였고, 2009년부터는 정부의 업무조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시도 합동평가에 통합되면서 합동평가 자료 중 복지 분야 자료를 별도로 분석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간접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말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동안 복지종합평가의 평가지표, 평가척도는 많은 변화를 하였다. 평가방식이 간접방식으로 변화하면서 평가지표가 많이 간소화되어 복지영역별 지표를 충분히 개발, 활용할 수 없어 평가결과에 대한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그렇지만 복지종합평가와는 별도로 지역복지실행계획, 복지행정(민관협력 등), 조례제정 등에 대한 별도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복지정책의 양적 및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안전행정부 및 보건복지부 관계 공무원과 시·군·구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린다. 본 연구결과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평가자료의 검증 및 자료처리에 참여한 송은영 연구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5
제2장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7· 5
제1절 국내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9· 5
제2절 국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8· 6
제3장 2013년 복지종합평가 결과 종합분석	3· 7
제1절 평가개요	5
제2절 2013년 주요 평가 결과	67
제3절 2013년 복지종합평가 결과의 시사점	3· 8
제4장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결과 분석	5· 8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78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98
제5장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평가결과 분석	5· 9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79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99
제6장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701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0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

제7장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평가결과 분석	721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2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1
제8장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141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1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4
제9장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551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1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1
제10장 아동보호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561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1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1
제11장 보육기반 조성 평가결과 분석	771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1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1
제12장 시·도별 주요 복지통계	11
제1절 복지기반 조성	11
제2절 기초생활보장	11
제3절 복지서비스	11

제13장 시·군·구별 주요 복지통계	Ⅱ
제1절 복지기반 조성	Ⅲ
제2절 기초생활보장	Ⅴ
제3절 복지서비스	Ⅶ
 제14장 복지정책평가 8개년 성과와 정책제언	744
제1절 복지정책평가 8개년 성과	94
제2절 정책제언	48

표 목차

〈표 2-1〉 2006~2012년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 분야의 평가지표	9..... 5
〈표 2-2〉 2006~2012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분야의 평가지표	0..... 6
〈표 2-3〉 2006~2012년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분야의 평가지표	2..... 6
〈표 2-4〉 2006~2012년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분야의 평가지표	3..... 6
〈표 2-5〉 2006~2012년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분야의 평가지표	4..... 6
〈표 2-6〉 2006~2012년 노인 복지서비스 분야의 평가지표	5..... 6
〈표 2-7〉 2006~2012년 장애인 복지서비스 분야의 평가지표	6..... 6
〈표 2-8〉 2006~2012년 아동보호서비스 분야의 평가지표	7..... 6
〈표 2-9〉 2006~2012년 보육기반 조성 분야의 평가지표	8..... 6
<표 2-10> MPMP 세부지표	9..... 6
<표 2-11> 보건복지부 성과측정	1..... 7
〈표 3-1〉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의 틀	5..... 7
〈표 3-2〉 2013년 복지종합평가의 전국 평균 점수	6..... 7
〈표 3-3〉 2013년 복지종합평가 총점	7..... 7
<표 3-4> 2013년 복지종합평가 지역별 평균 점수	7..... 7
〈표 3-5〉 2006~2013년 지역별 복지종합평가의 최고 및 최저(100점 기준)	8..... 7
〈표 3-6〉 2013년 16개 평가그룹별 복지종합평가 총점의 평균 및 격차	0..... 8
〈표 3-7〉 2013년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	0..... 8
<표 3-8> 2013년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의 3대 지역 격차(100점 기준 환산)	1..... 8
〈표 3-9〉 2013년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의 16개 그룹 간 격차	2..... 8
〈표 3-10〉 2013년 평가총점, 인구수, 재정자립도 간의 상관관계	3..... 8
〈표 4-1〉 2012~2013년 지역사회서비스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7..... 8
〈표 4-2〉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의 평가점수	8..... 8
〈표 4-3〉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9..... 8
〈표 4-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 평가결과	0..... 9
〈표 4-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선택형, 개발형) 기초분석	1..... 9
〈표 4-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의 지역격차	1..... 9
〈표 4-7〉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	2..... 9
〈표 4-8〉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기초분석	3..... 9
〈표 4-9〉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의 지역격차	4..... 9

〈표 5-1〉 2012~2013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7..... 9
<표 5-2〉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의 평가점수	8..... 9
〈표 5-3〉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9..... 9
〈표 5-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평가결과	0...0... 1
〈표 5-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기초분석	0...0... 1
<표 5-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의 지역격차	0...0... 1
〈표 5-7〉 기부식품 등 증가율 평가결과	1·0· 1
〈표 5-8〉 기부식품 등 증가율 기초분석	2·0· 1
〈표 5-9〉 기부식품 등 증가율의 지역격차	2·0· 1
〈표 5-10〉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평가결과	3·0· 1
〈표 5-11〉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초분석	4·0· 1
〈표 5-12〉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의 지역격차	5·0· 1
〈표 6-1〉 2012~2013년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적절성」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9...0... 1
〈표 6-2〉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의 평가점수	0...1... 1
〈표 6-3〉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1...1... 1
〈표 6-4〉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평가결과	4...1... 1
〈표 6-5〉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기초분석	5...1... 1
〈표 6-6〉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의 지역격차	5...1... 1
〈표 6-7〉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평가결과	6...1... 1
〈표 6-8〉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기초분석	7...1... 1
〈표 6-9〉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의 지역격차	7...1... 1
〈표 6-10〉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평가결과	9...1... 1
〈표 6-1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기초분석	9...1... 1
〈표 6-1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실적의 지역격차	0...2... 1
〈표 6-13〉 수급자 관리실적 평가결과	1...2... 1
〈표 6-14〉 수급자 관리실적 기초분석	1...2... 1
〈표 6-15〉 수급자 관리실적의 지역격차	2...2... 1
〈표 6-16〉 긴급복지 지원실적 평가결과	3...2... 1
〈표 6-17〉 긴급복지 지원 실적 기초분석	4...2... 1
〈표 6-18〉 긴급복지 지원실적의 지역격차	5...2... 1
〈표 7-1〉 2012~2013년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9...2... 1

〈표 7-2〉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의 평가점수	0·3· 1
〈표 7-3〉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1·3· 1
〈표 7-4〉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평가결과	2·3· 1
〈표 7-5〉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기초분석	3·3· 1
〈표 7-6〉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지역격차	4·3· 1
〈표 7-7〉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평가결과	5·3· 1
〈표 7-8〉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기초분석	6·3· 1
〈표 7-9〉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의 지역격차	6·3· 1
〈표 7-10〉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평가결과	8·3· 1
〈표 7-11〉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기초분석	9·3· 1
〈표 7-12〉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의 지역격차	9·3· 1
〈표 8-1〉 2012~2013년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4·4· 1
〈표 8-2〉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의 평가점수	4·4· 1
〈표 8-3〉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5·4· 1
〈표 8-4〉 전체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7·4· 1
〈표 8-5〉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기초분석	8·4· 1
〈표 8-6〉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지역격차	8·4· 1
〈표 8-7〉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평가결과	0·5· 1
〈표 8-8〉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기초분석	0·5· 1
〈표 8-9〉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지역격차	1·5· 1
〈표 8-10〉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평가결과	2·5· 1
〈표 8-11〉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기초분석	3·5· 1
〈표 8-12〉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의 지역격차	3·5· 1
〈표 9-1〉 2012~2013년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7·5· 1
〈표 9-2〉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평가점수	8·5· 1
〈표 9-3〉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8·5· 1
〈표 9-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평가결과	0·6· 1
〈표 9-5〉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기초분석	0·6· 1
〈표 9-6〉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의 지역격차	1·6· 1
〈표 9-7〉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평가결과	2·6· 1
〈표 9-8〉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기초분석	2·6· 1

〈표 9-9〉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의 지역격차	3·6·1
〈표 10-1〉 2011~2012년 아동복지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7·6·1
〈표 10-2〉 「아동보호 서비스」의 평가점수	8·6·1
〈표 10-3〉 「아동보호 서비스」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9·6·1
〈표 10-4〉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평가결과	0·7·1
〈표 10-5〉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기초분석	0·7·1
〈표 10-6〉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의 지역격차	1·7·1
〈표 10-7〉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평가결과	2·7·1
〈표 10-8〉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기초분석	2·7·1
〈표 10-9〉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 지원금 증감률의 지역격차	3·7·1
〈표 10-10〉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4·7·1
〈표 10-11〉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기초분석	4·7·1
〈표 10-12〉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의 지역격차	5·7·1
〈표 11-1〉 2011~2012년 보육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9·7·1
〈표 11-2〉 보육기반 조성의 평가점수	0·8·1
〈표 11-3〉 보육기반 조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0·8·1
〈표 11-4〉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평가결과	1·8·1
〈표 11-5〉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기초분석	2·8·1
〈표 11-6〉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의 지역격차	3·8·1
〈표 11-7〉 취약보육 실시율 평가결과	4·8·1
〈표 11-8〉 취약보육 실시율 기초분석	5·8·1
〈표 11-9〉 취약보육 실시율의 지역격차	5·8·1
〈표 12-1〉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지역선택형+지역개발형)	9·8·1
〈표 12-2〉 시·도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0·9·1
〈표 12-3〉 시·도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1·9·1
〈표 12-4〉 시·도별 기부식품 등 증가율	2·9·1
〈표 12-5〉 시·도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3·9·1
〈표 12-6〉 시·도별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4·9·1
〈표 12-7〉 시·도별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4·9·1
〈표 12-8〉 시·도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5·9·1
〈표 12-9〉 시·도별 수급자 관리실적	6·9·1

〈표 12-10〉 시·도별 긴급복지 지원실적	7·9 1
〈표 12-11〉 시·도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8·····9···· 1
〈표 12-12〉 시·도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수급자의 취·창업률	8·····9···· 1
〈표 12-13〉 시·도별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	9·····9···· 1
〈표 12-14〉 시·도별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9·····9···· 2
〈표 12-15〉 시·도별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2·····9···· 2
〈표 12-16〉 시·도별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3·····9···· 2
〈표 12-17〉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개정법 시설·인력 기준 충족률	4·····9···· 2
〈표 12-18〉 시·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4·····9···· 2
〈표 12-19〉 시·도별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5·····9···· 2
〈표 12-20〉 시·도별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6·····9···· 2
〈표 12-21〉 시·도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7·····9···· 2
〈표 12-22〉 시·도별 요보호아동 중 가정보호비율	7·····9···· 2
〈표 12-23〉 시·도별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8·····9···· 2
〈표 12-24〉 시·도별 취약보육 실시율	9·9 2
〈표 13-1-1〉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3·····1···· 2
〈표 13-1-2〉 부산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4·····1···· 2
〈표 13-1-3〉 대구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5·····1···· 2
〈표 13-1-4〉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5·····1···· 2
〈표 13-1-5〉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6·····1···· 2
〈표 13-1-6〉 대전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6·····1···· 2
〈표 13-1-7〉 울산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6·····1···· 2
〈표 13-1-8〉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7·····1···· 2
〈표 13-1-9〉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8·····1···· 2
〈표 13-1-10〉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8·····1···· 2
〈표 13-1-11〉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9·····1···· 2
〈표 13-1-12〉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9·····2···· 2
〈표 13-1-13〉 전라남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9·····2···· 2
〈표 13-1-14〉 경상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1·····2···· 2
〈표 13-1-15〉 경상남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2·····2···· 2
〈표 13-1-1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2·····2···· 2

〈표 13-1-17〉	서울특별시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3·2·2
〈표 13-1-18〉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4·2·2
〈표 13-1-19〉	대구광역시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5·2·2
〈표 13-1-20〉	인천광역시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5·2·2
〈표 13-1-21〉	광주광역시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6·2·2
〈표 13-1-22〉	대전광역시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6·2·2
〈표 13-1-23〉	울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7·2·2
〈표 13-1-24〉	경기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7·2·2
〈표 13-1-25〉	강원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8·2·2
〈표 13-1-26〉	충청북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9·2·2
〈표 13-1-27〉	충청남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0·3·2
〈표 13-1-28〉	전라북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1·3·2
〈표 13-1-29〉	전라남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1·3·2
〈표 13-1-30〉	경상북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2·3·2
〈표 13-1-31〉	경상남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3·3·2
〈표 13-1-3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4·3·2
〈표 13-1-33〉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4·3·2
〈표 13-1-34〉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5·3·2
〈표 13-1-35〉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6·3·2
〈표 13-1-3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6·3·2
〈표 13-1-37〉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7·3·2
〈표 13-1-38〉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7·3·2
〈표 13-1-39〉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7·3·2
〈표 13-1-40〉	경기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8·3·2
〈표 13-1-41〉	강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9·3·2
〈표 13-1-42〉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9·3·2
〈표 13-1-43〉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0·4·2
〈표 13-1-44〉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0·4·2
〈표 13-1-45〉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1·4·2
〈표 13-1-46〉	경상북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2·4·2
〈표 13-1-47〉	경상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2·4·2

〈표 13-1-4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3·4·2
〈표 13-1-49〉 서울특별시 기부식품 등 증가율	4·4·2
〈표 13-1-50〉 부산광역시 기부식품 등 증가율	4·4·2
〈표 13-1-51〉 대구광역시 기부식품 등 증가율	5·4·2
〈표 13-1-52〉 인천광역시 기부식품 등 증가율	6·4·2
〈표 13-1-53〉 광주광역시 기부식품 등 증가율	6·4·2
〈표 13-1-54〉 대전광역시 기부식품 등 증가율	7·4·2
〈표 13-1-55〉 울산광역시 기부식품 등 증가율	7·4·2
〈표 13-1-56〉 경기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7·4·2
〈표 13-1-57〉 강원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8·4·2
〈표 13-1-58〉 충청북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9·4·2
〈표 13-1-59〉 충청남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0·5·2
〈표 13-1-60〉 전라북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0·5·2
〈표 13-1-61〉 전라남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1·5·2
〈표 13-1-62〉 경상북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2·5·2
〈표 13-1-63〉 경상남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3·5·2
〈표 13-1-64〉 제주특별자치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3·5·2
〈표 13-1-65〉 서울특별시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4·5·2
〈표 13-1-66〉 부산광역시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5·5·2
〈표 13-1-67〉 대구광역시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5·5·2
〈표 13-1-68〉 인천광역시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6·5·2
〈표 13-1-69〉 광주광역시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7·5·2
〈표 13-1-70〉 대전광역시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7·5·2
〈표 13-1-71〉 울산광역시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8·5·2
〈표 13-1-72〉 경기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8·5·2
〈표 13-1-73〉 강원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9·5·2
〈표 13-1-74〉 충청북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0·6·2
〈표 13-1-75〉 충청남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1·6·2
〈표 13-1-76〉 전라북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1·6·2
〈표 13-1-77〉 전라남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2·6·2
〈표 13-1-78〉 경상북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3·6·2

〈표 13-1-79〉 경상남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4·6·2
〈표 13-1-80〉 제주특별자치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5·6·2
〈표 13-2-1〉 서울특별시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6·6·2
〈표 13-2-2〉 부산광역시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7·6·2
〈표 13-2-3〉 대구광역시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7·6·2
〈표 13-2-4〉 인천광역시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8·6·2
〈표 13-2-5〉 광주광역시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8·6·2
〈표 13-2-6〉 대전광역시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9·6·2
〈표 13-2-7〉 울산광역시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9·6·2
〈표 13-2-8〉 경기도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0·7·2
〈표 13-2-9〉 강원도의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1·7·2
〈표 13-2-10〉 충청북도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1·7·2
〈표 13-2-11〉 충청남도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2·7·2
〈표 13-2-12〉 전라북도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3·7·2
〈표 13-2-13〉 전라남도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3·7·2
〈표 13-2-14〉 경상북도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4·7·2
〈표 13-2-15〉 경상남도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5·7·2
〈표 13-2-16〉 제주특별자치도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5·7·2
〈표 13-2-17〉 서울특별시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6·7·2
〈표 13-2-18〉 부산광역시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7·7·2
〈표 13-2-19〉 대구광역시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7·7·2
〈표 13-2-20〉 인천광역시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8·7·2
〈표 13-2-21〉 광주광역시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8·7·2
〈표 13-2-22〉 대전광역시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9·7·2
〈표 13-2-23〉 울산광역시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9·7·2
〈표 13-2-24〉 경기도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9·7·2
〈표 13-2-25〉 강원도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0·8·2
〈표 13-2-26〉 충청북도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1·8·2
〈표 13-2-27〉 충청남도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2·8·2
〈표 13-2-28〉 전라북도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2·8·2
〈표 13-2-29〉 전라남도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3·8·2

〈표 13-2-30〉	경상북도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4·8·2
〈표 13-2-31〉	경상남도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5·8·2
〈표 13-2-32〉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5·8·2
〈표 13-2-33〉	서울특별시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6·8·2
〈표 13-2-34〉	부산광역시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7·8·2
〈표 13-2-35〉	대구광역시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7·8·2
〈표 13-2-36〉	인천광역시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8·8·2
〈표 13-2-37〉	광주광역시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8·8·2
〈표 13-2-38〉	대전광역시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8·8·2
〈표 13-2-39〉	울산광역시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9·8·2
〈표 13-2-40〉	경기도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9·8·2
〈표 13-2-41〉	강원도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0·9·2
〈표 13-2-42〉	충청북도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1·9·2
〈표 13-2-43〉	충청남도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1·9·2
〈표 13-2-44〉	전라북도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2·9·2
〈표 13-2-45〉	전라남도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3·9·2
〈표 13-2-46〉	경상북도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3·9·2
〈표 13-2-47〉	경상남도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4·9·2
〈표 13-2-48〉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5·9·2
〈표 13-2-49〉	서울특별시의 수급자 관리실적	5·9·2
〈표 13-2-50〉	부산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	6·9·2
〈표 13-2-51〉	대구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	7·9·2
〈표 13-2-52〉	인천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	7·9·2
〈표 13-2-53〉	광주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	7·9·2
〈표 13-2-54〉	대전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	8·9·2
〈표 13-2-55〉	울산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	8·9·2
〈표 13-2-56〉	경기도의 수급자 관리실적	9·9·2
〈표 13-2-57〉	강원도의 수급자 관리실적	9·9·2
〈표 13-2-58〉	충청북도의 수급자 관리실적	0·0·3
〈표 13-2-59〉	충청남도의 수급자 관리실적	1·0·3
〈표 13-2-60〉	전라북도의 수급자 관리실적	1·0·3

〈표 13-2-61〉	전라남도의 수급자 관리실적	2·0·3
〈표 13-2-62〉	경상북도의 수급자 관리실적	2·0·3
〈표 13-2-63〉	경상남도의 수급자 관리실적	3·0·3
〈표 13-2-64〉	제주특별자치도의 수급자 관리실적	4·0·3
〈표 13-2-65〉	서울특별시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4·0·3
〈표 13-2-66〉	부산광역시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5·0·3
〈표 13-2-67〉	대구광역시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6·0·3
〈표 13-2-68〉	인천광역시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6·0·3
〈표 13-2-69〉	광주광역시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7·0·3
〈표 13-2-70〉	대전광역시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7·0·3
〈표 13-2-71〉	울산광역시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7·0·3
〈표 13-2-72〉	경기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8·0·3
〈표 13-2-73〉	강원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9·0·3
〈표 13-2-74〉	충청북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9·0·3
〈표 13-2-75〉	충청남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0·1·3
〈표 13-2-76〉	전라북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0·1·3
〈표 13-2-77〉	전라남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1·1·3
〈표 13-2-78〉	경상북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2·1·3
〈표 13-2-79〉	경상남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2·1·3
〈표 13-2-80〉	제주특별자치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3·1·3
〈표 13-2-81〉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3·1·3
〈표 13-2-82〉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4·1·3
〈표 13-2-83〉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5·1·3
〈표 13-2-84〉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6·1·3
〈표 13-2-85〉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6·1·3
〈표 13-2-86〉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7·1·3
〈표 13-2-87〉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7·1·3
〈표 13-2-88〉	경기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8·1·3
〈표 13-2-89〉	강원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9·1·3
〈표 13-2-90〉	충청북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9·1·3
〈표 13-2-91〉	충청남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0·2·3

〈표 13-2-92〉	전라북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1...2... 3
〈표 13-2-93〉	전라남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1...2... 3
〈표 13-2-94〉	경상북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2...2... 3
〈표 13-2-95〉	경상남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3...2... 3
〈표 13-2-96〉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4...2... 3
〈표 13-2-97〉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4...2... 3
〈표 13-2-98〉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5...2... 3
〈표 13-2-99〉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6...2... 3
〈표 13-2-100〉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6...2... 3
〈표 13-2-101〉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7...2... 3
〈표 13-2-102〉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7...2... 3
〈표 13-2-103〉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7...2... 3
〈표 13-2-104〉	경기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8...2... 3
〈표 13-2-105〉	강원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9...2... 3
〈표 13-2-106〉	충청북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9...2... 3
〈표 13-2-107〉	충청남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0...3... 3
〈표 13-2-108〉	전라북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1...3... 3
〈표 13-2-109〉	전라남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1...3... 3
〈표 13-2-110〉	경상북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2...3... 3
〈표 13-2-111〉	경상남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3...3... 3
〈표 13-2-112〉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3...3... 3
〈표 13-2-113〉	서울특별시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4...3... 3
〈표 13-2-114〉	부산광역시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5...3... 3
〈표 13-2-115〉	대구광역시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5...3... 3
〈표 13-2-116〉	인천광역시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6...3... 3
〈표 13-2-117〉	광주광역시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6...3... 3
〈표 13-2-118〉	대전광역시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7...3... 3
〈표 13-2-119〉	울산광역시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7...3... 3
〈표 13-2-120〉	경기도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7...3... 3
〈표 13-2-121〉	강원도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8...3... 3
〈표 13-2-122〉	충청북도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9...3... 3

〈표 13-2-123〉 충청남도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0	4	3
〈표 13-2-124〉 전라북도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0	4	3
〈표 13-2-125〉 전라남도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1	4	3
〈표 13-2-126〉 경상북도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2	4	3
〈표 13-2-127〉 경상남도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2	4	3
〈표 13-2-128〉 제주특별자치도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3	4	3
〈표 13-2-129〉 서울특별시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3	4	3
〈표 13-2-130〉 부산광역시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4	4	3
〈표 13-2-131〉 대구광역시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5	4	3
〈표 13-2-132〉 인천광역시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6	4	3
〈표 13-2-133〉 광주광역시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6	4	3
〈표 13-2-134〉 대전광역시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6	4	3
〈표 13-2-135〉 울산광역시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7	4	3
〈표 13-2-136〉 경기도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7	4	3
〈표 13-2-137〉 강원도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8	4	3
〈표 13-2-138〉 충청북도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9	4	3
〈표 13-2-139〉 충청남도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0	5	3
〈표 13-2-140〉 전라북도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0	5	3
〈표 13-2-141〉 전라남도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1	5	3
〈표 13-2-142〉 경상북도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2	5	3
〈표 13-2-143〉 경상남도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3	5	3
〈표 13-2-14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3	5	3
〈표 13-2-145〉 서울특별시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4	5	3
〈표 13-2-146〉 부산광역시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5	5	3
〈표 13-2-147〉 대구광역시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5	5	3
〈표 13-2-148〉 인천광역시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6	5	3
〈표 13-2-149〉 광주광역시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7	5	3
〈표 13-2-150〉 대전광역시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7	5	3
〈표 13-2-151〉 울산광역시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8	5	3
〈표 13-2-152〉 경기도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8	5	3
〈표 13-2-153〉 강원도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9	5	3

〈표 13-2-154〉 충청북도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0	6	3
〈표 13-2-155〉 충청남도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1	6	3
〈표 13-2-156〉 전라북도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2	6	3
〈표 13-2-157〉 전라남도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2	6	3
〈표 13-2-158〉 경상북도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3	6	3
〈표 13-2-159〉 경상남도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4	6	3
〈표 13-2-160〉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5	6	3
〈표 13-2-161〉 서울특별시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6	6	3
〈표 13-2-162〉 부산광역시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7	6	3
〈표 13-2-163〉 대구광역시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7	6	3
〈표 13-2-164〉 인천광역시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8	6	3
〈표 13-2-165〉 광주광역시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8	6	3
〈표 13-2-166〉 대전광역시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9	6	3
〈표 13-2-167〉 울산광역시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9	6	3
〈표 13-2-168〉 경기도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0	7	3
〈표 13-2-169〉 강원도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1	7	3
〈표 13-2-170〉 충청북도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1	7	3
〈표 13-2-171〉 충청남도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2	7	3
〈표 13-2-172〉 전라북도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3	7	3
〈표 13-2-173〉 전라남도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3	7	3
〈표 13-2-174〉 경상북도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4	7	3
〈표 13-2-175〉 경상남도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5	7	3
〈표 13-2-176〉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6	7	3
〈표 13-3-1〉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6	7	3
〈표 13-3-2〉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7	7	3
〈표 13-3-3〉 대구광역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8	7	3
〈표 13-3-4〉 인천광역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8	7	3
〈표 13-3-5〉 광주광역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9	7	3
〈표 13-3-6〉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9	7	3
〈표 13-3-7〉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0	8	3
〈표 13-3-8〉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0	8	3

〈표 13-3-9〉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1·8·3
〈표 13-3-10〉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2·8·3
〈표 13-3-11〉 충청남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3·8·3
〈표 13-3-12〉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3·8·3
〈표 13-3-13〉 전라남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4·8·3
〈표 13-3-14〉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4·8·3
〈표 13-3-15〉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5·8·3
〈표 13-3-16〉 제주특별자치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6·8·3
〈표 13-3-17〉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6·8·3
〈표 13-3-18〉 부산광역시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7·8·3
〈표 13-3-19〉 대구광역시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8·8·3
〈표 13-3-20〉 인천광역시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8·8·3
〈표 13-3-21〉 광주광역시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9·8·3
〈표 13-3-22〉 대전광역시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9·8·3
〈표 13-3-23〉 울산광역시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9·8·3
〈표 13-3-24〉 경기도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0·9·3
〈표 13-3-25〉 강원도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1·9·3
〈표 13-3-26〉 충청북도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1·9·3
〈표 13-3-27〉 충청남도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2·9·3
〈표 13-3-28〉 전라북도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2·9·3
〈표 13-3-29〉 전라남도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3·9·3
〈표 13-3-30〉 경상북도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3·9·3
〈표 13-3-31〉 경상남도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4·9·3
〈표 13-3-32〉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5·9·3
〈표 13-3-33〉 서울특별시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5·9·3
〈표 13-3-34〉 부산광역시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6·9·3
〈표 13-3-35〉 대구광역시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7·9·3
〈표 13-3-36〉 인천광역시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7·9·3
〈표 13-3-37〉 광주광역시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7·9·3
〈표 13-3-38〉 대전광역시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8·9·3
〈표 13-3-39〉 울산광역시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8·9·3

〈표 13-3-40〉	경기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9·9·3
〈표 13-3-41〉	강원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9·9·3
〈표 13-3-42〉	충청북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0·0·4
〈표 13-3-43〉	충청남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1·0·4
〈표 13-3-44〉	전라북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1·0·4
〈표 13-3-45〉	전라남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2·0·4
〈표 13-3-46〉	경상북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2·0·4
〈표 13-3-47〉	경상남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3·0·4
〈표 13-3-48〉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4·0·4
〈표 13-3-49〉	서울특별시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4·0·4
〈표 13-3-50〉	부산광역시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5·0·4
〈표 13-3-51〉	대구광역시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6·0·4
〈표 13-3-52〉	인천광역시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6·0·4
〈표 13-3-53〉	광주광역시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7·0·4
〈표 13-3-54〉	대전광역시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7·0·4
〈표 13-3-55〉	울산광역시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8·0·4
〈표 13-3-56〉	경기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8·0·4
〈표 13-3-57〉	강원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9·0·4
〈표 13-3-58〉	충청북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0·1·4
〈표 13-3-59〉	충청남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1·1·4
〈표 13-3-60〉	전라북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1·1·4
〈표 13-3-61〉	전라남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2·1·4
〈표 13-3-62〉	경상북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3·1·4
〈표 13-3-63〉	경상남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4·1·4
〈표 13-3-64〉	제주특별자치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5·1·4
〈표 13-3-65〉	서울특별시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5·1·4
〈표 13-3-66〉	부산광역시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6·1·4
〈표 13-3-67〉	대구광역시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7·1·4
〈표 13-3-68〉	인천광역시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7·1·4
〈표 13-3-69〉	광주광역시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8·1·4
〈표 13-3-70〉	대전광역시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8·1·4

〈표 13-3-71〉	울산광역시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8·1·4
〈표 13-3-72〉	경기도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9·1·4
〈표 13-3-73〉	강원도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0·2·4
〈표 13-3-74〉	충청북도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0·2·4
〈표 13-3-75〉	충청남도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1·2·4
〈표 13-3-76〉	전라북도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1·2·4
〈표 13-3-77〉	전라남도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2·2·4
〈표 13-3-78〉	경상북도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3·2·4
〈표 13-3-79〉	경상남도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4·2·4
〈표 13-3-80〉	제주특별자치도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4·2·4
〈표 13-3-81〉	서울특별시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5·2·4
〈표 13-3-82〉	부산광역시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6·2·4
〈표 13-3-83〉	대구광역시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6·2·4
〈표 13-3-84〉	인천광역시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7·2·4
〈표 13-3-85〉	광주광역시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7·2·4
〈표 13-3-86〉	대전광역시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7·2·4
〈표 13-3-87〉	울산광역시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8·2·4
〈표 13-3-88〉	경기도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8·2·4
〈표 13-3-89〉	강원도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9·2·4
〈표 13-3-90〉	충청북도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0·3·4
〈표 13-3-91〉	충청남도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0·3·4
〈표 13-3-92〉	전라북도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1·3·4
〈표 13-3-93〉	전라남도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1·3·4
〈표 13-3-94〉	경상북도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2·3·4
〈표 13-3-95〉	경상남도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3·3·4
〈표 13-3-96〉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3·3·4
〈표 13-3-97〉	서울특별시의 취약보육 실시율	4·3·4
〈표 13-3-98〉	부산광역시의 취약보육 실시율	5·3·4
〈표 13-3-99〉	대구광역시의 취약보육 실시율	5·3·4
〈표 13-3-100〉	인천광역시의 취약보육 실시율	6·3·4
〈표 13-3-101〉	광주광역시의 취약보육 실시율	6·3·4

〈표 13-3-102〉 대전광역시의 취약보육 실시율	7·3·4
〈표 13-3-103〉 울산광역시의 취약보육 실시율	8·3·4
〈표 13-3-104〉 경기도의 취약보육 실시율	8·3·4
〈표 13-3-105〉 강원도의 취약보육 실시율	9·3·4
〈표 13-3-106〉 충청북도의 취약보육 실시율	0·4·4
〈표 13-3-107〉 충청남도의 취약보육 실시율	1·4·4
〈표 13-3-108〉 전라북도의 취약보육 실시율	1·4·4
〈표 13-3-109〉 전라남도의 취약보육 실시율	2·4·4
〈표 13-3-110〉 경상북도의 취약보육 실시율	3·4·4
〈표 13-3-111〉 경상남도의 취약보육 실시율	4·4·4
〈표 13-3-112〉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약보육 실시율	5·4·4
〈표 14-1〉 지자체간 복지종합평가결과의 격차	9·4·4
〈표 14-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선택형+지역개발형)의 배정액, 집행액, 집행률	0·5·4
〈표 14-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	0·5·4
〈표 14-4〉 기부식품 총액 및 이용실적	1·5·4
〈표 14-5〉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수 및 발굴실적	1·5·4
〈표 14-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실적	2·5·4
〈표 14-7〉 긴급복지지원실적 결정가구수	2·5·4
〈표 14-8〉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	3·5·4
〈표 14-9〉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취·창업인원 및 취·창업률	3·5·4
〈표 14-10〉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자수 및 탈수급률	4·5·4
〈표 14-11〉 전체 수급권자 및 사례관리대상자의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5·5·4
〈표 14-12〉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5·5·4
〈표 14-13〉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6·5·4
〈표 14-14〉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6·5·4
〈표 14-15〉 평가인증 영유아보육시설	7·5·4
〈표 14-16〉 취약보육시설 이용 아동	7·5·4

그림 목차

[그림 3-1] 복지종합평가의 전국 평균 점수 변화추이 : 06~13년	6..... 7
[그림 3-2] 2006~2013년 지역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1,000점 기준 환산)	9..... 7
[그림 14-1]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방식	9·5·4

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

- 최근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또한 강조
 - 이러한 시점에서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기획능력 및 추진 역량 향상이 필요
 -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통한 지역사회 특성 파악 및 주민욕구가 적극 반영된 복지정책 수립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복지정책평가결과 및 성과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정책 활성화 및 개선임.
 -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정부합동평가(시·도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관심유도
 - 향후 효율적인 평가방향 설정

□ 연구내용

- 2013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분석은 8개의 평가지표에 따른 세부지표 22개에 대한 16개 광역 시·도(세종특별자치시 제외) 및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평가점수를 산출
- 지역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은 기준설정에 의한 평가그룹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평가그룹별 우수지자체 및 분야별 우수지자체를 선정
- 평가지표의 적정성·타당성 검토 및 평가방식의 바람직한 방안 제안

□ 연구방법

- 복지정책평가의 동향과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연구진 전체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 및 분과회의

제2장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 국내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2006~2012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 복지기반 조성

-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와 관련된 평가지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임.
 -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됨.
-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와 관련된 지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기부식품 활성화 정도임.
 - 전년도와 비교할 때 지표의 수는 같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상근간사 배치율과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로 변화됨.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과 관련된 평가지표는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이행급여특례보호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수급자관리실적, 긴급복지 지원실적임.
 - 기초생활보장의 중요성과 관심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비례하여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분야의 평가지표수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감소하지 않았음.
-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와 관련된 평가지표는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의 탈수급률,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지원 실적임.

- 3개의 지표는 사업에 따른 효과를 잘 나타내 주는 성과지표로서 의미가 큼.
-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과 관련된 평가지표는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임.
- 새롭게 구성된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은 허위사실로 의료보험급여를 받는 대상자에 대한 것으로 의료급여의 목적에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복지서비스

- 노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개정법 시설·인력 기준 충족률과 기초노령연금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임.
- 노인 복지서비스 분야의 평가지표는 평가초기와 비교할 때 많은 부분이 감소함.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평가지표는 장애인연금 수급률 뿐 임.
-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단순히 장애인연금 수급률로 국한하여 평가를 하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음.
- 아동보호서비스와 관련된 평가지표는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와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임.
- 아동보호서비스의 평가지표는 현재 요보호아동에 국한되어 있어 추후 요보호아동복지 외의 아동복지관련 평가지표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보육기반 조성과의 관련된 평가지표는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과 취약보육 실시율임.
- 전년도와 동일한 평가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짐.

□ 국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지방자치단체 성과측정 프로그램

- 온타리오 주의 Municipal Performance Measurement Program(MPMP)은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임.
- 또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적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수준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용한 데이터로 사용됨.
- 13개 서비스 영역은 상수, 소방, 토지이용계획, 도서관서비스, 지방자치단체, 공원 및 휴양, 경찰, 도로, 고형 폐기물, 폭우, 환승/경유, 폐수, 빌딩서비스 등임.

○ 캐나다 앨버타 주의 보건복지부 성과측정

- 앨버타 주는 「Heath and wellness annual report」를 통해 거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
- 7개의 성과목표를 가지고 18개의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시함.

제3장 2013년 복지종합평가 결과 종합분석

□ 2013년 주요 평가 결과

- 2013년 복지종합평가 결과는 6,726점 만점에 평균 4,823.5점이며,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점수는 71.7점임.
 - 100점 기준 환산의 평균점수는 2012년 68.8점에서 다소 상승함.
- 평가결과의 전국 격차는 최고 6,078.4점, 최저 3,779.8점임.
 -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고 90.37점, 최저 56.20점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획득한 지자체 간에 복지수준의 격차가 약 1.6배나 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대 지역별 복지평가 총점의 평균은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어촌이었으며, 대도시는 가장 낮았음.
 -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에 의해 살펴보면, 중소도시 74.72점, 농어촌

71.46점, 대도시 68.91점임.

□ 전국 및 3대 지역의 평가지표별 평가점수

○ 2013년 평가지표별 평균 평가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가 72.9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기반확충도 72.88점,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72.32점 순이었음.

－ 반면에 아동보호 서비스는 64.00점으로 가장 낮음.

○ 2013년 복지정책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백점기준으로 환산하여 3대 지역을 비교하면, 대도시는 「보육기반 조성」이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는 「지역사회서비스 기반확충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아동보호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은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과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가 가장 높았음,

－ 3대 지역 간 격차는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가 18.08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15.18점으로 컸음.

－ 반면에 「아동보호 서비스」는 2.53점으로 격차가 가장 작았고, 다음은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4.44점으로 작았음.

제4장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55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00.85점(SD=95.40)이었음.

－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550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220점으로 기본 점수인 40%만을 획득하고 있어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컸음.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에 대한 평가결과는 40점 만점에 평균 29.78점이었음.

- 지역별 평균 점수는 중소도시 33.29점, 농어촌 29.37점, 대도시 26.62점
-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3.10점이었음.
- 지역별 평균 점수는 중소도시 47.09점, 농어촌 46.22점, 대도시 35.68점으로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유사하였으나, 대도시는 다소 낮은 수준

제5장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950점 만점에 평균 667.66점이었음.
-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950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380점으로 기본 점수인 40%만을 획득하고 있어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매우 컸음.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에 대한 평가결과는 40점 만점에 평균 28.47점이었음.
- 지역별 평균 점수는 중소도시 지자체가 35.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어촌 지자체 26.63점, 대도시 지자체 23.14점의 순이었음.
- 기부식품 활성화 정도는 복합지표로서 기부식품 등 증가율과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에 의하여 평가됨.
- 기부식품 등 증가율에 대한 평가결과는 30점 만점에 평균 20.63점이었음.
 - 지역별 평균 점수는 농어촌 지자체가 평균 21.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 20.32점, 대도시 지자체 평균 19.88점의 순이었음.
-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30점 만점에 평균 21.18점이었음.
 - 지역별 평균 점수는 대도시 지자체가 21.77점, 중소도시 지자체 21.07

점, 농어촌 지자체 20.73점이었음.

제6장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1,240점 만점에 평균 1,194.40점이었음.

- 최고점수는 대도시와 농어촌의 지자체가 1,190.40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소도시는 다소 낮은 1128.40점이었음.
- 중소도시의 평균점이 918.42점으로 대도시 및 농어촌에 비해 높았음.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20점 만점에 평균 13.90점이었음.

- 지역별 평균 점수는 대도시 지자체가 15.09점, 중소도시 지자체 13.96점, 농어촌 지자체 12.71점이었음.

○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20점 만점에 평균 14.97점이었음.

- 지역별 평균 점수는 대도시 지자체가 15.30점, 중소도시 지자체 15.97점, 농어촌 지자체 13.70점이었음.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20점 만점에 평균 13.40점이었음.

- 지역별 평균 점수는 대도시 지자체가 12.78점, 중소도시 지자체 13.41점, 농어촌 지자체 13.96점이었음.

○ 수급자 관리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10점 만점에 평균 6.85점이었음.

- 지역별 평균 점수는 대도시 지자체가 6.32점, 중소도시 지자체 6.36점, 농어촌 지자체 7.82점이었음.

○ 긴급복지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30점 만점에 평균 21.76점이었음.

- 지역별 평균 점수는 대도시 지자체가 18.22점, 중소도시 지자체 24.37점, 농어

촌 지자체 22.56점이었음.

제7장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1,050점 만점에 평균 744.40점이었음.

- 지역적으로 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모두 최고점과 최저점인 420점을 받은 지자체가 있었으며, 평균적으로는 중소도시가 789.02점으로 높았으며 대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723.79점, 720.78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에 대한 평가결과는 30점 만점에 평균 20.88점이었음.

- 지역별 평균 점수는 대도시 지자체가 19.20점, 중소도시 지자체 20.93점, 농어촌 지자체 22.41점이었음.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에 대한 평가결과는 40점 만점에 평균 28.94점이었음.

- 지역별 평균 점수는 대도시 지자체가 28.24점, 중소도시 지자체 31.79점, 농어촌 지자체 26.86점이었음.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30점 만점에 평균 21.07점이었음.

- 지역별 평균 점수는 대도시 지자체가 8.51점, 중소도시 지자체 22.42점, 농어촌 지자체 19.38점이었음.

제8장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640점 만점에 평균 462.84점이었음.

- 최고점수는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이 모두 640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점수는 대도시와 농어촌이 256점, 농어촌이 294.4점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의 최저점수가 높게 나타남.
- 지역적으로 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모두 최고점과 최저점인 420점을 받은 지자체가 있었으며, 평균적으로는 중소도시가 789.02점으로 높았으며 대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723.79점, 720.78점으로 비슷하였음.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에 대한 평가결과는 40점 만점에 평균 27.48점이었음.

- 지역별 평균 점수는 대도시 지자체가 24.84점, 중소도시 지자체 27.21점, 농어촌 지자체 30.20점이었음.

○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에 대한 평가결과는 40점 만점에 평균 28.86점이었음.

- 지역별 평균 점수는 대도시 지자체가 29.95점, 중소도시 지자체 30.29점, 농어촌 지자체 26.48점이었음.

○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20점 만점에 평균 15.98점이었음.

- 지역별 평균 점수는 대도시 지자체가 14.69점, 중소도시 지자체 15.93점, 농어촌 지자체 17.23점이었음.

제9장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666점 만점에 평균 485.98점이었음.

- 전국의 최고점은 666.00점 만점이었고, 최저점은 266.40점(40%)이었음.
- 최고점 621.60점, 최저점 266.40점을 보인 중소도시 지자체를 제외한 대도시 지자체와 농어촌 지자체에서도 동일하였음.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의 평가점수는 30점 만점에 평균 22.69점이었음.

- 평가점수의 평균은 3대 지역이 모두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대도시 지자체 22.69점, 중소도시 지자체 22.38점, 농어촌 지자체 22.09점이었음.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의 평가점수는 30점 만점에 평균 21.10점이었음.

- 평가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자체 24.15점, 중소도시 지자체 20.75점, 대도시 지자체 18.19점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음.
- 전국 및 3대 지역의 최고와 최저 점수는 모두 만점인 30.00점과 기본 점수인 12.00점이었음.

제10장 아동보호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560점 만점에 평균 413.52점이었음.

-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560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224.00점으로 기본 점수인 40%만을 획득하고 있어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크게 남.
-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 지자체의 평균 점수가 422.0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도시 지자체 평균 410.77점, 농어촌 지자체 평균 407.88점 순이었음.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는 복합지표로서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과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로 구성되어 평가됨.
 - －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에 대한 평가결과는 10점 만점에 전국 229개 지자체 평균 8.34점이었음.
 - 3대 지역별 평균 점수는 대도시 지자체가 가장 높은 8.88점이었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8.70점, 농어촌 지자체 7.51점의 순이었음.
 - －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에 대한 평가결과는 20점 만점에 전국 229개 지자체 평균 12.77점이었음.
 - 3대 지역별 평균 점수는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중소도시 지자체가 평균 12.89점, 대도시 지자체 평균 12.74점, 농어촌 지자체 평균 12.67점이었음.
-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에 대한 평가결과는 20점 만점에 전국 평균 15.81점이었음.
 - － 3대 지역별 평균 점수는 농어촌 지자체가 16.2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16.09점, 대도시 지자체 15.05점의 순이었음.

제11장 보육기반 조성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1,070점 만점에 평균 769.51점이었음.
 - －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1,070.00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428.00점으로 기본 점수인 40%만을 획득하고 있어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현저함.

-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지자체 평균이 793.3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 773.92점, 농어촌 지자체 평균 742.91점의 순이었음.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에 대한 평가결과는 50점 만점에 평균 37.62점이었음.
 - 3대 지역별 평균 점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농어촌 지자체 평균 38.23점, 대도시 지자체 평균 36.69점,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 34.99점이었음.
- 취약보육 실시율에 대한 평가결과는 50점 만점에 평균 34.26점이었음.
 - 3대 지역별 평균 점수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 37.34점, 대도시 지자체 평균 34.46점, 농어촌 지자체 평균 31.20점이었음.

제12장 사·도별 주요 복지통계

□ 복지기반 조성

-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이 가장 높은 광역 지자체는 제주도(106.39%)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서울(83.41%)이었음.
 -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은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와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로 파악됨.
 -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는 대전이 86.67%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36.26%로 가장 낮았음.
 -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는 대전이 93.52%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8.76%로 가장 낮았음.

○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은 경북과 제주가 100.0%로 전체 지자체에 민간상근간사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민간상근간사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부산, 대구, 대전 등이었음.
- 기부식품제공 활성화 정도는 2개의 세부지표인 기부식품 등 증가율과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으로 파악함.
 - 기부식품 등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44.5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서 2.35%에 불과하였음.
 - 2011년 대비 20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445.07%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남으로 -6.96%로 감소하였음.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인천이 0.32%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전북이 0.26%로 가장 낮았음.
-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부산이 0.47%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제주가 0.33%로 가장 낮았음.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0.51~0.53%의 범주에 있었으며, 광주와 충북이 0.53%로 가장 높았음.
- 수급자 관리실적은 0.10~0.12%의 범주에 있었으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이 공동 0.12%로 가장 높았음.
-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광주가 3.62%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1.16%로 가장 낮았음.

○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부산이 25.42%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9.08%로 가장 낮았음.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충북이 20.91%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9.13%로 가장 낮았음.
-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경기도가 16,828,60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가 1,366,876천원으로 가장 적었음.

○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경북이 7.00%로 가장 낮았고, 인천이 13.42%로 가장 높았음.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광주가 -8.84%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인천이 -0.32%로 가장 작게 감소하였음.
-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제주가 100.0%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95.93%로 가장 낮았음.

□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개정법 시설 인력 기준 충족률은 제주가 66.67%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7.90%로 가장 낮았음.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은 대전이 93.34%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38.85%로 가장 낮았음.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충북이 46.02%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4.51%로 가장 낮았음.

□ 아동보호서비스

-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부산이 11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서울 105.56%이었음.
-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은 울산이 12.08%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2.01%로 가장 낮았음.
-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은 강원이 89.71%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45.24%로 가장 낮았음.

□ 보육기반 조성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제주가 40.04%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32.38%로 가장 낮았음.
- 취약보육 실시율은 경남이 37.44%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31.36%로 가장 낮았음.

제13장 시·군·구별 주요 복지통계

□ 복지기반 조성

○ 지역사회서비스 기반확충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작구(95.8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금천구(72.97%)이었음.
-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금정구(99.4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강서구(83.69%)이었음.
-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중구(96.3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북구(92.82%)이었음.
-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남동구(99.20%)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옹진군(68.55%)이었음.
-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광산구(96.82%)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북구(92.07%)이었음.
-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구(95.74%)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유성구(91.01%)이었음.
-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구(91.45%)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울주군(77.31%)이었음.
-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시흥시, 양평군, 가평군(100.0%)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동두천시(82.58%)이었음.

-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철원군(111.52%)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횡성군(54.20%)이었음.
 -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충주시(97.24%)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옥천군(80.72%)이었음.
 -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계룡시(100.0%)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부여군(77.57%)이었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에서 11개 지자체가 100.0%이었으며, 순창군이 83.91%로 가장 낮았음.
 -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목포시, 완도군(100.0%)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화순군(82.89%)이었음.
 -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성주군(97.9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울릉군(65.57%)이었음.
 -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창녕군(110.0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하동군(76.95%)이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가 모두 100%를 상회하는 좋은 결과를 보였음.
-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종로구(97.8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중구(36.63%)이었음.
 -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연제구(91.38%)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북구(20.67%)이었음.
 -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달서구(90.4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중구(51.52%)이었음.
 -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옹진군(89.47%)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부평구(60.07%)이었음.
 -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광산구(78.67%)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남구(22.41%)이었음.

-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구(92.3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대덕구(70.00%)이었음.
 -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울주군(93.2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북구(43.30%)이었음.
 -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안양시(99.4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안산시(19.40%)이었음.
 -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양양군(95.39%)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인제군(9.33%)이었음.
 -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진천군(87.8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증평군(47.67%)이었음.
 -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홍성군(82.08%)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공주시(15.27%)이었음.
 -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진안군(96.7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정읍시(14.42%)이었음.
 -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순천시(97.12%)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진도군(18.37%)이었음.
 -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성주군(90.22%)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의성군(13.67%)이었음.
 -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고성군(107.48%)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밀양시(1.42%)이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가 모두 80%를 하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서귀포시가 79.76%로 제주시 62.30%보다 다소 높았음.
- －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강북구(73.7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은평구(2.44%)이었음.
 -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북구(72.38%)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강서구(28.57%)이었음.

-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남구(66.15%)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달성군(11.27%)이었음.
-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옹진군(88.24%)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남동구(15.00%)이었음.
-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구(89.2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남구(50.00%)이었음.
-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유성구(98.22%)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서구(91.05%)이었음.
-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중구(72.3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남구(35.26%)이었음.
-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파주시(97.2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안성시(18.97%)이었음.
-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양구군(96.77%)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춘천시(25.76%)이었음.
-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충주시(93.30%)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단양군(32.94%)이었음.
-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홍성군(89.08%)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서산시(2.90%)이었음.
-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장수군(98.5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주시(47.45%)이었음.
-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구례군(98.28%)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영암군(35.29%)이었음.
-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상주시(99.6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칠곡군(41.45%)이었음.
-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고성군(80.00%)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창원시(12.68%)이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가 50.75%로 제주시 43.95%보다 다소 높았음.

○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에서만 이루어짐으로써 44.00%의 낮은 배치율을 보였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어느 곳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0.00%의 매우 낮은 배치율을 보였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어느 곳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0.00%의 매우 낮은 배치율을 보였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에서만 이루어짐으로써 40.00%의 낮은 배치율을 보였음.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60.00%의 배치율을 보였음.
-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어느 곳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0.00%의 매우 낮은 배치율을 보였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80.00%의 높은 배치율을 보였음.
-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90.32%의 매우 높은 배치율을 보였음.
-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55.56%의 배치율을 보였음.
-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 7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58.33%의 배치율을 보였음.
-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 13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86.67%의 높은 배치율을 보였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7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50.00%의 배치율을 보였음.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13.64%의 매우 낮은 배치율을 보였음.
-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모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100.00%의 매우 높은 배치율을 보였음.
-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22.22%의 매우 낮은 배치율을 보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모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100.00%의 매우 높은 배치율을 보였음.

– 기부식품 증가율

-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강북구(58.75%)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종로구(-36.73%) 이었음.
-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영도구(204.24%)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북구(-21.53%) 이었음.
-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구(174.6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달성군(-32.70%) 이었음.
-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계양구(65.6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동구(-24.68%) 이었음.
-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구(46.34%)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광산구(3.12%) 이었음.
-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구(67.67%)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유성구(29.76%) 이었음.
-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구(117.3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울주군(10.34%) 이었음.
-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양평군(1,288.7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광명시(-36.76%) 이었음.
-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화천군(948.1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속초시(-24.98%) 이었음.

-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보은군(1,517.40%)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충주시(-55.95%) 이었음.
 -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청양군(110.99 %)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금산군(-81.18%) 이었음.
 -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정읍시(141.19 %)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진안군(-10.01%) 이었음.
 -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진도군(317.50 %)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장성군(-62.00%) 이었음.
 -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칠곡군(103.8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울진군(-46.78%) 이었음.
 -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합천군(1,469.0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양산시(-55.83%) 이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서귀포시가 50.89%로 제주시 27.50%보다 높았음.
- 기부식품 이용실적 증가율
-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도봉구(2,529.68%)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관악구(-133.58%) 이었음.
 -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사상구(7,755.40%)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강서구(-40.06%) 이었음.
 -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구(615.8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서구(-300.00%) 이었음.
 -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중구(75.3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서구(-65.87%) 이었음.
 -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남구(1,414.58%)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서구(-14.16%) 이었음.
 -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구(299.1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중구(95.23%) 이었음.

-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구(183.5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중구(-173.48%) 이었음.
-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양평군(2,063.1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성남시(-78.41%) 이었음.
-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원주시(611.40%)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동해시(-54.05%) 이었음.
-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단양군(1,068.54%)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진천군(-17.93%) 이었음.
-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부여군(188.27%)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금산군(-128.19%) 이었음.
-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순창군(221.52%)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장수군(-133.27%) 이었음.
-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진도군(2,666.7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고흥군(-63.23%) 이었음.
-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산시(753.94%)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경주시(-44.01%) 이었음.
-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거창군(281.15%)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양산시(-128.87%) 이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는 증가율이 416.67%나 된 반면에 제주시는 82.13% 증가에 그침.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중구가 0.35%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0.23%로 가장 낮았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기장군이 0.33%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0.22%로 가장 낮았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중구가 0.35%로 가장 높았고, 달성군이 0.18%로 가장 낮았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중구가 0.42%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0.23%로 가장 낮았음.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광산구가 0.30%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0.25%로 가장 낮았음.
-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중구와 유성구가 0.31%로 가장 높았고, 서구와 대덕구가 0.25%로 가장 낮았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울주군이 0.33%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0.17%로 가장 낮았음.
-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김포시가 0.36%로 가장 높았고, 의정부시, 화성시, 광주시가 0.23%로 가장 낮았음.
-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속초시와 철원군이 0.39%로 가장 높았고, 인제군이 0.20%로 가장 낮았음.
- 충청북도 12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진천군이 0.34%로 가장 높았고, 음성군이 0.17%로 가장 낮았음.
- 충청남도 15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태안군이 0.35%로 가장 높았고, 계룡시가 0.24%로 가장 낮았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임실군이 0.34%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이 0.17%로 가장 낮았음.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장흥군이 0.39%로 가장 높았고, 고흥군이 0.22%로 가장 낮았음.
- 경상북도 23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울릉군이 0.39%로 가장 높았고, 봉화군이 0.23%로 가장 낮았음.
- 경상남도 18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밀양시가 0.35%로 가장 높았고, 산청군이 0.19%로 가장 낮았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모두 0.28로 동일하였음.

–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마포구가 0.51%로 가장 높았고, 서대문구, 구로구, 서초구가 0.00%로 가장 낮았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강서구가 0.52%로 가장 높았고, 기장군이 0.39%로 가장 낮았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북구와 수성구가 0.48%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0.34%로 가장 낮았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중구가 0.51%로 가장 높았고, 강화군과 옹진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남구와 북구가 0.44%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0.37%로 가장 낮았음.
-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중구가 0.48%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0.33%로 가장 낮았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북구와 울주군이 0.50%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0.23%로 가장 낮았음.
-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시흥시, 하남시, 의왕시, 가평군, 연천군이 0.51%로 가장 높았고, 동두천시와 과천시 0.17%로 가장 낮았음.
-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이 0.51%로 가장 높았고,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양양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충청북도 12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영동군이 0.52%로 가장 높았고, 단양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충청남도 15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보령시, 금산군, 청양군, 홍성군이 0.50%로 가장 높았고, 태안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무주군과 임실군이 0.51%로 가장 높았고, 장수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보성군과 무안군이 0.51%로 가장 높았고,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함평군, 신안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경상북도 23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의성군이 0.53%로 가장 높았고, 청송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경상남도 18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김해시와 거창군이 0.51%로 가장 높았고, 통영시, 사천시, 창녕군, 고성군, 함양군, 함천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서귀포시가 0.39%로 제주시 0.30%보다 높았음.
-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마포구가 0.56%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가 0.38%로 가장 낮았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동구와 금정구가 0.52%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0.40%로 가장 낮았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달성군이 0.54%로 가장 높았고, 서구와 수성구가 0.50%로 가장 낮았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중구가 0.55%로 가장 높았고, 연수구와 옹진군이 0.51%로 가장 낮았음.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서구와 광산구가 0.54%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0.51%로 가장 낮았음.
 -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대덕구가 0.54%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0.51%로 가장 낮았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울주군이 0.53%로 가장 높았고, 그 외의 지자체는 0.52% 이었음.

-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가평군이 0.56%로 가장 높았고, 오산시가 0.49%로 가장 낮았음.
-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횡성군이 0.56%로 가장 높았고, 강릉시가 0.41%로 가장 낮았음.
- 충청북도 12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진천군이 0.56%로 가장 높았고, 청주시와 단양군이 0.51%로 가장 낮았음.
- 충청남도 15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태안군이 0.56%로 가장 높았고, 당진시가 0.48%로 가장 낮았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김제시와 순창군이 0.55%로 가장 높았고, 장수군이 0.50%로 가장 낮았음.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강진군이 0.57%로 가장 높았고, 화순군이 0.43%로 가장 낮았음.
- 경상북도 23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의성군이 0.66%로 가장 높았고, 예천군이 0.46%로 가장 낮았음.
- 경상남도 18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거제시와 고성군이 0.55%로 가장 높았고, 산청군이 0.22%로 가장 낮았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서귀포시가 0.52%로 제주시 0.50%보다 다소 높았음.

– 수급자 관리실적

- 서울특별시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25개 지자체 중에서 용산구, 동대문구, 마포구, 강남구가 0.13%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가 0.10%로 가장 낮았음.
- 부산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16개 지자체 중에서 동구가 0.13%로 가장 높았고, 부산진구가 0.09%로 가장 낮았음.
- 대구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8개 지자체 중에서 중구와 달성군이 0.12%로 가장 높았고, 동구, 서구, 달서구가 0.09%로 가장 낮았음.
- 인천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10개 지자체 중에서 연수구가 0.13%로

가장 높았고, 남동구가 0.10%로 가장 낮았음.

- 광주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5개 지자체 중에서 남구가 0.15%로 가장 높았고, 광산구가 0.10%로 가장 낮았음.
- 대전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5개 지자체 중에서 서구가 0.12%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가 0.10%로 가장 낮았음.
- 울산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5개 지자체 중에서 4개 지자체가 0.11%이었고, 중구는 0.09%로 가장 낮았음.
- 경기도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31개 지자체 중에서 안산시, 광주시, 과천시, 연천군이 0.13%로 가장 높았고, 군포시와 가평군이 0.09%로 가장 낮았음.
- 강원도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18개 지자체 중에서 삼척시가 0.14%로 가장 높았고, 동해시가 0.10%로 가장 낮았음.
- 충청북도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12개 지자체 중에서 청원군, 보은군, 단양군이 0.13%로 가장 높았고, 옥천군이 0.09%로 가장 낮았음.
- 충청남도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15개 지자체 중에서 부여군이 0.14%로 가장 높았고, 아산시와 태안군이 0.11%로 가장 낮았음.
- 전라북도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14개 지자체 중에서 장수군과 부안군이 0.14%로 가장 높았고, 남원시가 0.10%로 가장 낮았음.
- 전라남도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22개 지자체 중에서 영광군이 0.14%로 가장 높았고, 구례군이 0.10%로 가장 낮았음.
- 경상북도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23개 지자체 중에서 울릉군이 0.14%로 가장 높았고, 칠곡군이 0.08%로 가장 낮았음.
- 경상남도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18개 지자체 중에서 의령군, 남해군, 거창군이 0.13%로 가장 높았고, 거제시가 0.08%로 가장 낮았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2개 지자체 중에서 서귀포시가 0.12%로 제주시 0.11%보다 근소하게 높았음.

– 긴급복지 지원실적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에서 종로구가 2.11%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가 0.71%로 가장 낮았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에서 수영구가 3.07%로 가장 높았고, 사하구가 1.13%로 가장 낮았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에서 남구가 2.37%로 가장 높았고, 달성군이 0.80%로 가장 낮았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에서 강화군이 1.99%로 가장 높았고, 연수구가 1.11%로 가장 낮았음.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남구가 3.78%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3.09%로 가장 낮았음.
-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동구가 3.65%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가 3.25%로 가장 낮았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울주군이 3.23%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1.73%로 가장 낮았음.
-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광주시가 4.06%로 가장 높았고, 시흥시가 1.81%로 가장 낮았음.
-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원주시와 철원군이 2.28%로 가장 높았고, 화천군이 0.92%로 가장 낮았음.
-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에서 증평군이 4.32%로 가장 높았고, 보은군과 단양군이 2.71%로 가장 낮았음.
-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에서 서천군이 3.37%로 가장 높았고, 천안시가 1.09%로 가장 낮았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에서 남원시가 3.71%로 가장 높았고, 완주군이 1.33%로 가장 낮았음.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에서 광양시가 3.84%로 가장 높았고, 영광군이 1.45%로 가장 낮았음.
-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에서 성주군이 2.93%로 가장 높았고, 고령군이 1.05%로 가장 낮았음.

-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김해시가 2.82%로 가장 높았고, 창녕군이 0.88%로 가장 낮았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중에서 서귀포시가 1.28%로 제주시 1.08%보다 높았음.

○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에서 동작구가 17.21%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1.90%로 가장 낮았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에서 사상구가 38.10%로 가장 높았고, 영도구가 5.04%로 가장 낮았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에서 달성군이 20.00%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8.09%로 가장 낮았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에서 남구가 19.39%로 가장 높았고, 용진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광산구가 19.17%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11.28%로 가장 낮았음.
-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대덕구가 27.59%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18.71%로 가장 낮았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울주군이 26.79%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16.22%로 가장 낮았음.
-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남양주시가 23.81%로 가장 높았고, 연천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횡성군이 68.57%로 가장 높았고, 양양군이 2.70%로 가장 낮았음.
-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에서 괴산군이 39.13%로 가장 높았고, 청주시가 17.14%로 가장 낮았음.

-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에서 태안군이 34.62%로 가장 높았고, 부여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에서 부안군이 40.43%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가 9.48%로 가장 낮았음.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에서 장성군이 37.14%로 가장 높았고, 여수시가 10.00%로 가장 낮았음.
 -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에서 김천시가 45.83%로 가장 높았고, 예천군과 울릉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고성군이 37.50%로 가장 높았고, 통영시가 10.57%로 가장 낮았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중에서 서귀포시가 25.42%로 제주시 15.15% 보다 더 높았음.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에서 도봉구가 21.03%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가 4.51%로 가장 낮았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에서 서구가 34.36%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7.26%로 가장 낮았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에서 북구가 18.18%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6.25%로 가장 낮았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에서 계양구가 23.26%로 가장 높았고, 옹진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북구가 27.61%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5.13%로 가장 낮았음.
 -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중구가 24.91%로 가장 높았고, 대덕구가 12.41%로 가장 낮았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남구가 25.68%로 가장 높았고, 울주군이 8.04%로 가장 낮았음.

-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구리시가 25.56%로 가장 높았고, 의왕시, 동두천시, 연천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양양군이 45.95%로 가장 높았고,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에서 괴산군이 43.48%로 가장 높았고, 진천군이 5.13%로 가장 낮았음.
 -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에서 논산시가 20.72%로 가장 높았고, 금산군이 3.08%로 가장 낮았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에서 장수군이 30.95%로 가장 높았고, 임실군이 7.69%로 가장 낮았음.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에서 담양군이 50.00%로 가장 높았고, 구례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에서 상주시가 32.00%로 가장 높았고, 군위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양산시가 34.21%로 가장 높았고, 의령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18.64%, 제주시 18.09%로 2개 지자체가 유사하였음.
- －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강서구가 725,824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36,907천원으로 가장 적었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 사하구가 1,715,88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장군이 308,480천원으로 가장 적었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 수성구가 653,15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183,987천원으로 가장 적었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 중구가 1,169,769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옹진군이 0원으로 가장 적었음.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북구가 1,732,05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가 60,510천원으로 가장 적었음.
-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동구가 667,70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가 40,000천원으로 가장 적었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동구가 1,147,82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가 379,239천원으로 가장 적었음.
-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성남시가 3,755,16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평군과 연천군이 2,000천원으로 가장 적었음.
-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정선군이 1,511,53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철원군과 양구군이 13,611천원으로 가장 적었음.
-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 청주시가 856,58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동군이 15,000천원으로 가장 적었음.
-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 천안시가 1,725,18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계룡시가 8,280천원으로 가장 적었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전주시가 1,480,98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완주군이 104,163천원으로 가장 적었음.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목포시가 1,551,03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례군과 고흥군이 8,233천원으로 가장 적었음.
-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 포항시가 2,005,989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릉군이 0원으로 가장 적었음.
-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 창원시가 2,783,47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령군이 0원으로 가장 적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중 제주시가 744,382천원으로 서귀포시 622,494천원보다 많았음.

○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강남구가 2.12%로 가장 낮았고, 중랑구가 19.89%로 가장 높았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 동구가 9.95%로 가장 낮았고, 중구가 21.45%로 가장 높았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 남구가 2.83%로 가장 낮았고, 동구가 13.52%로 가장 높았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 강화군이 8.28%로 가장 낮았고, 옹진군이 34.66%로 가장 높았음.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남구가 13.26%로 가장 낮았고, 서구가 22.02%로 가장 높았음.
-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 유성구가 7.64%로 가장 낮았고, 중구가 17.97%로 가장 높았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동구가 7.07%로 가장 낮았고, 북구가 13.25%로 가장 높았음.
-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동두천시가 -14.87%로 가장 낮았고, 오산시가 29.15%로 가장 높았음.
-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양구군이 0.17%로 가장 낮았고, 고성군이 19.19%로 가장 높았음.
-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 진천군이 6.12%로 가장 낮았고, 단양군이 15.07%로 가장 높았음.
-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 예산군이 -1.11%로 가장 낮았고, 부여군이 16.07%로 가장 높았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고창군이 -6.27%로 가장 낮았고, 전주시가 19.96%로 가장 높았음.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영광군이 6.72%로 가장 낮았고, 구례군이 22.12%로 가장 높았음.
-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 울릉군이 -11.27%로 가장 낮았고, 포항시가

16.39%로 가장 높았음.

-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 거창군이 5.41%로 가장 낮았고, 양산시 21.05%로 가장 높았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중 제주시가 8.48%로 서귀포시 16.25%보다 크게 낮았음.

－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관악구가 -10.87%로 가장 낮았고, 강북구가 6.87%로 가장 높았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 금정구가 -20.44%로 가장 낮았고, 영도구가 3.10%로 가장 높았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 동구가 -9.76%로 가장 낮았고, 서구가 -2.90%로 가장 높았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 옹진군이 -17.28%로 가장 낮았고, 부평구가 5.52%로 가장 높았음.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서구가 -14.24%로 가장 낮았고, 남구가 -4.99%로 가장 높았음.
-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동구가 -6.40%로 가장 낮았고, 서구가 2.51%로 가장 높았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 울주군이 -7.82%로 가장 낮았고, 북구가 0.45%로 가장 높았음.
-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포천시 -27.84%로 가장 낮았고, 하남시가 18.79%로 가장 높았음.
-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정선군이 -16.42%로 가장 낮았고, 홍천군이 8.72%로 가장 높았음.
-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 진천군이 -11.85%로 가장 낮았고, 증평군이 7.16%로 가장 높았음.
-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 천안시가 -11.10%로 가장 낮았고, 서천군이

3.19%로 가장 높았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무주군이 -15.04%로 가장 낮았고, 완주군이 -2.92%로 가장 높았음.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영암군이 -15.39%로 가장 낮았고, 진도군이 4.67%로 가장 높았음.
-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 영양군이 -15.82%로 가장 낮았고, 울릉군이 17.72%로 가장 높았음.
-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 남해군이 -9.29%로 가장 낮았고, 김해시가 4.03%로 가장 높았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중 제주시가 2.00로 서귀포시 2.19%보다 다소 낮았음.

－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상해요인 조사처리율)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종로구가 86.67%로 가장 낮았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 중구, 서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96.39%로 가장 낮았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 중구, 남구, 달성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달서구가 94.13%로 가장 낮았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 중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계양구가 94.33%로 가장 낮았음.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가 100.00%를 보였고, 북구만이 88.43%이었음.
-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98.99%로 가장 낮았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가 100.00%를 보였고, 동구만이

99.37%이었음.

-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평택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의왕시, 여주군, 과천시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양주시가 79.53%로 가장 낮았음.
 -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정선군이 68.35%로 가장 낮았음.
 -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청주시가 96.38%로 가장 낮았음.
 -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 13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당진시와 논산시가 각각 99.55%, 80.24%이었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군산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완주군이 70.69%로 가장 낮았음.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20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순천시와 장성군이 각각 99.87%, 93.49%이었음.
 -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 17개 지자체가 100.00%로 가장 높았는데, 이들은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등이다. 울릉군이 92.31%로 가장 낮았음.
 -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 13개 지자체가 100.00%로 가장 높았는데, 이들은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등이다. 의령군이 97.74%로 가장 낮았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모두 100.00%이었음.
- －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부당이득금 징수율)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노원구가 99.80%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38.77%로 가장 낮았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 서구가 97.28%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77.62%로 가장 낮았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 서구가 97.28%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77.62%로 가장 낮았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 옹진군이 94.81%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35.31%로 가장 낮았음.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광산구가 96.43%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85.76%로 가장 낮았음.
-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 유성구가 94.78%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65.87%로 가장 낮았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북구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울주군이 58.09%로 가장 낮았음.
-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시흥시가 99.78%로 가장 높았고, 수원시가 46.52%로 가장 낮았음.
-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평창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철원군이 45.72%로 가장 낮았음.
-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 보은군이 99.55%로 가장 높았고, 영동군이 41.83%로 가장 낮았음.
-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 청양군이 99.85%로 가장 높았고, 예산군이 38.70%로 가장 낮았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임실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전주시가 58.91%로 가장 낮았음.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영광군이 99.65%로 가장 높았고, 신안군이 62.77%로 가장 낮았음.
-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 울릉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성주군이 41.64%로 가장 낮았음.

-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 의령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통영시가 55.84%로 가장 낮았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가 69.53%로 서귀포시 57.49%보다 높았음.

□ 복지서비스

○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금천구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0.00%로 가장 낮았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 동구, 금정구, 기장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51.63%로 가장 낮았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 달서구가 88.64%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36.65%로 가장 낮았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 중구, 동구, 계양구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남동구가 68.47%로 가장 낮았음.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광산구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78.56%로 가장 낮았음.
-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동구가 98.23%로 가장 높았고, 대덕구가 80.47%로 가장 낮았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 중구가 95.63%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30.00%로 가장 낮았음.
-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과천시 100.00%로 가장 높았고, 포천시가 0.00%로 가장 낮았음.
-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홍천군이 93.97%로 가장 높았고, 속초시와 정선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 영동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증평군이 47.52%로 가장 낮았음.

-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 서산시가 92.40%로 가장 높았고, 계룡시가 2.94%로 가장 낮았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순창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장성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진도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 군위군과 의성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상주시가 23.51%로 가장 낮았음.
-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 통영시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함안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중 제주시가 78.61%로 서귀포시 70.68% 보다 높았음.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종로구가 70.38%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가 4.98%로 가장 낮았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 강서구가 121.24%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13.12%로 가장 낮았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 달성군이 68.72%로 가장 높았고, 달서구가 11.44%로 가장 낮았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 옹진군이 170.83%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8.44%로 가장 낮았음.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동구가 134.09%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18.18%로 가장 낮았음.
-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대덕구가 44.47%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15.63%로 가장 낮았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북구가 29.89%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8.66%로 가장 낮았음.

-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가평군이 52.89%로 가장 높았고, 과천시가 3.59%로 가장 낮았음.
-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양양군이 101.52%로 가장 높았고, 태백시가 13.82%로 가장 낮았음.
-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 음성군이 211.75%로 가장 높았고, 증평군이 19.53%로 가장 낮았음.
-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 논산시가 84.71%로 가장 높았고, 당진시가 11.49%로 가장 낮았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남원시가 85.64%로 가장 높았고, 완주군이 24.32%로 가장 낮았음.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목포시가 102.11%로 가장 높았고, 무안군이 6.50%로 가장 낮았음.
-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 안동시가 107.66%로 가장 높았고, 군위군이 15.18%로 가장 낮았음.
-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 의령군이 116.23%로 가장 높았고, 밀양시가 15.53%로 가장 낮았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가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서귀포시가 32.57%로 제주시 31.43%보다 근소하게 높았음.

○ 아동보호서비스

－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중구가 200.00%로 가장 높았고, 18개 지자체는 100.00%이었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 서구가 166.67%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0.00%로 가장 낮았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 6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2개 지자체(달서구와 달성군)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5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1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광역시는 모든 지자체가 100.00%이었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 1개 지자체(울주군)만이 100.00%이었고, 4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15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13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청북도 12개 중 6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6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청남도 15개 중 8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7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라북도 14개 중 6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8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라남도 22개 중 13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9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상북도 23개 중 11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12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상남도 18개 중 13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5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모두 100.00%이었음.
-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에서 관악구가 9.93%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

가 -19.76%로 가장 낮았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에서 부산진구가 8.93%로 가장 높았고, 금정구가 -9.67%로 가장 낮았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에서 달성군이 5.70%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0.89%로 가장 낮았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에서 연수구가 34.53%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3.98%로 가장 낮았음.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북구가 12.22%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3.42%로 가장 낮았음.
-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동구가 19.83%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3.99%로 가장 낮았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남구가 26.72%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0.26%로 가장 낮았음.
-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양평군이 24.93%로 가장 높았고, 여주군이 -5.32%로 가장 낮았음.
-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화천군이 16.95%로 가장 높았고, 인제군이 -4.59%로 가장 낮았음.
-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에서 청원군이 25.23%로 가장 높았고, 영동군이 -12.34%로 가장 낮았음.
-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에서 금산군이 27.10%로 가장 높았고, 당진시가 -10.82%로 가장 낮았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에서 순창군이 14.99%로 가장 높았고, 김제시가 -11.46%로 가장 낮았음.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에서 보성군이 13.68%로 가장 높았고, 진도군이 -26.42%로 가장 낮았음.
-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에서 영천시가 31.66%로 가장 높았고, 고령군이 -19.39%로 가장 낮았음.

-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사천시가 8.42%로 가장 높았고, 함양군이 -11.15%로 가장 낮았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중에서 서귀포시가 3.80%로 제주시 1.86%보다 높았음.

－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중구와 성동구가 11.11%로 가장 낮았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 중구, 북구, 사상구, 기장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14.71%로 가장 낮았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 달서구와 달성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중구와 동구가 0.00%로 가장 낮았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 중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동구와 옹진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서구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47.37%로 가장 낮았음.
-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 중구가 79.31%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29.63%로 가장 낮았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울주군만이 57.14%로 가장 낮았음.
-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광명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구리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오산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안양시, 양평군, 과천시가 0.00%로 가장 낮았음.
-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강릉시(75.68%), 원주시(82.00%), 춘천시(86.54%)를 제외한 15개 지자체가 100.00%의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증평군, 음성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 공주시, 서천군, 태안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계룡시가 0.00%로 가장 낮았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장수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구례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장성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 안동시, 영주시, 경산시,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칠곡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군위군과 예천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 통영시,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의령군과 함천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중 제주시가 66.67%로 서귀포시 56.67%보다 높았음.

○ 보육기반조성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중구가 46.15%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가 32.33%로 가장 낮았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 중구가 42.86%로 가장 높았고, 해운대구가 26.52%로 가장 낮았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 달성군이 37.40%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33.33%로 가장 낮았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 옹진군이 43.75%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31.98%로 가장 낮았음.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동구가 39.77%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30.87%로 가장 낮았음.

-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동구가 37.33%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가 30.56%로 가장 낮았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 중구가 36.94%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29.76%로 가장 낮았음.
-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가평군이 41.43%로 가장 높았고, 파주시가 27.33%로 가장 낮았음.
-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영월군, 정선군, 양양군이 50.00%로 가장 높았고, 동해시가 26.87%로 가장 낮았음.
-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 진천군이 41.46%로 가장 높았고, 괴산군이 30.00%로 가장 낮았음.
-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 청양군이 47.06%로 가장 높았고, 아산시가 23.67%로 가장 낮았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장수군과 임실군이 50.00%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이 29.17%로 가장 낮았음.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고흥군이 45.45%로 가장 높았고, 신안군이 0.00%로 가장 낮았음.
-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 영덕군과 봉화군이 50.00%로 가장 높았고, 청송군이 10.00%로 가장 낮았음.
-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 하동군이 47.50%로 가장 높았고, 남해군이 19.44%로 가장 낮았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중 제주시가 40.53%로 서귀포시 38.52%보다 근소하게 높았음.

－ 취약보육 실시율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노원구가 37.67%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가 29.37%로 가장 낮았음.
-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금정구가 37.43%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30.04%로 가장 낮았음.

-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달성군이 36.63%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30.86%로 가장 낮았음.
-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연수구가 37.06%로 가장 높았고, 옹진군이 26.10%로 가장 낮았음.
-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서구가 38.08%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30.93%로 가장 낮았음.
-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서구가 38.42%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34.38%로 가장 낮았음.
-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북구가 37.16%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33.03%로 가장 낮았음.
-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연천군이 40.67%로 가장 높았고, 양평군이 29.24%로 가장 낮았음.
-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영월군이 36.23%로 가장 높았고, 철원군이 24.70%로 가장 낮았음.
- 충청북도 12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옥천군이 36.12%로 가장 높았고, 청원군이 27.48%로 가장 낮았음.
- 충청남도 15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계룡시가 39.72%로 가장 높았고, 태안군이 26.20%로 가장 낮았음.
- 전라북도 14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정읍시가 38.96%로 가장 높았고, 장수군이 28.32%로 가장 낮았음.
- 전라남도 22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완도군이 38.80%로 가장 높았고, 영광군이 27.39%로 가장 낮았음.
- 경상북도 23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상주시가 45.96%로 가장 높았고, 울진군이 26.13%로 가장 낮았음.
- 경상남도 18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함안군이 44.83%로 가장 높았고, 하동군이 30.86%로 가장 낮았음.

-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서귀포시가 43.97%로 제주시 33.90%보다 높았음.

제14장 복지정책평가 8개년 성과와 정책제언

□ 복지정책평가 8개년 성과

○ 복지종합평가의 전반적 결과

- 복지종합평가의 전반적 결과를 전체 지자체의 평균점수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2013년 71.7점으로 전년도 보다 향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복지종합평가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70점대에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전체 지자체 평가결과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향상되었지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는 현저하여, 이와 같은 결과는 평가결과의 향상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력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복지기반조성의 성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선택형+지역개발형)의 예산 집행률은 2011년 90.16%에서 2012년 93.09%로 다소 상승하는 성과를 거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은 2010년 37.39%에서 2012년 51.97%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둠.
- 민간복지자원의 하나인 기부식품의 총액은 2008년 370억 6,797만 6천원→2009년 520억 5,800만 5천원→2010년 603억 1,967만원→2011년 782억 2,237만 6천원→2012년 928억 7,827만 8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기초생활보장의 성과

-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수는 2008년 184,289명→2009년 226,145명→2010년 224,889명→2011년 113,677명→2012년 136,679명으로 다소 등락을 보임.

- 총 수급자 대비 신규 수급자수는 2008년 12.76%→2009년 15.22%→2010년 15.42%→2011년 7.74%→2012년 9.83%의 변화를 보였음.
-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수는 2011년 879,663가구, 2012년 6,128,161가구로 증가하였고,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는 같은 기간에 238,904건에서 700,37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중점관리 소득 감소건수도 같은 기간에 640,759건에서 676,270건으로 증가하였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긴급복지지원 총 결정가구수는 2008년 27,426가구→2009년 93,693가구→2010년 45,223가구→2011년 41,924가구→2012년 38,838가구로 2009년 이후 감소하여 긴급지원 신청건수와 비교한다면 지원결정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임을 알 수 있음.
-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2009년 684억 991만 4천원→2010년 579억 3,710만 2천원→2011년 526억 7,964만 1천원→2012년 1,065억 4,640만 4천원으로 변화함.
 -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 지원액은 2009년 73억 645만 5천원→2010년 30억 7,348만 6천원→2011년 116억 7,885만 9천원→2012년 275억 9,835만 2천원으로 최근에 큰 폭의 증가를 보임.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 대비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취·창업률은 2008년 7.93%→2009년 8.63%→2010년 10.65%→2011년 12.81%→2012년 15.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 대비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자수인 탈수급률은 2008년 7.39%→2009년 7.35%→2010년 9.08%→2011년 10.74%→2012년 16.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전체 수급권자의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는 2007년 46.4일→2008년 47.8일→2009년 57.7일→2010년 63.3일→2011년 286.5일→2012년 295.3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
- 전체 수급권자의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는 2007년 2,329,103원→

2008년 2,489,922원→2009년 2,415,074원→2010년 2,824,652원→
2011년 2,942,829원→2012년 3,046,203원으로 상승

- 의료급여 대상 중 집중관리대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의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는 전체 수급권자의 평균 의료급여일수 보다 현저히 높았으나,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성과를 거둠.

○ 복지서비스의 성과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2011년 22.53%, 2012년 24.19%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2010년 61.02%→2011년 97.43%→2012년 102.02%로 크게 상승하는 성과를 거둠.
-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은 2010년 22,534원→2011년 23,063원→2012년 23,731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은 영유아보육시설은 2008년 5,380개소, 2009년 7,555개소, 2010년 5,797개소, 2011년 6,515개소, 2012년 6,237개소 임.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 대비 취약보육시설 이용 아동비 비율인 취약보육 시설 이용률은 2008년 47.12%→2009년 52.34%→2010년 58.54%→2011년 60.47%→2012년 63.96%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

□ 정책제언

○ 평가방식에 대한 정책제언

- 지역사회복지종합평가는 안전행정부 합동평가의 복지평가, 복지재정 및 복지인력 평가, 자체 특화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중점사업 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토록 함.
-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자체 특화사업 평가”와 “보건복지부 중점사업 평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를 평가하고, 중앙에서는 시도별 1~2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하여 직접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체

지자체에 적용토록 함.

○ 평가지표에 대한 정책제언

－ 복지기반조성 영역의 정책제언

- 민간복지자원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의 재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구 만명당 법정민간복지종사자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업안정성(이직률) 및 급여수준,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충분성, 사회복지생활시설 설치율 등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민간상근간사의 배치 여부에 의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민간상근간사의 자격 및 공개채용 여부, 역할 강화, 신분안정 등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세부 평가지표인 기부식품에 대한 평가기준을 “인구 1인당 기부식품 모금 및 이용 금액”으로 함으로써 지자체의 인구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많은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사업과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정책제언

- 향후 기초보장제도 개편 속에서 자활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근로능력 가구들의 탈수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자활사업 평가시 이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요구됨.
- 긴급복지제도의 평가에서 의료지원이외 다른 지원건수에 대한 비중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항목의 개발이 필요함.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를 생각하고 수급자들의 권리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이 개발되고 함께 평가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경제의 주요한 한 축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크므로 이와 관련된 평가지표들이 자활사업 평가지표에 포함되어야 함.

-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낮은 자활사업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대도시의 기존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개선이 요구됨.
- 의료급여 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평가에서 대도시가 농어촌 지자체들에 비해 낮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강화되어야 하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전체 평가체계에서 의료급여의 평가 비중을 높이고, 평가내용을 더욱 강화하여야 함.

－ 복지서비스 영역의 정책제언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복지서비스 중요성과 투입재정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수를 증대하여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세부 평가지표는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노인보호(시설보호 및 장기요양보호)와 관련된 평가지표가 포함되어야 함.
- 장애인복지서비스 평가지표는 전체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 지표이어야 하며, 재가장애인서비스 수준관련 지표, 장애인 자립생활 및 고용관련 지표, 장애인 재활관련 지표, 장애인 이동권 보장관련 지표 등이 적극 고려되어야 함.
- 요보호 및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서비스의 평가지표는 전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포괄적 평가지표로 대체되어야 하며, 특히 아동권리 증진의 실천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어야 함.
- 보육서비스의 재정투입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가중치를 높이고, 평가지표의 산출방식을 개선해야 하며,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를 중요시하는 평가지표와 아동 안전과 관련된 평가지표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기획능력 및 추진역량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통한 지역사회 특성 파악 및 주민욕구가 적극 반영된 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수행된 평가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효율적인 평가 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복지정책평가결과 및 성과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복지정책 활성화 및 개선에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정부합동평가(시·도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이다. 이를 통해 229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관심유도이다. 지역복지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자치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관심 유도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복지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할 것이다.

셋째, 향후 효율적인 평가방향 설정이다. 지난 평가의 성과를 분석하여 연도별·분야별 특징을 파악하고 평가영역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분과회의를 통해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 등의 모색을 통해 향후 효율적인 평가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2013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분석, 지역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평가지표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방식의 바람직한 방안 제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2013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분석은 8개의 평가지표에 따른 세부지표 22개에 대한 16개 광역 시도(세종특별자치시 제외) 및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평가점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지역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은 기준설정에 의한 평가그룹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평가그룹별 우수지자체 및 분야별 우수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셋째, 평가지표의 적정성·타당성 검토 및 평가방식의 바람직한 방안 제안이다. 전문가 및 시군구 평가담당자 회의 등을 의견분석과 현 지표분석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현행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검토 및 지자체 복지정책 추진성과가 담보될 수 있는 효과성 높은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복지정책평가의 동향과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연구진 전체회의 실시, 전문가 자문회의 및 분과회의를 수행하였다.

먼저 복지정책평가의 동향과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로서 복지정책평가 동향은 국내와 캐나다를 살펴보았다. 국내의 경우 2006년부터 올해까지의 사회복지종합평가의 평가틀과 평가지표를 논의하였고, 국외 선행연구로서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와 앨버타 주의 성과측정 프로그램과 지표를 살펴보았다.

둘째, 연구진 전체회의는 평가자료의 분석결과 검토를 위해 전체회의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문가 자문회의 및 분과회의는 평가지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의 파악을 위함으로 현 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제2장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제1절 국내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제2절 국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2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 동향 < <

제1절 국내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지역복지정책평가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9개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지역복지정책평가는 2006년 이래로 현재까지 9년 동안 실시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지역복지정책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복지기반 조성

가.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생겨나고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가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축소되었다. 2012년의 지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등이다.

〈표 2-1〉 2006~2012년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 분야의 평가지표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복지특화사업 예산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복지특화사업 건수 지역복지 민관협력사업 건수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개발형 사업 선정 건수 특화사업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개발형사업의 기준 금액 대비 액수 사회복지 결산액 대비 특화사업 결산액 비율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서비스 조직, 인력 및 예산확보 정도 4대 바우처사업 서비스 제공 대상자(이용자) 수 4대 바우처사업 서비스 제공인력 수 예산 실 집행률 특화사업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서비스 자체개발형사업 선정건수 및 기준금액 대비 실적 사업 수 대비 참여 공급기관 수 사회복지 결산액 대비 특화사업 결산액 비율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사회서비스 예산대비 집행률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시행률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개발형)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 시행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개발형) 위기가구 통합서비스(사례관리) 추진실적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주: 2007년에는 2008년의 지역사회서비스분야가 복지총괄분야의 사회서비스 활성화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2008~2011년 평가와의 비교를 위해 이를 지역사회서비스분야로 분리하여 제시함.

자료: 1) 김승권 외(2006).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7).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10). 2009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승권 외(2011a). 2010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김승권 외(2011b).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의 지표와 관련하여 평가 초기(2006년)에는 양적으로 많았고 다양한 다방면의 영역을 다루고 있었으나, 2011년 이후 2개 지표로 축소되었으며, 2012년의 지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기부식품 활성화 정도 등으로 이루어졌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지표의 수는 같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상근간사 배치율과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로 변화되었다.

〈표 2-2〉 2006~2012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분야의 평가지표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부서 담당공무원의 충분성 인구 만 명당 법정 민간시설종사자수 전체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지방이양사업비 증감률 인구 1인당 민간복지재원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능력(이용시설의 충분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민간간사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실적 신설된 공무원의 전문성 기관장의 조직 및 인사개혁 실적 사회복지직 배치 수준 주민의 복지관련 온라인 제안 및 활용 실적 사회복지기관 정보시스템 보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부서 담당공무원의 근무연속성 인구 천 명당 등록 자원봉사자수 공공부조재정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비율 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인건비 증감률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보호능력(생활시설의 충분성)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 비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전담체계 개편 실시 및 서비스 기능에 맞는 팀 구성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참여 실적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율 복지행정인력의 행정 정보시스템 활용률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부서 담당공무원 충분성 인구 만 명당 법정 민간시설종사자수 전체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인구 1인당 민간복지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부서 담당공무원의 근무연속성 인구 천 명당 등록 자원봉사자수 지방이양사업비 증감률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충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생활 시설의 관리수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간사 채용 및 자격 •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 활성화 • 전달체계 개편 실시 및 서비스 기능에 맞는 팀 구성 • 자체개발형사업의 기준 금액 대비 액수 • 복지정책사업에의 노력 • 복지정책사업의 기획, 추진, 목적달성, 만족도 등 • 기관장의 조직개혁 실적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참여 실적 • 복지행정인력의 행정정보시스템 활용률 • 민관협력 사업건수 • 민관협력사업 건수 • 사회복지기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보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의 활성화 • 자체개발형 사업 선정 건수 •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우수 복지정책사업 수준 •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업 • 현장 평가시 협조, 자료의 신속성 및 정확성 • 기관장의 인사개혁 실적 • 사회복지직 배치수준 • 사회복지기관 정보시스템 보급률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부서 담당공무원 충분성 • 인구 만 명당 법정민간복지종사자수 • 전체재정 대비 사회복지 재정 비율 • 인구 1인당 민간복지재원 •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충분성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및 민간간사 활용 •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 활성화 • 읍면동 사회복지직 기초수급자 담당 가구 수 • 연차별 실행계획수립 과정의 충실성 •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우수 복지정책사업 •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업 • 현장 평가시 협조, 자료의 신속성 및 정확성 • 전년도 취약분야 개선도 • 기관장의 조직개혁 실적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참여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부서 담당행정직공무원의 근무연속성 • 인구 천 명당 등록 자원봉사자수 및 등록자원봉사자 당 평균 활동시간 • 사회복지재정 대비 자체투입재정비율 • 사회복지생활시설 설치율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관리수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의 활성화 • 수급자 사례관리유형분류 및 관리 • 연차별 실행계획수립의 실행도 • 복지정책사업에의 노력 • 복지정책사업의 기획, 추진, 목적달성, 만족도 등 • 기관장의 인사개혁 실적 • 사회복지직 배치 수준 • 복지행정인력의 행정정보시스템 활용률 • 사군구 새물행정시스템과의 정보연계시스템 보급률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 전체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연계시스템 사용률 •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 등록 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종사자 수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정도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무원 배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율 • 활동 자원봉사자의 연평균 봉사활동 시간 • 기부식품 등 증가율 및 이용자 증가율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 등 증가율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 활성화 정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자료: <표 2-1>과 동일

2. 기초생활보장

가.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기초생활보장의 중요성과 관심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비례하여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분야의 평가지표수는 감소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위기에 놓이거나 급여가 감소한 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활성화 정도가 평가지표로 새롭게 나타난 것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012년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과 관련된 평가지표는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이행급여특례보호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수급자관리실적, 긴급복지 지원실적 등이 있다.

〈표 2-3〉 2006~2012년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분야의 평가지표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복지사업비의 지방비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실적 신규수급자 발굴 실적 기초생활부정수급 발굴 및 환수 긴급지원 결정 ('06. 3. 24 긴급지원사업 시행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공무원 평균 기초보장담당 연수 민간 및 타 기관 연계 발굴실적 탈수급 실적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탈수급 실적 긴급지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공무원의 근무연속성 기초생활 부정수급 발굴 및 환수 급여조정 실적 긴급지원 후 타지원 연계 실적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기초생활 부정수급 발굴 및 환수 실적 급여조정 실적 탈수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기초생활 모니터링 제도 참여실적 긴급지원 후 타지원 연계실적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 수급자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 급여조정 실적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시군구 신규 대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조정 실적 정책대상자 대비 수급 가구 수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한시생계보호 종료자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조정 실적 긴급복지 지원실적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이행급여특례보호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관리실적 긴급복지 지원실적

자료: <표 2-1>과 동일

나.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와 관련된 평가지표는 2012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지원실적 등 3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3개의 지표는 사업에 따른 효과를 잘 나타내 주는 성과지표로서 의미가 크다.

〈표 2-4〉 2006~2012년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분야의 평가지표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사업 조건 이행률 취업·창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율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사업 기금 활용실적 자활공동체 창업 활성화 정도 자활사업 조건 불이행률 수급자의 자활성공률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자활공동체 사업운영 지원 혹은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액수 차상위계층의 취업·창업률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사업 기금 활용실적 자활공동체 사업운영 지원 혹은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액수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수급자의 자활 성공률 차상위계층의 취업·창업률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센터 및 자활공동체 우선구매(위탁) 등 사업운영 규모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기금 활용실적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수급자의 취·창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자활사업 참여자 수급자의 탈수급률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실적

자료: <표 2-1>과 동일

다.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과 관련된 평가지표는 2012년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등 3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은 허위사실로 의료보험급여를 받는 대상자에 대한 것으로 의료급

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관한 것으로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을 평가지표로 두는 것은 의료급여의 목적에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2-5〉 2006~2012년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분야의 평가지표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관리 신속처리율 • 입원환자의 재원 장기화 • 보건기관 이용률 •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 • 교육실적 • 친절도 • 접근성과 편의성 •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5일 초과 환자수 증감률 • 1인당 의료이용률 증감률 • 현금급여 실적 • 홍보실적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 민원처리 신속도 • 만성질환 화가처형 질환 및 12세 미만 아동 발급 실적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관리 신속 처리율 • 의료급여제도 교육실적 • 수급권자 1인당 평균의료급여 내원일수 증감률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제도 홍보실적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실적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감률 • 사례관리 대상자 평균진료비 증감률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관리 처리 • 자체사업 기획 및 추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감률 • 사례관리 대상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제도 교육 및 홍보 • 수급권자 1인당 평균의료급여 내원일수 증감률 •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증감률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자격처리의 신속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감률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감률 •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및 사례관리 대상자 비율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감률 • 사례관리 대상인원 목표 달성률 •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수급권자 및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자료: <표 2-1>과 동일

3. 복지서비스

가. 노인 복지서비스

노인 복지서비스 분야의 평가지표는 평가초기와 비교할 때 많은 부분이 감소하였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필요가 있겠다. 2012년 노인 복지서비스 분야의 평가지표는 노인

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개정법 시설·인력 기준 충족률과 기초노령연금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등이 있다.

〈표 2-6〉 2006~2012년 노인 복지서비스 분야의 평가지표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1인당 노인복지사업비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 노인생활시설 설치률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계획 수립 노인복지관련 지자체(특수)사업의 수 노인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사업비 증감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복지 전담부서설치 여부 및 공무원 1인당 노인수 노인 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 노인수 노인복지사업 추진 과정에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 노력 노인 일자리 제공 비율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1인당 노인복지사업비 노인복지사업 추진과정에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 노력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생활시설 설치율 노인복지 지방이양사업 집행액의 증감률 노인일자리 제공 노인 1인당 노인복지(회)관 서비스 이용 횟수 비율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노인복지사업 추진과정에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 노력 노인복지(회)관 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가노인복지시설 충족률 노인일자리 제공 비율 독거노인생활지도 서비스 수혜자 비율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거노인 생활 관리자 서비스 제공률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일자리 제공률(공공영역+민간영역)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요양시설 충족률 부적정 급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동자료 적기처리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노령연금 관리의 적절성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개정법 시설·인력 기준 충족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노령연금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자료: <표 2-1>과 동일

나.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2012년 평가지표는 장애인연금 수급률 뿐 이다. 평가 초기 1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점차 평가지표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단순히 장애인연금 수급률로 국한하여 평가를 하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표 2-7〉 2006~2012년 장애인 복지서비스 분야의 평가지표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사업비 •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여부 •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 지원 예산 •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조례 제정 수 • 장애인복지사업의 2004년 대비 사업비 증감률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평균재직월수 •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설치여부 및 개최실적 •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관련 기금적립액 • 장애인복지사업관련 특수사업 지원 예산 •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 • 장애인 생산물 우선 구매액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사업비 •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 지원 예산 • 장애인복지사업의 2005년 대비 사업비 증감률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사업기반 •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조례 제정수 •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 • 장애인 생산물우선구매액의 비율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시설 및 그룹홈 증축률 • 여성장애인 사업 발굴 노력 및 시행 실적 • 장애인 생산물 우선 구매액의 비율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담 과(팀) 설치여부 및 장애인 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연속성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장애인전용주차지역 과태료 부과건수 •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 비율 •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비율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비율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사업 성과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율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연금 지급률 	

자료: <표 2-1>과 동일

다.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보호서비스의 2012년 평가지표는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와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로 구성되었다. 아동보호서비스의 평가지표는 현재 요보호아동에 국한되어 있어 추후 요보호아동복지 외의 아동복지관련 평가지표가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표 2-8〉 2006~2012년 아동보호서비스 분야의 평가지표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1인당 아동복지사업비 • 아동 10만 명당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수 • 아동복지관련 특수시책사업 지원 아동1인당 사업비 • 아동참여 • 아동보호(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관련 전달체계 •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아동수 • 아동위원 배치율 • 아동복지관련 특수시책사업 규모 • 아동복지이양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실적증감률 • 방과후 아동보호 비율 • 요보호아동 대학진학률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1인당 아동복지사업비 • 아동위원 • 아동복지이양 사업에 대한 사업비증감률 •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보호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아동수 • 아동참여 • 아동 문화관련 기관 설치 및 프로그램교육실시 • 아동발달지원계좌(CDA)비율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위원 배치 및 회의결과 반영 • 아동문화 관련 기관 설치 및 프로그램교육실시 •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방지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참여 활성화 •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비율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개설 및 저축률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저축률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식아동 급식지원 내실화 정도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아동 방과 후 보호비율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자료: <표 2-1>과 동일

4. 보육기반 조성

보육기반 조성 분야의 평가지표는 전년도와 동일한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과 취약보육 실시율이다. 현재 보육시설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인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지표로서 현재 평가인증률 평균이 65.4%로 많은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고 있어 추후 보육시설 평가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생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에 관한 부분은 가임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좀 더 다양한 평가지표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표 2-9〉 2006~2012년 보육기반 조성 분야의 평가지표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 및 취약보육실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 확충률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수요 충족률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수 취약보육실시율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수 취약보육실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보육 실시율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보육 실시율

주: 2008년에는 아동복지분야에 보육지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2009~2011년 평가와의 비교를 위해 이를 보육분야로 분리하여 제시함.

자료: 1) 김승권 외(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11a). 2010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11b).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절 국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는 있는 평가로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와 앨버타 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캐나다는 연방주의가 발달된 국가로서 주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와 지자체는 주의 자체적 평가와 입법을 통해 주의 특성을 살린 성과관리 제도를 만들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지방자치단체 성과측정 프로그램(Municipal Performance Measurement Program)과 앨버타 주의 보건복지부 성과측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지방자치단체 성과측정 프로그램

캐나다는 주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성과평가에 서로 대표적으로 선행되고 있는 곳은 온타리오 주이다. 온타리오 주의 Municipal Performance Measurement Program(MPMP)은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것은 또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적화하고 지방자치단

체의 서비스 수준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용한 데이터로 사용된다.

MPMP는 지방자치단체의 13개 서비스 영역 상수(drinking water), 소방(fire service), 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ning), 도서관서비스(libraries),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 공원 및 휴양(parks and recreation), 경찰(police), 도로(roads), 고형폐기물(solid waste), 폭우(storm water), 환승/경유(transit), 폐수(waste water), 빌딩서비스(Building service) 등을 포함하고 있다.

13개 영역의 서비스 성과측정을 위해 MPMP는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 지표를 나누어 사용하는데, 효율성은 서비스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자원의 양을 의미하며 효과성은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결과를 달성한 정도와 관련된다. 13개 영역에 대한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13개 영역은 지자체에서 주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 주와 지자체의 관심 영역, 시민의 의견, 책무성 등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과 환경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0> MPMP 세부지표

서비스 영역	목적	측정유형	측정
지방 자치단체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 운영	효율성	• 총 지자체 운영비용에 대한 운영 및 경영관리 비용 비율
소방	효율적인 소방서비스	효율성	• 1,000\$ 당 소방서비스 운영비용
경찰	효율적인 경찰 서비스	효율성	• 1가구 당 경찰서비스 운영비용
	안전한 지역사회	효과성	• 인구 1천 명당 폭력범죄비율
	안전한 지역사회	효과성	• 인구 1천 명당 특성범죄비율
	안전한 지역사회	효과성	• 인구 1천 명당 총 범죄비율
	안전한 지역사회	효과성	• 청소년 1천 명당 청소년 범죄비율
도로	포장도로의 효율적인 유지	효율성	• 도로 1km 당 포장된 도로 운영비용
	비포장도로의 효율적인 유지	효율성	• 도로 1km 당 비포장된 도로 운영비용
	효율적인 겨울철 도로 유지	효율성	• 겨울철 도로 1km 당 유지비용
	지자체목표를 충족하는 보도상황	효과성	• 보도(인도)상황의 '좋거나' '매우 좋은' 정도의 비율
	겨울철 재해에 대응	효과성	• 겨울철 재해에 대응한 도로유지 비율
환승/경유	효율적인 관례적(conventional) 환승	효율성	• 정기적 고객의 환승 고객 수
	관례적 환승의 최대 이용	효과성	• 1년에 서비스 지역 내에서 관례적 환승을 하는 고객 수
폐수	효율적인 지자체 폐수 수거서비스	효율성	• 폐수 1km 당 폐수 수거서비스 비용
	효율적인 폐수처리 및 처분서비스	효율성	• 폐수 1천 리터 당 처리 및 처분 비용
	효율적인 지자체 폐수 시스템	효율성	• 폐수 1천 리터 당 수거, 처리, 처분 비용
	환경과 인간의 건강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 하수관리	효과성	• 1년에 폐수 100km 당 폐수main backup 수

70 지역복지정책평가결과 및 성과분석

서비스 영역	목적	측정유형	측정
폭우	효율적인 도시 폭우 관리	효율성	• 도시의 폭우관리를 위해 1km 당 배수시스템 운영비용
	효율적인 지방 폭우 관리	효율성	• 지방의 폭우관리를 위해 1km 당 배수시스템 운영비용
상수	효율적인 지자체 여과 서비스	효율성	• 1천 리터 당 상수 여과 운영비용
	효율적인 지자체 상수 분배 서비스	효율성	• 1천 리터 당 상수 분배 운영비용
	효율적인 지자체 상수 시스템	효율성	• 1천 리터 당 상수 여과 및 분배 운영비용
	안전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수	효과성	• 사실상 지자체 상수제공에 해당되는 보건의료사무소에 의해 boil water advisory 편중된 날짜 수
	시스템신뢰도 향상	효과성	• 1년에 상수파이프 100km 당 터진 수도관 수
고형 폐기물	효율적인 지자체 쓰레기수거 서비스	효율성	• 1톤, 또는 1가구 당 쓰레기수거 운영비용
	효율적인 지자체 쓰레기처분 서비스	효율성	• 1톤, 또는 1가구 당 쓰레기 처분 운영비용
	효율적인 고형폐기물 수거 서비스	효율성	• 1톤 또는 1가구 당 고형폐기물 수거 운영비용
	효율적인 고형폐기물 관리	효율성	• 1톤 또는 1가구 당 고형폐기물관리 운영비용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향상된 수거	효과성	• 1천 가구 당 쓰레기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 민원율
	고형폐기물관리시설의 적합성 측정	효과성	•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고형폐기물관리업체 수
	매립 또는 소각으로부터 지자체 고형폐기물 제거프로그램 전환	효과성	• 고형폐기물의 재활용품 전환율
공원 및 휴양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효율성	• 1인당 공원 운영비용
	휴양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효율성	• 1인당 휴양프로그램 운영비용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효율성	• 1인당 휴양시설 운영비용
	공원, 휴양프로그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효율성	• 1인당 공원, 프로그램, 시설 운영비용
	산책로의 휴양기회	효과성	• 도서관 서비스 운영비
	인구수에 적합한 공공용지(Open space)	효과성	• 1천 명당 공간의 면적(헥타르)
	주민의 욕구에 맞는 휴양프로그램 제공	효과성	• 1천 명당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전체참가자 시간
	인구수에 적합한 실내 휴양 시설	효과성	• 1천 명당 실내 시설의 면적(평방미터)
	인구수에 적합한 실내 휴양 시설	효과성	• 1천 명당 실외 시설의 면적(평방미터)
도서관	효율적인 도서관 서비스	효율성	• 1인당 도서관 서비스 운영비용
	도서관서비스 이용 증가	효과성	• 1인당 도서관 이용률
	도서관 사용에 있어 더 나은 정보 제공	효과성	• 총 도서관 이용률 중 전자도서관 이용률
	도서관 사용에 있어 더 나은 정보 제공	효과성	• 총 도서관 이용률 중 비전자도서관 이용률
토지이용계획	이주영역의 새로운 토지 창출발생	효과성	• 이주영역내에 위치한 새로운 토지의 비율, 블록(block), 유닛(unit)의 승인율
	농지의 보전	효과성	• 리포팅이여(reporting year)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재지정된, 즉 농업목적으로 지정된 토지면적 비율
	농지의 보전	효과성	• 200년 기준연도에 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지정된 농업목적으로 지정된 토지 비율
	농지의 보전	효과성	• 리포팅이여(reporting year)동안 다른 용도로 재지정되었다가 농업목적을 위해 지정된 토지면적(헥타르)
	농지의 보전	효과성	• 2000년 1월 1일 이래로 다른 용도로 재지정되었다가 농업목적을 위해 지정된 토지면적(헥타르)

자료: Ontario ministry 홈페이지 <http://www.mah.gov.on.ca> 에서 2013년 11월 21일 인출.

2. 캐나다 앨버타 주의 보건복지부 성과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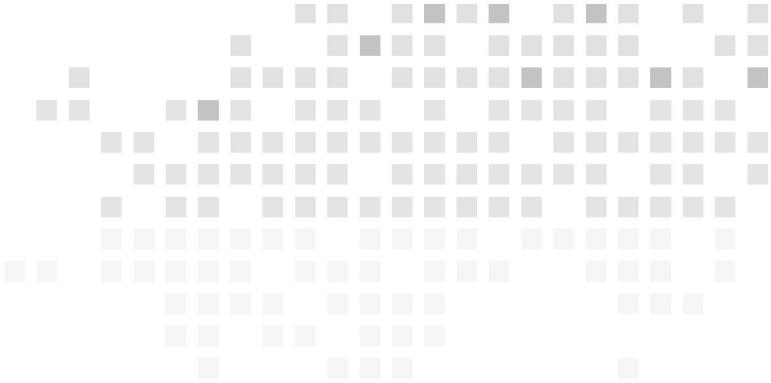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는 「Heath and wellness annual report」를 통해 거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9~2010년 보고서에 나타난 성과목표는 크게 7개로 구분되어 18개의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2-11> 보건복지부 성과측정

성취목표 1. 효과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헬스시스템(Health system)	
측정 1.A	전체 의료시스템(Health system) 대한 대중의 평가 - 의료시스템을 '완벽하다' 또는 '좋다'라고 말한 사람의 비율
성취목표 2.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의료시스템	
측정 2.A	연간 부처 운영비용 - 실제 전년 대비 변화 비율
측정 2.B	민원발생정도 - 지난해 주민이 보고한 불만비율
성취목표 3. 건강한 사회 건강한 주민	
측정 3. A	스스로 보고한 건강상태 - 스스로 건강이 '뛰어남', '매우양호', '양호'라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측정 3. B	양호한 체질량지수(BMI)를 가진 사람의 비율 - BMI 18.5~24.9인 것으로 보고한 사람의 비율
측정 3. C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매년 권장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비율(65세 이상/6~23개월 영아)
측정 3. D	흡연 - 흡연자의 비율(12세~19세)
측정 3. E	정기적 과다 음주 - 젊은 주민들 사이의 주기적이고 과도한 음주 비율
성취목표 4. 위험을 완화하고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력한 공중보건의 능력	
측정 4. A	성병 전염 - 매독, 최근 발표된 전염률
측정 4. B	환자 안전 - 지난해 헬스케어를 받는 동안 자신이나 직계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난 비율
측정 4. C	공공의료시스템의 신뢰성 - 지난해 헬스케어서비스를 받은 주민의 만족도 비율
성취목표 5. 의료인력협력, 발전, 능력 강화	
측정 5. A	1차의료네트워크를 통한 1차의료접근 - 1차 의료네트워크에 등록된 주민 비율
성취목표 6.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측정 6. A	대기시간
측정 6. B	응급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중의 평가 - 필요로 하는 서비스 이용이 '쉬웠다'라고 응답한 비율
측정 6. C	장기치료를 요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 수

성취목표 7. 혁신과 기술을 통한 의료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	
측정 7. A	앨버타 주 Netcare에 접속하는 요양보호사의 수
측정 7. B	앨버타 Health link를 인식하는 앨버타주민 비율
	앨버타 Health link를 지난해 이용한 비율
측정 7. C	POSP(Physician office system program)에 등록된 의사와 병원 내에서 전자의료기록을 사용한 비율

자료: Alberta ministry(2010). Health and Wellness Annual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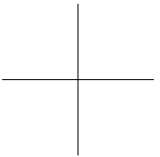


제3장 2013년 복지종합평가 결과 종합분석

제1절 평가개요

제2절 2013년 주요 평가 결과

제3절 2013년 복지종합평가 결과의 시사점



3

2013년 복지종합평가 결과 < 종합분석 >

제1절 평가개요

정부 평가업무 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평가는 2009년부터 안전행정부의 ‘시·도 합동평가’에 통합·실시되고 있다. 합동평가에 통합되면서 복지종합평가의 평가들은 대폭 간소화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여 실시되던 2006~2008년 기간에는 많은 평가지표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정책의 평가가 수행 가능하였으나, 안전행정부로 이관된 후에는 합동평가의 성격상 많은 지표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워 지표수를 대폭 줄였다. 더군다나 시·군·구를 방문하여 직접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도에서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질적 지표는 제외되는 경향이다.

실제로 안전행정부의 시·도 합동평가에 통합된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관련된 복지평가지표는 2009년의 50개 지표에서 2010년에는 37개, 2011년 28개, 2012년과 2013년에는 24개 지표로 감소되었다.

〈표 3-1〉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의 틀

(단위: 개, 점)

연도	평가분야(평가영역)	평가내용	(세부)평가지표	배점
2006년	8	52	95	770
2007년	8	57	81	1,000
2008년	9	55	76	1,000
2009년	9	17	50	2,977
2010년	9	14	37	7,715
2011년	9	9	28	7,280
2012년	4	8	24	6,713
2013년	4	8	24	6,726

이와 같은 평가지표의 감소는 종합평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로 인하여 보건복지부는 2012년에 복지종합평가와는 별도로 사례관리와 창의적 전달체계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병행하였고, 2013년에는 지역복지 실행계획, 복지행정(민관협력 등), 조례제정 등에 대한 별도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한계

를 극복하고 있는 경향이다.

제2절 2013년 주요 평가 결과

1. 전국 및 3대 지역의 평가점수

2013년 복지종합평가 결과는 6,726점 만점에 평균 4,823.5점이며,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점수는 71.7점이다. 100점 기준 환산의 평균점수는 2012년 68.8점에서 다소 상승한 것이다.

〈표 3-2〉 2013년 복지종합평가의 전국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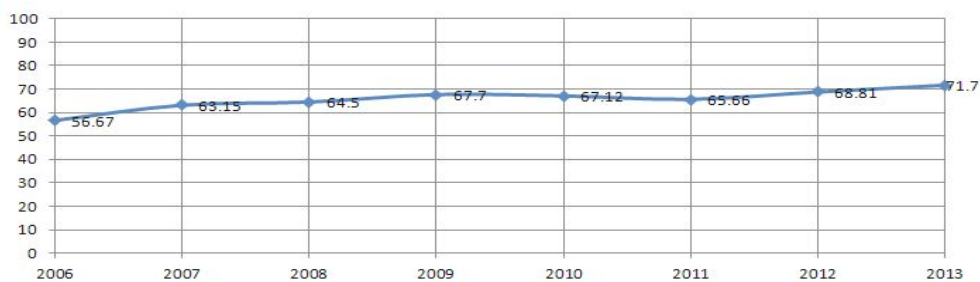
(단위: 점)

	총점기준		100점 기준 환산	
	만점	평균	만점	평균
총점	6,726	4,823.5	100.0	71.7

평가결과의 평균 점수를 2006년부터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100점 기준 2006년 56.67점, 2007년 63.15점, 2008년 64.5점, 2009년 67.7점, 2010년 67.12점, 2011년 65.66점, 2012년 68.81, 2013년 71.7점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평균 70점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효과성 증대와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개발에 보다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3-1] 복지종합평가의 전국 평균 점수 변화추이 : 06~13년

(단위: 점)



평가결과의 전국 격차를 살펴보면, 최고 6,078.4점, 최저 3,779.8점이었다.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고 90.37점, 최저 56.20점이다. 따라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획득한 지자체 간에 복지수준의 격차가 약 1.6배나 되었다.

〈표 3-3〉 2013년 복지종합평가 총점

(단위: 점)

영역	총점 기준			100점 기준 환산		
	최고	최저	격차(최고-최저)	최고	최저	격차(최고-최저)
총점	6,078.4	3,779.8	2,298.6	90.37	56.20	34.17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대 지역별 복지평가 총점의 평균은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어촌이었으며, 대도시는 가장 낮았다. 이는 2012년 평가결과와 동일한 양상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에 의해 살펴보면, 중소도시 74.72점, 농어촌 71.46점, 대도시 68.91점이었다.

3대 지역 내에서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의 격차도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중소도시 32.26점, 농어촌 28.02점, 대도시 27.93점으로 나타났다.

<표 3-4> 2013년 복지종합평가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점)

	총점			100점 기준 환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평균	4,634.6	5,025.3	4,806.3	68.91	74.72	71.46
최고	5,658.7	6,078.4	5,709.9	84.13	90.37	84.89
최저	3,779.8	3,908.6	3,825.2	56.20	58.11	56.87
격차(최고-최저)	1,878.9	2,169.8	1,884.7	27.93	32.26	28.02

이와 같은 3대 지역 내에서의 평가결과의 격차는 과거년도(2006~2011년) 평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대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내에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수준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요구된다.

<표 3-5>와 [그림 3-2]에서 나타나듯이 중소도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그 격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중소도시 기초지자체의 격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도시와 농어촌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는 여전히 큰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은 복지격차는 자체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재정자립도에서의 격차에 기인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5> 2006~2013년 지역별 복지종합평가의 최고 및 최저(100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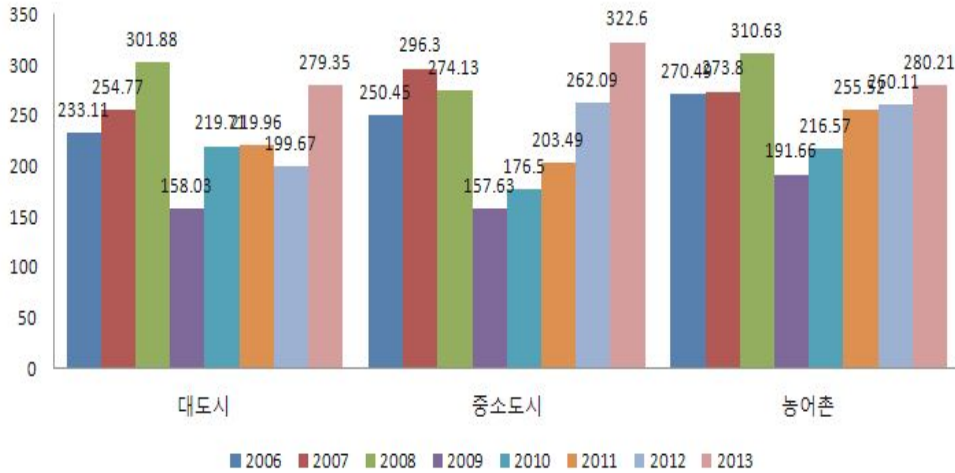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6년	최고	70.84	72.13	68.23
	최저	47.53	47.09	41.18
	차이(최고-최저)	23.31	25.04	27.05
2007년	최고	75.77	80.05	73.84
	최저	50.30	50.42	46.53
	차이(최고-최저)	25.47	29.63	27.31
2008년	최고	83.93	80.99	77.51
	최저	53.74	53.57	46.45
	차이(최고-최저)	30.19	27.42	31.06
2009년	최고	73.73	75.99	78.68
	최저	57.93	60.23	59.51
	차이(최고-최저)	15.80	15.76	19.17
2010년	최고	76.22	77.64	78.60
	최저	54.25	59.99	56.94
	차이(최고-최저)	21.97	17.65	21.66
2011년	최고	75.44	78.52	78.33
	최저	53.45	58.17	52.78
	차이(최고-최저)	21.99	20.35	25.55
2012년	최고	76.72	83.92	81.87
	최저	56.75	57.71	55.86
	차이(최고-최저)	19.97	26.21	26.01
2013년	최고	84.13	90.37	84.89
	최저	56.20	58.11	56.87
	차이(최고-최저)	27.93	32.26	28.02

주: 평가총점은 2006년 720점, 2007년과 2008년 1,000점, 2009년 2,977점, 2010년 7,715점, 2011년 7,280점, 2012년 6,713점, 2013년 6,726점이며 8개년도 비교를 위해 평가총점을 1,000점으로 환산함.

자료: 1) 김승권 외(2006).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7).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10). 2009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승권 외(2011a). 2010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김승권 외(2011b).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3-2] 2006~2013년 지역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1,000점 기준 환산)



2013년 우수지자체 선정을 위하여 전체 229개 시군구를 16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그룹구분의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대 지역, 재정자립도, 인구수에 근거하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5개 평가그룹, 농어촌 6개 평가그룹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유사한 복지환경을 가진 지자체 간의 비교에 의하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2013년 복지정책평가 평균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가그룹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비교하면, 중소도시 E그룹이 27.66점으로 가장 격차가 컸으며, 농어촌 A그룹은 13.22점으로 가장 작았다. 이를 3대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도시는 E그룹이 24.13점으로 가장 컸고, D그룹은 16.72점으로 가장 작았고, 중소도시는 E그룹이 27.66점으로 가장 컸고, B그룹이 13.22점으로 가장 작았으며, 농어촌은 F그룹이 26.25점으로 가장 컸고, A그룹이 14.71점으로 가장 작았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유사한 복지환경 즉, 지역,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이 유사한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준은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어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도, 노력, 효과적 추진 등이 복지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6〉 2013년 16개 평가그룹별 복지종합평가 총점의 평균 및 격차

(단위: 점)

평가그룹		총점 기준				100점 기준 환산			
		평균	최고	최저	차이 (최고-최저)	평균	최고	최저	차이 (최고-최저)
대도시	A	4330.87	5013.30	3779.80	1233.50	64.39	74.54	56.20	18.34
	B	4522.64	5334.50	3945.40	1389.10	67.24	79.31	58.66	20.65
	C	4736.27	5406.90	3859.40	1547.50	70.42	80.39	57.38	23.01
	D	4826.58	5375.50	4250.80	1124.70	71.76	79.92	63.20	16.72
	E	4765.29	5658.70	4035.30	1623.40	70.85	84.13	60.00	24.13
중소도시	A	4988.44	5313.50	4416.70	896.80	74.17	79.00	65.67	13.33
	B	5080.93	5653.10	4763.80	889.30	75.54	84.05	70.83	13.22
	C	4973.28	5677.70	4168.60	1509.10	73.94	84.41	61.98	22.43
	D	4903.07	5677.90	3908.60	1769.30	72.90	84.42	58.11	26.31
	E	5183.65	6078.40	4218.30	1860.10	77.07	90.37	62.72	27.66
농어촌	A	4831.85	5270.30	4281.20	989.10	71.84	78.36	63.65	14.71
	B	4858.57	5709.90	4210.70	1499.20	72.24	84.89	62.60	22.29
	C	4685.02	5564.90	4476.80	1088.10	69.66	82.74	66.56	16.18
	D	4915.33	5583.80	4132.60	1451.20	73.08	83.02	61.44	21.58
	E	4604.95	5408.90	3825.20	1583.70	68.46	80.42	56.87	23.55
	F	4780.73	5695.10	3929.40	1765.70	71.08	84.67	58.42	26.25

2. 전국 및 3대 지역의 평가지표별 평가점수

2013년 평가지표별 평균 평가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가 72.9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72.88점,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72.32점 순이었다.

〈표 3-7〉 2013년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만점	총점 평균	100점 기준 환산
지역사회서비스 기반확충도	550	400.85	72.88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950	667.66	70.28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1240	878.78	70.87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1050	744.40	70.90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640	462.84	72.32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	666	485.98	72.97
아동보호 서비스	560	413.52	64.00
보육기반 조성	1070	769.51	71.92

반면에 아동보호 서비스는 64.00점으로 가장 낮았다. 2012년과 비교하면, ‘노인장애인복지서비스’(65.20점)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에, ‘아동보호서비스’(65.96점)는 여전히 낮은 수준(김승권 외, 2012)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복지정책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백점기준으로 환산하여 3대 지역을 비교하면, 지표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대도시는 「보육기반 조성」이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는 「지역사회서비스 기반확충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아동보호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은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과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가 가장 높았다.

3대 지역 간 격차는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가 18.08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15.18점으로 컸다. 반면에 「아동보호 서비스」는 2.53점으로 격차가 가장 작았고, 다음은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4.44점으로 작았다.

<표 3-8> 2013년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의 3대 지역 격차(100점 기준 환산)

(단위: 점)

영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격차
지역사회서비스 기반확충도	62.30	80.38	75.58	18.08(중소도시-대도시)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64.78	79.96	69.00	15.18(중소도시-대도시)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67.72	74.07	70.75	6.35(중소도시-대도시)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68.93	75.14	68.65	6.49(중소도시-농어촌)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69.47	73.43	73.91	4.44(농어촌-대도시)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	69.71	71.89	77.07	7.36(농어촌-대도시)
아동보호 서비스	73.35	75.37	72.84	2.53(중소도시-농어촌)
보육기반 조성	74.15	72.33	69.43	4.72(대도시-농어촌)

2013년 복지정책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평균 점수에 의해 16개 그룹별로 비교하면, 지표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는 중소도시 A그룹(464.41점)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 A그룹(289.30점)이 가장 낮았다. 「민간복지자원 활성화」는 중소도시 B그룹(765.70점)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 A그룹(577.60점)이 가장 낮았다.

저소득층 업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업무의 적절성」은 중소도시 E그룹(944.05점)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 A그룹(793.60점)이 가장 낮았다. 「자활사

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는 대도시 D그룹(850.50점)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 A그룹(635.60점)이 가장 낮았다.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은 중소도시 E그룹(517.12점)이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B그룹(419.84점)이 가장 낮았다.

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는 대도시 E그룹(558.96점)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 A그룹(363.34점)이 가장 낮았다. 「아동보호 서비스」는 중소도시 B그룹(438.29점)이 가장 높았고, 농어촌 D그룹(382.52점)이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보육기반 조성」은 중소도시 E그룹(868.84점)이 가장 높았고, 농어촌 E그룹(694.68점)이 가장 낮았다.

〈표 3-9〉 2013년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의 16개 그룹 간 격차

(단위: 점)

지역	평가그룹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 확충도	민간복지 자원 활성화	기초생활 업무의 적절성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노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	보육기반 조성
전국		400.85	667.66	878.78	744.40	462.84	485.98	413.52	769.51
대도시	A그룹	289.30	577.60	793.60	635.60	446.72	363.34	413.65	811.06
	B그룹	314.60	606.10	802.69	697.90	422.40	440.30	406.19	832.46
	C그룹	345.40	691.60	888.67	708.40	448.00	457.32	429.33	767.55
	D그룹	372.90	590.90	857.25	850.50	468.48	507.64	394.24	784.67
	E그룹	394.43	610.71	857.37	726.75	437.03	558.96	410.40	769.64
중소 도시	A그룹	464.41	734.47	919.93	819.66	445.60	425.27	436.80	742.31
	B그룹	452.10	765.70	928.35	816.90	419.84	475.08	438.29	784.67
	C그룹	437.80	739.10	887.84	756.70	486.40	497.28	409.17	758.99
	D그룹	415.80	723.27	911.81	743.40	482.56	509.12	400.21	716.90
	E그룹	438.90	692.87	944.05	806.40	517.12	490.62	424.85	868.84
농어촌	A그룹	391.35	697.15	907.11	675.23	483.45	512.31	437.66	727.60
	B그룹	391.35	658.42	912.83	739.85	462.77	510.60	423.88	758.88
	C그룹	412.92	667.92	864.18	820.62	486.40	492.67	406.65	697.15
	D그룹	421.81	675.23	927.14	698.65	442.09	523.41	382.52	844.48
	E그룹	414.19	629.92	802.18	701.08	479.02	484.98	398.89	694.68
	F그룹	459.25	608.00	852.06	691.50	483.66	552.62	398.40	735.24

3. 종합평가 점수와 재정자립도 및 인구와의 상관관계

단순상관관계 분석은 한 변수가 다른 하나의 변수와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때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 상관계수 r 값은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상관성이 높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5 이상이 되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자립도와 평가총점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유의미하였으며($P<.05$), 재정자립도와 인구수의 상관관계는 매우 강하게 유의미하였다($P<.001$). 그렇지만 상관관계의 방향은 달랐는데, 재정자립도와 평가총점과의 상관관계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진 지자체의 평가결과가 좋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가진 지자체의 평가결과는 좋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재정자립도 높다는 점이 평가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노력과 관심이 높다면 좋은 평가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재정자립도와 인구수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자체가 인구수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인구수와 평가총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3-10〉 2013년 평가총점, 인구수, 재정자립도 간의 상관관계

구분	총점	인구수	재정자립도
총점	1	-	-
인구수	-.071	1	-
재정자립도	-.157*	.641***	1

주: * $P<.05$, ** $P<.01$, *** $P<.001$

제3절 2013년 복지종합평가 결과의 시사점

3대 지역 간 평가점수의 격차,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지자체 간 평가점수의 격차, 유사한 복지환경을 가진 각 그룹 내에서의 기초 지자체 간 격차 평가점수의 격차로 미루어보아 복지의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은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2013년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평가점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복지수준이 점차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군·구 대상의 복지평가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재정자립도와 평가점수와의 상관관계가 역(-)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재정의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특히, 노력과 관심)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채 가시지 않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효과적·효율적 복지정책의 추진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복지에서의 민관협력의 강화와 전달체계의 효율화 등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제4장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4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 평가결과 분석 <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들의 4개 영역 중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표는 「복지기반조성」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가들의 전체 24개 세부지표 중 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과 통합 사례관리 추진실적이다.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표의 가중치는 5.5로서 전년도(2012년)의 10.7에 비해 절반으로 낮아졌다.

〈표 4-1〉 2012~2013년 지역사회서비스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선택형,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마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률 위기가구 통합서비스(사례관리) 추진실적 	10.7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선택형, 개발형) 통합 사례관리 추진실적 	5.5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표는 55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00.85점(SD=95.40)이었다.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550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220점으로 기본 점수인 40%만을 획득하고 있어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크게 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중소도시 지자체의 평균 점수가 442.10점(SD=78.44)으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 지자체는 중소도시 지자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평균 415.70점(SD=94.81)이었으며, 대도시 지자체는 평균 342.64점(SD=84.00)으로 가장 낮았다.

3대 지역 내에서의 지자체 간의 격차는 유사하게 큰 수준이었다. 즉, 중소도시 지자

체와 농어촌 지자체의 최고점은 만점(100%)이었고, 최저점은 기본 점수(40%)이었다. 이와는 달리 대도시 지자체의 최고점은 만점(100%) 보다 훨씬 낮은 517점이었고, 최저점은 기본 점수(40%)인 220점이었다.

〈표 4-2〉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의 평가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전국	(229)	550.00	550.00	220.00	400.85	95.40
	대도시	(74)	550.00	517.00	220.00	342.64	84.00
	중소도시	(76)	550.00	550.00	220.00	442.10	78.44
	농어촌	(79)	550.00	550.00	220.00	415.70	94.8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표의 2개 세부지표 평가결과는 <표 4-3>에 제시된다. 첫 번째 세부 지표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에 대한 평가결과는 40점 만점에 평균 29.78점(SD=9.15)이었다. 지역별 평균 점수는 중소도시 33.29점(SD=8.37), 농어촌 29.37점(SD=9.51), 대도시 26.62점(SD=8.34)이었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40점 만점이 최고 점수이었고, 기본 점수인 16점이 최저 점수를 보여 지역선택형 및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각 지역 내에서 지자체 간에 큰 격차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세부 지표인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3.10점(SD=13.09)이었다. 지역별 평균 점수는 중소도시 47.09점(SD=11.97), 농어촌 46.22점(SD=13.04), 대도시 35.68점(SD=11.12)으로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유사하였으나, 대도시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내에서의 지자체 간 점수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최고 점수는 60점 만점이었고, 최저 점수는 기본 점수인 24점이었다.

따라서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의 의미를 살펴보면, 농어촌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환경(넓은 면적과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대도시는 구청 중심의 사례관리에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주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맞지 않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4-3〉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단위: 개, 점)

세부지표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	전국	(229)	40.00	40.00	16.00	29.78	9.15
	대도시	(74)	40.00	40.00	16.00	26.62	8.34
	중소도시	(76)	40.00	40.00	16.00	33.29	8.37
	농어촌	(79)	40.00	40.00	16.00	29.37	9.51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전국	(229)	60.00	60.00	24.00	43.10	13.09
	대도시	(74)	60.00	60.00	24.00	35.68	11.12
	중소도시	(76)	60.00	60.00	24.00	47.09	11.97
	농어촌	(79)	60.00	60.00	24.00	46.22	13.04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선택형,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선택형, 개발형)’은 “(집행액(국비+지방비))/사업별 예산배정액(국비+지방비)) × 100”에 의해 평가된다. 여기서 사업별 예산배정액은 ‘12.2~’13.1월까지 복지부 사업별 최종 사업승인액이고, 집행액은 ‘12.2~’13.1월까지의 집행액이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 (집행액(국비+지방비))/사업별 예산배정액(국비+지방비))×100
- 사업별 예산배정액 : ‘12.2~’13.1월까지 복지부 사업별 최종 사업승인액
- 집행액 : ‘12.2~’13.1월까지 집행액
- 평가대상사업 : 지역선택형 및 지역개발형

동 산출식을 적용하여 집행률이 96% 이상이면 만점인 40점을, 93% 이상~96% 미만이면 34점을, 90% 이상~93% 미만이면 28점을, 87% 이상~90% 미만이면 22점을, 87%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16점을 부여하였다.

전체 지자체 중 만점인 40점을 획득한 지자체가 31.00%로 가장 많았고, 기본 점수인 16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20.52%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중소도시 50.00%, 농어촌 32.91%, 대도시 9.46%로 대도시가 가장 저조하였다.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친 지자체는 대도시가 39.19%나 되었고, 농어촌

22.79%, 중소도시 10.53%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 지자체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배정 및 예산집행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가능성을 고려한 예산배정이 필요할 것이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4-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집행액(국비+지방비)/사업별 예산배정액(국비+지방비)) × 1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	40점: 96% 이상	31.00	9.46	50.00	32.91
	34점: 93% 이상~96% 미만	21.40	29.73	18.42	16.46
	28점: 90% 이상~93% 미만	14.41	17.57	11.84	13.92
	22점: 87% 이상~90% 미만	12.67	10.81	9.21	13.92
	16점: 87% 미만	20.52	39.19	10.53	22.79
계(수)		100.00 (229)	100.00 (74)	100.00 (76)	100.00 (79)

2012년에 229개 전체 지자체가 집행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선택형, 개발형)의 재정은 1,748억원이었다.¹⁾전국의 1개 지자체 당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선택형, 개발형)의 예산 배정액은 평균 820,091천원이었고, 실제 집행액은 평균 763,458천원이어서 예산집행률은 93.09%였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선택형, 개발형)의 예산 배정 대비 실제 집행인 예산집행률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소도시→농어촌→대도시의 순이었다. 즉, 예산집행률이 가장 높은 중소도시 1개 지자체 당 예산 배정액은 평균 1,061,780.9천원이었고 실제 집행액은 평균 1,014,284.1천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95.53%이었다. 다음으로 예산집행률이 높은 농어촌 1개 지자체 당 예산 배정액은 평균 330,682천원이었고 실제 집행액은 평균 305,864.5천원으로 예산집행률은 92.50%이었다.

이와는 달리 대도시 1개 지자체 당 예산 배정액은 평균 1,094,347.5천원이었고 실제 집행액은 평균 994,364천원이어서 예산집행률은 가장 낮은 90.86%이었다. 즉, 대도시 지자체는 예산 배정액은 가장 많았지만 실제 집행액은 중소도시 보다도 낮은 수

1) 2011년에 230개 전체 지자체가 집행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선택형, 개발형)의 재정은 약 1,682억원이었다(김승권 외, 2012).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선택형, 개발형) 기초분석

(단위: 개, 천원,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1개 지자체 당 배정액	1개 지자체 당 집행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선택형, 개발형)
전국 평균	(229)	820,091.3	763,457.7	93.09
대도시 평균	(74)	1,094,347.5	994,363.8	90.86
중소도시 평균	(76)	1,061,780.9	1,014,284.1	95.53
농어촌 평균	(79)	330,681.6	305,864.5	92.50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선택형, 개발형)의 예산집행률의 지자체 간 격차는 현저하였다. 전국 229개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은 최고 111.52%, 최저 54.21%로 격차가 무려 57.31%pt나 되었다. 이를 3대 지역별 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내에서의 최고 집행률과 최저 집행률의 차이는 농어촌이 57.31%pt로 가장 컸고, 중소도시와 대도시는 유사한 32.44%pt, 30.91%pt이었다.

〈표 4-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111.52	54.21	57.31
대도시	(74)	99.46	68.55	30.91
중소도시	(76)	108.07	75.63	32.44
농어촌	(79)	111.52	54.21	57.31

2.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통합서비스(사례관리) 추진실적’은 다음에 제시된 산출식에 의하여 평가된다. 여기서 사례관리 요청건수는 '12.1.1~12.11.30일까지 읍·면·동 및 시·군·구의 초기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례관리 요청건수이고,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는 동일한 기간에 접수된

사례관리 요청건수 중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한 건수이며, 사례관리 종결건수는 '12.1.1 일 이후 초기상담을 통해 등록된 대상자 중 종결된 건수를 말한다. 다만, 종결원인 중 대상자의 거절이나 포기, 사망, 이사, 연락두절에 따른 종결은 사례관리 종결건수에서 제외된다.

○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left(\frac{(A \times 1) + (B \times 0.8)}{\text{사례관리 요청건수}} \times 100 \right) \times 0.3 + \left(\frac{(C \times 1) + (D \times 1.2)}{\text{사례관리 계획수립건수}} \times 100 \right) \times 0.7$
- 사례관리 요청건수 : '12.1.1~12.11.30일까지 읍면동 및 시군구 초기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례관리 요청건수
-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 '12.1.1~12.11.30일까지 접수된 사례관리 요청건수 중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한 건수
- 사례관리 종결건수 : '12.1.1이후 초기상담을 통해 등록된 대상자 중 종결로 처리된 건수 ※ 종결원인 중 대상자의 거절이나 포기, 사망, 이사, 연락두절에 따른 종결은 제외

동 산출식을 적용하여 추진실적이 80 이상이면 만점인 60점을, 68 이상~80 미만이면 51점을, 56 이상~68 미만이면 42점을, 44 이상~56 미만이면 33점을, 44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24점을 부여하였다.

전체 지자체 중 만점인 6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25.76%이었고, 기본 점수인 24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18.78%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농어촌 35.45%, 중소도시 32.89%로 유사한 수준에서 많았고, 반면에 대도시는 8.1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친 지자체는 대도시가 35.15%로 많았고,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각각 11.39%, 10.53%로 비교적 적었다.

〈표 4-7〉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left(\frac{(A \times 1) + (B \times 0.8)}{\text{사례관리 요청건수}} \times 100 \right) \times 0.3 + \left(\frac{(C \times 1) + (D \times 1.2)}{\text{사례관리 계획수립건수}} \times 100 \right) \times 0.7$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60점: 80 이상	25.76	8.11	32.89	35.45
	51점: 68 이상~80 미만	16.16	5.41	22.37	20.25
	42점: 56 이상~68 미만	21.40	29.73	23.68	11.39
	33점: 44 이상~56 미만	17.90	21.62	10.53	21.52
	24점: 44 미만	18.78	35.15	10.53	11.39
계(수)		100.00(229)	100.00(74)	100.00(76)	100.00(79)

주: A는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의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B는 요청일로부터 31일 이상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C는 사례관리 1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사례관리 종결건수; D는 사례관리 6개월 이상 사례관리 종결 건수.

따라서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는데, 사례관리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사례관리업무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대도시 지자체는 통합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012년에 229개 전체 지자체의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을 보면, 사례관리 요청건수는 평균 287.1건이었고,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는 166.7건이었으며, 사례관리 종결건수는 113.7건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 간에 큰 격차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중소도시 지자체가 가장 많았고, 대도시 지자체와 농어촌 지자체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즉, 중소도시 1개 지자체 당 사례관리 요청건수는 평균 460.5건이었고,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는 평균 247.5건이었으며, 사례관리 종결건수는 평균 183.1건이었다. 반면에 대도시와 농어촌의 1개 지자체 당 사례관리 요청건수의 평균은 각각 200.189건, 201.8건이었고,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의 평균은 각각 130.9건, 122.6건이었으며, 사례관리 종결건수의 평균은 각각 67.0건, 90.7건이었다.

본 세부지표의 평가 산출식에 기초한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은 전국 평균 63.51%이었다. 중소도시 지자체가 평균 69.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로 평균 68.47%이었으며, 대도시 지자체는 평균 51.98%로 가장 낮았다.

〈표 4-8〉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기초분석

(단위: 개, 건,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1개 지자체 당 사례관리요청건수	1개 지자체 당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1개 지자체 당 사례관리 종결건수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전국 평균	(229)	287.1	166.7	113.7	63.51
대도시 평균	(74)	200.2	130.9	67.0	51.98
중소도시 평균	(76)	460.5	247.5	183.1	69.56
농어촌 평균	(79)	201.8	122.6	90.7	6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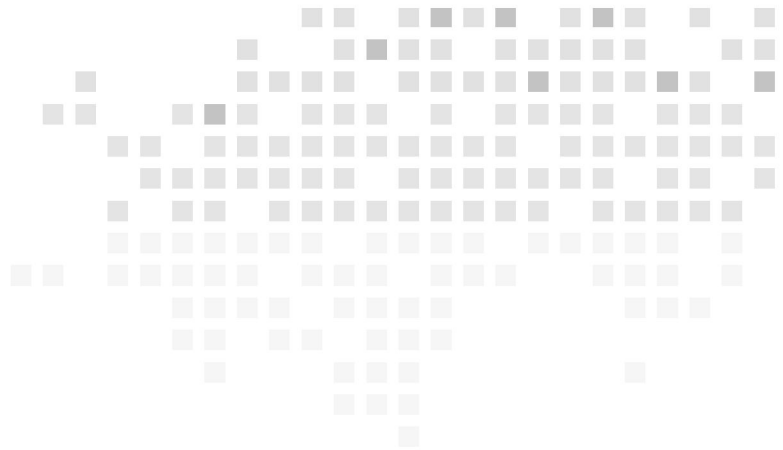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본 세부지표의 평가 산출식에 기초한 추진실적의 전국 및 3대 지역 내 격차도 현저하였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지역 내에서의 최고 집행률과 최

저 집행률의 차이는 약 3~5배의 차이가 났다. 즉, 최고 실적과 최저 실적의 차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79.354%pt, 78.560%pt이었고, 농어촌은 69.746%pt이었다.

〈표 4-9〉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의 지역격차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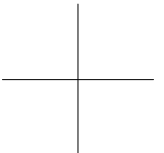
지역	(분석 지자체 수)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101.096	19.775	81.321
대도시	(74)	99.129	19.775	79.354
중소도시	(76)	100.995	22.435	78.560
농어촌	(79)	101.096	31.350	69.746



제5장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5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평가결과 분석 <<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2012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들의 4개 영역 중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지표는 「복지기반조성」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가들의 전체 세부지표 중 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과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이다. 특히,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는 복합지표로 기부식품 등 증가율과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지표의 가중치는 9.5로서 타 지표에 비하여 낮을 뿐만 아니라 2011년 4.9, 2012년 4.5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졌다.

〈표 5-1〉 2012~2013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기부식품 활성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 등 증가율 -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4.5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 등 증가율 -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9.5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지표는 950점 만점에 평균 667.66점(SD=154.56)이었다.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950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380점으로 기본 점수인 40%만을 획득하고 있어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매우 컸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 지자체의 평균 점수가 731.13점(SD=144.50)으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 지자체는 평균 655.50점(SD=158.52)이었으

며, 대도시 지자체는 평균 615.45점(SD=138.52)으로 가장 낮았다. 3대 지역 내에서의 지자체 간 격차는 동일하게 큰 수준이었다. 즉, 지역에 관계없이 최고점수는 만점(100%)인 950점이었고, 최저 점수는 기본 점수(40%)인 380점이었다.

<표 5-2>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의 평가점수

(단위: 개, 점)

평가지표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전국	(229)	950.00	950.00	380.00	667.66	154.56
	대도시	(74)	950.00	950.00	380.00	615.45	138.52
	중소도시	(76)	950.00	950.00	380.00	731.13	144.50
	농어촌	(79)	950.00	950.00	380.00	655.50	158.52

주: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의 가중치는 9.5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지표의 세부지표 평가결과는 <표 5-3>에 제시된다. 첫 번째 세부 지표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에 대한 평가결과는 40점 만점에 평균 28.47점(SD=12.02)이었다. 지역별 평균 점수는 중소도시 지자체가 35.58점(SD=9.37)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어촌 지자체 26.63점(SD=12.00), 대도시 지자체 23.14점(SD=11.04)의 순이었다. 또한 3대 지역 간 격차는 매우 컸는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최고점수는 40점 만점이었고, 최저점은 기본 점수인 16점이었다.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지표의 두 번째 세부 지표인 ‘기부식품 활성화 정도’는 복합 지표로서 ‘기부식품 등 증가율’과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에 의하여 평가되었다. 먼저 ‘기부식품 등 증가율’에 대한 평가결과는 30점 만점에 평균 20.63점(SD=6.67)이었다. 지역별 평균 점수는 농어촌 지자체가 평균 21.63점(SD=7.3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 20.32점(SD=6.32), 대도시 지자체 평균 19.88점(SD=6.20)의 순이었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최고점수는 30점 만점이었고, 최저점수는 기본 점수인 12점이어서 3대 지역 내의 지자체 간에도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복합지표인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30점 만점에 평균 21.18점(SD=6.69)이었다. 3대 지역별 평균 점수는 유사하였다. 즉, 대도시 지자체가 21.77점(SD=6.89), 중소도시 지자체 21.07점(SD=6.30), 농어촌 지자체 20.73점(SD=6.91)이었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최고점수는 30점 만점이었고, 최저점수는 기본 점수인 12점이어서 3대 지역 내의 지자체 간에도 격차가 컸다.

〈표 5-3〉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단위: 개, 점)

세부지표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전국	(229)	40.00	40.00	16.00	28.47	12.02
		대도시	(74)	40.00	40.00	16.00	23.14	11.04
		중소도시	(76)	40.00	40.00	16.00	35.58	9.37
		농어촌	(79)	40.00	40.00	16.00	26.63	12.00
기부식품 활성화 정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전국	(229)	30.00	30.00	12.00	20.63	6.67
		대도시	(74)	30.00	30.00	12.00	19.88	6.20
		중소도시	(76)	30.00	30.00	12.00	20.32	6.32
		농어촌	(79)	30.00	30.00	12.00	21.63	7.35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전국	(229)	30.00	30.00	12.00	21.18	6.69
		대도시	(74)	30.00	30.00	12.00	21.77	6.89
		중소도시	(76)	30.00	30.00	12.00	21.07	6.30
		농어촌	(79)	30.00	30.00	12.00	20.73	6.91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은 민간상근간사의 배치 여부에 따라 최고 점과 최저점으로 양분되어 평가된다. 여기서 민간상근간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를 전담하는 유급간사로서 민간인이면서 상근자를 말한다. 민간상근간사 배치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민간상근간사 배치 지자체/지자체 수)×100
- 민간상근간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를 전담하는 민간상근간사(유급간사에 한함)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민생안정요원, 자활근로요원, 주민생활지원협의회 간사는 제외
 - 기간제 근로자(1년 미만의 경우)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인정, 단 사무보조' 명목으로 채용한 경우는 불인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로 임명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간사 겸임시는 인정, 단, 사회복지협의회 간사로 임명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겸임시는 불인정
 - 2012년 이전에 채용한 경우도 2012년에 계속 채용 사실 확인시 인정
 - ※ 2012. 7.1일 이후 채용하여 2013년까지 6개월 이상 계속 채용사실 확인시 인정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민간상근간사가 배치가 되었으면 최고 점수인 40점을, 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 점수인 16점을 부여하였다. 전체 지자체 중 만점인 4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51.97%이었고, 기본 점수인 12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48.03%

이었다. 따라서 전년도(2011년) 보다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이 약 2배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중소도시 지자체 81.58%, 농어촌 지자체 44.30%, 대도시 지자체 29.73%로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과 대도시 지자체 평균의 격차가 2.7배나 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에 민간상근간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년도에 비하여 배치율이 향상되었지만 더욱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대도시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5-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민간상근간사 배치 지자체 / 지자체수) x 10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40점: 100% 이상	51.97	29.73	81.58	44.30
	16점: 0%이상~100%미만	48.03	70.27	18.42	55.70
계(수)		100.00 (229)	100.00 (74)	100.00 (76)	100.00 (79)

〈표 5-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기초분석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1개 지자체 당 민간상근간사 배치 지자체 합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전국	(229)	119.0	51.97
대도시	(74)	22.0	29.73
중소도시	(76)	62.0	81.58
농어촌	(79)	35.0	44.30

본 세부지표의 평가 산출식의 특성상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모두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민간상근간사가 배치되어 있으면 100%,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0%가 되기 때문이다.

〈표 5-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100.00	0.00	100.00
대도시	(74)	100.00	0.00	100.00
중소도시	(76)	100.00	0.00	100.00
농어촌	(79)	100.00	0.00	100.00

2. 기부식품제공 활성화 정도

가. 기부식품 등 증가율

기부식품 등 증가율은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11년 기부식품 등 총액)/’11년 기부식품 등 총액}×100”에 의해 평가된다. 여기서 기부식품 등 총액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부식품 등 증가율: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11년 기부식품 등 총액)/’11년 기부식품 등 총액}×100
- 기부식품 등 총액: 기부식품 제공사업자(푸드뱅크·마켓)가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한 식품 중 기부자에게 직접 기부 받은 식품 등의 『영수증 발행금액(장부가액)』
 - 전국·광역 푸드뱅크 또는 타 기부식품 지원사업자로부터 이관 받은 식품 등은 불포함(중복 실적)
 - ※ FMS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중인 기부식품 제공 및 관리시스템

동 산출식을 적용하여 증가율이 60% 이상이면 만점인 30점을, 40% 이상~60% 미만이면 26점을, 20% 이상~40% 미만이면 21점을, 0% 이상~20% 미만이면 17점을, 0%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12점을 부여하였다.

전체 지자체 중 만점인 3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22.27%이었고, 기본 점수인 12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26.69%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농어촌 지자체가 35.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17.10%, 대도시 지자체 13.51%로 대도시 지자체가 가장 저조하였다(농어촌과 대도시 차이 2.6배).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친 지자체는 3대 지역이 유사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3대 지역 간 격차 뿐 만 아니라 각 지역 내에서도 지자체 간에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7〉 기부식품 등 증가율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2012년 기부식품 등 총액-2011년 기부식품 등 총액)/2011년 기부식품 등 총액}×100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부식품 등 증가율	30점: 60% 이상	22.27	13.51	17.10	35.44
	26점: 40% 이상~60% 미만	14.41	17.57	15.79	10.13
	21점: 20% 이상~40% 미만	14.85	18.92	19.74	6.33
	17점: 0% 이상~20% 미만	18.78	25.68	25.00	25.32
	12점: 0% 미만	26.69	24.32	22.37	22.78
계(수)		100.00(229)	100.00(74)	100.00(76)	100.00(79)

2012년 229개 전체 지자체의 기부식품 등 총액은 약 929억으로 2011년 약 786억 보다 증가하여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 2012년 전국의 1개 지자체 당 기부식품 등 총액은 평균 405,582천원으로 전년도의 평균 341,582.4천원보다 18.74%pt 증가하였다.

2012년 기부식품 등 총액을 3대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도시 지자체가 가장 많았고(611,157.4천원),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이었으며(532,350.2천원), 농어촌 지자체(81,696.4천원)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어 지역 간에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관련 업소 수에서 3대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현실적 여건 상 어쩔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8〉 기부식품 등 증가율 기초분석

(단위: 개, 천원,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1개 지자체 당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	1개 지자체 당 11년 기부식품 배분총액	기부식품 등 증가율
전국 평균	(229)	405,582.0	341,582.4	18.74
대도시 평균	(74)	611,157.4	550,415.5	12.85
중소도시 평균	(76)	532,350.2	425,276.4	25.18
농어촌 평균	(79)	81,696.4	65,450.9	24.82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기부식품 등 증가율'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본 세부지표의 평가 산출식에 의해 기부식품 등 증가율의 지자체 간과 지역 내 격차를 살펴보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전국 229개 지자체의 추진실적은 최고 1,517.40%, 최저 -81.18%로 격차가 무려 1,598.58%pt나 되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농어촌이 1,598.57%pt로 가장 컸고, 다음은 대도시 240.97%pt이었으며, 중소도시는 228.31%pt이었다.

〈표 5-9〉 기부식품 등 증가율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기부식품 등 증가율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1,517.40	-81.18	1,598.58
대도시	(74)	204.24	-36.73	240.97
중소도시	(76)	172.36	-55.95	228.31
농어촌	(79)	1,517.40	-81.18	1,598.57

나.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은 “(기부식품 배분총액 증가율)+(기부식품 이용자 증가율)+(기부식품 제공건수 증가율)”에 의하여 평가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배분총액 증가율)+(기부식품 이용자 증가율)+(기부식품 제공건수 증가율)
• 배분금액 증가율={(‘12년 기부식품 배분총액 - ‘11년 기부식품 배분총액) / ‘11년 기부식품 배분총액}×100
• 기부식품 이용자 증가율={(‘12년 기부식품 이용자-‘11년 기부식품 이용자)/‘11년 기부식품 이용자}×100
• 기부식품 제공건수 증가율={(‘12년 기부식품 제공건수-‘11년 기부식품 제공건수)/‘11년 기부식품 제공건수}×100

동 산출식을 적용하여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이 150 이상이면 만점인 30점, 100 이상~150 미만이면 26점, 50 이상~100 미만이면 21점, 0 이상~50 미만이면 17점, 0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12점을 부여하였다.

전체 지자체 중 만점인 3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26.64%이었고, 기본 점수인 12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20.96%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대도시 지자체 33.78%, 농어촌 지자체 25.32%, 중소도시 지자체 21.05%이었다.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친 지자체는 농어촌 지자체가 24.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도시 지자체 20.27%이었으며, 중소도시 지자체는 18.42%이었다.

〈표 5-10〉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부식품 배분총액 증가율)+(기부식품 이용자 증가율)+(기부식품 제공건수 증가율)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30점: 150 이상	26.64	33.78	21.05	25.32
	26점: 100 이상~150 미만	10.48	4.05	14.47	12.66
	21점: 50 이상~100 미만	20.52	25.68	23.68	12.66
	17점: 0 이상~50 미만	21.40	16.22	22.37	25.31
	12점: 0 미만	20.96	20.27	18.42	24.05
계(수)		100.00(229)	100.00(74)	100.00(76)	100.00(79)

2012년에 229개 전체 지자체의 배분식품 등 총액은 약 1,045억원으로 2011년의 869억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전국의 1개 지자체 당 평균 배분식품 등 총액은 456,248천원, 평균 기부식품 이용자 수는 1,317명, 평균 기부식품 제공건수는

24,030건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 간에 큰 격차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도시 지자체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이었으며, 농어촌 지자체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기부식품 이용실적으로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 지자체는 1개 지자체 당 배분식품 등 총액이 평균 659,875.8천원, 기부식품 이용자수 1,505.0명, 기부식품 제공건수 28,063.2건이었고, 중소도시 지자체는 1개 지자체 당 배분식품 등 총액이 567,903.1천원, 기부식품 이용자수 1,729.1명, 기부식품 제공건수 35,470.2건이었다. 이들 두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농어촌 지자체는 1개 지자체 당 배분식품 등 총액이 158,093.2천원, 기부식품 이용자수 747.0명, 기부식품 제공건수 9,248.4건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3대 지역 간 격차는 기부식품 등 총액과 마찬가지로 식품기부가 가능한 회사 또는 업체의 수가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세부지표의 평가 산출식 (기부식품 배분총액 증가율)+(기부식품 이용자 증가율)+(기부식품 제공건수 증가율)에 의해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은 전국 지자체 평균 73.23%이었다. 3대 지역 중에서는 대도시 지자체가 가장 많았고(87.80%), 다음은 농어촌 지자체이었으며(78.81%), 중소도시 지자체는 가장 적었다(60.51%).

〈표 5-11〉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초분석

(단위: 개, 천원, 명, 건,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1개 지자체 당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개 지자체 당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배분식품 등 총액	기부식품 이용자수	기부식품 제공건수	배분식품 등 총액	기부식품 이용자수	기부식품 제공건수	
전국 평균	(229)	456,248.1	1,317.9	24,030.7	377,936.5	1,122 .1	17,792.0	73.23
대도시 평균	(74)	659,875.8	1,505.0	28,063.2	537,506.4	1,183.1	20,361.2	87.80
중소도시 평균	(76)	567,903.1	1,729.1	35,470.2	488,355.1	1,562.9	26,551.8	60.51
농어촌 평균	(79)	158,093.2	747.0	9,248.4	122,240.7	640.8	6,958.4	78.81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기부식품 등 증가율'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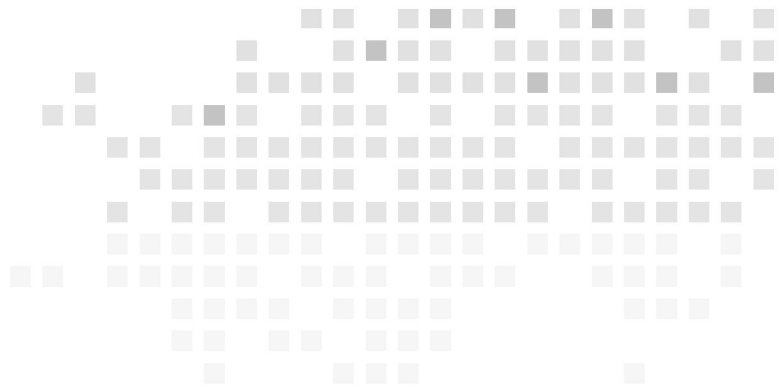
평가 산출식에 의한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의 지자체 간과 지역 내 격차를 살펴보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전국 229개 지자체의 추진실적은 최고 7,755.40, 최저 -300.00으로 격차가 무려 8,055.40나 되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

면, 대도시가 가장 큰 8,055.40이었고, 다음은 농어촌 2,799.98, 중소도시 1,714.59의 순이었다.

〈표 5-12〉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7,755.40	-300.00	8,055.40
대도시	(74)	7,755.40	-300.00	8,055.40
중소도시	(76)	1,585.71	-128.87	1,714.59
농어촌	(79)	2,666.71	-133.27	2,799.98



제6장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6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서 위기 발생 시 국민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중요한 복지제도중 하나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이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며 커다란 제도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2014년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이 준비되고 있으며, 새로운 공공부조 제도를 맞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변경되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평가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제도변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초기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항상 복지평가의 중심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들의 4개 영역 중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지표는 「기초생활보장」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가들의 전체 세부지표 중 5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수급자 관리실적, 긴급복지 지원실적 등이다.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지표의 가중치는 12.4로 2012년 11.8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표 6-1〉 2012~2013년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적절성」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급여조정 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 관리실적 긴급복지 지원실적 	11.8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 관리실적 긴급복지 지원실적 	12.4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만점은 1,240점으로 2012년 평가에 비해 상향 조정되었다. 이 제도의 복지평가에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기초보장제도가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3년 평가점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만점을 받은 지자체는 없었으며, 최고점수는 대도시와 농어촌의 지자체가 1,190.40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중소도시는 다소 낮은 1128.40점이었다. 전국 평균점수에서는 839.68점이며, 중소도시의 평균점이 918.42점으로 대도시 및 농어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비록 최고점수에서는 낮았지만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도시의 기초보장업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2〉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의 평가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지역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전국	1,240.00	1,190.40	545.60	839.68	127.99
	대도시	1,240.00	1,190.40	545.60	839.68	127.99
	중소도시	1,240.00	1,128.40	620.00	918.42	115.30
	농어촌	1,240.00	1,190.40	570.40	877.26	152.75

주: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의 가중치는 12.4임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은 예년과 동일하게 5가지 세부항목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를 보면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수급자 관리실적”, “긴급복지지원실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과 비교하여 급여조정실적 대신에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이 변경된 것이다.

각 항목별 비중은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각각 20%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수급자 관리실적은 가장 낮은 10%이었다. 이 외에 긴급복지지원 실적은 가장 비중이 높은 30%를 점유하고 있었다.

5가지 세부항목별로 받은 점수의 분포를 보면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수인 20점, 10점 및 30점을 받은 지자체가 있었으며, 최저점을 받은 지자체들과는 많은 점수차이를 보여주었다.

각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의 평균점수는 13.90점,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15.09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에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13.96점과 12.71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2012년에 신규로 추가된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만점은 20점, 최저점은 8점이었으며, 전국 평균점수는 14.97점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적으로 중소도시가 15.97점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도시 15.30점, 농어촌 13.70점의 순이었다. 도시지역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농어촌은 다소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예년과 동일한 지표인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의 평균점수는 13.40점이었으며,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비슷한 수준인 13.96점과 13.41점을 받은 반면에 대도시는 다소 낮은 12.7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관리 실적은 10점 만점으로 다른 평가점수에 비해서는 낮은 배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 평균점수는 6.85점이었으며 대도시, 중소도시는 거의 비슷한 6.32점과 6.36점을 농어촌은 이보다 다소 높은 7.82점을 받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급자관리실적은 동일한 형태로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표 6-3〉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단위: 점)

세부지표	지역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전국	20.00	20.00	8.00	13.90	4.32
	대도시	20.00	20.00	8.00	15.09	4.20
	중소도시	20.00	20.00	8.00	13.96	3.87
	농어촌	20.00	20.00	8.00	12.71	4.57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전국	20.00	20.00	8.00	14.97	4.43
	대도시	20.00	20.00	8.00	15.30	3.48
	중소도시	20.00	20.00	8.00	15.97	3.52
	농어촌	20.00	20.00	8.00	13.70	5.59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전국	20.00	20.00	8.00	13.40	4.16
	대도시	20.00	20.00	8.00	12.78	3.91
	중소도시	20.00	20.00	8.00	13.41	3.98
	농어촌	20.00	20.00	8.00	13.96	4.52
수급자 관리실적	전국	10.00	10.00	4.00	6.85	2.12
	대도시	10.00	10.00	4.00	6.32	1.91
	중소도시	10.00	10.00	4.00	6.36	1.90
	농어촌	10.00	10.00	4.00	7.82	2.20
긴급복지지원 실적	전국	30.00	30.00	12.00	21.76	6.74
	대도시	30.00	30.00	12.00	18.22	6.68
	중소도시	30.00	30.00	12.00	24.37	5.82
	농어촌	30.00	30.00	12.00	22.56	6.25

5번째 세부지표인 긴급복지지원 실적의 만점은 30점으로 기초보장제도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 평균점수를 보면 전국평균은 21.76점으로 전년도(20.74점)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24.37점과 22.56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대도시는 18.22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 모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대도시의 점수가 낮은 점에서 향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올해의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은 과거와 달리 지표를 변경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즉 기존 지표들은 총수급자수중에서 신규수급자수의 비율을 통해 평가가 진행되었다면, 올해 지표는 동일한 지표이외에 추가적으로 지난 3년간 신규수급자수 평균과 신규수급자수 항목과 신규수급자수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로 들어온 수급자수를 추가하였다. 특히, 세 가지 세부지표에 대한 비중을 보면 기존 지표와 동일한 것은 0.2, 최근 3년간 신규수급자수는 0.3인 반면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들어온 신규수급자수는 0.5의 비중으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제도완화 효과가 실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복지평가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과의 면담 혹은 자료를 통해 보면 2012년에 단행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를 통해 신규수급자수가 늘어나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전체적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185%는 일선에서 보기에 그리 크게 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급자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left(\frac{\text{신규수급자수}}{\text{총수급자수}} \times 0.2 \right) + \left(\frac{\text{신규수급자수}}{\text{최근 3년간 신규수급자 평균}} \times 0.3 \right) + \left(\frac{\text{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text{신규수급자수}} \times 0.5 \right)$$

- 신규 수급자 수 : '12년 중 수급자로 결정되어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수(가구원수)
- 최근 3년간 신규 수급자 평균 : '10년 ~ '12년 중 수급자로 결정되어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수(가구원수)의 평균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신규 수급자 수 : '12년 중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되어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수(가구원수)
- 총 수급자 수 : '12.12.31일 현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수(가구원수)
 - ※ 비수급 빈곤층의 발굴 보호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 신규수급자 수에서 특례수급자를 일반 수급자로 전환한 경우나 세대원수 변경에 의한 기존 수급자 수 중복 계산은 불인정
 -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는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등)에 대한 기준완화(185%)를 의미하며,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보호는 제외

새롭게 변경된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20점의 만점을 받은 지자체는 20.96%였으며, 지역적으로는 대도시가 가장 많은 27.03%,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약 10%pt 정도 차이를 보이는 18.99%와 17.11%이었다. 각각의 분포에 있어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5단계의 점수대에 17점을 제외하고는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별로 보면 편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대도시의 경우에는 상위점수인 20점, 17점, 14점대에 27.03%, 25.68%, 18.92%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도시는 중간점수대인 14점과 11점에 28.95%, 23.68%가 농어촌은 점수가 낮은 11점과 8점대에 20.25%와 34.18%로 나타나고 있어 신규수급자 발굴에 있어 지역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간 신규수급자 발굴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예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난 양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의 인구변동성이 낮다는 점에서 요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높지 않고 오히려 유출이 많은 상황에서 농어촌 지자체의 경우 신규수급자보다는 수급자 관리에 좀 더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뒤의 지표중 하나인 수급자 관리실적에서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지자체가 월등히 높은 점수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4〉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left(\frac{\text{신규수급자수}}{\text{총수급자수}} \times 0.2 \right) + \left(\frac{\text{신규수급자수}}{\text{최근3년간신규수급자평균}} \times 0.3 \right) + \left(\frac{\text{부양의무자기준완화신규수급자수}}{\text{신규수급자수}} \times 0.5 \right)$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20점: 0.310%이상	20.96	27.03	17.11	18.99
	17점: 0.290%이상~0.310%미만	17.47	25.68	17.11	10.13
	14점: 0.270%이상~0.290%미만	21.40	18.92	28.95	16.45
	11점: 0.250%이상~0.270%미만	19.65	14.86	23.68	20.25
	8점: 0.250%미만	20.52	13.51	13.15	34.18
계(수)		100.00(229)	100.00(74)	100.00(76)	100.00(79)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에 대한 세부지표의 내용들을 보면 2012년 평가기간에 전국적으로는 평균 6,072.5명의 수급자들이 각 지자체별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도시 지자체가 가장 많은 8,474.3명, 중소도시 지자체는 7,617.9명이었으며, 농어촌 지자체는 가장 적은 2,336명 수준이었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지자체에 비해 농어촌 지자체가 총수급자가 1/3수준으로 낮았다.

신규수급자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평균 596.9명이 발굴되었으며 이중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899.2명과 73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어촌이 180.4명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 신규수급자수에서도 도시지역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농어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가장 낮았다. 정책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발굴된 신규수급자수는 전국 평균 24.5명으로 신규수급자수 597명의 4.2% 수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큰 개선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역시 도시지역의 신규수급자가 많이 발굴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은 다소 적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은 총수급자수 대비 0.28% 수준이었으며, 각각의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표 6-5〉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기초분석

(단위: 명, %)

지역	총 수급자 수	신규 수급자 수	1개 지자체 당 최근 3년간 신규수급자 수	1개 지자체 당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신규수급자 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전국 평균	6,072.5	596.9	744.4	24.5	0.28
대도시 평균	8,474.3	899.2	1,085.8	32.6	0.29
중소도시 평균	7,617.9	735.3	927.1	30.0	0.28
농어촌 평균	2,336.0	180.4	248.7	11.7	0.27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에 대한 분석 지자체 229개를 대상으로 최고의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을 보인 비율은 0.42%로 대도시지역이었으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비슷한 0.39%를 보여주고 있다. 최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곳은 대도시와 농어촌이 0.17%이었으며 중소도시는 이보다 다소 높은 0.23% 수준이었다.

〈표 6-6〉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0.42	0.17	0.25
대도시	(74)	0.42	0.17	0.24
중소도시	(76)	0.39	0.23	0.16
농어촌	(79)	0.39	0.17	0.23

2.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이번에 기존 급여조정실적을 대신하여 추가된 평가항목이다. 급여조정실적이 거의 매해 평가항목으로 포함되고 있는 반면에 이행급여 특례 보호실적은 처음으로 도입되어 평가된 항목이다. 이행급여는 수급자 및 수급가구들이 빈곤함정(Poverty trap)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탈수급한 가구들에 대해 일정기간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급탈락 후 급여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불안감을 완화하고 수급가구들의 탈수급율을 높이

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행급여특례 보호 실적은 다시 두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근로능력가구수 대비 이행급여 특례가구수와 기존 이행급여특례가구수 대비 신규이행급여특례가구수의 비율이 각각 50%씩의 가중치로 평가되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동 지표의 성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은 기초보장제도의 탈수급율을 높이고 빈곤가구의 탈빈곤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 이행급여특례수급자 보호실적

- 이행급여특례가구수 : '12.12.31일 현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이행급여특례가구수
- 근로능력가구수 : '12.12.31일 현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근로능력가구수
- 신규이행급여특례가구수 : '12.1.1~'12.12.31까지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이행급여특례가구수
- 기존이행급여특례가구수 : '11.1.1~'12.12.31까지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이행급여특례가구수

이행급여특례 보호조정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다른 지표들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7.07%의 지자체가 만점인 20점을 받았으며 반면에 최저점수인 8점을 받은 지자체도 20.09%로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여 농어촌의 지자체중 40.51%가 20점 만점을 받은 반면에 중소도시와 대도시는 25.00%, 14.87%로 농어촌 지자체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17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도시지역 지자체들의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높이기 위한 이행급여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6-7〉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left(\frac{\text{이행급여특례가구수}}{\text{근로능력가구수}} \times 0.5\right) + \left(\frac{\text{신규이행급여특례가구수}}{\text{기존이행급여특례가구수}} \times 0.5\right)$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20점: 0.500%이상	27.07	14.87	25.00	40.51
	17점: 0.430%이상~0.500%미만	27.95	43.24	39.47	2.53
	14점: 0.360%이상~0.430%미만	15.72	21.62	19.74	6.33
	11점: 0.290%이상~0.360%미만	9.17	10.81	7.89	8.86
	8점: 0.290%미만	20.09	9.46	7.90	4.77
계(수)		100.00(229)	100.00(74)	100.00(76)	100.00(79)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의 세부 지표들에 대한 전국 및 지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근

로능력가구수는 전국 평균 964.2가구이었으며, 지역적으로는 대도시가 1,462.6가구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농어촌은 305.9가구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행급여특례 가구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평균 15.6가구로 근로능력가구수의 1.7%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많은 근로능력가구들도 이행급여를 통한 탈수급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이행급여 특례가구수도 농어촌의 이행급여 특례 가구수에 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율측면에서도 전국 평균은 0.43%,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0.44%, 0.43%로 높은 반면에, 농어촌은 0.38%로 다소 낮았다.

〈표 6-8〉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기초분석

(단위: 가구, %)

지역	1개 지자체 당 근로능력 가구수	1개 지자체 당 이행급여특례 가구수	1개 지자체 당 기존이행특례 가구수	1개 지자체 당 신규이행특례 가구수	이행급여특례가구수
전국 평균	964.2	15.6	20.1	17.1	0.43
대도시 평균	1,462.6	22.7	29.3	25.4	0.44
중소도시 평균	1,163.3	21.3	27.5	23.3	0.43
농어촌 평균	305.9	3.5	4.5	3.5	0.39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이행급여특례 보호 실적의 최고 비율은 전국적으로 0.53%이었으며, 최저 비율은 0.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6-9〉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이행급여 보호실적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0.53	0.00	0.53
대도시	(74)	0.52	0.00	0.52
중소도시	(76)	0.51	0.00	0.51
농어촌	(79)	0.53	0.00	0.53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세 번째 평가항목인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평가되는 지표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주요한 정책적 결정을 진행한다면 지자체에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계획 및 수립, 급여, 수급자 선정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지자체 차원에서 기초보장제도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핵심적 기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동 위원회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통해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평가항목은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의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수급자가구중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논의를 위해 상정된 가구수와 두 번째로 상정된 가구중에서 신규로 보호가 확정된 가구수로 구분되어 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50%로 동일하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left(\frac{\text{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text{수급자가구수}} \times 0.5 \right) + \left(\frac{\text{신규보호가구수}}{\text{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 \times 0.5 \right)$$

- 수급자 가구수 : '12.12.31일 현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가구수
- 신규보호가구수 : '12년 중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별도위원회 포함)를 통해 기초수급자로 추가 보호한 전체 가구수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 가구수 : '12년 중 기초수급자 책정을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 논의된 전체 가구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의 점수는 전국적으로 20.09%의 지자체가 20점을 받고 있으며 17점대를 제외하고는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의 지자체 중 만점을 받은 비율이 27.85%로 높은 반면에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14.87%, 17.11%로 농어촌에 비해서는 낮았다. 농어촌의 지자체들이 다소 높은 점수대에 있는 반면에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지자체들은 중간점수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표 6-10〉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left(\frac{\text{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text{수급자가구수}} \times 0.5 \right)$ $\left(\frac{\text{신규보호가구수}}{\text{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 \times 0.5 \right)$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20점: 0.531%이상	20.09	14.87	17.11	27.85
	17점: 0.524%이상~0.531%미만	10.92	10.81	11.84	10.12
	14점: 0.517%이상~0.524%미만	23.58	21.62	30.26	18.99
	11점: 0.510%이상~0.517%미만	24.45	29.73	19.74	24.05
	8점: 0.510%미만	20.96	22.97	21.05	18.99
계(수)		100.00(229)	100.00(74)	100.00(76)	100.00(79)

지방생활위원회 활성화 실적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면, 수급가구수에서는 도시지역이 농어촌에 비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은 3,580.8가구로 신규수급자수에 살펴본 수급자수와 비교시 수급가구 당 평균 2명 정도의 가구원이 있었다. 신규보호가구는 전국 평균 150.8가구로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많았으며 농어촌은 이들 도시지역보다는 매우 낮았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을 보면 전국 평균은 0.51%로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자체 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다.

〈표 6-1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기초분석

(단위: 가구, %)

지역	1개 지자체 당 수급자 가구수	1개 지자체 당 신규 보호 가구수	1개 지자체 당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 가구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전국 평균	3,580.8	150.8	152.8	0.51
대도시 평균	4,926.1	191.6	194.0	0.51
중소도시 평균	4,502.0	188.9	190.1	0.52
농어촌 평균	1,434.5	75.8	78.4	0.51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에 대한 평가비율을 최고 및 최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고는 농어촌이 0.66%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최저도 농어촌지역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지역의 지자체가 극단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6-1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실적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0.66	0.22	0.44
대도시	(74)	0.56	0.38	0.18
중소도시	(76)	0.55	0.41	0.14
농어촌	(79)	0.66	0.22	0.44

4. 수급자 관리실적

수급자 관리실적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평가되는 항목이다. 동 평가항목은 작년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두 번째 항목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작년과 동일하게 중점관리소득으로 수급자들이 신고한 추정소득, 사적 이전소득 및 부양비 부과지수가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소득이 증가한 건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은 작년에는 기타 조정건수로 표현되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하여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중 소득 감소가 발생한 건수로 한정하는 것이다. 각각의 가중치는 중점관리 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70%, 감소한 경우는 30%로 작년과 동일한 비중을 두고 있다.

동 지표의 경우 작년에 평가를 통해 수급자 보호보다는 재정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여전히 올해도 소득 증가에 가중치를 많이 두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자 보호 보다는 재정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 수급자 관리실적: $\left(\frac{\text{중점관리소득 증가건수}}{\text{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수}} \times 0.7\right) + \left(\frac{\text{중점관리소득감소건수}}{\text{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수}} \times 0.3\right)$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고 소득이 산정된 대상자에 대한 관리 실적
 -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수: 추정소득, 사적이전소득 및 부양비부과자수('11.12.31일 현재 행복e음시스템 상 대상자 기준)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중 소득이 증가한 건수
 - 중점관리 소득 감소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중 소득이 감소한 건수

수급자 관리실적에 대한 지자체 평가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23.58%의 지자체가 만점인 10점을 받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중간점수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이 차이를 보여 농어촌의 지자체가 10점과 8점대의 높은 점수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지자체들은 중간점수대인 8점과 6점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도시지역은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 신규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농어촌은 인구감소로 인해 신규수급자보다는 수급자 관리에 보다 중심을 두어 평가할 수 있다.

〈표 6-13〉 수급자 관리실적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left(\frac{\text{중점관리소득 증가건수}}{\text{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수}} \times 0.7 \right) + \left(\frac{\text{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text{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수}} \times 0.3 \right)$				
수급자 관리실적	10점: 0.125%이상	23.58	12.16	13.16	44.30
	8점: 0.118%이상~0.125%미만	22.71	22.97	22.37	22.78
	6점: 0.111%이상~0.118%미만	23.58	27.03	30.26	13.92
	5점: 0.104%이상~0.111%미만	14.41	17.57	17.11	8.87
	4점: 0.104%미만	15.72	20.27	17.10	10.13
계(수)		100.00(229)	100.00(74)	100.00(76)	100.00(79)

수급자 관리실적에 대한 기초분석을 보면, 중점관리 소득이 증가한 건수는 전국 평균 3천여 건을 상회하며,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4,1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도시와 농어촌의 순이었다. 중점관리소득이 감소한 건수도 중소도시가 가장 많은 3,904.8건이었으며 다음으로 대도시와 농어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관리실적에 대한 비율은 보면 전국 평균은 0.11%였으며 지역적으로 농어촌이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동일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6-14〉 수급자 관리실적 기초분석

(단위: 건, 명, %)

지역	1개 지자체 당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1개 지자체 당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수	1개 지자체 당 중점관리소득 감소 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전국 평균	3,058.4	26,760.5	2,953.1	0.11
대도시 평균	3,344.9	30,900.3	3,625.7	0.11
중소도시 평균	4,113.4	36,040.1	3,904.8	0.11
농어촌 평균	1,775.1	13,955.6	1,407.7	0.12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수급자 관리실적'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전국 229개 지자체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최고 0.15%, 최저 0.08%로 0.07%pt의 격차를 보였다.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동일한 0.06%pt의 차이를 보였다.

〈표 6-15〉 수급자 관리실적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수급자 관리실적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0.15	0.08	0.07
대도시	(74)	0.15	0.09	0.06
중소도시	(76)	0.14	0.08	0.06
농어촌	(79)	0.14	0.08	0.06

5. 긴급복지 지원실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들이 특히 취약계층의 개인 및 가구가 긴급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의 측면에서 위기가구 발생 시 단기간의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긴급가구의 생계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며, 기초보장제도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 볼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지자체 복지평가가 진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기초생활보장부문에 포함되어 계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다른 지표들이 포함과 삭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신규수급자 발굴실적과 더불어 변함없이 꾸준히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복지평가의 지표 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작년과 달리 두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총 결정건수 중 의료지원 결정건수를 제외한 결정건수로 긴급지원의 대부분이 의료지원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지원으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간접지표라 할 수 있다. 두번째는 긴급복지를 지원 신청한 가구수중에서 다른 복지지원제도로 연계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은 긴급지원신청건수 중에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총 결정건수의 비율로 평가되고 있다. 각 항목에 대한 별도의 가중치는 주어지고 있으며, 단순히 세 항목에 대한 비율의 합계로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긴급복지 지원실적: $\frac{\text{의료지원 제외 결정건수}}{\text{총결정건수}} + \frac{\text{타지원연계건수}}{\text{긴급지원신청건수}} + \frac{\text{총결정건수}}{\text{긴급지원신청건수}}$	
• 총 결정건수: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재산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결정건수
• 의료지원제외결정건수:	총결정건수에서 의료지원건수 제외
• 타지원연계건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육청 차상위 교육급여, 보건소(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 등 연계가구수
• 긴급지원 신청 가구수: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을 신청한 가구수
※ 타지원 연계건수는	신청 1건당 최대 2건까지만 인정
※ 총결정건수에는	신청 1건에 대한 복합지원, 연장지원 건수 모두 포함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만점을 받은 지자체는 27.07%로 많은 지자체가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취지를 고려 시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12점의 최저점을 받은 지자체도 20.96%로 다소 분포하고 있다. 점수의 평가결과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는 점에서 하위점수를 받은 지자체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들이 줄어들고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이 많이 발굴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농어촌에 비해 중소도시의 지자체들이 높은 점수인 30점과 26점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대도시의 지자체들은 반면에 가장 낮은 수준인 12점에 분포하는 비율이 40.5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간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적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6-16〉 긴급복지 지원실적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frac{\text{의료지원 제외 결정건수}}{\text{총결정건수}} + \frac{\text{타지원 연계 가구수}}{\text{긴급지원 신청 건수}} + \frac{\text{총결정 건수}}{\text{긴급지원 신청 건수}}$				
긴급복지 지원 실적	30점: 2.75%이상	27.07	17.57	38.16	25.32
	26점: 2.25%이상~2.75%미만	17.03	4.05	22.37	24.05
	21점: 1.75%이상~2.25%미만	14.38	14.87	19.74	21.52
	17점: 1.25%이상~1.75%미만	16.16	22.97	11.84	13.92
	12점: 1.25%미만	20.96	40.54	7.89	15.19
계(수)		100.00(229)	100.00(74)	100.00(76)	100.00(79)

긴급복지 평가항목의 세부실적을 보면 먼저 전국적으로 총 결정건수는 평균적으로 169.6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의료지원제외 건수가 61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부분을 의료지원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신청건수는 평균 198.4건으로 이중 결정건수가 169.6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긴급지원 신청 후 제도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일시적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긴급보호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른 제도와 연계가 중요한데 타제도에 대한 연계건수도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전국평균 지원 실적은 2.22%로 나타났으며 전국평균에 비해 대도시의 지자체가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에 비해 결정건수나 신청건수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른 제도로의 연계에 있어 중소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17〉 긴급복지 지원 실적 기초분석

(단위: 건, %)

지역	1개 지자체 당 총 결정건수	1개 지자체 당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	1개 지자체 당 긴급지원 신청건수	1개 지자체 당 타지원 연계건수	긴급복지 지원실적
전국 평균	169.6	61.0	198.4	199.7	2.22
대도시 평균	230.3	72.5	259.7	193.5	1.95
중소도시 평균	214.5	84.6	244.3	300.5	2.50
농어촌 평균	69.6	27.5	96.8	108.4	2.23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긴급복지지원 실적에 대한 전국 및 지역 간 격차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최고가 4.32%, 최저는 0.71로 3.61%pt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최고 비율을 대도시가 최저비율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 간 격차가 큰 곳은 농어촌으로 3.44%pt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18〉 긴급복지 지원실적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긴급복지 지원실적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4.32	0.71	3.61
대도시	(74)	3.78	0.71	3.07
중소도시	(76)	4.06	0.97	3.09
농어촌	(79)	4.32	0.88	3.44



제7장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7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 평가결과 분석 <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빈곤층의 생활안정으로서 수급가구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생활보호를 대체하며 근로능력자를 포함하면서 이들이 빈곤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활사업의 도입이었다. 이전 생활보호제도 하에서 자활사업은 단순 취로사업에 불과하였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를 벗어나 수급가구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하고 탈수급이 가능하도록 인프라구축은 물론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들의 4개 영역 중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지표는 「기초생활보장」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가들의 전체 세부지표 중 3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실적 등이다. 2012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추진되었다. 다만, 지표 가중치가 10.5로 2012년 4.9보다 대폭 높아졌다.

〈표 7-1〉 2012~2013년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실적 	4.9
2013년	위와 같음	10.5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의 만점은 1,050점으로 작년에 비해 상향조정되었으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받은 지자체가 모두 있었

다. 전국 평균은 744.40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59.79점이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모두 최고점과 최저점인 420점을 받은 지자체가 있었으며, 평균적으로는 중소도시가 789.02점으로 높았으며 대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723.79, 720.78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의 경우 자활인프라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평가가 낮았다는 점에서 대도시 지자체들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표 7-2〉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의 평가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지역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전국	1,050.00	1,050.00	420.00	744.40	159.79
	대도시	1,050.00	1,050.00	420.00	723.79	161.44
	중소도시	1,050.00	1,050.00	420.00	789.02	149.59
	농어촌	1,050.00	1,008.00	420.00	720.78	160.68

주: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의 가중치는 10.5임.

2013년 자활사업의 세부평가항목은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작년의 평가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수급자의 취·창업률”,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실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비중은 탈수급률과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대한 지원실적은 각각 30%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취·창업률은 40%로 다른 두 항목에 비해서는 10%pt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작년의 평가와 비교시 취·창업률은 10%pt 상향조정된 것이며, 반면에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지원실적은 10%pt 하향조정된 것이다.

세 가지 항목 모두 불 경우 만점과 최저점에 해당되는 30점 및 40점과 12점 및 16점을 받은 지자체들이 지역별로 모두 나타나고 있다. 평균점수에서 탈수급률은 20.88점이었으며, 지역적으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전국 평균 28.94점으로 도시지역이 높았으며 농어촌은 가장 낮은 26.86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자활근로 및 공동체 지원 실적에 대한 평균점수는 21.07점이었으며, 중소도시가 가장 높은 22.42점 이었으며 다음으로 농어촌이 19.38점이었다. 반면에 대

도시는 8.51점에 불과해 대도시 지자체들이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에 대해 매우 인색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활기업들이 스스로 자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초기 인력 및 기술력과 더불어 판매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우선 지원은 기업의 초기 기반을 다지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도시 지자체들의 지원이 늘어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7-3〉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단위: 점)

세부지표	지역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전국	30.00	30.00	12.00	20.88	6.17
	대도시	30.00	30.00	12.00	19.20	5.87
	중소도시	30.00	30.00	12.00	20.93	5.42
	농어촌	30.00	30.00	12.00	22.41	6.76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전국	40.00	40.00	16.00	28.94	8.78
	대도시	40.00	40.00	16.00	28.24	8.51
	중소도시	40.00	40.00	16.00	31.79	7.95
	농어촌	40.00	40.00	16.00	26.86	9.17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전국	30.00	30.00	12.00	21.07	6.38
	대도시	30.00	30.00	12.00	8.51	5.94
	중소도시	30.00	30.00	12.00	22.42	6.49
	농어촌	30.00	30.00	12.00	19.38	6.3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기초보장제도의 탈수급률은 제도도입 이후 계속해서 중요시 여겨지는 항목이었다. 이는 수급자 및 수급가구들의 과도하게 제도에 의존하거나 빈곤을 대물림하는 것과 같은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자활사업의 탈수급률 파악은 매우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수급자에 대한 탈수급률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는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참여(실인원) 수급자수 대비 자활특례상향 또는 탈수급자수를 두고 있다. 기준은 2012년 1년간에 발생한 건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수급자를 모두 포

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행급여 관련 사업의 참여자도 함께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다. 탈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이후 자활특례로 상향하거나 기초보장제도의 수급범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frac{\text{자활특례상향 또는 탈수급자 수}^{1)}}{\text{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참여(실인원)수급자 수}^{2)}} \times 100$		
•	탈수급자 수: '12.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중 자활(이행) 특례로 상향 이동하였거나 수급 중지된 인원수(사망, 전출 제외) ※ 희망리본, 취업패키지에 참여한 수급자 중 이행특례상향이동자만 포함(희망키움통장으로 인한 이행특례이동자 제외)			
•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참여(실인원) 수급자수: '12.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일자리형+인턴형+희망리본프로젝트(성과형 시범사업))+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전체 인원(사망, 전출 제외)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의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전국적으로는 26점을 받은 경우가 가장 낮은 12.66% 이었으며 21점이 가장 많은 26.20%였으며 나머지 점수대는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의 지자체들이 30점 만점을 받은 경우가 32.91%로 가장 많은 반면에 중소도시는 중간 점수군에 대도시는 다소 하위점수군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자활사업이 수치상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수와 인프라에서 많은 이점을 지닌 도시지자체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도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7-4〉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frac{\text{자활특례상향 또는 탈수급자 수}}{\text{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참여(실인원)수급자 수}} \times 100$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30점: 25.0%이상	20.09	12.16	14.47	32.91
	26점: 20.0%이상~25.0%미만	12.66	10.81	13.16	13.92
	21점: 15.0%이상~20.0%미만	26.20	21.62	38.16	18.99
	17점: 10.0%이상~15.0%미만	22.71	31.08	21.05	16.46
	12점: 10.0%미만	18.34	24.33	13.16	17.72
계(수)		100.00(229)	100.00(74)	100.00(76)	100.00(79)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에 대한 세부지표들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참여수급자와 이를 통한 탈수급자의 규모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탈수급률 역시 전국 평균은 16.34%로 낮으며, 지역적으로는 농어촌의 탈수급률이 20.13%로 도시지역에 비해 높았다.

이를 전체 수급자로 확산시에는 거의 미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수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2012년 지자체 평균 탈수급자 수는 27.2명이며 규모면에서는 대도시가 47.4명, 중소도시 28.1명으로 많았으며 농어촌은 7.4명으로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낮았다.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에서도 전국 평균적으로 166.2명이었으며, 대도시 및 중소도시가 301.4명과 169.3명, 농어촌은 이보다 낮은 36.5명 수준이었다.

〈표 7-5〉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기초분석

(단위: 명, %)

지역	1개 지자체 당 탈수급자 수			1개 지자체 당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자활사업 수급자의 탈수급률
	계	특례상향 이동자	탈수급자		
전국 평균	27.2	11.8	15.3	166.2	16.34
대도시 평균	47.4	19.5	27.9	301.4	15.72
중소도시 평균	28.1	12.8	15.3	169.3	16.57
농어촌 평균	7.4	3.8	3.6	36.5	20.13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수급자의 탈수급률 최고 및 최저, 지역 간 격차를 보면 평균적으로 68.57%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농어촌의 격차가 가장 크며 중소도시 및 대도시의 순으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최고와 최저 간에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관심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7-6〉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68.57	0.00	68.57
대도시	(74)	38.10	0.00	38.10
중소도시	(76)	45.83	0.00	45.83
농어촌	(79)	68.57	0.00	68.57

2.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탈수급율과 함께 자활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주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복지평가가 처음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평가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기초보장제도의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중요한 지표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에 대한 평가내용은 2012년의 평가지표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참여(실인원) 수급자수 대비 수급을 유지하면서 취업 및 창업을 한 수급자수의 비율로 산정된다. 구체적인 평가식은 아래와 같다.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frac{\text{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수}}{\text{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참여(실인원)수급자수}}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창업자 수: '12.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및 고용부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수급유지자 중 취업 및 창업한 자의 수(사망·전출 제외)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실인원) 수급자수: '12.1.1~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일자리형+인턴형+희망리본프로젝트(성과형시범사업))+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전체인원(사망·전출 제외)

취·창업률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만점을 받은 지자체는 27.07%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점수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점수분포에 있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대도시는 상위와 중간점수군에 분포하고 있으며, 중소도시는 주로 상위점수에 농어촌은 상위점수와 최저점수에 많은 지자체들이 분포하고 있다.

먼저 중소도시 지자체의 35.53%가 만점을 받았으며 28점 이상의 상위분포에 많은 지자체들이 위치하고 있다. 대도시 역시 만점은 24.33%이었으며 중간점수인 28점과

22점대에 대도시 지자체들이 분포하고 있다. 반면에 농어촌의 경우 40점 만점을 받은 지자체는 21.52%이었지만 최저점수를 받은 지자체도 29.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지역적으로 취·창업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한 점도 이들 평가점수를 낮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7-7〉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frac{\text{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text{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실인원) 수급자 수}} \times 100$				
수급자의 취·창업률	40점: 19.0%이상	27.07	24.33	35.53	21.52
	34점: 15.0%이상~19.0%미만	16.16	12.16	22.37	13.92
	28점: 11.0%이상~15.0%미만	20.52	22.97	21.05	17.72
	22점: 7.0%이상~11.0%미만	17.90	24.32	11.84	17.72
	16점: 7.0%미만	18.34	16.22	9.21	29.11
계(수)		100.00(229)	100.00(74)	100.00(76)	100.00(79)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중 취·창업률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를 보면 수급유지자중 취·창업자는 전국적으로 평균 25.2명으로 이중 취업자가 23.4명, 창업자가 1.9명으로 기초보장 수급자들의 창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 대비 비율은 15.19%로 역시 높지 않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과 농어촌 간에 참여규모가 확연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취·창업자수가 43.1명, 29.2명인 반면에, 농어촌은 4.7명에 불과하며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에서는 중소도시가 17.22%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와 농어촌은 14.32%와 12.92% 이었다.

〈표 7-8〉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기초분석

(단위: 명, %)

지역	1개 지자체 당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			1개 지자체 당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취업자	창업자	계		
전국 평균	23.4	1.9	25.2	166.2	15.19
대도시 평균	41.3	1.9	43.1	301.4	14.32
중소도시 평균	26.4	2.8	29.2	169.3	17.22
농어촌 평균	3.7	1.0	4.7	36.5	12.92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의 최고와 최저의 격차를 보면 전국평균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최고 비율 50%를 받은 지자체도 있는 반면에 전국적으로 전혀 취·창업률이 없는 0%인 지자체들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어촌의 지자체들이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비슷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7-9〉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50.00	0.00	50.00
대도시	(74)	34.36	0.00	34.36
중소도시	(76)	35.66	0.00	35.66
농어촌	(79)	50.00	0.00	50.00

3.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실적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평가하는 이유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빈곤을 경험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충분한 네트워크 마.련이 부족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탈수급을 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판매망과 인프라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이 생산해 내는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이들 사업참여자도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자생력을 이끌어낸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는 전체 지자체수 대비 자활사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업을 우선 위탁한 금액, 자체 예산지원액을 합한 것에 대한 비율로 평가된다. 동 금액이 높아질수록 지자체 차원에서 자활사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많이 구입하거나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활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p>○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실적: (생산품 우선 구매액 + 사업 우선위탁액 + 자체예산 지원액) /지자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품 우선구매액: 시·군·구의 역할을 통해 전국에서 생산되는 사업단 또는 자활기업(공동체)의 자활생 산품을 해당 시·군·구와 해당 시·군·구내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총금액(예산집행, 국비-도비-시·군·구비 포함, 민간단체 및 개인 구매 제외) • 사업 우선위탁액: 시·군·구의 역할을 통해 해당 시·군·구와 해당 시·군·구내 공공기관^①에서 타 시·군·구 및 해당 시·군·구내 소재한 사업단 또는 자활공동체에 우선 위탁한 사업비 총금액(예산집행, 국비-도 비-시·군·구비 포함, 민간단체 및 개인 위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역할에 대한 근거자료: 실적에 대한 공문시행, 지역단위 관계기관 협의(간담회, 사업설명회 등) 결과보고서 제출 ※ 예산집행 근거자료: 위탁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리스트(기획재정부 고시 내 용 참조)와 교육청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사업 예시: 타부처·타부서의 위탁사업(교육청 보조사업,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 효율사업 등), 타 시군구의 정부양곡배송사업단에 해당시군구 양곡배송사업 위탁시 인정 ※ 제외 사업 예시: 당연 위탁사업(자활근로사업비, 전체 바우처사업,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예산 지원액: 시도와 시군구가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참여자 역량강화(교육 및 훈련 등), 사업활성화 등을 지원한 실적, 시도 예산으로 광역자활센터, 광역자활기업(공동체) 지원한 실적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예산지원은 국비 매칭금은 제외, 도비와 시군구 투입예산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사업 예시) 광역형/지역특화형 우수자활근로 공모사업, 당해 연도 자활기금 지원액, 지역 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지원액, 자활기업(공동체) 생산품 판매장 임대료 지원액 등(단, 무상 임대 제외) ※ 시도예산으로 광역자활센터 지원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지원금÷해당시도 지자체 수=각 지자체 해당 지원금액으로 실적반영 ※ 시도예산으로 광역자활기업(공동체) 지원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지원액÷해당시도 지자체 수=각 지자체 해당 지원금액으로 실적반영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을 보면 전국기준으로 각 점수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최고 점수인 30점의 경우 20.89%, 최저점수인 12점도 20.52%로 비슷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같은 도시지역 지자체는 전반적으로 중간 및 상위점수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농

어촌 지자체의 경우에는 하위 점수를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만점을 받은 비율로 중소도시가 28.9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도시 17.57%이었다. 반면에 농어촌은 13.92%로 도시지역 지자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저비율에서도 농어촌 지자체가 29.1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전반적으로 중간 점수대에 분포하고 있어 지원실적에 있어 지역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7-10〉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산물 우선 구매액+사업 우선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지자체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30점: 670,000이상	20.89	17.57	28.94	13.92
	26점: 480,000이상~670,000미만	17.90	20.27	18.42	15.19
	21점: 290,000이상~480,000미만	21.84	29.73	19.74	16.46
	17점: 100,000이상~290,000미만	19.65	16.21	17.11	25.32
	12점: 100,000미만	20.52	16.22	15.79	29.11
계(수)		100.00(229)	100.00(74)	100.00(76)	100.00(79)

동 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규모면에서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지역 지자체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농어촌은 이보다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평균적으로 생산물 우선 구매액은 전국적으로 약 39,678.7백만원을 구매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대도시가 63,097.3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중소도시가 54,302.3백만원 수준이었다. 반면에 농어촌은 이보다 많이 낮은 3,674백만원에 불과해 도시지역 지자체들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사업 우선 위탁액 규모는 중소도시가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와 농어촌은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체 예산 지원액 역시 대도시가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실적은 전국 평균 465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 중소도시 지자체가 가장 많은 605백만원을, 다음은 대도시가 46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반면에 농어촌의 지자체들은 329백만원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7-11〉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기초분석

(단위: 천원)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액	사업 우선 위탁액	자체 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전국 평균	39,678.7	305,072.6	120,516.8	465,268.14
대도시 평균	63,097.3	217,967.3	185,899.9	466,964.50
중소도시 평균	54,302.3	437,585.0	113,400.8	605,288.08
농어촌 평균	3,674.0	259,184.7	66,117.7	328,976.42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에 대한 지역간 격차를 보면 전국적으로 최고금액과 최저금액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도시와 농어촌의 일부 지자체는 동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내 격차는 중소도시가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도시와 농어촌은 비슷한 수준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표 7-12〉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의 지역격차

(단위: 개, 천원)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3,755,167.00	0.00	3,755,167.00
대도시	(74)	1,732,057.00	0.00	1,732,057.00
중소도시	(76)	3,755,167.00	4800.00	3,750,367.00
농어촌	(79)	1,511,535.00	0.00	1,511,535.00



제8장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8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 평가결과 분석 <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 도입 초기 기초보장제도의 한 급여로서 생계급여에 비해 예산비중이 높지 않은 급여였다. 하지만 이후 의료급여 대상자와 급여 수준이 증가하면서 기초보장제도의 급여 중 생계급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급여로 발전하였으며 지금은 별도의 법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부문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의료급여분야 평가는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이라는 1개의 영역에 3개의 지표를 통해 평가되고 있다. 이는 2012년 평가에 비해 한 개의 지표가 줄어들었으며 내용에서도 일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두 개의 지표인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은 2012년과 동일한 반면에 2012년 평가지표였던 사례관리 대상인원 목표달성률,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전환율의 두 개 지표 대신 2013년에는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이 변경되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들의 4개 영역 중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지표는 「기초생활보장」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가들의 전체 세부지표 중 3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등이다.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지표의 가중치는 6.4로 2012년 6.2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표 8-1〉 2012~2013년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사례관리 대상인원 목표달성률 •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율 	6.4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6.2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점수는 640점 만점이며,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이 40%,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을 40%,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이 20%로 산정하고 있다.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는 전국 평균 462.84점(SD=82.33)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 간 표준편차는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고점수는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이 모두 640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점수는 대도시와 농어촌이 256점, 농어촌이 294.4점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의 최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농어촌이 473.0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469.98점, 444.63점의 순이었다. 표준편차를 통해 보면 대도시가 가장 큰 86.03점이었으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각각 83.41점과 75.64점이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지역편차가 적은 반면에 의료 인프라가 좋은 도시지역의 표준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농어촌에 비해 도시지역의 의료급여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8-2〉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의 평가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지역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전국	640.00	640.00	256.00	462.84	82.33
	대도시	640.00	640.00	256.00	444.63	86.06
	중소도시	640.00	640.00	256.00	469.98	83.41
	농어촌	640.00	640.00	294.40	473.03	75.64

주: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가중치는 6.4임.

의료급여 관리 적절성의 세부 평가내용을 보면 전체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가율과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4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담이득금 징수실적은 이보다 낮은 2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세개의 세부지표 모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전국과 3대 지역이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경우 농어촌이 평균 30.20점, 중소도시가 27.21점, 대도시가 24.84점으로 지역 간 차이가 있었으며,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경우 중소도시가 30.29점, 대도시 29.95점, 농어촌이 26.48점으로 역시 다소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신규지표인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담이득금 징수실적은 농어촌이 17.23점, 중소도시가 15.93점, 대도시 14.69점으로 농어촌의 지자체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두 가지 평가지표에 비해서는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는 있지 않았다.

〈표 8-3〉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단위: 점)

세부지표	지역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전국	40.00	40.00	16.00	27.48	8.41
	대도시	40.00	40.00	16.00	24.84	8.02
	중소도시	40.00	40.00	16.00	27.21	8.39
	농어촌	40.00	40.00	16.00	30.20	8.05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전국	40.00	40.00	16.00	28.86	8.38
	대도시	40.00	40.00	16.00	29.95	8.78
	중소도시	40.00	40.00	16.00	30.29	7.65
	농어촌	40.00	40.00	16.00	26.48	8.24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담이득금 징수 실적	전국	20.00	20.00	8.00	15.98	4.69
	대도시	20.00	20.00	8.00	14.69	4.73
	중소도시	20.00	20.00	8.00	15.93	4.79
	농어촌	20.00	20.00	8.00	17.23	4.26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의료급여에 대한 첫 번째 세부 평가항목은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지표이다. 동 지표는 2000년대 들어 중요 복지제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의료급여의 급격한 재정증가에 대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자하는 것으로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를 지자체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즉,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파악하는 것으로 부정한 의료급여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자체의 의료급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의 지표는 작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은 아래 산식에서와 같이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times 0.5$)+(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times 0.5$)’로 산출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증감률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입내원일수나 진료비의 절대치를 활용할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들과 같이 의료이용이 많은 대상자가 많은 시·군·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시·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률을 지표로 활용하였다(김승권 외, 2012).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역순위 평가):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times 0.5$)+(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times 0.5$)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12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의\ 평균값) /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의\ 평균값\} \times 100$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12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의\ 평균값) /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의\ 평균값\} \times 100$
- ※ 전체수급권자 기준 : '12년 12월 31일 지급기준(심사결정) - 진료실인원, 총 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에 대한 지표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만점을 받은 지자체는 19.65% 이었지만 차점은 14.85%에 불과해 전반적으로는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가 많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의 지자체가 상위점수인 28점 이상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는 반면에 대도시는 반대로 28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중소도시 역시 전반적으로는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가 많이 있었지만 대도시에 비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가 많이 있었다. 의료기관 및 의료관련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시지역이 오히려 의료급여의 관리에 있어서는 농어촌에 비해서는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4〉 전체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0.5)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0.5)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40점: 7.6%미만	19.65	14.87	19.74	26.58
	34점: 7.6%이상~9.7%미만	14.85	5.41	17.10	22.79
	28점: 9.7%이상~11.8%미만	22.71	21.62	19.74	22.79
	22점: 11.8%이상~13.9%미만	22.71	29.73	22.37	16.45
	13.9점: 20%이상	20.08	28.37	21.05	11.39
계(수)		100.00 (229)	100.00 (74)	100.00 (76)	100.00 (79)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에 대한 기초자료를 살펴보면, 수급권자 1인당 의료급여 일수 증감률은 전국 평균 9.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가장 높게 증가한 11.4% 이었으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9.9%, 7.6%로 농어촌에 비해 도시지역의 의료급여일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증가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11.6%로 10% 이상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12.4%, 11.7%로 10% 이상 증가한 반면에 농어촌은 이보다 다소 낮은 10.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지표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은 10.52%가 증가하였으며, 농어촌이 가장 낮은 9.09%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는 각각 11.88%, 10.82%로 농어촌지역에 비해서는 의료급여에 관리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8-5〉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기초분석

(단위: 일, 원, %)

지역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B)			전체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A×0.5)+(B×0.5)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20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 ②	(A) {(②-①)/①}× 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20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 ④	(B) {(④-③)/③}× 100	
전국 평균	269.6	295.3	9.6	2,731,469.4	3,046,203.0	11.6	10.52
대도시 평균	260.1	289.8	11.4	2,599,179.5	2,920,693.0	12.4	11.88
중소도시 평균	261.6	287.6	9.9	2,683,469.5	2,998,362.3	11.7	10.82
농어촌 평균	286.2	307.8	7.6	2,901,563.6	3,209,793.2	10.6	9.09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에 대한 지역별 차이는 전국적으로 42.78%pt로, 이는 중소도시와 동일한 수준이다. 반면에 격차가 가장 작은 지역은 농어촌이 26.20%pt이었으며, 대도시가 다음인 30.08%pt 이었다.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이 낮을수록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중소도시의 지자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의료급여 관리에 대한 검토와 논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8-6〉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26.41	-16.37	42.78
대도시	(74)	22.72	-7.35	30.06
중소도시	(76)	26.41	-16.37	42.78
농어촌	(79)	17.83	-8.36	26.20

주: 본 지표의 수치는 역점수화 되어 산출됨.

2.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의료급여의 두 번째 평가지표는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로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지표이다. 즉 수급자들에게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지역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수급자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동 사업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급여의 재정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관리하고 방지함으로써 사례관리대상자들의 의료이용이 적절하게 유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지표 계산은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은 크게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times 0.5$ 와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times 0.5$ ’의 합을 통해 산출한다.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가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은 전년대비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역순위 평가):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times 0.5$)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times 0.5$)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12\text{년 } 1\text{인당 평균 급여일수}' - '11\text{년 } 1\text{인당 평균 급여일수}') / '11\text{년 } 1\text{인당 평균 급여일수}'\} \times 100$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 $\{('12\text{년 } 1\text{인당 평균 진료비}' - '11\text{년 } 1\text{인당 평균 진료비}') / '11\text{년 } 1\text{인당 평균 진료비}'\} \times 100$
- 사례관리대상자는 '12년도 고위험군 사례관리 종결자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평가함.
※ 사례관리대상자 기준: '12년도 고위험군 사례관리 종결자(일반/조기 종결자)로서 지급기준은 전체 수급권자와 동일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에 대한 실적을 보면 전국적으로 30점 만점을 받은 지자체는 38.43%이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21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만점을 받은 지자체가 47.30%, 43.42%로 높은 반면에 농어촌은 25.32%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수대 분포에 있어서도 도시지역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반면에, 농어촌은 하위점수를 받은 지자체가 많이 있었다. 직전 지표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에서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이 낮았다는 점에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사례관리 효과보다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자체적인 의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어촌에서 사례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진료일수 및 진료비에 대한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도시에서는 사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직전지표에서 진료비 증가

가 농어촌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8-7〉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 0.5)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 0.5)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30점: -9%미만	38.43	47.30	43.42	25.32
	26점: -9%이상~-6%미만	16.16	8.11	18.42	21.52
	21점: -6%이상~-3%미만	11.35	10.81	13.16	10.13
	17점: -3%이상~0%미만	17.47	18.92	15.79	17.72
	12점: 0%이상	16.59	14.86	9.21	25.31
계(수)		100.00(229)	100.00(74)	100.00(76)	100.00(79)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에 대한 기초자료를 보면, 사례관리 대상자의 1인당 평균의료급여 일수는 평균은 물론 모든 지역에서 음의 성장률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의 평균이 -4.7%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다.

또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도 평균적으로는 13.3%가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16.1%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중소도시 13.8%, 농어촌 9.6%의 순이었다. 동 지표에 대한 전체 평균은 8.5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곳은 대도시(9.87%)와 중소도시(9.25%)이었으며 농어촌지역은 다소 부족한 6.36%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8〉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기초분석

(단위: 일, 원, %)

지역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B)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A×0.5)+ (B×0.5)
	20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20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A) '{(②-①)/①} ×100	2011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③	20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B) '{(④-③)/③} ×100	
전국 평균	990.2	952.0	-3.9	7,081,220.1	6,142,461.5	-13.3	-8.56
대도시 평균	1,044.4	1,006.2	-3.7	7,607,801.5	6,383,283.5	-16.1	-9.87
중소도시 평균	1,013.9	966.1	-4.7	7,205,650.4	6,213,324.8	-13.8	-9.25
농어촌 평균	916.6	887.7	-3.1	6,468,261.5	5,848,709.1	-9.6	-6.36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지역 간 격차를 보면, 전국 평균은 최고와 최저 비율 간에 61.54%pt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의 격차가 가장 큰 50.83%pt 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대도시가 47.75%pt로 낮게 평가되었다. 최고 수치에서도 농어촌이 25.15%pt로 높다는 점에서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표 8-9〉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25.15	-36.39	61.54
대도시	(74)	11.36	-36.39	47.75
중소도시	(76)	13.80	-22.35	36.15
농어촌	(79)	25.15	-25.68	50.83

주: 본 지표의 수치는 역점수화 되어 산출됨.

3.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은 2013년 평가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표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해요인 조사처리율”과 “조사처리건수를 상해요인 통보건서”로 나눈 것을 합산하게 된다. 각 지표의 가중치는 첫 번째 지표는 30%, 두 번째 지표는 70%의 가중치를 두고 있다. 의료급여에 대한 평가지표 중 앞의 두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오히려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적 평가(역순 평가)를 주는 것인 반면에 세 번째 지표인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은 실적이 높아질수록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잘못 지원되었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재원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얼마나 이를 환수하고 의료급여 재원이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라 할 수 있다.

○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상해요인 조사처리율×0.3)+(부당이득금 징수율×0.7)	
• 상해요인 조사처리율: (조사처리건수/상해요인 통보건수)×100	
※ 조사처리건수: 상해요인으로 '11년도 통보된 건('11년도 1차수~12차수)에 대해 조사 처리하여 징수 토록 결정된 건수(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모두 포함)	
• 부당이득금 징수율: (징수금액/결정금액)×100	
※ 결정금액: '11년도 상해요인(구상금 포함) 결정 부당금액, 현지조사 부당금액 및 공단에서 통보된 부 당금액	
※ 징수금액: '11년도 상해요인 통보건 중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으로 결정되어 '11년도~'12년 12월 31일까지 징수 완료된 금액, '11년도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부당이득금 통보되어 징수 완료된 금 액, 공단 통보 건 징수 완료된 금액 그리고 '11년도 통보된 건의 전산상계 및 방법변경 금액, '11년 도 결손한 금액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만점인 20점을 받은 지자체가 48.04%로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최저점수를 받은 지자체도 17.90%라는 점에서 일부 지자체의 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지자체중 62.02%와 50.0%가 최고점을 받았다. 반면에 대도시의 20점을 받은 지자체는 31.0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분포하고 있으며 또한 최저점을 받은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동 지표에 대한 실적은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농어촌의 지자체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10〉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상해요인 조사처리율×0.3)+ (부당이득금 징수율×0.7)				
	20점: 90%이상	48.04	31.08	50.00	62.02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17점: 85%이상~90%미만	14.41	20.27	10.53	12.66
	14점: 80%이상~85%미만	10.92	12.16	11.84	8.86
	11점: 75%이상~80%미만	8.73	13.52	9.21	3.80
	8점: 75%미만	17.90	22.97	18.42	12.66
	계(수)	100.00(229)	100.00(74)	100.00(76)	100.00(79)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에 대한 기초분석 자료를 통해 보면, 먼저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거의 100%에 도달하는 98.3% 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 간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77.4%이었으며 대도시의 평균이 다소 낮은 75.4%, 농어촌이 가장 높은 82.6%로 나타났다. 동 지표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은 83.69%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가장 높은 87.22%, 다음으로 중

소도시 및 대도시는 83.83%와 82.37% 순이었다.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대한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실적에 대한 제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8-11〉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기초분석

(단위: 개, 천원, %)

지역	1개 지자체 당 조사처리 건수	1개 지자체 당 11년도 보통건수	1개 지자체 당 상해요인 조사처리율	1개 지자체 당 징수금액	1개 지자체 당 결정금액	1개 지자체 당 부당이득금 징수율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전국 평균	413.6	420.8	98.3	64,730,481.0	83,596,722.7	77.4	83.69
대도시 평균	486.9	493.8	98.6	80,996,142.4	107,406,044.1	75.4	82.37
중소도시 평균	546.8	557.2	98.1	87,259,091.6	112,297,838.9	77.7	83.83
농어촌 평균	216.8	221.2	98.0	27,821,198.1	33,683,119.9	82.6	8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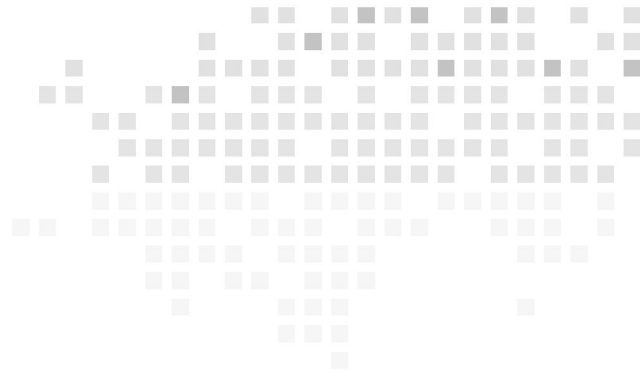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에 대한 지역격차를 살펴보면 의료급여의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는 3대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전국 평균이 45.29%pt로 가장 낮은 수준인 농어촌의 42.91%pt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중소도시는 대도시 다음으로 높은 43.66%를 보여주고 있다.

〈표 8-12〉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100.00	54.71	45.29
대도시	(74)	100.00	54.71	45.29
중소도시	(76)	99.90	56.24	43.66
농어촌	(79)	100.00	57.09	42.91



제9장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9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 평가결과 분석 <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들의 4개 영역 중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 지표는 「복지서비스」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가들의 전체 세부지표 중 3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개정법 시설·인력 기준 충족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등이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개정법 시설·인력 기준 충족률은 시도 평가에 적용하고, 시·군·구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 지표의 가중치는 11.1로 2012년 14.9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표 9-1〉 2012~2013년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요양시설 입소율 및 종합재가기관 확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요양시설 입소율 종합재가기관 확충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장애인연금 수급률 	14.9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개정법 시설·인력 기준 충족률 (시·도 평가에 적용하며, 시·군·구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11.1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개정법 시설·인력 기준 충족률을 제외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과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의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만점은 666점으로 환산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의 평균점수는 485.98점(SD=102.35)이었다.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자체가 513.27점(SD=93.9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478.76점(SD=95.99), 대도시 지자체

464.25점(SD=111.72)의 순이었다.

전국의 최고점은 666.00점 만점이었고, 최저점은 266.40점(40%)이었다. 이러한 최고점 621.60점, 최저점 266.40점을 보인 중소도시 지자체를 제외한 대도시 지자체와 농어촌 지자체에서도 동일하였다.

〈표 9-2〉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평가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지역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전국	666.00	666.00	266.40	485.98	102.35
	대도시	666.00	666.00	266.40	464.25	111.72
	중소도시	666.00	621.60	266.40	478.76	95.99
	농어촌	666.00	666.00	266.40	513.27	93.96

주: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가중치는 11.1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의 평가점수는 30점 만점에 평균 22.69점(SD=6.10)이었다. 평가점수의 평균은 3대 지역이 모두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대도시 지자체 22.69점(SD=6.35), 중소도시 지자체 22.38점(SD=5.37), 농어촌 지자체 22.09점(SD=6.49)이었다. 전국 및 3대 지역의 최고와 최저 점수는 모두 30.00점의 만점과 12.00점(40%)의 기본 점수이었다.

〈표 9-3〉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단위: 점)

세부지표	지역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전국	30.00	30.00	12.00	22.69	6.10
	대도시	30.00	30.00	12.00	23.64	6.35
	중소도시	30.00	30.00	12.00	22.38	5.37
	농어촌	30.00	30.00	12.00	22.09	6.49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전국	30.00	30.00	12.00	21.10	6.54
	대도시	30.00	30.00	12.00	18.19	6.41
	중소도시	30.00	30.00	12.00	20.75	6.49
	농어촌	30.00	30.00	12.00	24.15	5.32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의 평가점수는 30점 만점에 평균 21.10점(SD=6.54)이었다. 평가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자체 24.15점(SD=5.32), 중소도시 지자체 20.75점(SD=6.49), 대도시 지자체 18.19점(SD=6.41)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국 및 3대 지역의 최고와 최저 점수는 모두 만점인 30.00점과 기본 점수인 12.00점 이었다.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은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 \times 0.7 + (\text{과년도 부당수급 환수액}/\text{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 \times 0.3\} \times 100$ ’으로 평가된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 \times 0.7 + (\text{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text{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 \times 0.3\} \times 100$

-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 대비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
-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 금액 대비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평가기준은 86% 이상이면 만점인 30점, 69% 이상~86% 미만이면 26점, 52% 이상~69% 미만이면 21점, 35% 이상~52% 미만이면 17점, 35% 미만이면 기본점수인 12점을 부여한다.

전체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의 평가결과를 보면, 86% 이상의 높은 환수율을 보인 지자체는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4.45%이었고, 35% 미만의 낮은 환수율을 보인 지자체는 13.54%이었다. 환수율 구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69% 이상~86% 미만으로 26.64%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대도시 지자체는 만점인 30점(86% 이상)을 받은 경우가 36.49%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지자체와 농어촌 지자체는 차점인 26점(69% 이상~86% 미만)을 받은 경우가 각각 32.90%, 25.32%로 가장 많았다.

〈표 9-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text{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text{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 \times 0.7 + (\text{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 / \text{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 \times 0.3\} \times 10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30점: 86% 이상	24.45	36.49	14.47	22.78
	26점: 69% 이상~86% 미만	26.64	21.62	32.90	25.32
	21점: 52% 이상~69% 미만	19.65	12.16	23.68	21.52
	17점: 35% 이상~52% 미만	15.72	18.92	19.74	10.13
	12점: 35% 미만	13.54	10.81	9.21	20.25
계(수)		100.00 (229)	100.00 (74)	100.00 (76)	100.00 (79)

2012년 전국적으로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환수액은 당해연도 부당수급 6억 1,441만원과 과년도 부당수급 7,053만원으로 합계 6억 8,494만원이었다. 이를 전국 229개 지자체 평균으로 환산하면, 1개 지자체 당 환수액은 당해연도 부당수급 2,683천원과 과년도 부당수급 308천원으로 합계 2,991천원이었다.

3대 지역별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환수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도시 지자체의 부당수급이 많았는데, 지자체 당 환수액은 당해연도 부당수급 3,617.7천원과 과년도 부당수급 422천원으로 합계 4,039.7천원이었다. 대도시 지자체 당 환수액은 당해연도 부당수급 2,319.5천원과 과년도 부당수급 265.2천원으로 합계 2,584.7천원이었다. 농어촌 지자체 당 환수액은 당해연도 부당수급 2,125천원과 과년도 부당수급 239.6천원으로 합계 2,364.6천원이었다.

〈표 9-5〉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기초분석

(단위: 천원, %)

지역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전국 평균	2,683.2	4,200.6	308.4	523.7	62.38
대도시 평균	2,319.5	3,527.6	265.2	452.8	63.60
중소도시 평균	3,617.7	5,746.8	422.0	719.4	61.66
농어촌 평균	2,125.0	3,343.4	239.6	401.9	62.37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은 전국 및 3대 지역 모두 최고 100%, 최저 0%를 보였다. 이는 3대 지역 내에서도 노력 여하에 따라 연금 수급자 관리의 적절성과 부적절성이 현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표 9-6〉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100.00	0.00	100.00
대도시	(74)	100.00	0.00	100.00
중소도시	(76)	100.00	0.00	100.00
농어촌	(79)	100.00	0.00	100.00

2.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신규 수급자수/수급가능자수)×100’으로 산출된다. 신청 가능자 수는 ‘12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가능자 수이고, 신규 수급자 수는 ‘12.12월 기준으로 한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수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신규 수급자 수/수급가능자 수)×100
- 신규 수급자 수: ‘12.12월 기준으로 한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수
 - ※ 신규 수급자 수는 ‘12년도에 신규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자격을 취득한 장애인 수(단, 시설수급자는 과년도도 모두 포함)
 - 신청 가능자 수: ‘12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가능자 수
 - ※ 신청 가능자 수는 ‘12년도에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수(‘11.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의 평가는 38.0% 이상이면 만점인 30점, 30.0% 이상~38.0% 미만이면 26점, 22.0% 이상~30.0% 미만이면 21점, 14.0% 이상~22.0% 미만이면 17점, 14.0% 미만이면 기본점수인 12점을 부여한다.

전체적으로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의 평가결과를 보면, 38.0% 이상의 높은 수급률을 보인 지자체는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3.58%이었고, 14% 미만의 낮은 수급률을 보인 지자체는 20.52%이었다. 환수율 구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38.0% 이상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농어촌 지자체가 만점인 30점(38.0% 이상)을 받은 경우가 32.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는 중간 점수인 21점(22.0% 이상~30.0% 미만)을 받은 경우가 23.68%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 지자체는 최저점인 12점(14.0% 미만)을 받은 경우가 36.49%로 가장 많았다.

〈표 9-7〉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적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신규 수급자 수/수급가능자 수)×100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30점: 38.0% 이상	23.58	16.22	21.05	32.91
	26점: 30.0% 이상~38.0% 미만	13.54	4.05	13.16	22.78
	21점: 22.0% 이상~30.0% 미만	20.96	13.51	23.68	25.32
	17점: 14.0% 이상~22.0% 미만	21.40	29.73	19.74	15.19
	12점: 14.0% 미만	20.52	36.49	22.37	3.80
계(수)		100.00(229)	100.00(74)	100.00(76)	100.00(79)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의 전국 평균은 24.19%로 낮았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자체가 40.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24.33%, 대도시 지자체 20.46%의 순이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수급가능자 수가 많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자체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9-8〉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기초분석

(단위: 명, %)

지역	1개 지자체 당 신규 수급자 수	1개 지자체 당 수급가능자 수	장애인연금 수급률
전국 평균	224.2	926.8	24.19
대도시 평균	258.2	1,261.6	20.46
중소도시 평균	313.5	1,288.6	24.33
농어촌 평균	106.5	265.2	40.17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의 격차는 전국적으로 최고 221.75%, 최저 3.59%로 격차가 208.16%pt나 되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자체의 격차가 가장 컸고(205.25%pt), 다음은 대도시 지자체(165.85%pt), 중소도시 지자체(104.06%pt)의 순이었다.

〈표 9-9〉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장애인연금 수급률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221.75	3.59	208.16
대도시	(74)	170.83	4.98	165.85
중소도시	(76)	107.66	3.59	104.06
농어촌	(79)	211.75	6.50	205.25



제10장 아동보호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2012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들의 4개 영역 중 「복지서비스」 영역에 「아동 보호 서비스」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와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이다. 이 중에서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는 복합지표인데,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과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에 의해 평가된다. 「아동보호 서비스」 지표의 가중치는 11.2로서 전년도(2012년)의 12.1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표 10-1〉 2011~2012년 아동복지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12.1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11.2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보호 서비스」 지표는 560점 만점에 평균 413.52점($SD=78.46$)이었다.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560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224.00점으로 기본 점수인 40%만을 획득하고 있어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크게 났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 지자체의 평균 점수가 422.06점($SD=71.2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도시 지자체 평균 410.77점($SD=63.66$), 농어촌 지자체 평균 407.88점($SD=95.95$) 순이었다. 3대 지역 내에서의 지자체 간의 격차 역시 다소 컸다. 최고점수는 3대 지역 모두 만점인 560.00점이었으나, 최저점수는

대도시 291.20점, 농어촌 224.00점으로 차이가 났다.

〈표 10-2〉 「아동보호 서비스」의 평가점수

(단위: 개, 점)

평가지표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아동보호 서비스	전국	(229)	560.00	560.00	224.00	413.52	78.46
	대도시	(74)	560.00	560.00	291.20	410.77	63.66
	중소도시	(76)	560.00	560.00	257.60	422.06	71.26
	농어촌	(79)	560.00	560.00	224.00	407.88	95.95

주: 아동보호 서비스의 가중치는 11.2임.

「아동보호 서비스」 지표의 세부지표 평가결과는 〈표 10-3〉에 제시된다. 첫 번째 세부 지표인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는 복합지표로서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과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각각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에 대한 평가결과는 10점 만점에 전국 229개 지자체 평균 8.34점($SD=2.45$)이었다. 3대 지역별 평균 점수는 대도시 지자체가 가장 높은 8.88점($SD=2.16$)이었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8.70점($SD=2.23$), 농어촌 지자체 7.51점($SD=2.69$)의 순이었다. 전국 및 3대 지역 모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만점(10점)과 기본점수(4점)이었다.

다음으로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에 대한 평가결과는 20점 만점에 전국 229개 지자체 평균 12.77점($SD=4.46$)이었다. 3대 지역별 평균 점수는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중소도시 지자체가 평균 12.89점($SD=4.21$), 대도시 지자체 평균 12.74점($SD=4.39$), 농어촌 지자체 평균 12.67점($SD=4.80$)이었다. 전국 및 3대 지역 모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만점(20점)과 기본점수(8점)이었다.

두 번째 세부 지표인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에 대한 평가결과는 20점 만점에 전국 평균 15.81점($SD=4.75$)이었다. 3대 지역별 평균 점수는 농어촌 지자체가 16.24점($SD=5.1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16.09점($SD=4.35$), 대도시 지자체 15.05점($SD=4.70$)의 순이었다. 전국 및 3대 지역 모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만점(20점)과 기본점수(8점)이었다.

〈표 10-3〉 「아동보호 서비스」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단위: 점)

세부지표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자립지원전담 요원 배치율	전국	(229)	10.00	10.00	4.00	8.34	2.45
		대도시	(74)	10.00	10.00	4.00	8.88	2.16
		중소도시	(76)	10.00	10.00	4.00	8.70	2.23
		농어촌	(79)	10.00	10.00	4.00	7.51	2.69
	다담씨앗통장사업 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전국	(229)	20.00	20.00	8.00	12.77	4.46
		대도시	(74)	20.00	20.00	8.00	12.74	4.39
		중소도시	(76)	20.00	20.00	8.00	12.89	4.21
		농어촌	(79)	20.00	20.00	8.00	12.67	4.80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용	전국	(229)	20.00	20.00	8.00	15.81	4.75	
	대도시	(74)	20.00	20.00	8.00	15.05	4.70	
	중소도시	(76)	20.00	20.00	8.00	16.09	4.35	
	농어촌	(79)	20.00	20.00	8.00	16.24	5.12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실 배치인원/법정 배치인원)×100”에 의해 평가된다. 법정 배치인원은 아동복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별표 5에 제시되어 있는데, 10인 이상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 직업훈련 시설에 1인 이상 배치토록 되어 있다. .

○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실 배치인원/법정 배치인원)×100
· 법정 배치인원: 10인 이상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 직업훈련시설에 1인 이상 배치
※ 법정 배치인원: 아동복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별표5 참조

이 산출식을 적용하여 집행률이 100% 이상이면 만점인 10점, 90% 이상~100% 미만이면 8점, 80% 이상~90% 미만이면 6점, 70% 이상~80% 미만이면 5점, 70% 미만이면 기본 점수인 4점을 부여한다.

전체 지자체 중 만점인 1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66.81%이었고, 기본 점수인 4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13.97%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대도시 77.03%, 중소도시 72.37%로 많았으나, 농어촌은 48.10%로 현저히 적은

양상을 보였다.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친 지자체는 농어촌이 24.05%로 많았으나 중소도시 9.21%, 대도시 9.46%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농어촌 지자체에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배치가 미흡한 이유를 규명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10-4〉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적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실 배치인원/법정 배치인원)×100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10점: 100% 이상	66.81	77.03	72.37	48.10
	8점: 90% 이상~100% 미만	4.37	2.70	3.95	5.06
	6점: 80% 이상~90% 미만	5.68	4.05	5.26	7.60
	5점: 70% 이상~80% 미만	9.17	6.76	9.21	11.39
	4점: 70% 미만	13.97	9.46	9.21	24.05
계(수)		100.00(229)	100.00(74)	100.00(76)	100.00(79)

2012년에 229개 전국 지자체의 법정 자립지원전담요원은 247명이었고, 실제 배치 인원은 252명으로 배치율은 102.02%이었다. 이를 3대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도시 지자체의 법정 배치인원은 105명, 실제 배치인원은 110명으로 배치율 107.76%를 보였고, 중소도시 지자체와 농어촌 지자체는 법정 배치인원 각각 106명, 36명이었고, 실제 배치인원도 동일하여 배치율 100.00%이었다.

〈표 10-5〉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기초분석

(단위: 개, 명,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1개 지자체 당 실 배치인원	1개 지자체 당 법정 배치인원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전국	(229)	252.0	247.0	102.02
대도시	(74)	110.0	105.0	104.76
중소도시	(76)	106.0	106.0	100.00
농어촌	(79)	36.0	36.0	100.00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2012년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의 지자체 간 격차는 현저하였다. 즉, 전국 229개 지자체의 평균 배치율은 최고 200%, 최저 0%로 격차가 200%p나 되었다. 즉, 법정 배치인원보다 실 배치인원이 두배가 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법정 배치인원을 두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있음을 의미한다. 대도시 지자체는 동일한 양상이었고, 중소도

시와 농어촌 지자체는 법정 배치인원을 둔 지자체와 법정 배치인원을 두지 않은 지자체로 양분되었다.

〈표 10-6〉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200.00	0.00	200.00
대도시	(74)	200.00	0.00	200.00
중소도시	(76)	100.00	0.00	100.00
농어촌	(79)	100.00	0.00	100.00

2.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12년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11년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11년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100”에 의해 평가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frac{('12년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 '11년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11년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times 100$
· '12년도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월별 정부(지자체) 매칭지원금(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 적립액)의 연간 누계액/월별 저축아동(매칭지원이 중단되는 18세 이상 아동 및 중도해지 아동 제외)의 연간 누계수
· '11년도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월별 정부(지자체) 매칭지원금(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 적립액)의 연간 누계액/월별 저축아동(매칭지원이 중단되는 18세 이상 아동 및 중도해지 아동 제외)의 연간 누계수

이 산출식을 적용하여 증감률이 9% 이상이면 만점인 20점, 6% 이상~9% 미만이면 17점, 3% 이상~6% 미만이면 14점, 0% 이상~3% 미만이면 11점, 0%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8점을 부여하였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만점인 2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17.47%이었고, 기본 점수인 8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33.62%나 되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농어촌이 21.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도시 17.57%, 중소도시 13.16%의 순이었다.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친 지자체는 농어촌 39.24%나 되었고, 다음은 대도시 32.43%, 중소도시 28.95%의 순이었다.

〈표 10-7〉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2년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2011년 1인당평균매칭지원금)/2011년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 100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20점: 9.0% 이상	17.47	17.57	13.16	21.51
	17점: 6.0% 이상~9.0% 미만	11.79	8.11	17.10	10.13
	14점: 3.0% 이상~6.0% 미만	16.60	21.62	18.42	10.13
	11점: 0.0% 이상~3.0% 미만	20.52	20.27	22.37	18.99
	8점: 0.0% 미만	33.62	32.43	28.95	39.24
계(수)		100.00 (229)	100.00 (74)	100.00 (76)	100.00 (79)

2012년에 전국의 1개 지자체당 평균 매칭지원금 누계액은 49,546,392원이었고, 평균 누계 가입자 수는 2,087.8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지원금은 23,730.9원이었다. 따라서 전국 229개 지자체의 디딤씨앗통장사업 매칭지원금 누계액은 2012년 약 113억이었고, 누계 가입자 수는 약 47만 8천명으로 추정된다.

〈표 10-8〉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기초분석

(단위: 원, 명,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1개 지자체 당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			1개 지자체 당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			디딤씨앗통장사 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매칭지원금 누계액	누계 가입자수	1인당평균 지원금	매칭지원금 누계액	누계 가입자수	1인당평균 지원금	
전국 평균	(229)	49,546,392.0	2,087.8	23,730.9	42,293,770.1	1,833.9	23,062.5	2.90
대도시 평균	(74)	58,011,128.5	2,451.2	23,666.7	48,680,003.5	2,131.8	22,835.3	3.64
중소도시 평균	(76)	69,228,711.0	2,894.3	23,918.7	59,022,253.2	2,529.4	23,334.1	2.51
농어촌 평균	(79)	22,682,509.1	971.7	23,344.1	20,218,504.4	885.7	22,828.8	2.26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 지원금 증감률'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이를 3대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도시 1개 지자체당 평균 매칭지원금 누계액은 58,011,128이었고, 평균 누계 가입자 수는 2,451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지원금은 23,667원이었다. 중소도시 1개 지자체당 평균 매칭지원금 누계액은 69,228,711원이었고, 평균 누계 가입자 수는 2,894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지원금은 23,919원이었다. 농어촌 1개 지자체당 평균 매칭지원금 누계액은 22,682,509원이었고, 평균 누

계 가입자 수는 972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지원금은 23,344원이었다. 따라서 지역구 분 없이 아동 1인당 평균 지원금은 약 23,000원대 이었다. 또한 '11년 대비 증가율은 전국 평균 2.90%이었고, 3대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가장 높았고(3.64%), 농어촌이 가장 낮았다(2.26%).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 지원금의 2012년 증감률은 지자체 간에 큰 격차를 보였다. 전국 229개 지자체의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지원금 증감률은 최고 34.53%, 최저 -26.42%로 격차가 60.95%pt나 되었다. 3대 지역별 증감률 격차는 중소도시 지자체가 가장 작은 47.64%pt이었고, 대도시와 농어촌 지자체는 각각 54.28%pt, 53.52%pt이었다.

〈표 10-9〉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 지원금 증감률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 지원금 증감률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34.53	-26.42	60.95
대도시	(74)	34.53	-19.76	54.28
중소도시	(76)	31.66	-15.98	47.64
농어촌	(79)	27.10	-26.42	53.52

3.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은 “(가정위탁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양육시설아동+가정위탁아동+공동생활가정)×100”에 의해 평가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가정위탁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양육시설아동+가정위탁아동+공동생활가정)×100
- 가정위탁아동: '12년 발생한 요보호아동 중 '12년 말 기준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 공동생활가정: '12년 발생한 요보호아동 중 '12년 말 기준 공동생활가정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 아동양육시설: '12년 발생한 요보호아동 중 '12년 말 기준 아동양육시설로 보호 조치된 아동

이 산출식을 적용하여 집행률이 80% 이상이면 만점인 20점, 65% 이상~80% 미만이면 17점, 50% 이상~65% 미만이면 14점, 35% 이상~50% 미만이면 11점, 70%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8점을 부여하였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만점인 2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48.47%이었고, 기본 점수인 4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17.90%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경우는 농어촌 지자체가 59.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44.73%, 대도시 지자체 40.54%이었다.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친 지자체는 농어촌 지자체가 24.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도시 지자체 17.90%, 중소도시 지자체 13.16%의 순이었다.

〈표 10-10〉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B)/(A+B+C)) \times 100$				
요보호 아동 가정보호비율	20점: 80.0% 이상	48.47	40.54	44.73	59.49
	17점: 65.0% 이상~80.0% 미만	9.61	6.76	15.79	6.33
	14점: 50.0% 이상~65.0% 미만	13.54	16.22	17.11	7.60
	11점: 35.0% 이상~50.0% 미만	10.48	20.27	9.21	2.53
	8점: 35.0% 미만	17.90	16.21	13.16	24.05
계(수)		100.00(229)	100.00(74)	100.00(76)	100.00(79)

주: A는 가정위탁아동, B는 공동생활가정, C는 아동양육 시설 아동을 의미함.

2012에 전국 229개 지자체의 평균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은 64.02%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자체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이 78.3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63.45%, 대도시 58.26%의 순이었다.

〈표 10-11〉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기초분석

(단위: 개, 명,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1개 지자체 당 가정위탁아동	1개 지자체 당 공동생활가정	1개 지자체 당 아동양육시설아동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전국 평균	(229)	8.0	3.1	6.2	64.02
대도시 평균	(74)	7.5	2.8	7.4	58.26
중소도시 평균	(76)	11.7	5.3	9.8	63.45
농어촌 평균	(79)	4.8	1.2	1.7	78.38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2012년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의 지자체 간 격차는 현저하게 나타났다. 전국 229개 지자체의 평균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은 최고 100%, 최저 0%이었으며, 이는 3대 지역별로도 동일하였다.

〈표 10-12〉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의 지역격차

(단위: 개, 명,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100.00	0.00	100.00
대도시	(74)	100.00	0.00	100.00
중소도시	(76)	100.00	0.00	100.00
농어촌	(79)	100.00	0.00	100.00



제11장 보육기반 조성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2012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들의 3개 영역 중 「보육기반 조성」 지표는 「여성·가정복지」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가들의 전체 세부지표 중 「보육기반 조성」 지표는 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과 취약보육 실시율이다. 「보육기반 조성」 지표의 가중치는 10.7로서 전년도(2012년)의 10.5에 비해 높아졌다.

〈표 11-1〉 2011~2012년 보육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 취약보육 실시율 	10.5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 취약보육 실시율 	10.7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육기반 조성」 지표는 1,070점 만점에 전국 229개 지자체 평균 769.51점(SD=159.91)이었다.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1,070.00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428.00점으로 기본 점수인 40%만을 획득하고 있어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현저하였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지자체 평균이 793.39점(SD=131.7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 773.92점(SD=155.55), 농어촌 지자체 평균 742.91점(SD=184.29)의 순이었다. 3대 지자체 내에서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보면, 3대 지역 지자체 모두 최고점은 만점인 1,070점으로 동일하였고, 최저점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자체는 513.60점이었으며, 농어촌 지자체는 기본 점수인 428점이었다.

〈표 11-2〉 보육기반 조성의 평가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보육기반 조성	전국	(229)	1,070.00	1,070.00	428.00	769.51	159.91
	대도시	(74)	1,070.00	1,070.00	513.60	793.39	131.72
	중소도시	(76)	1,070.00	1,070.00	513.60	773.92	155.55
	농어촌	(79)	1,070.00	1,070.00	428.00	742.91	184.29

주: 보육기반 조성의 가중치는 10.7임.

「보육기반 조성」 지표의 2개 세부지표 평가결과는 <표 11-3>에 제시된다. 첫 번째 세부지표인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에 대한 평가결과는 50점 만점에 평균 37.62점($SD=11.87$)이었다. 3대 지역별 평균 점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농어촌 지자체 평균 38.23점($SD=12.84$), 대도시 지자체 평균 36.69점($SD=11.06$),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 34.99점($SD=11.21$)이었다. 또한 전국 및 3대 지역의 최고점은 만점인 50점, 최저점은 기본 점수인 20점이었다.

두 번째 세부지표인 ‘취약보육 실시율’에 대한 평가결과는 50점 만점에 평균 34.26점($SD=10.44$)이었다. 3대 지역별 평균 점수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 37.34점($SD=10.63$), 대도시 지자체 평균 34.46점($SD=9.43$), 농어촌 지자체 평균 31.20점($SD=10.38$)이었다. 또한 전국 및 3대 지역의 최고점은 만점인 50점, 최저점은 기본 점수인 20점이었다. 따라서 장애아동, 다문화가족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빈곤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의 확대와 시간제 및 종일제 보육의 확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짐작케 한다.

〈표 11-3〉 보육기반 조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단위: 점)

세부지표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전국	(229)	50.00	50.00	20.00	37.62	11.87
	대도시	(74)	50.00	50.00	20.00	36.69	11.06
	중소도시	(76)	50.00	50.00	20.00	34.99	11.21
	농어촌	(79)	50.00	50.00	20.00	38.23	12.84
취약보육 실시율	전국	(229)	50.00	50.00	20.00	34.26	10.44
	대도시	(74)	50.00	50.00	20.00	34.46	9.43
	중소도시	(76)	50.00	50.00	20.00	37.34	10.63
	농어촌	(79)	50.00	50.00	20.00	31.20	10.38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비율)/2”에 의해 평가된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과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에 대한 개념, 자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frac{(\text{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1) + (\text{'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2)}{2}$
1) 평가인증 보육시설비율	$= \frac{\text{평가인증 보육시설수}}{\text{전체 보육시설수(11년말)}} \times 100$
2)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비율	$= \frac{\text{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수}}{\text{전체 보육시설수(11년말)}} \times 100$
•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 '11년말 전체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을 획득·유지하고 있는 보육시설 비율	
※ 전체 보육시설수에서 '평가인증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방과 후 전담보육시설'은 제외	
•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 '11년말 전체 보육시설 중 '12년도에 평가 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의 비율(재인증은 제외)	
※ 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이 산출식을 적용하여 평가인증률이 38% 이상이면 만점인 50점, 36% 이상~38% 미만이면 43점, 34% 이상~36% 미만이면 35점, 31% 이상~34% 미만이면 28점, 31%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20점을 부여하였다.

〈표 11-4〉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frac{(\text{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1) + (\text{'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2)}{2}$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50점: 38% 이상	37.12	41.89	23.68	45.57
	43점: 36% 이상~38% 미만	14.41	16.22	15.79	11.39
	35점: 34% 이상~36% 미만	14.41	17.57	17.11	8.86
	28점: 31% 이상~34% 미만	16.16	10.81	26.32	11.39
	20점: 31% 미만	17.90	13.51	17.10	22.79
계(수)		100.00(229)	100.00(74)	100.00(76)	100.00(79)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만점인 5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37.12%이었고, 기본 점수인 24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17.90%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농어촌이 45.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도시 41.89%이었으며, 중소도시는 23.68%로 매우 적었다.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친 지자체는 농어촌 22.79%, 중소도시 17.10%, 대도시 13.51%이었다.

2012년 전국 229개 지자체의 1개 지자체 당 평균 보육시설 수는 172.9개,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는 93.2개, 2012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는 27.2개이다. 이를 3대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도시의 1개 지자체 당 평균 보육시설 수는 200.9개,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는 118.8개, 2012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는 27.8개이었다. 중소도시의 1개 지자체 당 평균 보육시설 수는 298.9개,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는 148.4개, 2012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는 52.1개이었다. 농어촌의 1개 지자체 당 평균 보육시설 수는 25.5개,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는 16개, 2012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는 2.7개이다.

〈표 11-5〉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기초분석

(단위: 개)

지역	(분석 지자체 수)	1개 지자체 당 전체 보육시설 수	1개 지자체 당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전국 평균	(229)	172.9	93.2	27.2
대도시 평균	(74)	200.9	118.8	27.8
중소도시 평균	(76)	298.9	148.4	52.1
농어촌 평균	(79)	25.5	16.0	2.7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평가 산술식에 기초한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의 지자체 간 격차는 현저하게 나타났다. 전국 230개 지자체의 평가인증률 격차는 50.00%pt이었고, 이는 농어촌 지자체와 동일하였다. 반면에 대도시 지자체 간의 격차는 19.64%pt, 중소도시 지자체 간의 격차는 21.57%pt이었다.

〈표 11-6〉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50.00	0.00	50.00
대도시	(74)	46.15	26.52	19.64
중소도시	(76)	45.24	23.67	21.57
농어촌	(79)	50.00	0.00	50.00

2. 취약보육 실시율

‘취약보육 실시율’은 “{(영아×0.5)+장애아+다문화영유아+시간연장 및 휴일보육 이용 아동}/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100”에 의해 평가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약보육 실시율: $\frac{(\text{영아} \times 0.5) + \text{장애아} + \text{다문화영유아} + \text{시간연장} + \text{휴일보육 이용 아동 수}}{\text{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times 100$
· 영아, 장애아, 다문화영유아, 시간연장, 휴일보육 이용 아동수 : 취약보육 이용 아동으로서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으로 파악하며, ‘영아’는 조정계수 적용하여 ‘영아 이용 아동수 × 0.5’로 계산
※ 영아는 만 3세미만 아동, 장애아는 무상보육대상 장애아를 의미함.
·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실적)에 의함

이 산출식을 적용하여 취약보육 실시율이 37% 이상이면 만점인 50점, 35% 이상~37% 미만이면 43점, 33% 이상~35% 미만이면 35점, 31% 이상~33% 미만이면 28점, 31%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20점을 부여하였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만점인 5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18.34%이었고, 기본 점수인 2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21.40%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중소도시가 28.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도시 16.22%, 농어촌 10.13%의 순이었다. 반면에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친 지자체는 농어촌이 34.18%나 되었고,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유사한 수준으로 각각 14.86%, 14.47%이었다.

〈표 11-7〉 취약보육 실시율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frac{(\text{영아} \times 0.5) + \text{장애아} + \text{다문화영유아} + \text{시간연장} + \text{휴일보육 이용 아동 수}}{\text{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times 100$				
취약보육 실시율	50점: 37% 이상	18.34	16.22	28.95	10.13
	43점: 35% 이상~37% 미만	14.85	10.81	17.11	16.45
	35점: 33% 이상~35% 미만	24.89	35.14	22.37	17.72
	28점: 31% 이상~33% 미만	20.52	22.97	17.10	21.52
	20점: 31% 미만	21.40	14.86	14.47	34.18
계(수)		100.00(229)	100.00(74)	100.00(76)	100.00(79)

2011년에 전국 229개 지자체의 1개 지자체 당 평균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는 6.475명, 영아보육이용 아동수 3.819명, 장애아보육 이용아동 수 45명, 다문화영유아보육 이용아동 수 87명, 시간연장형보육 이용아동 수 179명, 휴일보육 이용아동 수 11명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도시의 1개 지자체 당 평균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는 8,047.1명, 영아보육이용 아동수 4,796.5명, 장애아보육 이용아동 수 61.8명, 다문화영유아보육 이용아동 수 77.3명, 시간연장형보육 이용아동 수 187.5명, 휴일보육 이용아동 수 8.8명이었다. 중소도시의 1개 지자체 당 평균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는 10,400.3명, 영아보육이용 아동수 6,190.8명, 장애아보육 이용아동 수 69.8명, 다문화영유아보육 이용아동 수 135.7명, 시간연장형보육 이용아동 수 327.1명, 휴일보육 이용아동 수 24.9명이었다. 그리고 농어촌의 1개 지자체 당 평균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는 1,226.7명, 영아보육이용 아동수 620.9명, 장애아보육 이용아동 수 4.5명, 다문화영유아보육 이용아동 수 50.5명, 시간연장형보육 이용아동 수 29.5명, 휴일보육 이용아동 수 0.7명이었다.

본 평가의 산출식에 근거한 취약보육시설 실시율(영아보육이용 수는 1/2만 적용함)은 전국 평균 34.47%이었고, 3대 지역별로는 큰 차이 없이 32.25%~35.12%의 구간에 있었다.

〈표 11-8〉 취약보육 실시율 기초분석

(단위: 명,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1개 지자체 당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1개 지자체 당 취약 보육 이용 아동수						취약보육 실시율
			영아보육이용아동수		장애아 보육 이용아동수	다문화 영유아보육 이용아동수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아동수	휴일 보육 이용 아동수	
			실제 이용수	실제이용수 ×0.5					
전국 평균	(229)	6,475.2	3,818.8	1,909.4	44.7	87.5	179.3	11.3	34.47
대도시 평균	(74)	8,047.1	4,796.5	2,398.3	61.8	77.3	187.5	8.8	33.97
중소도시 평균	(76)	10,400.3	6,190.8	3,095.4	69.8	135.7	327.1	24.9	35.12
농어촌 평균	(79)	1,226.7	620.9	310.5	4.5	50.5	29.5	0.7	32.25

주: 전국 평균값은 229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29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6개, 농어촌 79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취약보육 실시율'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평가 산출식에 기초한 취약보육 실시율의 지자체 간 격차는 컸다. 전국 229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최고 45.96%, 최저 23.49%로 격차는 22.47%pt이었다. 이는 중소도시와 동일한 것이다. 농어촌의 격차도 컸는데, 최고 44.83%, 최저 24.45%로 격차는 20.38%pt이었다. 대도시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최고 38.42%, 최저 26.10%로 격차는 12.32%pt이었다.

〈표 11-9〉 취약보육 실시율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취약보육 실시율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29)	45.96	23.49	22.47
대도시	(74)	38.42	26.10	12.32
중소도시	(76)	45.96	23.49	22.47
농어촌	(79)	44.83	24.45	20.38



제12장 시·도별 주요 복지통계

제1절 복지기반 조성

제2절 기초생활보장

제3절 복지서비스

제1절 복지기반 조성

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선택형,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이 가장 높은 광역 지자체는 제주도(106.39%)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서울(83.41%)이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이 전국 평균(93.09%)보다 높은 곳은 제주도를 비롯한 전북(99.02%), 경기(96.19%), 전남(95.62%), 대구(94.54%), 광주(94.34%), 인천(94.32%), 충남(93.97%), 대전(93.44%) 등이었다.

〈표 12-1〉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지역선택형+지역개발형)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률 (B/A)×100
전국	187,800,915	174,831,807	93.09
서울	17,582,654	14,666,085	83.41
부산	14,068,056	12,866,004	91.46
대구	11,434,633	10,810,615	94.54
인천	9,035,332	8,521,888	94.32
광주	9,350,520	8,821,061	94.34
대전	15,577,235	14,555,087	93.44
울산	3,933,284	3,342,178	84.97
경기	26,982,618	25,953,342	96.19
강원	8,491,609	7,500,613	88.33
충북	9,791,331	9,046,834	92.40
충남	10,328,194	9,705,038	93.97
전북	10,058,728	9,959,892	99.02
전남	13,986,182	13,373,453	95.62
경북	11,695,640	10,838,974	92.68
경남	11,336,975	10,457,691	92.24
제주	4,147,924	4,413,052	106.39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나.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는 대전이 86.67%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36.26%로 가장 낮았다.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가 전국 평균(58.06%) 보다 높은 곳은 가장 높은 대전을 비롯하여 충북(77.63%), 대구(76.76%), 울산(71.95%), 서울(70.95%), 인천(70.77%), 전남(69.01%), 제주(66.67%), 경기(60.05%), 전북(58.79%) 등이었다.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는 대전이 93.52%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8.76%로 가장 낮았다.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가 전국 평균(68.19%) 보다 높은 곳은 가장 높은 대전을 비롯하여 경북(81.69%), 전남(80.53%), 경기(77.37%), 전북(77.30%), 충북(74.03%), 광주(70.50%) 등이었다.

〈표 12-2〉 시도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전국	65,754	38,182	26,039	58.06	68.19
서울	3,442	2,442	787	70.95	32.23
부산	2,694	1,481	686	54.97	46.32
대구	1,282	984	283	76.76	28.76
인천	1,529	1,082	428	70.77	39.56
광주	2,371	905	638	38.17	70.50
대전	1,906	1,652	1,545	86.67	93.52
울산	1,590	1,144	591	71.95	51.66
경기	17,034	10,229	7,914	60.05	77.37
강원	2,211	1,089	681	49.25	62.53
충북	2,262	1,756	1,300	77.63	74.03
충남	3,284	1,724	784	52.50	45.48
전북	6,078	3,573	2,762	58.79	77.30
전남	5,650	3,899	3,140	69.01	80.53
경북	8,779	4,074	3,328	46.41	81.69
경남	5,306	1,924	1,069	36.26	55.56
제주	336	224	103	66.67	45.98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2.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은 경북과 제주가 100.0%로 전체 지자체에 민간상근간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민간상근간사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부산, 대구, 대전 등이었다.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이 전국 평균(51.97%)보다 높은 곳은 경북과 제주를 비롯한 경기(90.32%), 충남(86.67%), 울산(80.00%), 광주(60.00%), 충북(58.33%), 강원(55.56%) 등이었다.

〈표 12-3〉 시·도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 지자체 수(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 × 100
전국	119	229	51.97
서울	11	25	44.00
부산	0	16	0.00
대구	0	8	0.00
인천	4	10	40.00
광주	3	5	60.00
대전	0	5	0.00
울산	4	5	80.00
경기	28	31	90.32
강원	10	18	55.56
충북	7	12	58.33
충남	13	15	86.67
전북	7	14	50.00
전남	3	22	13.64
경북	23	23	100.00
경남	4	18	22.22
제주	2	2	100.00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나. 기부식품제공 활성화 정도

1) 기부식품 등 증가율

기부식품 등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44.92%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서

율로서 2.35%에 불과하였다. 기부식품 등 증가율이 전국 평균(18.74%)보다 높은 곳은 대전을 비롯한 부산(39.60%), 전북(35.39%), 울산(34.85%), 강원(30.22%), 제주(29.66%), 경기(29.56%), 경북(27.63%), 인천(23.24%), 광주(22.48%), 충남(21.46%), 전남(19.33%) 등이었다.

〈표 12-4〉 시·도별 기부식품 등 증가율

(단위: 천원, %)

	20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20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 ×100
전국	92,878,278	78,222,376	18.74
서울	25,420,545	24,836,344	2.35
부산	4,517,523	3,236,008	39.60
대구	2,501,188	2,284,607	9.48
인천	4,792,867	3,889,013	23.24
광주	2,966,351	2,421,956	22.48
대전	4,150,823	2,864,191	44.92
울산	1,616,352	1,198,631	34.85
경기	22,360,089	17,258,097	29.56
강원	1,882,845	1,445,952	30.22
충북	5,124,542	4,495,311	14.00
충남	4,822,454	3,970,424	21.46
전북	3,747,506	2,767,854	35.39
전남	2,556,518	2,142,418	19.33
경북	3,093,143	2,423,481	27.63
경남	2,245,104	2,154,831	4.19
제주	1,080,428	833,258	29.66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2)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2011년 대비 20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445.07%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남으로 -6.96%로 감소하였다.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이 전국 평균(73.23%)보다 높은 곳은 부산을 비롯한 대전(174.95%), 제주(120.24%), 광주(99.47%), 경기(87.76%), 강원(82.52%), 전남(80.33%), 울산(75.26%) 등이었다.

〈표 12-5〉 시·도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단위: 천원, 명, 건, %)

	20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20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B-E)/E]+[(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제공건수(C)	배분식품 등 총액(D)	기부식품 이용자수(E)	기부식품 제공건수(F)	
전국	104,480,804	301,795	5,503,030	86,547,468	256,958	4,074,378	73.23
서울	24,153,044	29,929	362,288	20,642,921	24,534	308,310	56.50
부산	5,157,892	16,771	251,172	3,824,035	7,784	63,631	445.07
대구	3,187,965	11,409	187,168	2,522,178	11,526	183,008	27.66
인천	5,455,883	15,301	470,617	4,571,891	15,199	432,973	28.70
광주	3,855,769	14,938	371,744	3,174,141	12,090	240,700	99.47
대전	4,885,227	14,758	296,558	3,382,971	9,909	163,299	174.95
울산	2,135,030	8,267	137,129	1,657,334	6,510	114,806	75.26
경기	23,981,365	46,908	1,553,107	19,660,945	42,969	991,683	87.75
강원	3,742,013	18,792	371,073	2,974,147	16,965	254,284	82.52
충북	5,561,240	18,271	351,888	5,397,754	16,247	259,744	50.96
충남	6,573,337	18,864	281,587	5,780,832	15,943	228,457	55.29
전북	4,004,949	21,921	202,351	3,455,041	22,000	210,560	11.66
전남	3,453,897	23,167	192,548	2,736,857	17,934	154,094	80.33
경북	3,478,010	23,848	144,761	2,676,161	18,801	179,138	37.62
경남	3,285,235	14,113	159,487	3,065,744	14,482	180,362	-6.96
제주	1,569,948	4,537	169,552	1,024,516	4,054	109,329	120.24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제2절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가.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인천이 0.32%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전북이 0.26%로 가장 낮았다.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이 전국 평균(0.28%)보다 높은 곳은 가장 높은 인천 외에도 서울, 대구, 강원으로 0.29% 이었다.

〈표 12-6〉 시도별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총수급자(A)	신규수급자(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 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D)	신규수급자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전국	1,390,600	136,679	170,458	5,621	0.28
서울	199,310	22,369	26,794	728	0.29
부산	135,973	13,344	16,481	560	0.28
대구	99,473	9,983	12,066	348	0.29
인천	70,860	8,481	9,398	371	0.32
광주	60,684	6,098	7,652	199	0.28
대전	44,992	4,533	5,631	152	0.28
울산	15,804	1,736	2,328	54	0.26
경기	192,170	20,288	25,746	780	0.28
강원	58,820	6,196	7,657	312	0.29
충북	49,669	4,581	6,117	201	0.27
충남	58,363	5,217	6,486	263	0.28
전북	95,656	7,038	9,613	372	0.26
전남	87,670	6,647	8,886	367	0.27
경북	105,193	8,338	10,346	435	0.28
경남	93,977	9,326	12,076	390	0.27
제주	21,986	2,504	3,181	89	0.28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부산이 0.47%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제주가 0.33%로 가장 낮았다.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이 전국 평균(0.43%)보다 높은 곳은 가장 높은 부산 외에도 인천, 전북(이상 0.46%), 대구, 경기, 강원(이상 0.44%) 등이 있었다.

〈표 12-7〉 시도별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건, %)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 특례가구수(B)	기존이행 특례가구수(C)	신규이행 특례가구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전국	220,811	3,578	4,611	3,925	0.43
서울	33,623	182	234	193	0.42
부산	22,174	534	669	611	0.47
대구	18,794	232	305	264	0.44
인천	11,767	269	367	329	0.46
광주	12,362	275	354	294	0.43
대전	7,346	165	204	167	0.42
울산	2,168	22	32	21	0.33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 특례가구수(B)	기존이행 특례가구수(C)	신규이행 특례가구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경기	27,642	555	697	595	0.44
강원	8,887	170	224	192	0.44
충북	6,721	84	108	91	0.43
충남	7,625	105	146	114	0.40
전북	16,220	400	507	453	0.46
전남	13,032	168	220	175	0.40
경북	16,122	230	291	246	0.43
경남	12,718	94	128	100	0.39
제주	3,610	93	125	80	0.33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0.51~0.53%의 범주에 있었다. 광주와 충북이 0.53%로 가장 높았고, 서울, 부산, 전남, 경남, 제주 등이 0.51%로 평균 아래에 머물렀다.

〈표 12-8〉 시·도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건, 가구, %)

	수급자 가구 수(A)	신규보호 가구 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 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전국	820,007	34,524	34,991	0.51
서울	120,704	4,851	5,010	0.51
부산	82,491	1,932	1,943	0.51
대구	54,784	2,317	2,321	0.52
인천	40,840	1,855	1,855	0.52
광주	31,148	1,589	1,591	0.53
대전	24,471	1,144	1,144	0.52
울산	10,090	490	490	0.52
경기	117,096	4,770	4,803	0.52
강원	35,609	1,509	1,530	0.52
충북	28,553	1,524	1,528	0.53
충남	34,513	1,346	1,351	0.52
전북	53,778	2,342	2,345	0.52
전남	51,926	2,122	2,164	0.51
경북	63,987	3,532	3,594	0.52
경남	58,408	2,678	2,779	0.51
제주	11,609	523	543	0.51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라. 수급자 관리실적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수급자 관리실적은 0.10~0.12%의 범주에 있었다.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이 공동 0.12%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0.10%로 평균 아래에 머물렀다.

〈표 12-9〉 시·도별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건, 명,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A)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C)	수급자 관리실적 $\{(A/B) \times 0.7\} + \{(C/B) \times 0.3\}$
전국	700,370	6,128,161	676,270	0.11
서울	75,729	669,779	78,693	0.11
부산	57,403	525,384	59,634	0.11
대구	37,962	400,007	46,538	0.10
인천	30,795	274,629	31,709	0.11
광주	23,308	199,442	24,475	0.12
대전	14,690	143,273	18,965	0.11
울산	7,634	74,108	8,288	0.11
경기	99,302	865,854	91,422	0.11
강원	38,057	310,796	34,138	0.12
충북	29,904	251,956	26,511	0.12
충남	39,959	309,659	33,554	0.12
전북	55,023	462,882	50,939	0.12
전남	62,508	514,843	55,235	0.12
경북	64,567	554,965	56,811	0.11
경남	50,604	455,078	46,941	0.11
제주	12,925	115,506	12,417	0.11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마. 긴급복지 지원실적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광주가 3.62%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1.16%로 가장 낮았다. 긴급복지 지원실적이 전국 평균(2.22%)보다 높은 곳은 가장 높은 광주 외에도 대전(3.51%), 충북(3.18%), 경기(3.03%), 전북(2.59%), 울산(2.44%), 전남(2.36%) 등이 있었다.

〈표 12-10〉 시·도별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가구,%)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연계 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전국	38,838	13,971	45,429	45,722	2.22
서울	5,046	898	5,880	1,070	1.22
부산	2,509	532	2,809	1,690	1.71
대구	1,748	225	2,156	729	1.28
인천	2,628	853	3,240	942	1.43
광주	3,694	2,180	3,604	7,208	3.62
대전	978	535	1,014	2,028	3.51
울산	437	144	515	651	2.44
경기	9,241	4,755	8,788	12,880	3.03
강원	1,576	636	2,051	977	1.65
충북	1,280	496	1,492	2,887	3.18
충남	1,674	549	4,006	3,971	1.74
전북	1,843	495	2,007	2,808	2.59
전남	2,358	853	2,636	2,901	2.36
경북	1,644	288	2,638	3,461	2.11
경남	1,906	505	2,170	1,347	1.76
제주	276	27	423	172	1.16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2.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가.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부산이 25.42%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9.08%로 가장 낮았다.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이 전국 평균(16.34%)보다 높은 곳은 가장 높은 부산 외에도 경북(22.15%), 대전(21.87%), 충북(21.67%), 울산(20.04%), 강원(19.07%), 경남(18.64%), 전남(18.08%), 충남(16.72%), 제주(16.45%) 등이 있었다.

〈표 12-11〉 사·도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자활특례상향 또는 탈수급자 수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 × 100
	계 (①+②)	자활(이행)특례 상향 이동자(①)	수급중지자 (②)		
전국	6,218	2,713	3,505	38,057	16.34
서울	633	106	527	6,975	9.08
부산	1,295	725	570	5,095	25.42
대구	283	87	196	2,402	11.78
인천	455	249	206	3,138	14.50
광주	516	207	309	3,174	16.26
대전	227	50	177	1,038	21.87
울산	96	20	76	479	20.04
경기	697	373	324	4,859	14.35
강원	279	141	138	1,463	19.07
충북	171	74	97	789	21.67
충남	203	51	152	1,214	16.72
전북	378	183	195	2,335	16.19
전남	263	94	169	1,455	18.08
경북	338	142	196	1,526	22.15
경남	307	183	124	1,647	18.64
제주	77	28	49	468	16.45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나.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수급자의 취·창업률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충북이 20.91%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9.13%로 가장 낮았다.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수급자의 취·창업률이 전국 평균(15.19%)보다 높은 곳은 가장 높은 충북 외에도 부산(20.08%), 광주(17.36%), 대전(20.42%), 경기(15.50%), 강원(19.75%), 전북(18.37%), 경북(17.89%), 경남(15.24%), 제주(18.16%) 등이 있었다.

〈표 12-12〉 사·도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자 중 취·창업자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B)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수급자의 취·창업률 (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계 A=①+②		
전국	5,352	430	5,782	38,057	15.19
서울	605	32	637	6,975	9.13
부산	983	40	1,023	5,095	20.08
대구	256	17	273	2,402	11.37

	수급자 중 취·창업자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B)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수급자의 취·창업률 (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계 A=①+②		
인천	408	19	427	3,138	13.61
광주	540	11	551	3,174	17.36
대전	201	11	212	1,038	20.42
울산	60	10	70	479	14.61
경기	704	49	753	4,859	15.50
강원	253	36	289	1,463	19.75
충북	143	22	165	789	20.91
충남	156	14	170	1,214	14.00
전북	389	40	429	2,335	18.37
전남	134	40	174	1,455	11.96
경북	250	23	273	1,526	17.89
경남	202	49	251	1,647	15.24
제주	68	17	85	468	18.16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다.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경기도가 16,828,60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가 1,366,876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이 많은 곳은 가장 많은 경기 외에도 부산(12,235,004천원), 경북(10,034,595천원) 등이 있었다.

〈표 12-13〉 시·도별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생산품 우선 구매액(A)	사업 우선 위탁액(B)	자체예산 지원액(C)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 (A+B+C)
전국	9,086,419	69,861,633	27,598,352	106,546,404
서울	1,924,303	1,981,478	2,645,360	6,551,141
부산	161,723	5,289,193	6,784,088	12,235,004
대구	6,060	2,768,026	397,700	3,171,786
인천	1,912,355	1,388,135	1,411,190	4,711,680
광주	662,030	1,963,838	623,208	3,249,076
대전	2,380	881,440	887,707	1,771,527
울산	347	1,857,473	1,007,339	2,865,159
경기	3,945,544	8,837,837	4,045,225	16,828,606
강원	185,045	7,354,343	1,722,251	9,261,639
충북	56,956	3,974,344	200,659	4,231,959
충남	29,581	2,906,269	768,482	3,704,332
전북	74,642	7,569,519	1,110,010	8,754,171
전남	32,999	7,272,573	856,450	8,162,022

	생산품 우선 구매액(A)	사업 우선 위탁액(B)	자체예산 지원액(C)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 (A+B+C)
경북	78,222	7,483,022	2,473,351	10,034,595
경남	14,232	7,547,235	2,085,364	9,646,831
제주	0	786,908	579,968	1,366,876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3.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가.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경북이 7.00%로 가장 낮았고, 인천이 13.42%로 가장 높았다.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이 전국 평균(9.6%)보다 낮은 곳은 가장 낮은 경북 외에도 충남(7.44%), 대구(7.94%), 강원(8.08%), 전북(8.09%), 경남(9.22%), 전남(9.37%), 경기(9.42%) 등이 있었다.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은 대구가 8.00%로 가장 낮았고, 인천이 16.76%로 가장 높았다.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이 전국 평균(11.6%)보다 낮은 곳은 가장 낮은 대구 외에도 경북(8.93%), 충남(9.82%), 강원(9.98%), 서울(10.42%), 울산(10.70%), 전북(11.14%), 경기(11.15%), 전남(13.61%) 등이 있었다.

〈표 12-14〉 시도별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20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 ②	증감률 {(②-①)/①} ×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20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 ④	증감률 {(④-③)/③} ×100
전국	269.6	295.3	9.6	2,731,469.4	3,046,203.0	11.6
서울	268.0	297.1	10.87	2,526,814	2,790,217	10.42
부산	269.5	304.8	13.10	2,921,431	3,336,530	14.21
대구	261.9	282.7	7.94	2,510,417	2,711,271	8.00
인천	256.2	290.6	13.42	2,389,672	2,790,100	16.76
광주	209.1	233.6	11.72	2,142,546	2,487,453	16.10
대전	249.3	276.2	10.80	2,438,651	2,752,077	12.85
울산	257.4	284.2	10.43	3,108,003	3,440,517	10.70
경기	268.60	293.90	9.42	2,627,237	2,920,097	11.15
강원	272.1	294.1	8.08	253,821	2,790,982	9.98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20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 ②	증감률 {(②-①)/①} ×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20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 ④	증감률 {(④-③)/③} ×100
충북	284.9	314.6	10.44	2,775,338	3,116,827	12.30
충남	277.4	298.1	7.44	2,763,884	3,035,146	9.82
전북	272.9	295.0	8.09	2,811,629	3,124,772	11.14
전남	273.0	298.6	9.37	2,862,696	3,252,283	13.61
경북	279.7	299.2	7.00	2,951,020	3,214,478	8.93
경남	273.7	298.9	9.22	3,133,762	3,516,365	12.21
제주	253.1	281.6	11.24	2,328,240	2,617,419	12.42

주: 전국과 광역자치체의 실적은 1인당 평균임.

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광주가 -8.84%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인천이 -0.32%로 가장 작게 감소하였다.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이 전국 평균(-3.85%)보다 더 감소한 곳은 가장 크게 감소한 광주 외에도 전북(-7.51%), 부산(-6.94%), 대구(-6.02%), 경북(-5.38%), 울산(-4.84%), 전남(-4.38%) 등이 있었다.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은 부산이 -26.94%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제주가 -4.54%로 가장 적게 감소하였다.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이 전국 평균(-13.26%)보다 더 감소한 곳은 가장 크게 감소한 부산 외에도 울산(-26.30%), 광주(-20.56%), 전북(-17.66%), 경기(-13.96%), 강원(-13.85%), 충남(-13.40%) 등이 있었다.

〈표 12-15〉 시도별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B)		
	20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20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A) {(②-①)/①} ×100	2011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③	20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B) {(④-③)/③} ×100
전국	990.2	952.0	-3.85	7,081,220.1	6,142,461.5	-13.26
서울	1,072.4	1,058.7	-1.28	6,949,816.1	6,303,625.6	-9.30
부산	1,002.1	932.5	-6.94	8,585,849.6	6,272,921.4	-26.94
대구	1,167.0	1,096.8	-6.02	7,687,317.1	6,766,235.0	-11.98
인천	977.4	974.3	-0.32	6667641.3	5862774.6	-12.07
광주	1025.4	934.8	-8.84	8708082.2	6917997.4	-20.56
대전	1,101.8	1,083	-1.71	7,602,660.8	7,201,533.4	-5.28
울산	938.4	893.0	-4.84	8,425,929.6	6,210,062.6	-26.30
경기	1,047.0	1,013.7	-3.17	7,037,349.4	6,055,110.5	-13.96
강원	903.4	868.8	-3.84	6,379,201.3	5,495,601.3	-13.85
충북	991.9	971.9	-2.02	6,715,615.0	6,081,227.8	-9.45
충남	992.3	963.7	-2.89	7,132,232.9	6,176,327.9	-13.40
전북	956.6	884.7	-7.51	7,154,780.1	5,891,504.4	-17.66
전남	906.8	867.0	-4.38	6,788,825.5	6,098,175.7	-10.17
경북	948.4	897.4	-5.38	6,691,631.9	5,997,476.3	-10.37
경남	936.1	903.9	-3.44	6,797,373.8	6,427,801.7	-5.44
제주	979.0	999.5	2.09	6,143,211.0	5,864,247.0	-4.54

주: 전국과 광역자치체의 실적은 1인당 평균임.

다.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제주가 100.0%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95.93%로 가장 낮았다. 조사처리율이 전국 평균(98.30%)보다 높은 곳은 가장 높은 제주 외에도 경남(99.92%), 전남(99.72%), 부산(99.42%), 인천(99.31%), 경북(99.24%), 울산(99.92%), 대전(99.61%), 충북(99.08%), 광주(98.93%), 강원(98.38%), 대구(98.33%) 등이 있었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광주가 90.89%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65.15%로 가장 낮았다. 징수율이 전국 평균(77.43%)보다 높은 곳은 가장 높은 광주 외에도 대구(88.21%), 전남(88.15%), 경남(86.43%), 울산(79.34%), 전북(79.34%), 충북(78.91%), 경기(77.56%) 등이 있었다.

〈표 12-16〉 시·도별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단위: 천원, %)

	상해요인 조사처리율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건수①	2011년 통보건수②	조사처리율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징수율 (③/④)×100
전국	94,720	96,359	98.30	14,823,280,147	19,143,649,501	77.43
서울	10,806	11,101	97.34	1,934,674,897	2,667,240,437	72.54
부산	10,017	10,075	99.42	1,416,178,768	2,032,499,080	69.68
대구	5,603	5,698	98.33	990,517,284	1,122,931,614	88.21
인천	4,444	4,475	99.31	513,926,847	755,575,117	68.02
광주	1,297	1,311	98.93	556,286,190	612,016,220	90.89
대전	2,570	2,580	99.61	420,158,298	553,645,760	75.89
울산	1,297	1,298	99.92	161,972,250	204,139,037	79.34
경기	11,828	12,330	95.93	1,941,527,473	2,503,247,627	77.56
강원	4,183	4,252	98.38	609,044,420	791,111,300	76.99
충북	3,328	3,359	99.08	573,412,400	726,634,210	78.91
충남	4,409	4,543	97.05	803,545,630	1,138,366,104	70.59
전북	7,969	8,273	96.33	1,000,093,330	1,260,517,076	79.34
전남	9,221	9,247	99.72	977,023,500	1,108,334,843	88.15
경북	8,134	8,196	99.24	1,135,527,160	1,530,300,521	74.20
경남	8,391	8,398	99.92	1,612,842,140	1,866,102,073	86.43
제주	1,223	1,223	100.00	176,549,560	270,988,482	65.15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제3절 복지서비스

1.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가.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개정법 시설·인력 기준 충족률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개정법 시설 인력 기준 충족률은 제주가 66.67%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7.90%로 가장 낮았다. 시설 인력 기준 충족률이 전국 평균(21.34%)보다 높은 곳은 가장 높은 제주 외에도 대구(50.00%), 경북(46.43%), 부산(38.10%), 충북(38.10%), 전남(37.84%), 전북(35.71%), 대전(33.33%), 인천(29.17%), 광주(27.78%), 경남(26.83%) 등이 있었다.

〈표 12-17〉 사·도별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개정법 시설·인력 기준 충족률

(단위: 명, %)

	시설인력기준 미충족시설수(A)	시설·인력 기준 충족 시설 수(B)	현행기준 전환 비율 (B/A)×100
전국	1,003	214	21.34
서울	114	9	7.90
부산	21	8	38.10
대구	26	13	50.00
인천	48	14	29.17
광주	18	5	27.78
대전	18	6	33.33
울산	12	2	16.67
경기	413	49	11.86
강원	44	6	13.64
충북	42	16	38.10
충남	37	6	16.22
전북	70	25	35.71
전남	37	14	37.84
경북	56	26	46.43
경남	41	11	26.83
제주	6	4	66.67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은 대전이 93.34%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38.85%로 가장 낮았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이 전국 평균(62.38%)보다 높은 곳은 가장 높은 대전 외에도 광주(91.11%), 인천(84.77%), 부산(76.73%), 충북(76.58%), 제주(72.66%), 전남(71.08%), 대구(68.87%), 경북(65.54%) 등이 있었다.

〈표 12-18〉 사·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단위: 천원,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전국	614,455	961,930	70,618	119,926	62.38
서울	44,288	103,719	4,639	13,796	39.98
부산	30,471	37,497	2,662	4,025	76.73
대구	23,307	32,014	2,406	4,031	68.87
인천	31,428	37,259	6,269	7,310	84.77
광주	13,323	14,230	1,058	1,241	91.11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대전	21,117	23,339	1,879	1,879	93.34
울산	7,706	12,983	711	1,222	59.00
경기	99,714	173,083	15,168	26,446	57.53
강원	20,562	47,280	1,548	5,526	38.85
충북	38,231	51,531	10,960	13,343	76.58
충남	47,614	82,724	6,049	9,490	59.41
전북	45,196	73,425	3,975	6,529	61.35
전남	64,304	84,556	4,198	7,056	71.08
경북	74,639	103,149	4,993	10,064	65.54
경남	40,449	68,189	2,808	6,254	54.99
제주	12,106	16,952	1,295	1,714	72.66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다.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충북이 46.02%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4.51%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이 전국 평균(24.19%)보다 높은 곳은 가장 높은 충북 외에도 전북(38.01%), 전남(37.92%), 광주(35.09%), 경북(34.56%), 대구(32.07%), 제주(31.73%), 충남(31.01%), 강원(28.10%), 경남(26.92%), 부산(26.32%), 대전(24.69%), 인천(20.50%) 등이 있었다.

〈표 12-19〉 시도별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수(A)	수급가능자수(B)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A/B) × 100
전국	51,345	212,242	24.19
서울	6,276	43,255	14.51
부산	3,488	13,253	26.32
대구	2,906	9,061	32.07
인천	2,453	11,968	20.50
광주	1,762	5,022	35.09
대전	1,501	6,079	24.69
울산	719	4,720	15.23
경기	8,908	49,598	17.96
강원	2,158	7,679	28.10
충북	3,265	7,095	46.02
충남	3,142	10,134	31.01
전북	2,985	7,854	38.01
전남	3,193	8,420	37.92
경북	4,021	11,635	34.56
경남	3,682	13,677	26.92
제주	886	2,792	31.73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2. 아동보호서비스

가.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부산이 11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서울 105.56%이었으며, 그 외 1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100.00%이었다.

〈표 12-20〉 사·도별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단위: 명, %)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A/B)×100
전국	252	247	102.02
서울	38	36	105.56
부산	23	20	115.00
대구	19	19	100.00
인천	7	7	100.00
광주	9	9	100.00
대전	13	13	100.00
울산	1	1	100.00
경기	29	29	100.00
강원	9	9	100.00
충북	13	13	100.00
충남	13	13	100.00
전북	14	14	100.00
전남	20	20	100.00
경북	15	15	100.00
경남	25	25	100.00
제주	4	4	100.00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나.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은 울산이 12.08%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2.01%로 가장 낮았다. 매칭지원금 증감률이 전국 평균(2.90%)보다 높은 곳은 가장 높은 울산 외에도 인천(11.70%), 대전(7.50%), 광주(6.95%), 충남(5.40%), 경기(4.27%), 강원(4.25%), 충북(3.61%), 대구(3.18%), 경북(2.94%) 등이 있었다.

〈표 12-21〉 시도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단위: 원, 명, %)

	20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20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A-B)/B\} \times 100$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①/②)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 (③/④)	
전국	11,346,123,768	478,117	23,730.9	9,685,273,352	419,957	23,062.5	2.90
서울	876,035,405	42,844	20,447.1	854,487,276	40,949	20,867.1	-2.01
부산	1,135,499,911	46,631	24,350.8	1,042,542,090	42,808	24,353.9	-0.01
대구	633,494,411	25,300	25,039.3	482,085,000	19,865	24,268.1	3.18
인천	662,517,400	26,054	25,428.6	473,753,200	20,809	22,766.8	11.70
광주	469,353,481	19,056	24,630.2	351,103,500	15,245	23,030.7	6.95
대전	349,201,500	14,904	23,430.1	266,952,190	12,248	21,795.6	7.50
울산	166,721,400	6,598	25,268.5	131,397,000	5,828	22,545.8	12.08
경기	1,753,905,961	73,578	23,837.4	1,466,547,260	64,149	22,861.6	4.27
강원	721,413,822	29,111	24,781.5	637,945,000	26,836	23,772.0	4.25
충북	537,725,956	22,770	23,615.6	448,055,115	19,657	22,793.7	3.61
충남	535,291,222	22,109	24,211.5	422,882,000	18,410	22,970.2	5.40
전북	781,174,560	32,639	23,933.8	697,265,713	29,543	23,601.7	1.41
전남	950,463,100	41,245	23,044.3	814,946,050	34,768	23,439.5	-1.69
경북	721,282,929	29,899	24,124.0	663,535,358	28,315	23,434.1	2.94
경남	794,758,450	35,059	22,669.2	706,072,100	31,237	22,603.7	0.29
제주	257,284,260	10,320	24,930.7	225,704,500	9,290	24,295.4	2.62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다. 요보호아동 중 가정보호비율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은 강원이 89.71%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45.24%로 가장 낮았다. 가정보호비율이 전국 평균(64.02%)보다 높은 곳은 가장 높은 강원 외에도 울산(79.17%), 경기(68.27%), 전북(67.89%), 충남(66.67%), 경남(66.67%), 인천(66.51%) 등이 있었다.

〈표 12-22〉 시도별 요보호아동 중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A+B)/(A+B+C) \times 100$
전국	1,829	701	1,422	64.02
서울	166	71	180	56.84
부산	96	35	118	52.61
대구	35	22	69	45.24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	$(A+B)/(A+B+C) \times 100$
인천	129	10	70	66.51
광주	46	33	49	61.72
대전	36	29	47	58.04
울산	50	7	15	79.17
경기	300	182	224	68.27
강원	200	18	25	89.71
충북	68	44	67	62.57
충남	102	32	67	66.67
전북	130	73	96	67.89
전남	138	67	170	54.67
경북	132	26	94	62.70
경남	158	40	99	66.67
제주	43	12	32	63.22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3. 보육기반 조성

가.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제주가 40.04%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32.38%로 가장 낮았다. 평가인증률이 전국 평균(34.81%)보다 높은 곳은 가장 높은 제주 외에도 서울(39.15%), 전북(37.65%), 인천(37.55%), 경북(36.26%), 강원(36.05%), 대구(35.27%) 등이 있었다.

〈표 12-23〉 시도별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개, %)

	전체 보육시설 수(A)	평가인증보육시설수(B)	20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C)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B/A)+(C/A)] \times 100 / 2$
전국	39,600	21,332	6,237	34.81
서울	5,954	4,022	640	39.15
부산	1,739	975	154	32.46
대구	1,561	857	244	35.27
인천	1,996	1,052	447	37.55
광주	1,205	645	174	33.98
대전	1,597	838	251	34.10
울산	818	402	147	33.56
경기	11,816	5,510	2,302	33.06
강원	1,147	683	144	36.05

	전체 보육시설 수(A)	평가인증보육시설수(B)	20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C)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B/A)+(C/A)]×100/2
충북	1,133	625	162	34.73
충남	1,788	832	326	32.38
전북	1,575	927	259	37.65
전남	1,160	663	142	34.70
경북	2,162	1,303	265	36.26
경남	3,397	1,631	505	31.44
제주	552	367	75	40.04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나. 취약보육 실시율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취약보육 실시율은 경남이 37.44%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31.36%로 가장 낮았다. 취약보육 실시율이 전국 평균(34.47%)보다 높은 곳은 가장 높은 경남 외에도 경북(37.27%), 대전(37.03%), 제주(36.38%), 전북(35.51%), 울산(35.43%), 경기(34.96%), 부산(34.86%), 대구(34.48%) 등이 있었다.

〈표 12-24〉 시·도별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 보육 이용 아동수							취약보육 실시율 (B/A)×100
		계(B) ②+③+④+⑤+ ⑥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영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⑤)	휴일 보육 이용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 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전 국	1,482,814	511,169.5	874,499	437,249.5	10,230	20,028	41,064	2,598	34.47
서울	239,335	78,991.0	138,906	69,453.0	1,582	2,079	5,588	289	33.00
부산	73,991	25,790.5	45,981	22,990.5	633	750	1,375	42	34.86
대구	66,795	23,029.0	39,450	19,725.0	778	716	1,693	117	34.48
인천	79,751	26,767.5	47,527	23,763.5	543	877	1,556	28	33.56
광주	53,378	17,804.5	31,001	15,500.5	423	475	1,312	94	33.36
대전	48,432	17,936.5	30,809	15,404.5	249	394	1,818	71	37.03
울산	33,800	11,974.5	21,269	10,634.5	366	430	532	12	35.43
경기	392,515	137,216.0	238,868	119,434.0	2,239	4,367	10,656	520	34.96
강원	46,007	14,429.0	24,332	12,166.0	211	754	1,125	173	31.36
충북	51,467	16,147.5	26,921	13,460.5	244	887	1,520	36	31.37
충남	67,626	22,038.0	37,274	18,637.0	414	1,403	1,506	78	32.59
전북	60,401	21,450.0	34,270	17,135.0	362	1,284	2,500	169	35.51
전남	56,481	18,329.0	29,290	14,645.0	547	1,609	1,504	24	32.45
경북	77,010	28,699.5	46,919	23,459.5	698	1,800	2,556	186	37.27
경남	108,931	40,783.0	67,222	33,611.0	735	1,884	4,235	318	37.44
제주	26,894	9,784.0	14,460	7,230.0	206	319	1,588	441	36.38

주: 전국 실적은 광역지자체 실적의 합.



제13장 시·군·구별 주요 복지통계

제1절 복지기반 조성

제2절 기초생활보장

제3절 복지서비스

제1절 복지기반 조성

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이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작구(95.8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금천구(72.97%)였다. 90% 이상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인 지자체는 25개 지자체 중 5개 뿐이었다.

〈표 13-1-1〉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17,582,654	1,466,085	83.41
중로구	429,988	343,160	79.81
중구	208,040	184,696	88.78
용산구	176,808	138,365	78.26
성동구	253,200	237,778	93.91
광진구	315,500	267,668	84.84
동대문구	602,500	479,397	79.57
중랑구	818,564	716,253	87.50
성북구	854,234	712,220	83.38
강북구	425,834	406,124	95.37
도봉구	1,044,360	807,341	77.31
노원구	1,021,274	811,466	79.46
은평구	800,010	715,808	89.48
서대문구	782,426	619,369	79.16
마포구	1,285,192	1,134,247	88.26
양천구	881,638	754,116	85.54
강서구	732,990	564,518	77.02
구로구	1,319,494	971,008	73.59
금천구	989,344	721,934	72.97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영등포구	1,018,520	847,595	83.22
동작구	531,732	509,555	95.83
관악구	757,420	593,164	78.31
서초구	509,986	455,406	89.30
강남구	595,504	568,402	95.45
송파구	506,780	424,431	83.75
강동구	721,316	682,064	94.56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이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금정구(99.4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강서구(83.69%)였다. 90% 이상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인 지자체는 16개 지자체 중 10개나 되었다.

〈표 13-1-2〉 부산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14,068,056	12,866,004	91.46
중구	280,785	256,625	91.40
서구	335,432	316,757	94.43
동구	449,800	435,067	96.73
영도구	1,168,134	1,035,191	88.62
부산진구	828,701	750,086	90.51
동래구	802,777	693,834	86.43
남구	1,215,744	1,087,357	89.44
북구	1,244,066	1,155,202	92.86
해운대구	1,688,934	1,490,093	88.23
사하구	1,297,332	1,249,458	96.31
금정구	935,182	930,158	99.46
강서구	631,806	528,761	83.69
연제구	589,034	525,775	89.26
수영구	942,467	886,753	94.09
사상구	1,071,453	989,559	92.36
기장군	586,409	535,328	91.2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이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중구(96.3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북구(92.82%)였다. 전체 8개 지자체가 90% 이상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표 13-1-3〉 대구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11,434,633	10,810,615	94.54
중구	442,774	426,527	96.33
동구	1,634,468	1,561,665	95.55
서구	1,045,736	977,931	93.52
남구	1,193,552	1,137,684	95.32
북구	1,546,098	1,435,077	92.82
수성구	1,535,744	1,466,972	95.52
달서구	2,233,464	2,096,226	93.86
달성군	1,802,797	1,708,533	94.7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남동구(99.20%)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옹진군(68.55%)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인 지자체는 10개 지자체 중 8개나 되었다.

〈표 13-1-4〉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9,035,332	8,521,888	94.32
중구	361,893	338,318	93.49
동구	498,713	462,405	92.72
남구	1,511,954	1,422,292	94.07
연수구	997,121	943,796	94.65
남동구	1,057,273	1,048,835	99.20
부평구	1,607,748	1,490,444	92.70
계양구	1,218,410	1,192,411	97.87
서구	1,427,125	1,347,176	94.40
강화군	220,810	184,163	83.40
옹진군	134,285	92,048	68.55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이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광산구(96.82%)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북구(92.07%)이었다. 전체 5개 지자체가 90% 이상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표 13-1-5〉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9,350,520	8,821,061	94.34
동구	1,009,539	947,740	93.88
서구	1,995,413	1,860,074	93.22
남구	1,544,539	1,478,896	95.75
북구	2,397,396	2,207,217	92.07
광산구	2,403,633	2,327,134	96.8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이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구(95.74%)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유성구(91.01%)이었다. 전체 5개 지자체가 90% 이상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표 13-1-6〉 대전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15,577,235	14,555,087	93.44
동구	2,941,728	2,734,453	92.95
중구	3,549,155	3,322,965	93.63
서구	3,817,816	3,655,274	95.74
유성구	2,609,798	2,375,124	91.01
대덕구	2,658,738	2,467,271	92.8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이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구(91.45%)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울주군(77.31%)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인 지자체는 5개 지자체 중 1개 뿐 이었다.

〈표 13-1-7〉 울산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3,933,284	3,342,178	84.97
중구	619,434	549,710	88.74
남구	1,014,014	877,749	86.56
동구	418,621	382,812	91.45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북구	635,036	568,544	89.53
울주군	1,246,179	963,363	77.3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시흥시, 양평군, 가평군(100.0%)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동두천시(82.58%)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인 지자체는 31개 지자체 중 27개나 되었다.

〈표 13-1-8〉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26,982,618	25,953,342	96.19
수원시	1,922,524	1,907,025	99.19
성남시	1,439,339	1,384,360	96.18
고양시	1,146,520	1,116,539	97.39
부천시	3,139,337	3,049,922	97.15
안양시	1,253,698	1,215,796	96.98
안산시	1,568,478	1,557,013	99.27
용인시	1,608,862	1,460,797	90.80
의정부시	1,330,000	1,299,605	97.71
남양주시	1,383,839	1,378,047	99.58
평택시	628,541	591,393	94.09
광명시	1,277,800	1,269,314	99.34
시흥시	1,811,256	1,811,256	100.00
군포시	917,821	857,107	93.38
화성시	1,480,322	1,228,958	83.02
파주시	567,562	550,800	97.05
이천시	424,560	412,311	97.11
구리시	1,013,365	1,005,092	99.18
김포시	502,556	482,136	95.94
포천시	345,093	306,373	88.78
광주시	446,452	424,581	95.10
안성시	321,188	316,174	98.44
하남시	279,985	252,887	90.32
의왕시	278,536	271,397	97.44
양주시	792,121	771,398	97.38
오산시	240,729	233,936	97.18
여주군	265,425	259,686	97.84
양평군	185,371	185,371	100.00
동두천시	299,713	247,491	82.58
과천시	31,738	30,669	96.63
가평군	43,867	43,867	100.00
연천군	36,020	32,041	88.95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이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철원군(111.52%)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횡성군(54.20%)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인 지자체는 18개 지자체 중 8개에 불과하였다.

〈표 13-1-9〉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8,491,609	7,500,613	88.33
춘천시	1,267,889	1,065,263	84.02
원주시	2,685,814	2,458,069	91.52
강릉시	710,371	659,192	92.80
동해시	630,004	597,509	94.84
태백시	113,166	85,589	75.63
속초시	203,938	193,156	94.71
삼척시	319,048	291,585	91.39
홍천군	179,667	145,285	80.86
횡성군	373,639	202,530	54.20
영월군	471,579	388,200	82.32
평창군	137,231	109,354	79.69
정선군	106,518	106,518	100.00
철원군	338,690	377,713	111.52
화천군	106,120	74,735	70.42
양구군	106,093	82,166	77.45
인제군	332,392	289,463	87.08
고성군	290,237	293,212	101.03
양양군	119,213	81,074	68.0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이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충주시(97.24%)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옥천군(80.72%)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인 지자체는 12개 지자체 중 7개였다.

〈표 13-1-10〉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9,791,331	9,046,834	92.40
청주시	2,322,364	2,139,099	92.11
충주시	1,916,009	1,863,143	97.24
제천시	1,317,720	1,170,997	88.87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청원군	1,572,496	1,486,823	94.55
보은군	178,498	163,063	91.35
옥천군	204,883	165,376	80.72
영동군	261,867	250,758	95.76
증평군	385,035	344,892	89.57
진천군	512,566	477,518	93.16
괴산군	70,002	62,388	89.12
음성군	459,376	389,022	84.68
단양군	590,515	533,755	90.3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계룡시(100.0%)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부여군(77.57%)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인 지자체는 15개 지자체 중 9개였다.

〈표 13-1-11〉 충청남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10,328,194	9,705,038	93.97
천안시	2,748,410	2,632,824	95.79
공주시	1,029,447	996,902	96.84
보령시	682,384	679,756	99.61
아산시	1,460,434	1,425,366	97.60
서산시	629,425	549,713	87.34
논산시	446,920	434,449	97.21
계룡시	101,489	101,489	100.00
당진시	580,391	519,707	89.54
금산군	574,377	532,822	92.77
부여군	216,903	168,241	77.57
서천군	628,365	552,498	87.93
청양군	225,664	211,393	93.68
홍성군	468,592	409,101	87.30
예산군	360,255	342,725	95.13
태안군	175,138	148,052	84.5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은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에서 11개 지자체가 100.0%이었다. 순창군이 83.91%로 가장 낮았다.

〈표 13-1-12〉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10,058,728	9,959,892	99.02
전주시	1,867,745	1,867,746	100.00
군산시	2,072,796	2,072,797	100.00
익산시	1,049,713	1,049,713	100.00
정읍시	870,600	870,600	100.00
남원시	803,834	803,835	100.00
김제시	554,842	554,842	100.00
완주군	781,488	781,488	100.00
진안군	350,360	350,360	100.00
무주군	134,323	134,323	100.00
장수군	281,970	281,970	100.00
임실군	344,864	307,494	89.16
순창군	362,691	304,317	83.91
고창군	296,729	293,634	98.96
부안군	286,773	286,773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목포시, 완도군(100.0%)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화순군(82.89%)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인 지자체는 22개 지자체 중 20개나 되었다.

〈표 13-1-13〉 전라남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13,986,182	13,373,453	95.62
목포시	1,458,423	1,458,423	100.00
여수시	978,683	914,415	93.43
순천시	1,059,830	1,056,437	99.68
나주시	669,751	644,471	96.23
광양시	382,270	355,373	92.96
담양군	721,766	696,945	96.56
곡성군	549,511	530,283	96.50
구례군	276,661	276,232	99.84
고흥군	565,245	527,767	93.37
보성군	642,072	601,163	93.63
화순군	710,191	588,709	82.89
장흥군	451,212	434,774	96.36
강진군	486,784	477,676	98.13
해남군	863,552	841,240	97.42
영암군	1,038,844	996,573	95.93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무안군	621,906	584,980	94.06
함평군	402,452	378,431	94.03
영광군	480,285	451,560	94.02
장성군	420,672	399,990	95.08
완도군	380,263	380,263	100.00
진도군	357,191	309,515	86.65
신안군	468,618	468,233	99.9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성주군(97.9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울릉군(65.57%)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인 지자체는 23개 지자체 중 16개였다.

〈표 13-1-14〉 경상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11,695,640	10,838,974	92.68
포항시	1,594,083	1,423,804	89.32
경주시	1,624,129	1,516,336	93.36
김천시	994,982	893,644	89.82
안동시	857,353	795,650	92.80
구미시	1,677,345	1,561,302	93.08
영주시	301,500	283,846	94.14
영천시	313,225	302,422	96.55
상주시	340,948	296,338	86.92
문경시	259,529	249,839	96.27
경산시	1,275,199	1,222,455	95.86
군위군	109,742	100,999	92.03
의성군	214,750	209,752	97.67
청송군	57,200	46,303	80.95
영양군	33,604	30,567	90.96
영덕군	260,830	250,711	96.12
청도군	383,080	374,055	97.64
고령군	119,038	105,988	89.04
성주군	85,885	84,105	97.93
칠곡군	711,595	643,833	90.48
예천군	115,255	101,624	88.17
봉화군	140,026	127,475	91.04
울진군	221,047	214,454	97.02
울릉군	5,295	3,472	65.5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이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창녕군(110.0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하동군(76.95%)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인 지자체는 18개 지자체 중 10개였다.

〈표 13-1-15〉 경상남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11,336,975	10,457,691	92.24
창원시	4,166,807	3,897,713	93.54
진주시	915,282	792,617	86.60
통영시	561,542	444,516	79.16
사천시	372,635	331,353	88.92
김해시	1,509,614	1,509,231	99.97
밀양시	423,500	355,878	84.03
거제시	267,273	248,041	92.80
양산시	1,706,837	1,602,718	93.90
의령군	122,694	112,747	91.89
함안군	196,611	179,071	91.08
창녕군	108,484	119,345	110.01
고성군	103,766	92,109	88.77
남해군	174,867	159,088	90.98
하동군	139,266	107,161	76.95
산청군	115,757	90,299	78.01
함양군	87,799	83,835	95.49
거창군	285,797	261,578	91.53
합천군	78,444	70,391	89.7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은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가 모두 100%를 상회하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제주시가 108.07%로 서귀포시 101.82%보다 다소 높았다.

〈표 13-1-1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4,147,924	4,413,052	106.39
제주시	3,033,314	3,278,193	108.07
서귀포시	1,114,610	1,134,859	101.8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나.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의 비율이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종로구(97.8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중구(36.63%)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25개 지자체 중 2개에 불과하였다.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의 비율이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강북구(73.7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은평구(2.44%)이었다. 5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25개 지자체 중 3개 뿐이었다.

〈표 13-1-17〉 서울특별시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계	3,442	2,442	787	70.95	32.23
종로구	138	135	45	97.83	33.33
중구	101	37	10	36.63	27.03
용산구	71	50	7	70.42	14.00
성동구	137	75	16	54.75	21.33
광진구	214	180	58	84.11	32.22
동대문구	91	55	11	60.44	20.00
중랑구	223	167	26	74.89	15.57
성북구	152	65	18	42.76	27.69
강북구	249	194	143	77.91	73.71
도봉구	107	76	16	71.03	21.05
노원구	212	194	34	91.51	17.53
은평구	113	82	2	72.57	2.44
서대문구	80	62	8	77.50	12.90
마포구	231	162	89	70.13	54.94
양천구	92	42	4	45.65	9.52
강서구	93	77	11	82.80	14.29
구로구	80	70	26	87.50	37.14
금천구	120	89	43	74.17	48.32
영등포구	190	123	64	64.74	52.03
동작구	127	108	29	85.04	26.85
관악구	162	112	42	69.14	37.50
서초구	114	52	12	45.61	23.08
강남구	34	26	6	76.47	23.08
송파구	224	151	55	67.41	36.42
강동구	87	58	12	66.67	20.6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의 비율이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

는 연제구(91.38%)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북구(20.67%)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6개 지자체 중 1개 뿐 이었다.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의 비율이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북구(72.38%)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강서구(28.57%)이었다. 5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6개 지자체 중 6개였다.

〈표 13-1-18〉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계	2,694	1,481	686	54.97	46.32
중구	42	31	17	73.81	54.84
서구	62	53	20	85.48	37.74
동구	216	159	78	73.61	49.06
영도구	152	101	36	66.45	35.64
부산진구	239	172	93	71.97	54.07
동래구	86	60	32	69.77	53.33
남구	178	140	65	78.65	46.43
북구	508	105	76	20.67	72.38
해운대구	190	105	47	55.26	44.76
사하구	143	96	30	67.13	31.25
금정구	49	26	15	53.06	57.69
강서구	43	21	6	48.84	28.57
연제구	58	53	20	91.38	37.74
수영구	270	99	57	36.67	57.58
사상구	314	147	61	46.82	41.50
기장군	144	113	33	78.47	29.2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의 비율이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달서구(90.4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중구(51.52%)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8개 지자체 중 1개 뿐 이었다.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의 비율이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남구(66.15%)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달성군(11.27%)이었다. 5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8개 지자체 중 2개였다.

〈표 13-1-19〉 대구광역시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 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계	1,282	984	283	76.76	28.76
중구	99	51	28	51.52	54.90
동구	169	111	29	65.68	26.13
서구	100	75	11	75.00	14.67
남구	182	130	86	71.43	66.15
북구	64	42	10	65.63	23.81
수성구	272	230	48	84.56	20.87
달서구	303	274	63	90.43	22.99
달성군	93	71	8	76.34	11.2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의 비율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옹진군(89.47%)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부평구(60.07%)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의 비율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옹진군(88.24%)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남동구(15.00%)이었다. 5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0개 지자체 중 3개였다.

〈표 13-1-20〉 인천광역시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 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계	1,529	1,082	428	70.77	39.56
중구	103	88	47	85.44	53.41
동구	114	84	41	73.68	48.81
남구	129	83	13	64.34	15.66
연수구	182	137	63	75.28	45.99
남동구	165	120	18	72.73	15.00
부평구	298	179	97	60.07	54.19
계양구	257	164	65	63.81	39.63
서구	232	187	64	80.60	34.23
강화군	30	23	5	76.67	21.74
옹진군	19	17	15	89.47	88.2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의 비율이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광산구(78.67%)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남구(22.41%)이었다. 90% 이상의 높

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의 비율이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구(89.2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남구(50.00%)이었다. 전체 5개 지자체가 5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표 13-1-21〉 광주광역시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계	2,371	905	638	38.17	70.50
동구	280	142	72	50.71	50.40
서구	874	343	306	39.25	89.21
남구	357	80	40	22.41	50.00
북구	649	174	130	26.81	74.71
광산구	211	166	90	78.67	54.2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의 비율이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구(92.3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대덕구(70.00%)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5개 지자체 중 2개였다.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의 비율이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유성구(98.22%)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서구(91.05%)이었다. 전체 5개 지자체가 5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표 13-1-22〉 대전광역시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계	1,906	1,652	1,545	86.67	93.52
동구	481	444	420	92.31	94.60
중구	176	136	126	77.27	92.65
서구	756	693	631	91.67	91.05
유성구	273	225	221	82.42	98.22
대덕구	220	154	147	70.00	95.46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의 비율이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울주군(93.2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북구(43.30%)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5개 지자체 중 1개 뿐 이었다.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의 비율이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중구(72.3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남구(35.26%)이었다. 5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5개 지자체 중 2개였다.

〈표 13-1-23〉 울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계	1,590	1,144	591	71.95	51.66
중구	290	246	178	84.83	72.36
남구	331	173	61	52.27	35.26
동구	215	134	72	62.33	53.73
북구	224	97	45	43.30	46.39
울주군	530	494	235	93.21	47.5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의 비율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안양시(99.4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안산시(19.40%)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31개 지자체 중 8개에 불과하였다.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의 비율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과천시(97.2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안성시(18.97%)이었다. 5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31개 지자체 중 28개나 되었다.

〈표 13-1-24〉 경기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계	17,034	10,229	7,914	60.05	77.37
수원시	844	413	316	48.93	76.51
성남시	636	412	230	64.78	55.83
고양시	679	515	463	75.85	89.90
부천시	1,290	375	246	29.07	65.60
안양시	877	872	636	99.43	72.94
안산시	3,140	609	473	19.40	77.67
용인시	1,051	996	917	94.77	92.01
의정부시	350	288	169	82.29	58.68
남양주시	678	309	199	45.58	64.40
평택시	285	207	156	72.63	75.36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광명시	311	103	52	33.12	50.49
시흥시	410	355	303	86.59	85.35
군포시	637	346	264	54.32	76.30
화성시	350	263	232	75.14	88.21
파주시	669	656	638	98.06	97.26
이천시	825	377	239	45.70	63.40
구리시	500	496	458	99.20	92.34
김포시	218	168	118	77.06	70.24
포천시	264	128	114	48.49	89.06
광주시	349	341	320	97.71	93.84
안성시	372	311	59	83.60	18.97
하남시	263	217	173	82.51	79.72
의왕시	203	121	70	59.61	57.85
양주시	233	224	205	96.14	91.52
오산시	269	249	236	92.57	94.78
여주군	154	56	24	36.36	42.86
양평군	369	316	225	85.64	71.20
동두천시	208	199	175	95.67	87.94
파천시	210	83	58	39.52	69.88
가평군	232	98	28	42.24	28.57
연천군	158	126	118	79.75	93.65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의 비율이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양양군(95.39%)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인제군(9.33%)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8개 지자체 중 1개 뿐이었다.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의 비율이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양구군(96.77%)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춘천시(25.76%)이었다. 5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8개 지자체 중 10개이었다.

〈표 13-1-25〉 강원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계	2,211	1,089	681	49.25	62.53
춘천시	170	66	17	38.82	25.76
원주시	211	159	90	75.36	56.60
강릉시	131	113	100	86.26	88.50
동해시	123	42	35	34.15	83.33
태백시	87	45	42	51.72	93.33
속초시	192	108	39	56.25	36.11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삼척시	155	83	71	53.55	85.54
홍천군	108	76	31	70.37	40.79
횡성군	102	44	42	43.14	95.46
영월군	60	39	12	65.00	30.77
평창군	54	36	33	66.67	91.67
정선군	41	35	10	85.37	28.57
철원군	44	23	9	52.27	39.13
화천군	32	20	6	62.50	30.00
양구군	65	62	60	95.39	96.77
인제군	536	50	40	9.33	80.00
고성군	47	41	11	87.23	26.83
양양군	53	47	33	88.68	70.2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의 비율이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진천군(87.8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증평군(47.67%)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2개 지자체 중 한 곳도 없었다.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의 비율이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충주시(93.30%)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단양군(32.94%)이었다. 5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2개 지자체 중 8개이었다.

〈표 13-1-26〉 충청북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계	2,262	1,756	1,300	77.63	74.03
청주시	176	154	131	87.50	85.07
충주시	668	522	487	78.14	93.30
제천시	224	173	142	77.23	82.08
청원군	178	149	52	83.71	34.90
보은군	112	65	52	58.04	80.00
옥천군	109	76	33	69.73	43.42
영동군	145	126	105	86.90	83.33
증평군	86	41	30	47.67	73.17
진천군	123	108	74	87.81	68.52
괴산군	144	109	93	75.69	85.32
음성군	173	148	73	85.55	49.32
단양군	124	85	28	68.55	32.9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의 비율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홍성군(82.08%)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공주시(15.27%)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5개 지자체 중 한 곳도 없었다.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의 비율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홍성군(89.08%)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서산시(2.90%)이었다. 5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5개 지자체 중 5개에 불과하였다.

〈표 13-1-27〉 충청남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계	3,284	1,724	784	52.50	45.48
천안시	355	166	70	46.76	42.17
공주시	262	40	21	15.27	52.50
보령시	105	40	12	38.10	30.00
아산시	369	277	140	75.07	50.54
서산시	197	138	4	70.05	2.90
논산시	567	104	83	18.34	79.81
계룡시	187	51	17	27.27	33.33
당진시	92	59	18	64.13	30.51
금산군	140	113	25	80.71	22.12
부여군	149	118	55	79.20	46.61
서천군	178	113	23	63.48	20.35
청양군	196	137	55	69.90	40.15
홍성군	212	174	155	82.08	89.08
예산군	136	100	75	73.53	75.00
태안군	139	94	31	67.63	32.9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의 비율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진안군(96.7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정읍시(14.42%)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4개 지자체 중 3개 이었다.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의 비율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장수군(98.5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주시(47.45%)이었다. 5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4개 지자체 중 13개나 되었다.

〈표 13-1-28〉 전라북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 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계	6,078	3,573	2,762	58.79	77.30
전주시	388	314	149	80.93	47.45
군산시	521	235	188	45.11	80.00
익산시	784	719	414	91.71	57.58
정읍시	1,082	156	132	14.42	84.62
남원시	201	182	172	90.55	94.51
김제시	128	75	54	58.59	72.00
완주군	223	122	78	54.71	63.93
진안군	309	299	245	96.76	81.94
무주군	317	263	257	82.97	97.72
장수군	419	336	331	80.19	98.51
임실군	499	217	209	43.49	96.31
순창군	182	152	121	83.52	79.61
고창군	686	290	271	42.27	93.45
부안군	339	213	141	62.83	66.2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의 비율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순천시(97.12%)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진도군(18.37%)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22개 지자체 중 4개에 불과하였다.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의 비율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구례군(98.28%)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영암군(35.29%)이었다. 5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22개 지자체 중 21개나 되었다.

〈표 13-1-29〉 전라남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 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계	5,650	3,899	3,140	69.01	80.53
목포시	308	116	102	37.66	87.93
여수시	372	344	206	92.47	59.88
순천시	208	202	115	97.12	56.93
나주시	269	122	113	45.35	92.62
광양시	370	358	262	96.76	73.18
담양군	53	41	33	77.36	80.49
곡성군	155	79	73	50.97	92.41
구례군	589	407	400	69.10	98.28
고흥군	125	107	79	85.60	73.83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보성군	228	163	138	71.49	84.66
화순군	323	144	76	44.58	52.78
장흥군	447	261	219	58.39	83.91
강진군	194	154	132	79.38	85.71
해남군	616	586	529	95.13	90.27
영암군	136	119	42	87.50	35.29
무안군	278	165	149	59.35	90.30
함평군	211	166	152	78.67	91.57
영광군	127	79	73	62.21	92.41
장성군	73	59	56	80.82	94.92
완도군	196	116	100	59.18	86.21
진도군	245	45	28	18.37	62.22
신안군	127	66	63	51.97	95.46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의 비율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성주군(90.22%)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의성군(13.67%)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23개 지자체 중 2개에 불과하였다.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의 비율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상주시(99.6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칠곡군(41.45%)이었다. 23개 전체 지자체가 5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표 13-1-30〉 경상북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계	8,779	4,074	3,328	46.41	81.69
포항시	898	270	154	30.07	57.04
경주시	258	117	71	45.35	60.68
김천시	101	88	81	87.13	92.05
안동시	425	117	96	27.53	82.05
구미시	1,061	373	306	35.16	82.04
영주시	781	391	369	50.06	94.37
영천시	665	173	153	26.02	88.44
상주시	396	259	258	65.40	99.61
문경시	507	435	414	85.80	95.17
경산시	594	535	461	90.07	86.17
군위군	561	181	175	32.26	96.69
의성군	439	60	38	13.67	63.33
청송군	192	66	52	34.38	78.79
영양군	96	82	51	85.42	62.20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영덕군	68	61	37	89.71	60.66
청도군	492	170	140	34.55	82.35
고령군	170	59	53	34.71	89.83
성주군	184	166	149	90.22	89.76
칠곡군	253	152	63	60.08	41.45
예천군	238	190	119	79.83	62.63
봉화군	232	49	46	21.12	93.88
울진군	84	39	20	46.43	51.28
울릉군	84	41	22	48.81	53.66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의 비율이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고성군(107.48%)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밀양시(1.42%)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8개 지자체 중 1개 뿐 이었다.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의 비율이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고성군(80.00%)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창원시(12.68%)이었다. 5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8개 지자체 중 11개이었다.

〈표 13-1-31〉 경상남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계	5,306	1,924	1,069	36.26	55.56
창원시	292	213	27	72.95	12.68
진주시	269	159	109	59.11	68.55
통영시	160	96	52	60.00	54.17
사천시	212	147	103	69.34	70.07
김해시	305	145	58	47.54	40.00
밀양시	2,393	34	24	1.42	70.59
거제시	153	108	45	70.59	41.67
양산시	169	128	85	75.74	66.41
의령군	178	77	29	43.26	37.66
함안군	217	176	136	81.11	77.27
창녕군	38	32	9	84.21	28.13
고성군	107	115	92	107.48	80.00
남해군	159	84	57	52.83	67.86
하동군	138	86	55	62.32	63.95
산청군	181	44	20	24.31	45.46
함양군	57	33	26	57.90	78.79
거창군	112	99	27	88.39	27.27
합천군	166	148	115	89.16	77.7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통합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의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가 모두 80%를 하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서귀포시가 79.76%로 제주시 62.30%보다 다소 높았다.

통합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의 비율은 서귀포시가 50.75%로 제주시 43.95%보다 다소 높았다.

〈표 13-1-3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

	사례관리 요청건수	사례관리 계획 수립 건수	사례관리 종결건수	사례관리 요청건수 대비 수립건수	사례관리 수립건수 대비 종결건수
계	336	224	103	66.67	45.98
제주시	252	157	69	62.30	43.95
서귀포시	84	67	34	79.76	50.75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2.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에서만 이루어짐으로써 44.00%의 낮은 배치율을 보였다.

〈표 13-1-33〉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11	25	44.00
종로구	0	1	0.00
중구	0	1	0.00
용산구	0	1	0.00
성동구	1	1	100.00
광진구	1	1	100.00
동대문구	1	1	100.00
중랑구	1	1	100.00
성북구	0	1	0.00
강북구	1	1	100.00
도봉구	1	1	100.00
노원구	1	1	100.00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은평구	0	1	0.00
서대문구	0	1	0.00
마포구	0	1	0.00
양천구	0	1	0.00
강서구	0	1	0.00
구로구	0	1	0.00
금천구	1	1	100.00
영등포구	1	1	100.00
동작구	0	1	0.00
관악구	0	1	0.00
서초구	1	1	100.00
강남구	0	1	0.00
송파구	1	1	100.00
강동구	0	1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어느 곳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0.00%의 매우 낮은 배치율을 보였다.

〈표 13-1-34〉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0	16	0.00
중구	0	1	0.00
서구	0	1	0.00
동구	0	1	0.00
영도구	0	1	0.00
부산진구	0	1	0.00
동래구	0	1	0.00
남구	0	1	0.00
북구	0	1	0.00
해운대구	0	1	0.00
사하구	0	1	0.00
금정구	0	1	0.00
강서구	0	1	0.00
연제구	0	1	0.00
수영구	0	1	0.00
사상구	0	1	0.00
기장군	0	1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어느 곳도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써 0.00%의 매우 낮은 배치율을 보였다.

〈표 13-1-35〉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0	8	0.00
중구	0	1	0.00
동구	0	1	0.00
서구	0	1	0.00
남구	0	1	0.00
북구	0	1	0.00
수성구	0	1	0.00
달서구	0	1	0.00
달성군	0	1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에서만 이루어짐으로써 40.00%의 낮은 배치율을 보였다.

〈표 13-1-3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4	10	40.00
중구	1	1	100.00
동구	0	1	0.00
남구	0	1	0.00
연수구	0	1	0.00
남동구	1	1	100.00
부평구	0	1	0.00
계양구	0	1	0.00
서구	1	1	100.00
강화군	1	1	100.00
옹진군	0	1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60.00%의 배치율을 보였다.

〈표 13-1-37〉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3	5	60.00
동구	0	1	0.00
서구	1	1	100.00
남구	1	1	100.00
북구	1	1	100.00
광산구	0	1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어느 곳도 이루어지
지 않음으로써 0.00%의 매우 낮은 배치율을 보였다.

〈표 13-1-38〉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0	5	0.00
동구	0	1	0.00
중구	0	1	0.00
서구	0	1	0.00
유성구	0	1	0.00
대덕구	0	1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에
서 이루어짐으로써 80.00%의 높은 배치율을 보였다.

〈표 13-1-39〉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4	5	80.00
중구	1	1	100.00
남구	0	1	0.00
동구	1	1	100.00
북구	1	1	100.00
울주군	1	1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90.32%의 매우 높은 배치율을 보였다.

〈표 13-1-40〉 경기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28	31	90.32
수원시	1	1	100.00
성남시	1	1	100.00
고양시	0	1	0.00
부천시	1	1	100.00
안양시	0	1	0.00
안산시	1	1	100.00
용인시	1	1	100.00
의정부시	1	1	100.00
남양주시	1	1	100.00
평택시	1	1	100.00
광명시	1	1	100.00
시흥시	1	1	100.00
군포시	1	1	100.00
화성시	1	1	100.00
파주시	1	1	100.00
이천시	1	1	100.00
구리시	1	1	100.00
김포시	1	1	100.00
포천시	1	1	100.00
광주시	1	1	100.00
안성시	1	1	100.00
하남시	1	1	100.00
의왕시	1	1	100.00
양주시	1	1	100.00
오산시	1	1	100.00
여주군	1	1	100.00
양평군	1	1	100.00
동두천시	0	1	0.00
과천시	1	1	100.00
가평군	1	1	100.00
연천군	1	1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55.56%의 배치율을 보였다.

〈표 13-1-41〉 강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10	18	55.56
춘천시	1	1	100.00
원주시	1	1	100.00
강릉시	1	1	100.00
동해시	0	1	0.00
태백시	1	1	100.00
속초시	1	1	100.00
삼척시	0	1	0.00
홍천군	0	1	0.00
횡성군	0	1	0.00
영월군	1	1	100.00
평창군	0	1	0.00
정선군	1	1	100.00
철원군	0	1	0.00
화천군	1	1	100.00
양구군	0	1	0.00
인제군	1	1	100.00
고성군	1	1	100.00
양양군	0	1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 7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58.33%의 배치율을 보였다.

〈표 13-1-42〉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7	12	58.33
청주시	1	1	100.00
충주시	1	1	100.00
제천시	1	1	100.00
청원군	0	1	0.00
보은군	1	1	100.00
옥천군	0	1	0.00
영동군	1	1	100.00
증평군	1	1	100.00
진천군	1	1	100.00
괴산군	0	1	0.00
음성군	0	1	0.00
단양군	0	1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 13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86.67%의 높은 배치율을 보였다.

〈표 13-1-43〉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13	15	86.67
천안시	1	1	100.00
공주시	1	1	100.00
보령시	1	1	100.00
아산시	1	1	100.00
서산시	0	1	0.00
논산시	1	1	100.00
계룡시	1	1	100.00
당진시	1	1	100.00
금산군	1	1	100.00
부여군	1	1	100.00
서천군	1	1	100.00
청양군	1	1	100.00
홍성군	0	1	0.00
예산군	1	1	100.00
태안군	1	1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7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50.00%의 배치율을 보였다.

〈표 13-1-44〉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7	14	50.00
전주시	1	1	100.00
군산시	1	1	100.00
익산시	1	1	100.00
정읍시	1	1	100.00
남원시	1	1	100.00
김제시	0	1	0.00
완주군	0	1	0.00
진안군	1	1	100.00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무주군	0	1	0.00
장수군	0	1	0.00
임실군	0	1	0.00
순창군	0	1	0.00
고창군	0	1	0.00
부안군	1	1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13.64%의 매우 낮은 배치율을 보였다.

〈표 13-1-45〉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3	22	13.64
목포시	0	1	0.00
여수시	1	1	100.00
순천시	1	1	100.00
나주시	0	1	0.00
광양시	1	1	100.00
담양군	0	1	0.00
곡성군	0	1	0.00
구례군	0	1	0.00
고흥군	0	1	0.00
보성군	0	1	0.00
화순군	0	1	0.00
장흥군	0	1	0.00
강진군	0	1	0.00
해남군	0	1	0.00
영암군	0	1	0.00
무안군	0	1	0.00
함평군	0	1	0.00
영광군	0	1	0.00
장성군	0	1	0.00
완도군	0	1	0.00
진도군	0	1	0.00
신안군	0	1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모두에서 이루어

짐으로써 100.00%의 매우 높은 배치율을 보였다.

〈표 13-1-46〉 경상북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23	23	100.00
포항시	1	1	100.00
경주시	1	1	100.00
김천시	1	1	100.00
안동시	1	1	100.00
구미시	1	1	100.00
영주시	1	1	100.00
영천시	1	1	100.00
상주시	1	1	100.00
문경시	1	1	100.00
경산시	1	1	100.00
군위군	1	1	100.00
의성군	1	1	100.00
청송군	1	1	100.00
영양군	1	1	100.00
영덕군	1	1	100.00
청도군	1	1	100.00
고령군	1	1	100.00
성주군	1	1	100.00
칠곡군	1	1	100.00
예천군	1	1	100.00
봉화군	1	1	100.00
울진군	1	1	100.00
울릉군	1	1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22.22%의 매우 낮은 배치율을 보였다.

〈표 13-1-47〉 경상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4	18	22.22
창원시	1	1	100.00
진주시	0	1	0.00
통영시	0	1	0.00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사천시	0	1	0.00
김해시	0	1	0.00
밀양시	1	1	100.00
거제시	1	1	100.00
양산시	0	1	0.00
의령군	0	1	0.00
함안군	0	1	0.00
창녕군	0	1	0.00
고성군	0	1	0.00
남해군	1	1	100.00
하동군	0	1	0.00
산청군	0	1	0.00
함양군	0	1	0.00
거창군	0	1	0.00
합천군	0	1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모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100.00%의 매우 높은 배치율을 보였다.

〈표 13-1-4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2	2	100.00
제주시	1	1	100.00
서귀포시	1	1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나. 기부식품 증가율

기부식품 등 증가율이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강북구(58.75%)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종로구(-36.73%)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없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25개 지자체 중 11개나 되었다.

〈표 13-1-49〉 서울특별시 기부식품 등 증가율

(단위: 천원, %)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계	25,420,545	24,836,344	2.35
종로구	526,722	832,478	-36.73
중구	1,078,838	1,028,172	4.93
용산구	924,626	789,557	17.11
성동구	633,550	781,270	-18.91
광진구	731,185	555,245	31.69
동대문구	483,671	576,620	-16.12
중랑구	649,244	641,729	1.17
성북구	413,069	322,242	28.19
강북구	1,949,431	1,227,990	58.75
도봉구	6,677,362	5,802,387	15.08
노원구	795,784	564,277	41.03
은평구	306,578	443,191	-30.82
서대문구	649,712	855,238	-24.03
마포구	665,460	853,335	-22.02
양천구	632,885	511,626	23.70
강서구	798,194	592,732	34.66
구로구	538,579	595,562	-9.57
금천구	570,660	795,781	-28.29
영등포구	1,242,948	1,671,465	-25.64
동작구	443,536	347,987	27.46
관악구	772,673	625,459	23.54
서초구	606,448	447,185	35.61
강남구	2,361,923	2,966,527	-20.38
송파구	408,683	384,755	6.22
강동구	558,784	623,534	-10.3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증가율이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영도구(204.24%)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북구(-21.53%)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6개 지자체 중 4개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2개이었다.

〈표 13-1-50〉 부산광역시 기부식품 등 증가율

(단위: 천원, %)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계	4,517,523	3,236,008	39.60
중구	134,280	57,101	135.16
서구	1,753,099	1,133,453	54.67
동구	112,351	100,377	11.93
영도구	155,023	50,954	204.24
부산진구	286,121	184,040	55.47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동래구	219,206	119,081	84.08
남구	325,792	269,648	20.82
북구	252,805	322,158	-21.53
해운대구	383,533	349,622	9.70
사하구	291,550	229,565	27.00
금정구	136,158	122,046	11.56
강서구	67,858	71,745	-5.42
연제구	59,574	45,722	30.30
수영구	70,251	60,170	16.75
사상구	165,579	69,945	136.73
기장군	104,343	50,381	107.1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증가율이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구(174.6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달성군(-32.70%)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8개 지자체 중 1개 뿐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3개나 되었다.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은 전년도에 이어 현년도에도 기부식품 등의 실적이 없는 서구이다.

〈표 13-1-51〉 대구광역시 기부식품 등 증가율

(단위: 천원, %)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계	2,501,188	2,284,607	9.48
중구	391,031	268,049	45.88
동구	142,354	51,835	174.63
서구	0	0	0.00
남구	789,567	737,952	6.99
북구	304,470	270,209	12.68
수성구	93,518	105,927	-11.71
달서구	764,385	827,066	-7.58
달성군	15,863	23,569	-32.7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증가율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계양구(65.6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동구(-24.68%)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없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2개이었다.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은 전년도에 이어 현년도에도 기부식품 등의 실적이 없는 용진군이다.

〈표 13-1-52〉 인천광역시 기부식품 등 증가율

(단위: 천원, %)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계	4,792,867	3,889,013	23.24
중구	791,929	548,843	44.29
동구	370,074	491,321	-24.68
남구	430,579	288,997	48.99
연수구	504,947	405,498	24.53
남동구	841,297	664,588	26.59
부평구	507,570	383,351	32.40
계양구	538,197	324,986	65.61
서구	559,370	610,335	-8.35
강화군	248,904	171,094	45.48
옹진군	0	0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증가율이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구(46.34%)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광산구(3.12%)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없었고,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도 없었다.

〈표 13-1-53〉 광주광역시 기부식품 등 증가율

(단위: 천원, %)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계	2,966,351	2,421,956	22.48
동구	272,868	246,045	10.90
서구	1,186,740	810,945	46.34
남구	216,351	193,132	12.02
북구	666,701	566,992	17.59
광산구	623,691	604,842	3.1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증가율이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구(67.67%)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유성구(29.76%)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없었고,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도 없었다.

〈표 13-1-54〉 대전광역시 기부식품 등 증가율

(단위: 천원, %)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계	4,150,823	2,864,191	44.92
동구	1,075,451	721,247	49.11
중구	1,107,618	770,905	43.68
서구	633,356	377,745	67.67
유성구	959,704	739,616	29.76
대덕구	374,694	254,678	47.1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증가율이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구(117.3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울주군(10.34%)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5개 지자체 중 1개 뿐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없었다.

〈표 13-1-55〉 울산광역시 기부식품 등 증가율

(단위: 천원, %)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계	1,616,352	1,198,631	34.85
중구	631,664	558,843	13.03
남구	415,249	223,212	86.03
동구	134,646	61,947	117.36
북구	141,536	88,851	59.30
울주군	293,257	265,778	10.3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증가율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양평군(1,288.7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광명시(-36.76%)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31개 지자체 중 5개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7개이었다.

〈표 13-1-56〉 경기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단위: 천원, %)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계	22,360,089	17,258,097	29.56
수원시	2,567,100	1,847,665	38.94
성남시	2,398,979	1,737,410	38.08
고양시	733,529	911,332	-19.51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부천시	515,455	380,142	35.60
안양시	382,043	407,979	-6.36
안산시	445,331	297,441	49.72
용인시	958,715	457,024	109.77
의정부시	615,419	340,270	80.86
남양주시	626,192	526,067	19.03
평택시	1,065,945	860,735	23.84
광명시	936,910	1,481,553	-36.76
시흥시	1,197,181	1,286,690	-6.96
군포시	619,478	633,595	-2.23
화성시	868,851	401,636	116.33
파주시	1,283,843	933,596	37.52
이천시	1,064,570	656,012	62.28
구리시	141,660	106,866	32.56
김포시	618,937	396,342	56.16
포천시	604,089	305,853	97.51
광주시	1,905,237	1,320,335	44.30
안성시	473,846	311,113	52.31
하남시	892,995	518,245	72.31
의왕시	145,415	129,151	12.59
양주시	243,761	241,781	0.82
오산시	97,156	60,691	60.08
여주군	165,618	171,231	-3.28
양평군	148,472	10,691	1,288.76
동두천시	466,453	412,181	13.17
과천시	33,207	16,159	105.50
가평군	39,980	43,206	-7.47
연천군	103,722	55,105	88.2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증가율이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화천군(948.1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속초시(-24.98%)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8개 지자체 중 6개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5개이었다.

〈표 13-1-57〉 강원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단위: 천원, %)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계	1,882,845	1,445,952	30.22
춘천시	243,321	204,981	18.70
원주시	487,078	435,392	11.87
강릉시	183,014	187,282	-2.28
동해시	132,398	114,547	15.58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태백시	49,594	62,942	-21.21
속초시	39,900	53,183	-24.98
삼척시	61,196	41,647	46.94
홍천군	139,110	57,782	140.75
횡성군	115,425	55,252	108.91
영월군	138,118	72,074	91.63
평창군	59,935	20,843	187.55
정선군	8,664	9,392	-7.75
철원군	35,224	36,293	-2.95
화천군	57,866	5,521	948.11
양구군	47,462	40,065	18.46
인제군	27,863	9,105	206.02
고성군	22,040	13,823	59.44
양양군	34,637	25,828	34.1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증가율이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보은군(1,517.40%)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충주시(-55.95%)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2개 지자체 중 3개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2개이었다.

〈표 13-1-58〉 충청북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단위: 천원, %)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계	5,124,542	4,495,311	13.40
청주시	2,605,802	1,718,892	51.60
충주시	213,187	483,979	-55.95
제천시	423,828	396,427	6.91
청원군	95,765	50,051	91.33
보은군	63,014	3,896	1,517.40
옥천군	6,022	400	1,405.50
영동군	57,039	43,301	31.73
증평군	60,102	47,745	25.88
진천군	642,060	537,292	19.50
괴산군	215,642	196,104	9.96
음성군	661,080	1,000,940	-33.95
단양군	81,001	16,284	397.4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증가율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청양군(110.99%)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금산군(-81.18%)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5개 지자체 중 2개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3개이었다.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은 전년도에 이어 현년도에도 기부식품 등의 실적이 없는 계룡시이다.

〈표 13-1-59〉 충청남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단위: 천원, %)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계	4,822,454	3,970,424	21.46
천안시	709,995	475,770	49.23
공주시	188,303	140,311	34.20
보령시	146,295	132,490	10.42
아산시	1,709,212	1,316,768	29.80
서산시	94,227	109,051	-13.59
논산시	1,230,895	1,163,568	5.79
계룡시	0	0	0.00
당진시	105,592	136,888	-22.86
금산군	4,710	25,020	-81.18
부여군	37,982	31,091	22.16
서천군	140,371	132,086	6.27
청양군	20,223	9,585	110.99
홍성군	284,523	188,178	51.20
예산군	69,051	34,264	101.53
태안군	81,075	75,354	7.5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증가율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정읍시(141.19 %)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진안군(-10.01%)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4개 지자체 중 1개 뿐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3개이었다.

〈표 13-1-60〉 전라북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단위: 천원, %)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계	3,747,506	2,767,854	35.39
전주시	1,065,223	835,531	27.49
군산시	226,860	156,064	45.36
익산시	603,430	386,974	55.94
정읍시	405,629	168,179	141.19
남원시	140,909	115,178	22.34
김제시	324,838	272,713	19.11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완주군	209,780	225,058	-6.79
진안군	47,713	53,019	-10.01
무주군	201,484	202,510	-0.51
장수군	50,122	34,556	45.05
임실군	61,718	56,627	8.99
순창군	98,297	62,041	58.44
고창군	220,757	149,753	47.41
부안군	90,746	49,651	82.7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증가율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진도군(317.50 %)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장성군(-62.00%)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22개 지자체 중 6개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10개나 되었다.

〈표 13-1-61〉 전라남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단위: 천원, %)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계	2,556,518	2,142,418	19.33
목포시	513,047	388,730	31.98
여수시	246,638	318,532	-22.57
순천시	218,886	201,811	8.46
나주시	223,894	82,206	172.36
광양시	186,541	222,532	-16.17
담양군	40,131	48,902	-17.94
곡성군	162,182	204,326	-20.63
구례군	3,236	4,518	-28.38
고흥군	11,030	23,846	-53.74
보성군	56,948	34,863	63.35
화순군	130,317	60,955	113.79
장흥군	19,204	48,608	-60.49
강진군	52,746	16,762	214.68
해남군	85,652	81,357	5.28
영암군	72,565	25,448	185.15
무안군	37,513	34,420	8.99
함평군	84,293	22,485	274.89
영광군	110,837	131,329	-15.60
장성군	10,788	28,393	-62.00
완도군	195,000	127,582	52.84
진도군	83,500	20,000	317.50
신안군	11,570	14,813	-21.8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증가율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칠곡군(103.8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울진군(-46.78%)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23개 지자체 중 1개 뿐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도 1개이었다.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은 전년도에 이어 현년도에도 기부식품 등의 실적이 없는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등이다.

〈표 13-1-62〉 경상북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단위: 천원, %)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계	3,093,143	2,423,481	27.63
포항시	744,928	645,241	15.45
경주시	76,097	59,208	28.52
김천시	301,881	167,378	80.36
안동시	392,803	367,153	6.99
구미시	438,342	276,584	58.48
영주시	209,494	135,502	54.61
영천시	63,207	36,280	74.22
상주시	128,433	117,335	9.46
문경시	51,589	42,075	22.61
경산시	408,010	393,019	3.81
군위군	0	0	0.00
의성군	29,707	17,192	72.80
청송군	0	0	0.00
영양군	0	0	0.00
영덕군	0	0	0.00
청도군	69,529	42,720	62.76
고령군	0	0	0.00
성주군	76,763	44,506	72.48
칠곡군	81,417	39,937	103.86
예천군	0	0	0.00
봉화군	0	0	0.00
울진군	20,943	39,351	-46.78
울릉군	0	0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증가율이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합천군(1,469.0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양산시(-55.83%)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8개 지자체 중 4개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도 4개이었다.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은 전년도에 이어 현년도에도 기부식품 등의 실적이 없는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등이다.

〈표 13-1-63〉 경상남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단위: 천원, %)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계	2,245,104	2,154,831	4.19
창원시	952,564	898,552	6.01
진주시	249,355	194,394	28.27
통영시	101,888	88,335	15.34
사천시	134,557	69,225	94.38
김해시	215,186	217,761	-1.18
밀양시	44,930	89,237	-49.65
거제시	23,341	28,814	-18.99
양산시	159,552	361,220	-55.83
의령군	0	0	0.00
함안군	85,430	21,583	295.82
창녕군	0	0	0.00
고성군	19,822	18,917	4.78
남해군	52,745	34,216	54.15
하동군	43,866	31,889	37.56
산청군	0	0	0.00
함양군	41,267	20,067	105.65
거창군	116,396	80,353	44.86
합천군	4,205	268	1,469.0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증가율은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귀포시가 50.89%로 제주시 27.50%보다 높았다.

〈표 13-1-64〉 제주특별자치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단위: 천원, %)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A)	'11년 기부식품 등 총액(B)	기부식품 등 증가율 [(A-B)/B]×100
계	1,080,428	833,258	29.66
제주시	964,354	756,330	27.50
서귀포시	116,074	76,928	50.8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다. 기부식품 이용실적 증가율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이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도봉구

(2,529.68%)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관악구(-133.58%)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25개 지자체 중 6개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4개이었다.

〈표 13-1-65〉 서울특별시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단위: 천원, 명, 건, %)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 +{(B-E)/E} +{(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계	24,153,044	29,929	362,288	20,642,921	24,534	308,310	56.50
종로구	890,767	824	14,141	976,116	878	12,670	-3.28
중구	1,347,109	637	7,541	1,035,429	296	7,686	143.42
용산구	941,080	724	10,904	854,830	538	9,528	59.10
성동구	898,939	946	10,437	781,489	681	9,926	59.09
광진구	786,940	679	2,880	502,857	582	3,633	52.43
동대문구	622,845	400	5,469	740,926	277	5,908	21.04
중랑구	1,170,783	1,223	4,537	934,084	1,618	4,838	-5.29
성북구	739,757	549	6,962	576,625	637	5,376	43.98
강북구	1,934,106	1,005	6,208	1,284,973	1,012	5,475	63.21
도봉구	1,164,515	5,465	70,231	360,546	458	5,347	2,529.68
노원구	1,303,413	1,871	44,063	1,147,371	1,573	34,629	59.79
은평구	517,684	964	41,666	1,265,788	1,102	10,022	244.12
서대문구	877,348	429	16,122	958,891	439	7,815	95.51
마포구	996,900	587	5,615	1,073,971	300	5,548	89.70
양천구	943,766	1,306	6,584	719,913	1,105	6,156	56.24
강서구	1,041,478	7,035	7,789	803,089	7,263	5,604	65.53
구로구	677,087	463	5,508	765,352	537	5,171	-18.80
금천구	728,516	696	28,478	779,766	418	68,957	1.23
영등포구	1,588,659	1,202	21,614	1,395,468	513	14,094	201.51
동작구	554,404	731	6,155	554,588	643	4,438	52.34
관악구	958,663	617	5,018	838,891	1,606	36,565	-133.58
서초구	669,629	248	5,088	506,230	304	4,075	38.72
강남구	1,727,343	630	22,741	833,857	1,079	29,214	43.38
송파구	478,772	458	2,824	573,270	481	2,288	2.16
강동구	592,541	240	3,713	378,601	194	3,347	91.15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이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사상구(7,755.40%)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강서구(-40.06%)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6개 지자체 중 11개나 되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2개

이었다.

〈표 13-1-66〉 부산광역시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단위: 천원, 명, 건, %)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 +{(B-E)/E} +{(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계	5,157,892	16,771	251,172	3,824,035	7,784	63,631	445.07
중구	307,890	635	11,089	188,753	174	2,950	603.96
서구	533,189	1,522	17,645	447,041	928	2,448	704.07
동구	180,989	242	1,484	162,021	245	1,497	9.61
영도구	311,691	1,398	23,312	208,922	305	1,586	1,777.41
부산진구	429,015	1,269	21,691	169,956	477	1,579	1,592.18
동래구	314,770	604	8,995	205,271	197	1,872	640.44
남구	442,766	1,417	18,863	262,421	1,256	18,505	83.48
북구	490,783	2,111	21,131	504,126	785	4,364	550.48
해운대구	418,647	1,176	15,160	407,892	519	4,305	381.37
사하구	387,628	1,418	34,424	228,763	470	9,155	547.16
금정구	287,501	1,495	30,137	262,179	556	4,450	755.78
강서구	152,069	87	1,612	187,657	148	1,342	-40.06
연제구	275,634	226	1,381	237,987	285	1,843	-29.95
수영구	178,616	724	3,773	125,323	805	3,499	40.29
사상구	284,227	1,709	34,720	87,200	30	1,708	7,755.40
기장군	162,477	738	5,755	138,523	604	2,528	167.1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이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구(615.8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서구(-300.00%)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8개 지자체 중 2개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5개나 되었다.

〈표 13-1-67〉 대구광역시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단위: 천원, 명, 건, %)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B-E)/E}+{(C-F)/F}]]×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계	3,187,965	11,409	187,168	2,522,178	11,526	183,008	27.66
중구	528,252	1,348	47,000	293,842	1,697	43,788	66.54
동구	221,779	1,733	15,603	123,052	672	3,266	615.86
서구	0	0	0	103,291	74	217	-300.00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B-E)/E}+{(C-F)/F}]]×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남구	608,155	1,939	19,436	498,293	2,083	31,148	-22.47
북구	537,968	1,752	31,265	526,006	2,458	42,683	-53.20
수성구	176,595	1,066	9,509	153,766	1,368	10,592	-17.45
달서구	963,937	2,460	49,404	671,072	2,133	19,452	212.95
달성군	151,279	1,111	14,951	152,856	1,041	31,862	-47.3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이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중구(75.3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서구(-65.87%)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없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10개 지자체 중 2개이었다.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은 전년도에 이어 현년도에도 기부식품 등의 이용실적이 없는 용진군인데, 이는 기부식품 등의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표 13-1-68〉 인천광역시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단위: 천원, 명, 건, %)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B-E)/E}+{(C-F)/F}]]×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계	5,455,883	15,301	470,617	4,571,891	15,199	432,973	28.70
중구	935,671	1,683	45,201	595,991	1,484	43,068	75.36
동구	383,399	1,597	54,029	379,006	1,625	42,545	26.43
남구	479,847	1,728	51,716	479,346	1,040	50,358	68.96
연수구	596,849	2,967	75,224	562,430	2,458	58,951	54.43
남동구	700,227	2,561	61,617	557,270	2,296	51,785	56.18
부평구	788,642	1,494	54,435	578,685	2,021	53,632	11.70
계양구	543,990	1,017	44,194	440,865	1,183	34,809	36.32
서구	635,505	1,055	32,877	619,559	1,661	48,322	-65.87
강화군	391,753	1,199	51,324	358,739	1,431	49,503	-3.33
용진군	0	0	0	0	0	0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이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남구(1,414.58%)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서구(-14.16%)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5개 지자체 중 4개나 되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1개 뿐이었다.

〈표 13-1-69〉 광주광역시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단위: 천원, 명, 건, %)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frac{[(A-D)/D] + [(B-E)/E] + [(C-F)/F]}{\times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계	3,855,769	14,938	371,744	3,174,141	12,090	240,700	99.47
동구	425,277	1,253	32,757	311,948	785	9,394	344.65
서구	858,572	3,480	132,598	859,403	3,616	147,827	-14.16
남구	414,323	1,098	66,511	314,680	730	4,643	1,414.58
북구	1,190,097	6,841	107,087	927,755	5,503	60,304	130.17
광산구	967,500	2,266	32,791	760,355	1,456	18,532	159.8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이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구(299.16%)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중구(95.23%)이었다. 전체 5개 지자체가 9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13-1-70〉 대전광역시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단위: 천원, 명, 건, %)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frac{[(A-D)/D] + [(B-E)/E] + [(C-F)/F]}{\times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계	4,885,227	14,758	296,558	3,382,971	9,909	163,299	174.95
동구	1,318,760	4,952	60,366	892,562	2,075	28,373	299.16
중구	903,308	2,600	45,520	656,618	2,794	27,654	95.23
서구	764,995	2,540	66,981	566,382	1,582	42,287	154.02
유성구	1,303,328	2,795	80,864	845,211	2,373	44,001	155.76
대덕구	594,836	1,871	42,827	422,198	1,085	20,984	217.4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이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구(183.5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중구(-173.48%)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5개 지자체 중 3개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1개 뿐이었다.

〈표 13-1-71〉 울산광역시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단위: 천원, 명, 건, %)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 +{(B-E)/E} +{(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계	2,135,030	8,267	137,129	1,657,334	6,510	114,806	75.26
중구	302,358	238	736	377,680	861	3,911	-173.48
남구	773,189	1,917	16,086	425,297	2,262	8,972	145.84
동구	307,037	731	42,946	231,240	444	23,075	183.53
북구	287,839	1,655	47,788	200,376	1,384	54,938	50.22
울주군	464,607	3,726	29,573	422,741	1,559	23,910	172.5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양평군 (2,063.13%)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성남시(-78.41%)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31개 지자체 중 14개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3개이었다.

〈표 13-1-72〉 경기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단위: 천원, 명, 건, %)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 +{(B-E)/E} +{(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계	23,981,365	46,908	1,553,107	19,660,945	42,969	991,683	87.75
수원시	1,594,450	3,040	65,865	1,606,485	2,826	75,916	-6.42
성남시	1,111,221	3,256	44,497	1,332,847	4,859	62,488	-78.41
고양시	770,762	1,744	71,245	910,507	1,484	38,830	85.65
부천시	567,907	2,757	143,805	410,289	3,319	120,090	41.23
안양시	744,544	697	15,082	884,635	741	9,611	35.15
안산시	578,309	252	44,647	407,873	357	39,042	26.73
용인시	1,065,971	2,953	66,828	496,045	1,151	13,594	663.05
의정부시	1,043,333	1,613	53,441	808,327	1,807	43,469	41.28
남양주시	684,321	1,360	42,691	613,588	2,048	28,432	28.09
평택시	1,397,596	2,384	55,993	1,043,250	2,551	44,543	53.12
광명시	1,134,544	854	104,043	1,806,670	975	33,223	163.55
시흥시	1,219,740	2,078	75,130	1,139,299	2,369	32,881	123.27
군포시	631,280	1,041	20,354	686,015	1,063	11,916	60.76
화성시	797,563	2,596	85,443	404,477	2,958	29,043	279.14
파주시	1,448,385	4,737	161,445	950,223	2,796	98,301	186.08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 + $\{(B-E)/E\}$ + $\{(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이천시	1,206,331	1,354	31,102	412,268	1,012	14,915	334.93
구리시	114,466	972	42,918	124,662	189	3,354	1,585.71
김포시	776,603	1,857	71,841	534,506	1,214	19,726	362.45
포천시	563,747	467	41,197	324,226	499	37,433	77.52
광주시	1,972,158	2,094	87,225	1,532,084	2,213	68,641	50.42
안성시	1,021,546	839	21,194	680,350	673	12,558	143.58
하남시	888,381	1,239	100,492	613,827	1,540	67,695	73.63
의왕시	147,290	233	25,825	147,787	283	29,710	-31.08
양주시	416,320	1,595	25,083	451,074	942	13,415	148.59
오산시	105,436	311	5,245	60,731	271	4,997	93.33
여주군	715,799	1,109	15,054	631,714	880	10,024	89.51
양평군	253,094	1,555	4,575	16,409	285	1,663	2,063.13
동두천시	564,010	617	3,684	374,382	412	3,435	107.66
과천시	28,408	370	1,378	16,159	88	797	469.16
가평군	182,856	356	4,838	97,852	484	5,943	41.83
연천군	234,994	578	20,947	142,384	680	15,998	80.9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이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원주시(611.40%)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동해시(-54.05%)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8개 지자체 중 9개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4개이었다.

〈표 13-1-73〉 강원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단위: 천원, 명, 건, %)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 + $\{(B-E)/E\}$ + $\{(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계	3,742,013	18,790	371,073	2,974,147	16,963	254,284	82.52
춘천시	363,522	2,423	45,916	330,758	2,508	53,079	-6.98
원주시	554,007	2,437	28,857	560,968	1,066	4,941	611.40
강릉시	215,727	1,755	14,947	138,575	1,874	9,512	106.46
동해시	149,627	388	4,820	148,695	485	7,379	-54.05
태백시	102,208	518	22,001	122,771	512	9,124	125.56
속초시	152,564	631	5,664	130,190	742	11,161	-47.03
삼척시	160,204	827	21,168	131,895	898	11,154	103.34
홍천군	348,885	1,205	21,561	205,974	1,003	13,520	149.00
횡성군	137,328	803	5,927	112,125	626	4,494	82.64
영월군	425,315	889	77,099	254,544	745	25,174	292.68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 + $\{(B-E)/E\}$ + $\{(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평창군	181,599	1,080	7,777	121,490	606	9,927	106.04
정선군	126,395	850	23,420	109,721	607	14,786	113.62
철원군	128,991	256	9,202	80,050	314	11,600	21.99
화천군	114,330	1,059	4,108	69,663	878	3,415	105.03
양구군	203,431	542	51,285	149,107	838	40,002	29.32
인제군	105,029	843	6,762	76,700	1,117	8,073	-3.83
고성군	141,649	367	12,275	121,745	292	8,308	89.78
양양군	131,202	1,919	8,284	109,176	1,854	8,635	19.6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이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단양군(1,068.54%)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진천군(-17.93%)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2개 지자체 중 6개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3개이었다.

〈표 13-1-74〉 충청북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단위: 천원, 명, 건, %)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 + $\{(B-E)/E\}$ + $\{(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계	5,561,240	18,271	351,888	5,397,754	16,247	259,744	50.96
청주시	1,858,924	6,971	126,771	1,876,901	6,354	82,638	62.15
충주시	351,426	1,555	21,270	578,124	1,773	13,670	4.12
제천시	399,698	1,496	56,846	490,492	1,298	47,944	15.32
청원군	420,745	900	22,374	242,905	739	13,477	160.88
보은군	167,371	898	9,661	95,046	638	10,509	108.79
옥천군	69,056	1,037	1,907	40,318	1,061	8,926	-9.62
영동군	216,112	1,861	18,210	182,797	1,686	25,501	-0.01
증평군	107,176	276	1,339	84,107	35	1,358	711.78
진천군	492,988	733	40,185	582,324	752	40,227	-17.93
괴산군	512,620	775	23,263	345,302	832	7,546	249.87
음성군	651,574	937	15,186	778,541	643	6,231	173.00
단양군	313,550	833	14,876	100,897	435	1,717	1,068.5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부여군(188.27%)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금산군(-128.19%)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5개 지자체 중 6개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4개이었다.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은 전년도에 이어 현년도에도 기부식품 등의 이용실적이 없는 계룡시인데, 이는 기부식품 등의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표 13-1-75〉 충청남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단위: 천원, 명, 건, %)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 +[(B-E)/E] +[(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계	6,573,337	18,864	281,587	5,780,832	15,943	228,457	55.29
천안시	1,043,173	1,530	27,988	780,744	1,357	24,114	62.43
공주시	293,881	400	2,452	153,195	488	2,407	75.67
보령시	434,050	1,771	39,743	314,947	1,315	27,460	117.22
아산시	1,339,940	2,971	55,335	1,129,267	1,975	39,193	110.27
서산시	152,194	421	7,044	136,533	521	4,802	38.97
논산시	1,222,687	2,678	35,621	1,229,036	2,663	34,530	3.21
계룡시	0	0	0	0	0	0	0.00
당진시	452,264	1,149	12,964	616,892	1,070	23,307	-63.68
금산군	59,668	106	500	89,124	192	1,007	-128.19
부여군	142,188	1,358	10,815	120,194	613	7,286	188.27
서천군	406,586	1,391	21,021	389,217	1,909	22,522	-29.34
청양군	57,692	1,524	3,587	75,798	588	3,346	142.50
홍성군	688,984	2,690	49,744	458,170	2,504	24,561	160.34
예산군	176,785	559	13,136	130,152	388	11,002	99.30
태안군	103,245	316	1,637	157,563	360	2,920	-90.6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순창군(221.52%)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장수군(-133.27%)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4개 지자체 중 3개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5개이었다.

〈표 13-1-76〉 전라북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단위: 천원, 명, 건, %)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 +[(B-E)/E] +[(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계	4,004,949	21,921	202,351	3,455,041	21,999	210,560	11.66
전주시	984,514	3,430	38,355	1,058,354	2,998	61,099	-29.79
군산시	235,847	2,664	8,221	199,599	2,520	6,481	50.72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 +{(B-E)/E} +{(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익산시	638,408	2,745	48,039	400,078	1,865	37,451	135.03
정읍시	411,127	1,832	4,207	170,025	2,489	5,092	98.03
남원시	158,155	1,368	8,492	166,650	1,005	5,584	83.10
김제시	352,289	2,714	18,877	276,622	3,272	12,275	64.08
완주군	234,122	1,279	21,985	284,995	1,373	21,961	-24.59
진안군	53,503	499	3,818	51,878	439	4,609	-0.36
무주군	231,135	1,284	23,884	221,671	1,121	16,594	62.74
장수군	83,138	1,130	1,912	91,985	1,847	12,606	-133.27
임실군	112,538	849	2,546	138,695	768	7,208	-72.99
순창군	124,884	385	2,045	97,368	257	840	221.52
고창군	272,682	1,268	11,502	204,886	1,415	13,203	9.82
부안군	112,607	474	8,468	92,235	631	5,557	49.5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진도군 (2,666.71%)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고흥군(-63.23%)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22개 지자체 중 11개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6개이었다.

〈표 13-1-77〉 전라남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단위: 천원, 명, 건, %)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 +{(B-E)/E} +{(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계	3,453,897	23,167	192,548	2,736,857	17,934	154,094	80.33
목포시	230,044	1,174	14,347	262,954	780	15,736	29.17
여수시	417,320	2,950	35,870	364,710	2,709	35,005	25.79
순천시	223,429	1,127	9,176	220,700	535	4,284	226.08
나주시	176,137	1,831	20,072	127,963	1,219	6,844	281.13
광양시	186,541	1,550	16,568	220,437	1,162	15,357	25.90
담양군	61,860	341	1,725	70,842	251	1,502	38.02
곡성군	309,403	1,027	11,429	243,835	562	11,141	112.22
구례군	36,312	152	1,762	46,988	157	2,186	-45.30
고흥군	69,742	1,195	2,550	70,850	1,582	4,061	-63.23
보성군	117,143	3,743	18,818	78,198	2,830	13,892	117.52
화순군	97,409	155	369	72,629	182	713	-28.96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 + $\{(B-E)/E\}$ + $\{(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장흥군	56,030	576	2,123	71,951	796	2,120	-49.62
강진군	77,363	1,005	1,360	35,472	349	279	693.52
해남군	144,238	1,285	11,964	114,818	944	5,509	178.92
영암군	119,832	1,385	9,508	45,969	1,025	2,009	569.07
무안군	65,338	414	926	33,155	278	526	222.03
함평군	214,011	658	15,647	126,176	747	10,975	100.27
영광군	355,490	949	13,546	203,874	735	19,226	73.94
장성군	66,907	391	925	115,508	392	1,113	-59.22
완도군	205,727	125	320	131,030	115	117	239.21
진도군	184,222	639	1,969	22,016	108	128	2,666.71
신안군	39,399	496	1,574	56,782	487	1,371	-13.96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산시(753.94%)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경주시(-44.01%)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23개 지자체 중 8개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2개이었다.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은 전년도에 이어 현년도에도 기부식품 등의 이용실적이 없는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등인데, 이는 기부식품 등의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표 13-1-78〉 경상북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단위: 천원, 명, 건, %)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 + $\{(B-E)/E\}$ + $\{(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계	3,478,010	23,848	144,761	2,676,161	18,801	179,138	37.62
포항시	631,460	3,641	28,315	655,206	4,024	27,714	-10.97
경주시	76,070	1,826	11,143	93,179	2,343	11,557	-44.01
김천시	394,648	4,739	26,534	269,137	2,478	100,767	64.21
안동시	391,880	1,139	8,074	314,350	860	4,021	157.90
구미시	531,990	1,900	26,466	268,089	803	7,820	473.49
영주시	232,235	963	2,957	153,869	889	3,007	57.59
영천시	67,909	968	1,176	45,377	362	441	383.73
상주시	178,892	1,948	14,298	156,444	1,822	12,646	34.33
문경시	63,986	1,628	4,331	42,154	1,086	3,205	136.83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 + $\{(B-E)/E\}$ + $\{(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경산시	506,059	1,450	10,715	358,232	908	1,423	753.94
군위군	0	0	0	0	0	0	0.00
의성군	53,447	623	1,332	64,529	123	398	624.00
청송군	0	0	0	0	0	0	0.00
영양군	0	0	0	0	0	0	0.00
영덕군	0	0	0	0	0	0	0.00
청도군	86,976	503	3,598	49,916	752	2,447	88.17
고령군	0	0	0	0	0	0	0.00
성주군	115,546	1,123	1,243	115,400	991	1,237	13.93
칠곡군	82,188	500	1,668	40,162	252	1,170	245.62
예천군	0	0	0	0	0	0	0.00
봉화군	0	0	0	0	0	0	0.00
울진군	64,724	897	2,911	50,117	1,108	1,285	136.64
울릉군	0	0	0	0	0	0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이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거창군 (281.15%)이었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양산시(-128.87%)이었다.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지자체는 18개 지자체 중 2개이었으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곳은 6개이었다.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은 전년도에 이어 현년도에도 기부식품 등의 이용실적이 없는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등인데, 이는 기부식품 등의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표 13-1-79〉 경상남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단위: 천원, 명, 건, %)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 + $\{(B-E)/E\}$ + $\{(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계	3,285,235	14,112	159,487	3,065,744	14,480	180,362	-6.96
창원시	860,468	3,303	48,512	749,665	3,590	55,770	-6.23
진주시	447,188	991	31,646	337,832	960	33,384	30.39
통영시	224,299	1,035	25,363	217,124	1,335	27,834	-28.04
사천시	179,848	1,356	6,081	176,508	1,301	6,474	0.05
김해시	427,800	1,251	9,052	425,061	1,246	4,939	84.32
밀양시	109,913	503	1,644	139,260	759	1,241	-22.33
거제시	23,921	476	1,972	28,229	371	1,652	32.41
양산시	387,589	1,142	8,579	550,092	1,499	35,038	-128.87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 + $\{(B-E)/E\}$ + $\{(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의령군	0	0	0	0	0	0	0.00
함안군	80,379	85	531	29,331	105	263	256.89
창녕군	0	0	0	0	0	0	0.00
고성군	97,152	389	986	80,543	323	940	45.95
남해군	52,745	581	802	34,216	476	754	82.58
하동군	60,568	991	3,014	44,764	831	2,809	61.86
산청군	0	0	0	0	0	0	0.00
함양군	64,189	100	282	82,577	285	460	-125.88
거창군	217,256	1,751	20,843	116,649	1,156	8,562	281.15
합천군	51,920	159	180	53,893	245	242	-64.3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은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가 큰 격차를 보였다. 서귀포시는 증가율이 416.67%나 된 반면에 제주시는 82.13% 증가에 그쳤다.

〈표 13-1-80〉 제주특별자치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증가율

(단위: 천원, 명, 건, %)

	'12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11년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A-D)/D\}$ + $\{(B-E)/E\}$ + $\{(C-F)/F\}$] ×100
	배분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기부식품 제공건수 (C)	배분식품 등 총액 (D)	기부식품 이용자수 (E)	기부식품 제공건수 (F)	
계	1,569,948	4,537	169,552	1,024,516	4,054	109,329	120.24
제주시	1,286,975	3,763	128,545	927,860	3,468	95,277	82.13
서귀포시	282,973	774	41,007	96,656	586	14,052	416.6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제2절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가.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중구가 0.35%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0.23%로 가장 낮았다.

〈표 13-2-1〉 서울특별시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계	199,310	22,369	26,794	728	0.29
종로구	3,934	545	786	8	0.24
중구	3,574	568	558	20	0.35
용산구	4,534	766	912	9	0.29
성동구	5,581	662	755	20	0.30
광진구	5,037	689	801	26	0.30
동대문구	8,568	1,202	1,339	35	0.31
종랑구	9,897	1,080	1,369	39	0.28
성북구	9,182	1,126	1,578	27	0.25
강북구	10,481	1,149	1,229	49	0.32
도봉구	5,220	629	711	21	0.31
노원구	21,315	1,576	1,734	80	0.31
은평구	12,335	1,407	1,551	34	0.31
서대문구	5,348	1,007	1,005	12	0.34
마포구	6,438	877	1,100	24	0.28
양천구	7,030	840	1,048	46	0.29
강서구	17,596	914	1,387	44	0.23
구로구	6,041	658	956	18	0.24
금천구	7,712	944	1,009	37	0.32
영등포구	8,106	1,094	1,474	29	0.26
동작구	5,804	637	851	23	0.26
관악구	10,561	1,160	1,236	49	0.32
서초구	3,002	336	409	8	0.28
강남구	9,017	1,011	1,276	25	0.27
송파구	6,306	762	863	20	0.30
강동구	6,691	730	857	25	0.2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기장군이 0.33%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0.22%로 가장 낮았다.

〈표 13-2-2〉 부산광역시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계	135,973	13,344	16,481	560	0.28
중구	2,387	251	301	12	0.30
서구	7,293	788	1,028	21	0.26
동구	7,467	772	850	30	0.31
영도구	8,241	679	798	36	0.30
부산진구	13,763	1,499	1,728	58	0.30
동래구	6,144	657	909	14	0.25
남구	7,243	731	1,011	42	0.27
북구	16,267	1,408	1,685	69	0.29
해운대구	14,311	1,561	1,751	49	0.30
사하구	14,688	1,210	1,548	50	0.27
금정구	8,562	855	1,117	27	0.27
강서구	2,481	231	421	16	0.22
연제구	6,990	723	881	24	0.28
수영구	4,907	558	737	27	0.27
사상구	11,144	991	1,261	64	0.29
기장군	4,085	430	455	21	0.33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중구가 0.35%로 가장 높았고, 달성군이 0.18%로 가장 낮았다.

〈표 13-2-3〉 대구광역시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계	99,473	9,983	12,066	348	0.29
중구	4,040	580	552	10	0.35
동구	15,278	1,477	1,858	65	0.28
서구	9,618	1,147	1,201	34	0.33
남구	9,453	1,218	1,282	43	0.33
북구	14,390	1,202	1,427	42	0.29
수성구	16,201	1,751	1,946	42	0.30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달서구	23,752	1,996	2,493	88	0.28
달성군	6,741	612	1,307	24	0.1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중구가 0.42%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0.23%로 가장 낮았다.

〈표 13-2-4〉 인천광역시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계	70,860	8,481	9,398	371	0.32
중구	3,382	686	563	14	0.42
동구	2,558	201	339	13	0.23
남구	9,727	1,143	1,448	54	0.28
연수구	8,268	806	942	30	0.29
남동구	13,405	1,640	1,813	71	0.32
부평구	16,769	1,772	1,957	87	0.32
계양구	5,222	651	665	30	0.34
서구	7,819	1,194	1,188	33	0.35
강화군	3,173	338	418	38	0.32
옹진군	537	50	65	1	0.26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광산구가 0.30%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0.25%로 가장 낮았다.

〈표 13-2-5〉 광주광역시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계	60,684	6,098	7,652	199	0.28
동구	6,894	916	1,195	23	0.27
서구	11,951	1,316	1,570	36	0.29
남구	9,307	1,080	1,313	49	0.29
북구	20,591	1,706	2,362	57	0.25
광산구	11,941	1,080	1,212	34	0.3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중구와 유성구가 0.31%로 가장 높았고, 서구와 대덕구가 0.25%로 가장 낮았다.

〈표 13-2-6〉 대전광역시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계	44,992	4,533	5,631	152	0.28
동구	12,311	1,342	1,633	42	0.28
중구	9,383	1,074	1,201	45	0.31
서구	11,026	899	1,255	29	0.25
유성구	4,469	475	519	11	0.31
대덕구	7,803	743	1,023	25	0.25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울주군이 0.33%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0.17%로 가장 낮았다.

〈표 13-2-7〉 울산광역시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계	15,804	1,736	2,328	54	0.26
중구	4,342	450	693	12	0.23
남구	4,157	500	558	16	0.31
동구	2,032	177	257	10	0.25
북구	1,925	183	386	4	0.17
울주군	3,348	426	434	12	0.3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김포시가 0.36%로 가장 높았고, 의정부시, 화성시, 광주시가 0.23%로 가장 낮았다.

〈표 13-2-8〉 경기도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계	192,170	20,288	25,746	780	0.28
수원시	14,282	1,494	1,926	50	0.27
성남시	15,467	1,738	2,149	66	0.28
고양시	13,996	1,480	1,690	42	0.30
부천시	13,225	1,281	1,606	45	0.28
안양시	7,677	864	1,103	21	0.27
안산시	14,890	1,601	1,889	71	0.30
용인시	5,564	494	747	27	0.24
의정부시	10,609	933	1,451	40	0.23
남양주시	8,194	961	1,353	43	0.26
평택시	8,771	910	1,179	28	0.27
광명시	4,712	483	612	20	0.28
시흥시	5,766	683	843	30	0.29
군포시	3,974	440	509	14	0.30
화성시	4,889	435	665	12	0.23
파주시	7,319	912	914	36	0.34
이천시	3,900	411	448	14	0.31
구리시	3,527	325	391	9	0.28
김포시	4,745	712	680	17	0.36
포천시	4,970	519	664	35	0.29
광주시	4,165	463	698	10	0.23
안성시	4,907	451	608	16	0.26
하남시	2,109	244	347	9	0.25
의왕시	1,353	142	202	5	0.25
양주시	4,298	460	514	21	0.31
오산시	2,767	344	442	12	0.28
여주군	3,221	316	485	13	0.24
양평군	2,938	238	310	17	0.28
동두천시	3,519	426	566	22	0.28
과천시	809	85	98	3	0.30
가평군	3,550	305	465	17	0.24
연천군	2,057	138	193	15	0.2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속초시와 철원군이 0.39%로 가장 높았고, 인제군이 0.20%로 가장 낮았다.

〈표 13-2-9〉 강원도의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계	58,820	6,196	7,657	312	0.29
춘천시	11,379	1,310	1,539	33	0.29
원주시	9,897	1,123	1,535	57	0.27
강릉시	7,243	701	900	47	0.29
동해시	3,416	314	421	22	0.28
태백시	1,654	168	214	6	0.27
속초시	4,271	538	470	18	0.39
삼척시	3,768	395	473	22	0.30
홍천군	2,224	188	263	17	0.28
횡성군	1,864	226	253	13	0.32
영월군	1,404	100	142	4	0.25
평창군	1,481	166	231	5	0.25
정선군	1,425	152	162	14	0.35
철원군	1,986	234	214	19	0.39
화천군	1,207	76	134	6	0.22
양구군	1,225	109	136	6	0.29
인제군	1,368	120	214	4	0.20
고성군	1,358	135	199	7	0.25
양양군	1,650	141	157	12	0.3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충청북도 12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진천군이 0.34%로 가장 높았고, 음성군이 0.17%로 가장 낮았다.

〈표 13-2-10〉 충청북도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계	49,669	4,581	6,117	201	0.27
청주시	15,766	1,364	1,766	41	0.26
충주시	7,186	703	881	33	0.28
제천시	6,292	684	768	30	0.31
청원군	3,420	362	446	10	0.28
보은군	1,498	114	146	12	0.30
옥천군	2,294	156	299	11	0.21
영동군	2,205	232	270	14	0.31
증평군	1,194	63	135	13	0.25
진천군	1,823	250	263	15	0.34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괴산군	2,030	178	220	11	0.29
음성군	4,332	331	722	10	0.17
단양군	1,629	144	201	1	0.2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충청남도 15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태안군이 0.35%로 가장 높았고, 계룡시가 0.24%로 가장 낮았다.

〈표 13-2-11〉 충청남도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계	58,363	5,217	6,486	263	0.28
천안시	10,194	1,163	1,313	40	0.31
공주시	4,539	409	571	17	0.25
보령시	5,422	450	549	39	0.31
아산시	6,519	673	771	22	0.30
서산시	3,976	307	428	15	0.26
논산시	7,307	488	657	16	0.25
계룡시	432	44	67	2	0.24
당진시	2,592	232	288	11	0.28
금산군	2,417	177	250	8	0.25
부여군	3,517	288	384	18	0.27
서천군	2,968	243	382	26	0.26
청양군	970	81	84	5	0.34
홍성군	2,713	230	269	9	0.29
예산군	2,955	244	270	17	0.32
태안군	1,842	188	203	18	0.35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전라북도 14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임실군이 0.34%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이 0.17%로 가장 낮았다.

〈표 13-2-12〉 전라북도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계	95,656	7,038	9,613	372	0.26
전주시	24,259	1,947	2,612	65	0.26
군산시	13,050	1,058	1,555	48	0.24
익산시	15,968	1,089	1,387	68	0.28
정읍시	8,755	699	935	34	0.26
남원시	6,478	493	533	21	0.31
김제시	8,627	520	719	38	0.27
완주군	4,630	314	469	26	0.26
진안군	1,461	79	114	3	0.24
무주군	1,295	79	183	5	0.17
장수군	1,371	90	152	6	0.22
임실군	1,929	192	204	16	0.34
순창군	1,517	82	126	5	0.24
고창군	3,060	171	287	11	0.22
부안군	3,256	225	337	26	0.2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전라남도 22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장흥군이 0.39%로 가장 높았고, 고흥군이 0.22%로 가장 낮았다.

〈표 13-2-13〉 전라남도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계	87,670	6,647	8,886	367	0.27
목포시	12,017	1,021	1,112	43	0.31
여수시	11,109	1,045	1,420	47	0.26
순천시	8,419	514	718	20	0.25
나주시	5,699	457	670	24	0.25
광양시	3,144	367	536	18	0.25
담양군	2,308	154	204	5	0.26
곡성군	1,889	129	172	8	0.27
구례군	1,600	92	138	9	0.26
고흥군	4,041	244	419	16	0.22
보성군	2,690	246	305	15	0.29
화순군	3,558	243	341	11	0.25
장흥군	2,663	271	258	29	0.39
강진군	2,392	148	200	5	0.25
해남군	4,221	331	509	24	0.25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영암군	2,290	140	169	5	0.28
무안군	2,960	196	276	5	0.24
함평군	2,329	166	186	9	0.31
영광군	3,767	245	378	14	0.24
장성군	3,006	179	299	16	0.24
완도군	2,918	182	221	13	0.30
진도군	2,393	116	186	8	0.23
신안군	2,257	161	169	23	0.3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상북도 23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울릉군이 0.39%로 가장 높았고, 봉화군이 0.23%로 가장 낮았다.

〈표 13-2-14〉 경상북도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계	105,193	8,338	10,346	435	0.28
포항시	17,277	1,351	2,028	65	0.24
경주시	9,135	782	1,013	33	0.27
김천시	5,981	467	529	21	0.30
안동시	8,369	564	659	34	0.30
구미시	7,806	858	890	31	0.33
영주시	6,116	411	558	19	0.26
영천시	6,243	481	557	33	0.31
상주시	4,171	438	447	32	0.35
문경시	3,786	298	315	17	0.33
경산시	8,396	681	870	17	0.26
군위군	1,160	77	101	4	0.27
의성군	3,018	241	233	23	0.37
청송군	1,674	137	143	12	0.35
영양군	1,362	119	156	5	0.27
영덕군	2,675	161	224	9	0.26
청도군	1,998	155	167	19	0.36
고령군	1,800	119	201	12	0.24
성주군	1,898	150	195	12	0.29
칠곡군	4,190	302	340	5	0.29
예천군	2,531	186	213	7	0.30
봉화군	2,023	132	206	6	0.23
울진군	3,336	193	267	15	0.27
울릉군	248	35	34	4	0.3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상남도 18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밀양시가 0.35%로 가장 높았고, 산청군이 0.19%로 가장 낮았다.

〈표 13-2-15〉 경상남도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계	93,977	9,326	12,076	390	0.27
창원시	20,261	2,524	3,141	76	0.28
진주시	11,361	1,066	1,314	31	0.28
통영시	5,274	526	628	25	0.29
사천시	4,976	449	505	36	0.32
김해시	12,454	1,189	1,618	34	0.25
밀양시	4,806	496	481	21	0.35
거제시	3,708	389	457	9	0.29
양산시	7,071	845	1,166	43	0.27
의령군	1,586	91	129	5	0.25
함안군	2,696	185	259	15	0.27
창녕군	2,686	191	297	8	0.23
고성군	2,403	244	428	26	0.24
남해군	2,071	162	204	8	0.28
하동군	2,752	204	276	9	0.26
산청군	2,242	146	282	5	0.19
함양군	2,070	122	189	8	0.24
거창군	2,886	326	457	22	0.27
합천군	2,674	171	245	9	0.25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모두 0.28로 동일하였다.

〈표 13-2-16〉 제주특별자치도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총 수급자 수(A)	신규 수급자 수(B)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C)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신규수급자 수(D)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B/A) \times 0.2\} + \{(B/C) \times 0.3\} + \{(D/B) \times 0.5\}$
계	21,986	2,504	3,181	89	0.28
제주시	15,101	1,765	2,239	61	0.28
서귀포시	6,885	739	942	28	0.2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마포구가 0.51%로 가장 높았고, 서대문구, 구로구, 서초구가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서대문구와 서초구는 이행급여특례가구, 기존 이행특례가구, 신규 이행특례가구가 전혀 없었고, 구로구는 신규 이행특례가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17〉 서울특별시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계	33,623	182	234	193	0.42
종로구	418	2	3	2	0.34
중구	534	4	4	3	0.38
용산구	579	7	9	8	0.45
성동구	948	8	12	10	0.42
광진구	868	4	5	5	0.50
동대문구	1,356	16	17	15	0.45
종랑구	1,519	2	3	2	0.33
성북구	1,889	1	2	2	0.50
강북구	1,827	4	4	4	0.50
도봉구	854	1	4	4	0.50
노원구	4,104	18	18	17	0.47
은평구	1,648	15	18	12	0.34
서대문구	690	0	0	0	0.00
마포구	1,062	11	13	13	0.51
양천구	1,235	11	18	16	0.45
강서구	3,229	17	20	16	0.40
구로구	1,004	1	1	0	0.00
금천구	1,335	8	11	6	0.28
영등포구	1,319	4	5	4	0.40
동작구	932	8	12	11	0.46
관악구	2,160	22	30	24	0.41
서초구	471	0	0	0	0.00
강남구	1,576	1	1	1	0.50
송파구	1,014	11	17	12	0.36
강동구	1,052	6	7	6	0.4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강서구가 0.52%로 가장 높았고, 기장군이 0.39%로 가장 낮았다.

〈표 13-2-18〉 부산광역시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계	22,174	534	669	611	0.47
중구	347	10	12	11	0.47
서구	884	41	55	51	0.49
동구	1,202	26	37	33	0.46
영도구	1,463	17	18	15	0.42
부산진구	2,424	60	67	64	0.49
동래구	914	24	33	26	0.41
남구	968	23	30	27	0.46
북구	2,729	52	67	62	0.47
해운대구	2,457	48	60	54	0.46
사하구	2,634	58	75	74	0.50
금정구	1,255	35	44	37	0.43
강서구	290	11	14	14	0.52
연제구	1,236	28	35	30	0.44
수영구	775	33	41	38	0.48
사상구	1,996	56	68	65	0.49
기장군	600	12	13	10	0.3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북구와 수성구가 0.48%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0.34%로 가장 낮았다.

〈표 13-2-19〉 대구광역시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계	18,794	232	305	264	0.44
중구	579	14	20	13	0.34
동구	2,623	24	37	26	0.36
서구	1,675	16	24	22	0.46
남구	1,685	34	41	38	0.47
북구	2,834	53	70	66	0.48
수성구	3,319	44	49	46	0.48
달서구	5,113	28	41	32	0.39
달성군	966	19	23	21	0.4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중구가

0.51%로 가장 높았고, 강화군과 옹진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강화군과 옹진군은 이행급여특례가구, 기존 이행특례가구, 신규 이행특례가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20〉 인천광역시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계	11,767	269	367	329	0.46
중구	540	30	35	34	0.51
동구	463	7	9	8	0.45
남구	1,457	47	77	70	0.47
연수구	1,499	28	36	30	0.43
남동구	2,301	58	76	68	0.46
부평구	2,858	38	55	51	0.47
계양구	840	23	29	25	0.44
서구	1,294	38	47	43	0.47
강화군	467	0	3	0	0.00
옹진군	48	0	0	0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남구와 북구가 0.44%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0.37%로 가장 낮았다.

〈표 13-2-21〉 광주광역시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계	12,362	275	354	294	0.43
동구	1,162	8	11	8	0.37
서구	2,614	75	113	91	0.42
남구	1,966	29	40	35	0.44
북구	4,417	121	135	116	0.44
광산구	2,203	42	55	44	0.4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중구가 0.48%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0.33%로 가장 낮았다.

〈표 13-2-22〉 대전광역시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계	7,346	165	204	167	0.42
동구	1,778	34	42	33	0.40
중구	1,720	50	59	55	0.48
서구	1,882	23	29	19	0.33
유성구	716	37	46	34	0.40
대덕구	1,250	21	28	26	0.4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북구와 울주군이 0.50%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0.23%로 가장 낮았다.

〈표 13-2-23〉 울산광역시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계	2,168	22	32	21	0.33
중구	678	6	9	4	0.23
남구	611	5	8	6	0.38
동구	277	8	9	5	0.29
북구	295	2	3	3	0.50
울주군	307	1	3	3	0.5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시흥시, 하남시, 의왕시, 가평군, 연천군이 0.51%로 가장 높았고, 동두천시와 과천시 0.17%로 가장 낮았다.

〈표 13-2-24〉 경기도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계	27,642	555	697	595	0.44
수원시	2,110	46	50	40	0.41
성남시	2,410	70	88	66	0.39
고양시	2,207	23	30	25	0.42
부천시	1,866	71	91	76	0.44
안양시	1,191	18	22	19	0.44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안산시	2,379	55	65	58	0.46
용인시	687	11	15	14	0.47
의정부시	1,548	39	49	45	0.47
남양주시	1,100	23	28	25	0.46
평택시	1,031	19	24	19	0.41
광명시	760	29	39	34	0.45
시흥시	1,011	15	17	17	0.51
군포시	753	28	31	25	0.42
화성시	536	8	16	13	0.41
파주시	973	20	33	30	0.46
이천시	589	3	4	4	0.50
구리시	549	4	4	4	0.50
김포시	730	7	9	8	0.45
포천시	636	11	16	14	0.45
광주시	622	11	12	11	0.47
안성시	688	7	9	8	0.45
하남시	298	7	7	7	0.51
의왕시	129	2	3	3	0.51
양주시	573	10	13	12	0.47
오산시	404	4	5	5	0.50
여주군	524	4	4	4	0.50
양평군	320	1	1	1	0.50
동두천시	416	2	3	1	0.17
파천시	118	1	3	1	0.17
가평군	248	3	3	3	0.51
연천군	236	3	3	3	0.5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이 0.51%로 가장 높았고,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양양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인제군, 양양군은 이행급여특례가구, 기존 이행특례가구, 신규 이행특례가구가 전혀 없었고 화천군은 신규 이행특례가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25〉 강원도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계	8,887	170	224	192	0.44
춘천시	2,229	59	84	65	0.40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원주시	1,501	55	65	63	0.50
강릉시	1,065	20	24	20	0.43
동해시	542	12	14	13	0.48
태백시	220	3	3	3	0.51
속초시	564	11	13	13	0.51
삼척시	658	3	7	3	0.22
홍천군	184	3	8	8	0.51
횡성군	268	0	0	0	0.00
영월군	144	0	0	0	0.00
평창군	213	1	1	1	0.50
정선군	131	0	0	0	0.00
철원군	259	1	1	1	0.50
화천군	169	1	2	0	0.00
양구군	187	1	1	1	0.50
인제군	179	0	0	0	0.00
고성군	142	0	1	1	0.50
양양군	232	0	0	0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충청북도 12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영동군이 0.52%로 가장 높았고, 단양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단양군은 이행급여특례 가구, 기존 이행특례가구, 신규 이행특례가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26〉 충청북도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계	6,721	84	108	91	0.43
청주시	2,385	38	43	38	0.45
충주시	1,186	6	9	9	0.50
제천시	974	3	4	4	0.50
청원군	401	8	12	6	0.26
보은군	119	2	2	2	0.51
옥천군	233	1	1	1	0.50
영동군	240	11	15	15	0.52
증평군	189	5	5	2	0.21
진천군	217	0	2	1	0.25
괴산군	224	7	10	8	0.42
음성군	312	3	5	5	0.50
단양군	241	0	0	0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충청남도 15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보령시, 금산군, 청양군, 홍성군이 0.50%로 가장 높았고, 태안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태안군은 이행급여특례가구, 기존 이행특례가구, 신규 이행특례가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27〉 충청남도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계	7,625	105	146	114	0.40
천안시	1,394	17	21	20	0.48
공주시	558	7	12	7	0.30
보령시	737	2	2	2	0.50
아산시	958	12	20	18	0.46
서산시	673	15	15	14	0.48
논산시	861	13	19	15	0.40
계룡시	55	1	3	2	0.34
당진시	336	8	16	12	0.39
금산군	340	1	1	1	0.50
부여군	343	3	4	2	0.25
서천군	351	19	23	15	0.35
청양군	126	0	1	1	0.50
홍성군	339	2	2	2	0.50
예산군	378	5	7	3	0.22
태안군	176	0	0	0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전라북도 14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무주군과 임실군이 0.51%로 가장 높았고, 장수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장수군은 이행급여특례가구, 기존 이행특례가구, 신규 이행특례가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28〉 전라북도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계	16,220	400	507	453	0.46
전주시	4,836	150	174	167	0.50
군산시	2,161	63	80	71	0.46
익산시	2,436	42	66	58	0.45
정읍시	1,442	30	46	41	0.46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남원시	1,146	42	51	49	0.50
김제시	1,585	29	38	30	0.40
완주군	651	20	22	15	0.36
진안군	183	8	10	6	0.32
무주군	216	3	3	3	0.51
장수군	207	0	0	0	0.00
임실군	313	4	5	5	0.51
순창군	193	3	5	2	0.21
고창군	398	4	5	4	0.41
부안군	453	2	2	2	0.5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전라남도 22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보성군과 무안군이 0.51%로 가장 높았고,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함평군, 신안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구례군, 함평군, 신안군은 이행급여특례가구, 기존 이행특례가구, 신규 이행특례가구가 전혀 없었고, 곡성군은 이행급여특례가구와 신규 이행특례가구가 전혀 없었으며, 담양군은 신규 이행특례가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29〉 전라남도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계	13,032	168	220	175	0.40
목포시	2,139	12	19	14	0.37
여수시	1,823	9	11	11	0.50
순천시	1,343	21	29	28	0.49
나주시	905	19	24	21	0.45
광양시	505	36	44	36	0.44
담양군	294	1	1	0	0.00
곡성군	278	0	4	0	0.00
구례군	278	0	4	0	0.00
고흥군	478	2	2	2	0.50
보성군	325	6	7	7	0.51
화순군	529	4	5	4	0.40
장흥군	340	2	2	1	0.25
강진군	371	18	27	15	0.30
해남군	539	9	9	8	0.45
영암군	313	13	14	13	0.49
무안군	442	5	5	5	0.51
함평군	260	0	0	0	0.00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영광군	462	4	4	4	0.50
장성군	408	4	5	4	0.40
완도군	352	2	2	1	0.25
진도군	399	1	2	1	0.25
신안군	249	0	0	0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상북도 23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의성군이 0.53%로 가장 높았고, 청송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청송군, 봉화군, 울릉군은 이행급여특례가구, 기존 이행특례가구, 신규 이행특례가구 가 전혀 없었고, 예천군은 신규 이행특례가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30〉 경상북도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계	16,122	230	291	246	0.43
포항시	2,917	26	29	26	0.45
경주시	1,146	22	28	22	0.40
김천시	908	14	16	16	0.51
안동시	1,207	11	12	11	0.46
구미시	1,355	48	62	57	0.48
영주시	857	7	9	9	0.50
영천시	1,067	17	23	16	0.36
상주시	554	1	1	1	0.50
문경시	562	4	6	6	0.50
경산시	1,265	17	30	16	0.27
군위군	188	0	1	1	0.50
의성군	276	17	21	21	0.53
청송군	310	0	0	0	0.00
영양군	220	8	8	8	0.52
영덕군	349	9	13	13	0.51
청도군	251	6	6	4	0.35
고령군	269	15	17	13	0.41
성주군	205	3	3	2	0.34
칠곡군	865	3	3	3	0.50
예천군	412	1	1	0	0.00
봉화군	402	0	0	0	0.00
울진군	513	1	2	1	0.25
울릉군	24	0	0	0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상남도 18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김해시와 거창군이 0.51%로 가장 높았고, 통영시, 사천시, 창녕군, 고성군, 함양군, 함천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통영시, 사천시, 창녕군, 고성군, 함양군, 함천군은 이행급여특례가구, 기존 이행특례가구, 신규 이행특례가구가 전혀 없었다.

〈표 13-2-31〉 경상남도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계	12,718	94	128	100	0.39
창원시	2,652	21	27	19	0.36
진주시	1,663	18	31	18	0.30
통영시	729	0	0	0	0.00
사천시	528	0	0	0	0.00
김해시	1,650	17	24	24	0.51
밀양시	660	6	6	6	0.50
거제시	434	9	11	9	0.42
양산시	1,119	7	7	6	0.43
의령군	197	2	2	1	0.26
함안군	361	3	7	4	0.29
창녕군	302	0	0	0	0.00
고성군	289	0	0	0	0.00
남해군	246	0	1	1	0.50
하동군	489	2	2	2	0.50
산청군	281	2	3	3	0.50
함양군	318	0	0	0	0.00
거창군	479	7	7	7	0.51
함천군	321	0	0	0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서귀포시가 0.39%로 제주시 0.30%보다 높았다.

〈표 13-2-32〉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

	근로능력 가구수(A)	이행급여특례 가구수(B)	기존 이행특례가구 수(C)	신규 이행특례가구 수(D)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B/A) \times 0.5\} + \{(D/C) \times 0.5\}$
계	3,610	93	125	80	0.33
제주시	2,657	60	82	48	0.30
서귀포시	953	33	43	32	0.3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마포구가 0.56%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가 0.38%로 가장 낮았다.

〈표 13-2-33〉 서울특별시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계	120,704	4,851	5,010	0.51
종로구	2,323	120	120	0.53
중구	2,647	147	162	0.48
용산구	3,319	92	129	0.38
성동구	3,472	119	119	0.52
광진구	3,240	80	81	0.51
동대문구	5,844	136	136	0.51
종랑구	6,135	278	278	0.52
성북구	5,832	269	269	0.52
강북구	6,263	180	180	0.51
도봉구	3,252	101	101	0.52
노원구	11,814	221	221	0.51
은평구	6,096	282	286	0.52
서대문구	3,497	95	95	0.51
마포구	3,852	444	444	0.56
양천구	4,270	163	163	0.52
강서구	10,263	647	676	0.51
구로구	3,785	245	313	0.43
금천구	4,683	234	234	0.52
영등포구	5,340	202	204	0.51
동작구	3,614	177	177	0.52
관악구	6,580	210	210	0.52
서초구	1,851	53	56	0.49
강남구	5,122	95	95	0.51
송파구	3,640	128	128	0.52
강동구	3,970	133	133	0.5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동구와 금정구가 0.52%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0.40%로 가장 낮았다.

〈표 13-2-34〉 부산광역시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계	82,491	1,932	1,943	0.51
중구	1,641	26	33	0.40
서구	3,887	108	108	0.51
동구	4,762	223	223	0.52
영도구	5,388	73	73	0.51
부산진구	8,873	155	155	0.51
동래구	3,678	86	86	0.51
남구	4,531	93	93	0.51
북구	9,727	155	155	0.51
해운대구	8,515	163	164	0.51
사하구	8,759	246	247	0.51
금정구	4,938	243	243	0.52
강서구	1,288	32	32	0.51
연제구	4,076	55	56	0.50
수영구	3,044	83	83	0.51
사상구	6,912	165	166	0.51
기장군	2,472	26	26	0.5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달성군이 0.54%로 가장 높았고, 서구와 수성구가 0.50%로 가장 낮았다.

〈표 13-2-35〉 대구광역시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계	54,784	2,317	2,321	0.52
중구	2,747	128	129	0.52
동구	8,604	333	333	0.52
서구	5,618	130	132	0.50
남구	5,490	320	320	0.53
북구	7,874	488	488	0.53
수성구	8,601	120	121	0.50
달서구	13,044	552	552	0.52
달성군	2,806	246	246	0.5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중구가 0.55%로 가장 높았고, 연수구와 옹진군이 0.51%로 가장 낮았다.

〈표 13-2-36〉 인천광역시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계	40,840	1,855	1,855	0.52
중구	2,143	208	208	0.55
동구	1,697	104	104	0.53
남구	5,803	282	282	0.52
연수구	4,447	114	114	0.51
남동구	7,725	503	503	0.53
부평구	9,800	306	306	0.52
계양구	3,070	128	128	0.52
서구	4,067	124	124	0.52
강화군	1,817	78	78	0.52
옹진군	271	8	8	0.5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서구와 광산구가 0.54%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0.51%로 가장 낮았다.

〈표 13-2-37〉 광주광역시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계	31,148	1,589	1,591	0.53
동구	3,288	139	141	0.51
서구	6,131	441	441	0.54
남구	4,380	215	215	0.52
북구	11,226	365	365	0.52
광산구	6,123	429	429	0.5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대덕구가 0.54%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0.51%로 가장 낮았다.

〈표 13-2-38〉 대전광역시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계	24,471	1,144	1,144	0.52
동구	7,115	339	339	0.52
중구	5,328	139	139	0.51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서구	5,742	184	184	0.52
유성구	2,170	148	148	0.53
대덕구	4,116	334	334	0.5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울주군이 0.53%로 가장 높았고, 그 외의 지자체는 0.52%를 보였다.

〈표 13-2-39〉 울산광역시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계	10,090	490	490	0.52
중구	2,895	134	134	0.52
남구	2,786	127	127	0.52
동구	1,336	53	53	0.52
북구	1,069	46	46	0.52
울주군	2,004	130	130	0.5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가평군이 0.56%로 가장 높았고, 오산시가 0.49%로 가장 낮았다.

〈표 13-2-40〉 경기도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계	117,096	4,770	4,803	0.52
수원시	8,964	263	263	0.51
성남시	9,772	660	660	0.53
고양시	8,524	303	316	0.50
부천시	8,263	166	166	0.51
안양시	4,688	182	182	0.52
안산시	8,986	197	199	0.51
용인시	3,406	83	83	0.51
의정부시	6,535	164	164	0.51
남양주시	4,971	237	237	0.52
평택시	5,284	247	248	0.52
광명시	2,970	144	144	0.52
시흥시	3,362	138	138	0.52
군포시	2,569	95	95	0.52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화성시	2,839	110	110	0.52
파주시	4,575	100	101	0.51
이천시	2,140	85	85	0.52
구리시	2,268	204	204	0.54
김포시	2,877	157	164	0.51
포천시	3,015	233	233	0.54
광주시	2,332	110	110	0.52
안성시	2,957	131	131	0.52
하남시	1,301	40	40	0.52
의왕시	934	36	36	0.52
양주시	2,600	93	93	0.52
오산시	1,648	64	68	0.49
여주군	1,954	84	88	0.50
양평군	1,875	103	103	0.53
동두천시	2,158	46	46	0.51
과천시	472	26	26	0.53
가평군	1,491	177	177	0.56
연천군	1,366	92	93	0.5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횡성군이 0.56%로 가장 높았고, 강릉시가 0.41%로 가장 낮았다.

〈표 13-2-41〉 강원도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계	35,609	1,509	1,530	0.52
춘천시	6,481	337	337	0.53
원주시	5,620	226	227	0.52
강릉시	4,337	59	73	0.41
동해시	2,180	12	12	0.50
태백시	1,130	18	19	0.48
속초시	2,713	213	213	0.54
삼척시	2,357	54	54	0.51
홍천군	1,381	41	41	0.51
횡성군	1,167	149	149	0.56
영월군	979	97	101	0.53
평창군	924	40	40	0.52
정선군	940	26	26	0.51
철원군	1,266	92	92	0.54
화천군	737	32	32	0.52
양구군	749	43	43	0.53
인제군	777	4	4	0.50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고성군	873	10	10	0.51
양양군	998	56	57	0.5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충청북도 12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진천군이 0.56%로 가장 높았고, 청주시와 단양군이 0.51%로 가장 낮았다.

〈표 13-2-42〉 충청북도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계	28,553	1,524	1,528	0.53
청주시	9,059	311	314	0.51
충주시	4,298	190	190	0.52
제천시	3,833	189	189	0.52
청원군	1,953	92	92	0.52
보은군	1,010	88	88	0.54
옥천군	1,174	102	102	0.54
영동군	1,494	107	107	0.54
증평군	755	62	63	0.53
진천군	1,148	141	141	0.56
괴산군	1,277	95	95	0.54
음성군	1,497	123	123	0.54
단양군	1,055	24	24	0.5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충청남도 15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태안군이 0.56%로 가장 높았고, 당진시가 0.48%로 가장 낮았다.

〈표 13-2-43〉 충청남도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계	34,513	1,346	1,351	0.52
천안시	5,966	277	277	0.52
공주시	2,626	100	100	0.52
보령시	3,107	108	108	0.52
아산시	3,893	65	65	0.51
서산시	2,381	16	16	0.50
논산시	3,937	87	87	0.51
계룡시	232	15	15	0.53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당진시	1,566	61	66	0.48
금산군	1,521	108	108	0.54
부여군	2,135	89	89	0.52
서천군	1,860	96	96	0.53
청양군	654	63	63	0.55
홍성군	1,643	65	65	0.52
예산군	1,804	64	64	0.52
태안군	1,188	132	132	0.56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전라북도 14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김제시와 순창군이 0.55%로 가장 높았고, 장수군이 0.50%로 가장 낮았다.

〈표 13-2-44〉 전라북도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계	53,778	2,342	2,345	0.52
전주시	12,879	231	231	0.51
군산시	7,468	284	285	0.52
익산시	8,642	307	307	0.52
정읍시	4,934	269	269	0.53
남원시	3,575	187	187	0.53
김제시	5,238	562	562	0.55
완주군	2,433	111	112	0.52
진안군	920	20	20	0.51
무주군	800	20	20	0.51
장수군	803	28	29	0.50
임실군	1,109	43	43	0.52
순창군	902	85	85	0.55
고창군	1,935	84	84	0.52
부안군	2,140	111	111	0.5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전라남도 22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강진군이 0.57%로 가장 높았고, 화순군이 0.43%로 가장 낮았다.

〈표 13-2-45〉 전라남도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계	51,926	2,122	2,164	0.51
목포시	5,988	77	77	0.51
여수시	6,692	442	443	0.53
순천시	4,682	173	180	0.50
나주시	3,312	159	163	0.51
광양시	1,880	56	56	0.51
담양군	1,392	7	7	0.50
곡성군	1,133	36	36	0.52
구례군	1,019	64	66	0.52
고흥군	2,855	68	68	0.51
보성군	1,751	237	253	0.54
화순군	2,041	43	52	0.43
장흥군	1,693	93	96	0.51
강진군	1,433	191	191	0.57
해남군	2,552	51	51	0.51
영암군	1,402	32	32	0.51
무안군	1,767	13	13	0.50
함평군	1,392	20	20	0.51
영광군	2,252	87	87	0.52
장성군	1,667	120	120	0.54
완도군	1,950	83	83	0.52
진도군	1,556	26	26	0.51
신안군	1,517	44	44	0.5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상북도 23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의성군이 0.66%로 가장 높았고, 예천군이 0.46%로 가장 낮았다.

〈표 13-2-46〉 경상북도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계	63,987	3,532	3,594	0.52
포항시	10,779	704	704	0.53
경주시	5,832	205	205	0.52
김천시	3,545	128	128	0.52
안동시	4,522	171	171	0.52
구미시	4,415	459	459	0.55
영주시	3,590	76	76	0.51
영천시	3,655	88	88	0.51
상주시	2,584	78	78	0.52
문경시	2,359	202	202	0.54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경산시	4,709	263	263	0.53
군위군	763	29	30	0.50
의성군	2,060	739	799	0.66
청송군	1,065	34	34	0.52
영양군	837	50	50	0.53
영덕군	1,831	39	39	0.51
청도군	1,423	71	71	0.52
고령군	1,001	20	20	0.51
성주군	1,245	41	41	0.52
칠곡군	2,505	22	22	0.50
예천군	1,629	11	12	0.46
봉화군	1,284	87	87	0.53
울진군	2,175	7	7	0.50
울릉군	179	8	8	0.5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상남도 18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거제시와 고성군이 0.55%로 가장 높았고, 산청군이 0.22%로 가장 낮았다.

〈표 13-2-47〉 경상남도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 \times 0.5) + \{(B/C) \times 0.5\}$
계	58,408	2,678	2,779	0.51
창원시	12,946	526	526	0.52
진주시	6,711	280	280	0.52
통영시	3,295	130	130	0.52
사천시	3,219	54	54	0.51
김해시	7,437	460	460	0.53
밀양시	3,134	262	262	0.54
거제시	2,228	230	230	0.55
양산시	4,167	121	121	0.51
의령군	965	19	20	0.49
함안군	1,772	55	55	0.52
창녕군	1,878	76	76	0.52
고성군	1,465	132	132	0.55
남해군	1,364	84	84	0.53
하동군	1,747	47	47	0.51
산청군	1,329	48	148	0.22
함양군	1,228	28	28	0.51
거창군	1,808	83	83	0.52
합천군	1,715	43	43	0.5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서귀포시가 0.52%로 제주시 0.50%보다 다소 높았다.

〈표 13-2-48〉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

	수급자 가구수(A)	신규보호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 상정 가구수(C)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C/A×0.5)}+{(B/C)×0.5}
계	11,609	523	543	0.51
제주시	7,830	369	389	0.50
서귀포시	3,779	154	154	0.5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라. 수급자 관리실적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25개 지자체 중에서 용산구, 동대문구, 마포구, 강남구가 0.13%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가 0.10%로 가장 낮았다.

〈표 13-2-49〉 서울특별시의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건, 명,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계	75,729	669,779	78,693	0.11
종로구	1,291	11,596	1,055	0.11
중구	1,314	10,472	1,245	0.12
용산구	1,700	13,620	1,722	0.13
성동구	2,164	17,729	1,948	0.12
광진구	2,542	20,813	2,075	0.12
동대문구	3,182	25,980	3,789	0.13
종량구	4,084	38,255	3,896	0.11
성북구	4,064	31,563	3,049	0.12
강북구	4,118	37,278	4,676	0.11
도봉구	2,231	19,257	2,151	0.11
노원구	6,305	55,410	7,652	0.12
은평구	4,658	42,718	4,952	0.11
서대문구	2,232	17,975	2,061	0.12
마포구	2,909	23,303	2,938	0.13
양천구	3,690	29,498	3,653	0.12
강서구	5,505	58,650	7,020	0.10
구로구	2,550	21,368	2,810	0.12
금천구	2,100	17,837	2,411	0.12
영등포구	3,187	28,849	2,933	0.11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동작구	2,657	24,774	2,698	0.11
관악구	3,774	38,007	3,704	0.10
서초구	1,353	12,874	1,189	0.10
강남구	3,234	25,505	3,585	0.13
송파구	2,403	20,747	2,643	0.12
강동구	2,482	25,701	2,838	0.1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부산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16개 지자체 중에서 동구가 0.13%로 가장 높았고, 부산진구가 0.09%로 가장 낮았다.

〈표 13-2-50〉 부산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건, 명,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계	57,403	525,384	59,634	0.11
중구	1,231	11,296	1,335	0.11
서구	3,546	36,902	3,515	0.10
동구	3,482	27,836	3,734	0.13
영도구	3,294	33,730	3,422	0.10
부산진구	6,237	64,794	5,956	0.09
동래구	2,724	24,776	2,579	0.11
남구	3,577	34,049	3,942	0.11
북구	4,800	40,901	5,220	0.12
해운대구	5,612	49,830	5,414	0.11
사하구	6,674	55,350	7,219	0.12
금정구	3,705	31,646	4,317	0.12
강서구	1,135	8,740	955	0.12
연제구	3,251	26,910	3,018	0.12
수영구	2,385	21,080	2,188	0.11
사상구	3,678	39,814	4,997	0.10
기장군	2,072	17,730	1,823	0.1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대구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8개 지자체 중에서 중구와 달성군이 0.12%로 가장 높았고, 동구, 달서구가 0.09%로 가장 낮았다.

〈표 13-2-51〉 대구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건, 명,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계	37,962	400,007	46,538	0.10
중구	1,431	11,576	1,379	0.12
동구	5,993	68,664	7,528	0.09
서구	3,887	45,341	5,202	0.09
남구	3,196	32,874	3,962	0.10
북구	6,334	59,622	7,288	0.11
수성구	6,303	59,472	6,496	0.11
달서구	8,276	100,293	11,986	0.09
달성군	2,542	22,165	2,697	0.1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인천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10개 지자체 중에서 연수구가 0.13%로 가장 높았고, 남동구가 0.10%로 가장 낮았다.

〈표 13-2-52〉 인천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건, 명,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계	30,795	274,629	31,709	0.11
중구	1,490	13,608	1,521	0.11
동구	1,283	11,043	1,290	0.12
남구	4,777	41,729	5,367	0.12
연수구	2,636	21,328	2,947	0.13
남동구	5,595	55,515	5,763	0.10
부평구	6,499	59,637	6,828	0.11
계양구	2,408	20,911	2,631	0.12
서구	3,897	32,490	3,858	0.12
강화군	1,875	15,739	1,303	0.11
옹진군	335	2,629	201	0.1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광주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5개 지자체 중에서 남구가 0.15%로 가장 높았고, 광산구가 0.10%로 가장 낮았다.

〈표 13-2-53〉 광주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건, 명,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계	23,308	199,442	24,475	0.12
동구	2,981	25,971	2,975	0.11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서구	3,939	33,294	4,730	0.13
남구	4,954	30,340	3,802	0.15
북구	7,357	67,360	8,246	0.11
광산구	4,077	42,477	4,722	0.1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대전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5개 지자체 중에서 서구가 0.12%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가 0.10%로 가장 낮았다.

〈표 13-2-54〉 대전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건, 명,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계	14,690	143,273	18,965	0.11
동구	3,819	36,448	4,940	0.11
중구	3,574	31,781	3,806	0.11
서구	3,164	31,597	4,892	0.12
유성구	1,411	15,804	1,930	0.10
대덕구	2,722	27,643	3,397	0.1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울산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5개 지자체 중에서 4개 지자체가 0.11%이었고, 중구는 0.09%로 가장 낮았다.

〈표 13-2-55〉 울산광역시의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건, 명,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계	7,634	74,108	8,288	0.11
중구	2,086	24,044	2,517	0.09
남구	1,778	16,116	1,642	0.11
동구	980	9,188	1,189	0.11
북구	964	8,490	997	0.11
울주군	1,826	16,270	1,943	0.1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기도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31개 지자체 중에서 안산시, 광주시, 과천시, 연천군이 0.13%로 가장 높았고, 군포시와 가평군이 0.09%로 가장 낮았다.

〈표 13-2-56〉 경기도의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건, 명,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계	99,302	865,854	91,422	0.11
수원시	6,858	62,320	6,605	0.11
성남시	6,798	54,010	6,421	0.12
고양시	6,505	62,501	6,041	0.10
부천시	5,748	54,675	5,510	0.10
안양시	3,531	29,504	3,094	0.12
안산시	6,998	56,216	7,298	0.13
용인시	3,501	30,090	2,973	0.11
의정부시	4,890	45,663	4,995	0.11
남양주시	4,884	42,902	5,206	0.12
평택시	4,274	43,601	4,431	0.10
광명시	2,229	18,535	2,157	0.12
시흥시	2,710	23,387	2,684	0.12
군포시	1,525	18,417	2,051	0.09
화성시	3,305	26,522	2,991	0.12
파주시	4,290	35,450	3,692	0.12
이천시	2,433	20,443	1,925	0.11
구리시	2,018	15,899	1,536	0.12
김포시	2,312	20,071	2,144	0.11
포천시	3,236	25,780	2,639	0.12
광주시	3,002	20,598	1,772	0.13
안성시	3,023	24,546	2,596	0.12
하남시	1,193	9,087	816	0.12
의왕시	879	7,219	754	0.12
양주시	2,652	23,985	1,873	0.10
오산시	1,500	13,209	1,363	0.11
여주군	1,998	19,129	1,870	0.10
양평군	2,280	18,966	1,684	0.11
동두천시	1,515	15,657	1,617	0.10
과천시	502	3,495	326	0.13
가평군	1,330	14,138	1,319	0.09
연천군	1,383	9,839	1,039	0.1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강원도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18개 지자체 중에서 삼척시가 0.14%로 가장 높았고, 동해시가 0.10%로 가장 낮았다.

〈표 13-2-57〉 강원도의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건, 명,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계	38,057	310,796	34,138	0.12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춘천시	6,331	61,575	7,063	0.11
원주시	5,003	41,544	4,948	0.12
강릉시	5,089	38,002	4,455	0.13
동해시	1,826	18,844	1,743	0.10
태백시	1,238	10,410	1,073	0.11
속초시	2,551	22,538	2,587	0.11
삼척시	2,868	19,808	2,229	0.14
홍천군	1,965	13,047	1,269	0.13
횡성군	1,625	12,778	1,234	0.12
영월군	1,405	10,021	945	0.13
평창군	1,206	8,278	755	0.13
정선군	1,174	8,498	804	0.13
철원군	1,270	9,043	960	0.13
화천군	1,004	7,175	747	0.13
양구군	535	4,818	623	0.12
인제군	848	8,062	860	0.11
고성군	1,036	7,763	829	0.13
양양군	1,083	8,592	1,014	0.1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충청북도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12개 지자체 중에서 청원군, 보은군, 단양군이 0.13%로 가장 높았고, 옥천군이 0.09%로 가장 낮았다.

〈표 13-2-58〉 충청북도의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건, 명,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계	29,904	251,956	26,511	0.12
청주시	7,518	64,750	7,300	0.12
충주시	4,466	38,117	3,866	0.11
제천시	3,511	34,886	3,545	0.10
청원군	3,137	22,257	1,998	0.13
보은군	1,268	8,734	922	0.13
옥천군	1,346	14,868	1,507	0.09
영동군	1,756	13,049	1,213	0.12
증평군	668	5,415	657	0.12
진천군	1,326	10,286	1,150	0.12
괴산군	1,704	13,655	1,429	0.12
음성군	1,717	15,669	2,002	0.12
단양군	1,487	10,270	922	0.1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충청남도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15개 지자체 중에서 부여군이

0.14%로 가장 높았고, 아산시와 태안군이 0.11%로 가장 낮았다.

〈표 13-2-59〉 충청남도의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건, 명,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계	39,959	309,659	33,554	0.12
천안시	6,047	47,644	5,928	0.13
공주시	3,276	25,946	2,599	0.12
보령시	3,554	27,571	2,874	0.12
아산시	3,786	32,529	3,519	0.11
서산시	3,158	22,962	2,733	0.13
논산시	4,533	35,130	3,535	0.12
계룡시	288	2,220	254	0.13
당진시	2,002	14,645	1,403	0.12
금산군	1,991	14,390	1,508	0.13
부여군	2,771	19,742	2,444	0.14
서천군	2,285	18,751	2,047	0.12
청양군	798	5,644	623	0.13
홍성군	1,868	14,149	1,552	0.13
예산군	2,105	15,573	1,504	0.12
태안군	1,497	12,763	1,031	0.1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전라북도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14개 지자체 중에서 장수군과 부안군이 0.14%로 가장 높았고, 남원시가 0.10%로 가장 낮았다.

〈표 13-2-60〉 전라북도의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건, 명,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계	55,023	462,882	50,939	0.12
전주시	11,714	107,832	11,163	0.11
군산시	7,403	62,659	7,145	0.12
익산시	7,918	67,194	7,249	0.11
정읍시	5,566	43,709	5,273	0.13
남원시	2,848	32,593	3,843	0.10
김제시	4,856	41,143	5,063	0.12
완주군	3,321	26,232	2,456	0.12
진안군	1,180	9,458	953	0.12
무주군	909	7,565	831	0.12
장수군	1,335	8,946	1,192	0.14
임실군	1,473	11,311	1,144	0.12
순창군	1,128	7,805	761	0.13
고창군	2,571	17,427	1,758	0.13
부안군	2,801	19,008	2,108	0.1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전라남도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22개 지자체 중에서 영광군이 0.14%로 가장 높았고, 구례군이 0.10%로 가장 낮았다.

〈표 13-2-61〉 전라남도의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건, 명,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계	62,508	514,843	55,235	0.12
목포시	5,897	53,980	6,231	0.11
여수시	6,547	59,296	7,277	0.11
순천시	5,332	48,343	4,606	0.11
나주시	4,082	34,283	4,012	0.12
광양시	2,038	17,656	2,121	0.12
담양군	2,225	16,702	1,521	0.12
곡성군	1,542	12,381	1,528	0.12
구례군	1,133	11,005	1,081	0.10
고흥군	3,270	24,623	2,378	0.12
보성군	2,334	16,675	1,488	0.12
화순군	2,560	22,006	2,079	0.11
장흥군	2,347	16,985	1,883	0.13
강진군	1,844	14,172	1,332	0.12
해남군	3,106	27,692	2,517	0.11
영암군	1,687	14,801	1,548	0.11
무안군	2,086	17,347	1,695	0.11
함평군	2,178	16,076	1,641	0.13
영광군	3,116	21,946	2,684	0.14
장성군	2,511	18,322	1,882	0.13
완도군	2,355	18,951	2,389	0.12
진도군	2,007	15,616	1,661	0.12
신안군	2,311	15,985	1,681	0.1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상북도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23개 지자체 중에서 울릉군이 0.14%로 가장 높았고, 칠곡군이 0.08%로 가장 낮았다.

〈표 13-2-62〉 경상북도의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건, 명,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계	64,567	554,965	56,811	0.11
포항시	10,105	83,574	8,792	0.12
경주시	5,617	50,996	4,680	0.10
김천시	3,424	26,766	2,576	0.12
안동시	5,190	43,753	4,686	0.12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구미시	3,505	29,435	3,625	0.12
영주시	3,574	26,775	2,807	0.12
영천시	3,528	38,469	4,062	0.10
상주시	2,839	27,882	2,797	0.10
문경시	2,578	23,731	2,492	0.11
경산시	4,100	36,583	4,044	0.11
군위군	1,083	8,007	812	0.13
의성군	2,305	16,186	1,373	0.13
청송군	1,036	10,699	1,162	0.10
영양군	837	8,751	1,012	0.10
영덕군	2,183	15,549	1,744	0.13
청도군	1,586	14,030	1,227	0.11
고령군	1,536	11,288	1,403	0.13
성주군	1,629	12,513	1,121	0.12
칠곡군	1,947	24,425	1,980	0.08
예천군	1,733	14,742	1,276	0.11
봉화군	1,326	10,678	1,020	0.12
울진군	2,662	18,478	1,925	0.13
울릉군	244	1,655	195	0.1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상남도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18개 지자체 중에서 의령군, 남해군, 거창군이 0.13%로 가장 높았고, 거제시가 0.08%로 가장 낮았다.

〈표 13-2-63〉 경상남도의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건, 명,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계	50,604	455,078	46,941	0.11
창원시	9,282	91,946	8,975	0.10
진주시	5,025	43,684	4,308	0.11
통영시	2,706	25,847	2,827	0.11
사천시	2,737	26,353	2,637	0.10
김해시	5,862	47,009	4,929	0.12
밀양시	2,521	23,273	2,163	0.10
거제시	609	19,552	3,524	0.08
양산시	2,934	26,321	3,275	0.12
의령군	1,095	8,388	992	0.13
함안군	1,659	14,481	1,283	0.11
창녕군	2,295	17,550	1,859	0.12
고성군	1,578	16,723	1,473	0.09
남해군	2,134	15,828	1,768	0.13
하동군	2,253	18,219	1,760	0.12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산청군	1,746	12,971	1,203	0.12
함양군	1,689	13,754	1,250	0.11
거창군	2,114	14,479	1,229	0.13
합천군	2,365	18,700	1,486	0.1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2개 지자체 중에서 서귀포시가 0.12%로 제주시 0.11%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표 13-2-64〉 제주특별자치도의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건, 명,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수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	수급자 관리실적
계	12,925	115,506	12,417	0.11
제주시	8,465	78,880	8,754	0.11
서귀포시	4,460	36,626	3,663	0.1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마. 긴급복지 지원실적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에서 종로구가 2.11%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0.71%로 가장 낮았다.

〈표 13-2-65〉 서울특별시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계	5,046	898	5,880	1,070	1.22
종로구	115	17	117	114	2.11
중구	88	5	90	53	1.62
용산구	129	21	150	0	1.02
성동구	197	32	200	106	1.68
광진구	127	9	283	142	1.02
동대문구	367	17	410	33	1.02
중랑구	391	44	415	68	1.22
성북구	275	43	283	0	1.13
강북구	346	127	341	102	1.68
도봉구	150	40	176	16	1.21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노원구	376	30	410	0	1.00
은평구	218	34	230	14	1.16
서대문구	235	57	225	13	1.34
마포구	116	9	129	136	2.03
양천구	177	58	195	28	1.38
강서구	246	12	278	27	1.03
구로구	133	3	151	0	0.90
금천구	241	49	495	88	0.87
영등포구	268	123	275	89	1.76
동작구	192	54	219	5	1.18
관악구	281	26	300	0	1.03
서초구	52	19	67	2	1.17
강남구	56	8	100	1	0.71
송파구	172	47	211	21	1.19
강동구	98	14	130	12	0.9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에서 수영구가 3.07%로 가장 높았고, 사하구가 1.13%로 가장 낮았다.

〈표 13-2-66〉 부산광역시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계	2,509	532	2,809	1,690	1.71
중구	110	35	110	12	1.43
서구	170	32	240	64	1.16
동구	147	8	155	48	1.31
영도구	128	36	131	102	2.04
부산진구	245	31	282	42	1.14
동래구	131	68	143	85	2.03
남구	182	43	194	22	1.29
북구	184	12	216	414	2.83
해운대구	226	27	256	83	1.33
사하구	205	36	237	21	1.13
금정구	134	31	144	79	1.71
강서구	92	25	89	57	1.95
연제구	133	51	151	122	2.07
수영구	140	52	173	326	3.07
사상구	179	27	186	180	2.08
기장군	103	18	102	33	1.5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에서 남구가

3.27%로 가장 높았고, 달성군이 0.80%로 가장 낮았다.

〈표 13-2-67〉 대구광역시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계	1,748	225	2,156	729	1.28
중구	135	9	226	76	1.00
동구	279	85	294	54	1.44
서구	238	36	303	52	1.11
남구	297	45	296	359	2.37
북구	264	16	344	55	0.99
수성구	237	22	270	15	1.03
달서구	249	10	356	116	1.07
달성군	49	2	67	2	0.8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에서 강화군이 1.99%로 가장 높았고, 연수구가 1.11%로 가장 낮았다.

〈표 13-2-68〉 인천광역시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계	2,628	853	3,240	942	1.43
중구	109	49	129	52	1.70
동구	146	68	233	84	1.45
남구	407	133	431	99	1.50
연수구	143	19	181	33	1.11
남동구	330	56	432	125	1.22
부평구	471	63	663	178	1.11
계양구	352	151	471	119	1.43
서구	421	195	480	213	1.78
강화군	187	108	156	34	1.99
옹진군	62	11	64	5	1.2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남구가 3.78%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3.09%로 가장 낮았다.

〈표 13-2-69〉 광주광역시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계	3,694	2,180	3,604	7,208	3.62
동구	304	108	414	828	3.09
서구	921	466	783	1,566	3.68
남구	1,299	1,071	1,353	2,706	3.78
북구	451	199	410	820	3.54
광산구	719	336	644	1,288	3.5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동구가 3.65%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가 3.25%로 가장 낮았다.

〈표 13-2-70〉 대전광역시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계	978	535	1,014	2,028	3.51
동구	333	212	329	658	3.65
중구	166	61	165	330	3.37
서구	191	107	227	454	3.40
유성구	67	22	73	146	3.25
대덕구	221	133	220	440	3.6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울주군이 3.23%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1.73%로 가장 낮았다.

〈표 13-2-71〉 울산광역시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계	437	144	515	651	2.44
중구	141	24	147	142	2.10
남구	131	51	129	157	2.62
동구	45	10	49	78	2.73
북구	34	7	95	111	1.73
울주군	86	52	95	163	3.2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광주시가

4.06%로 가장 높았고, 시흥시가 1.81%로 가장 낮았다.

〈표 13-2-72〉 경기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계	9,241	4,755	8,788	12,880	3.03
수원시	789	447	695	677	2.68
성남시	554	236	594	1,028	3.09
고양시	686	299	594	1,188	3.59
부천시	507	137	577	974	2.84
안양시	430	152	420	300	2.09
안산시	350	118	446	516	2.28
용인시	341	245	315	526	3.47
의정부시	639	318	741	673	2.27
남양주시	340	192	274	503	3.64
평택시	56	5	64	59	1.89
광명시	307	201	288	394	3.09
시흥시	232	89	261	141	1.81
군포시	186	42	200	352	2.92
화성시	169	70	172	212	2.63
파주시	835	584	638	1,276	4.01
이천시	126	79	117	133	2.84
구리시	346	242	258	516	4.04
김포시	160	53	191	210	2.27
포천시	114	36	119	238	3.27
광주시	324	235	243	486	4.06
안성시	140	55	131	98	2.21
하남시	203	96	194	355	3.35
의왕시	76	35	79	142	3.22
양주시	200	102	190	380	3.56
오산시	211	157	162	277	3.76
여주군	128	78	136	117	2.41
양평군	288	202	252	504	3.84
동두천시	260	151	203	303	3.35
파천시	45	24	45	90	3.53
가평군	104	29	106	147	2.65
연천군	95	46	83	65	2.4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원주시와 철원군이 2.28%로 가장 높았고, 화천군이 0.92%로 가장 낮았다.

〈표 13-2-73〉 강원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계	1,576	636	2,051	977	1.65
춘천시	199	26	272	91	1.20
원주시	272	147	305	259	2.28
강릉시	46	10	123	46	0.97
동해시	135	24	143	40	1.40
태백시	33	14	69	21	1.21
속초시	128	52	167	99	1.77
삼척시	103	44	110	96	2.24
홍천군	176	130	246	94	1.84
횡성군	35	8	41	6	1.23
영월군	99	52	83	3	1.75
평창군	38	6	52	11	1.10
정선군	25	12	27	19	2.11
철원군	126	92	105	37	2.28
화천군	12	2	32	12	0.92
양구군	60	12	89	27	1.18
인제군	26	2	44	38	1.53
고성군	35	2	72	36	1.04
양양군	28	1	71	42	1.0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에서 증평군이 4.32%로 가장 높았고, 보은군과 단양군이 2.71%로 가장 낮았다.

〈표 13-2-74〉 충청북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계	1,280	496	1,492	2,887	3.18
청주시	325	164	454	908	3.22
충주시	76	11	93	186	2.96
제천시	130	10	148	284	2.87
청원군	111	36	155	310	3.04
보은군	106	39	108	147	2.71
옥천군	64	5	65	130	3.06
영동군	152	103	143	286	3.74
증평군	60	47	39	78	4.32
진천군	60	21	64	128	3.29
괴산군	76	31	69	138	3.51
음성군	87	16	100	200	3.05
단양군	33	13	54	92	2.7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에서 서천군이 3.37%로 가장 높았고, 천안시가 1.09%로 가장 낮았다.

〈표 13-2-75〉 충청남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계	1,674	549	4,006	3,971	1.74
천안시	255	28	1,138	858	1.09
공주시	105	23	128	256	3.04
보령시	109	14	119	108	1.95
아산시	306	100	295	333	2.49
서산시	106	60	101	90	2.51
논산시	171	21	297	208	1.40
계룡시	14	2	15	29	3.01
당진시	54	30	52	26	2.09
금산군	45	3	50	93	2.83
부여군	75	24	187	374	2.72
서천군	107	60	132	264	3.37
청양군	23	2	38	18	1.17
홍성군	57	18	91	134	2.41
예산군	190	138	1,240	1,098	1.77
태안군	57	26	123	82	1.5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에서 남원시가 3.71%로 가장 높았고, 완주군이 1.33%로 가장 낮았다.

〈표 13-2-76〉 전라북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계	1,843	495	2,007	2,808	2.59
전주시	386	95	423	403	2.11
군산시	203	16	213	308	2.48
익산시	316	67	314	317	2.23
정읍시	91	14	97	194	3.09
남원시	247	131	196	376	3.71
김제시	126	8	263	512	2.49
완주군	70	4	77	28	1.33
진안군	57	37	58	47	2.44
무주군	92	69	96	136	3.13
장수군	53	12	48	58	2.54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임실군	27	4	27	54	3.15
순창군	51	10	52	104	3.18
고창군	81	16	102	189	2.84
부안군	43	12	41	82	3.3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에서 광양시가 3.84%로 가장 높았고, 영광군이 1.45%로 가장 낮았다.

〈표 13-2-77〉 전라남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계	2,358	853	2,636	2,901	2.36
목포시	332	80	393	179	1.54
여수시	182	34	174	141	2.04
순천시	313	195	202	205	3.19
나주시	90	29	95	131	2.65
광양시	106	60	83	166	3.84
담양군	99	23	104	134	2.47
곡성군	151	80	211	422	3.25
구례군	36	15	109	202	2.60
고흥군	103	26	121	104	1.96
보성군	67	32	137	248	2.78
화순군	119	50	119	96	2.23
장흥군	164	115	143	137	2.81
강진군	69	21	91	37	1.47
해남군	91	22	94	57	1.82
영암군	45	7	63	101	2.47
무안군	26	0	29	36	2.14
함평군	46	9	65	101	2.46
영광군	53	12	89	56	1.45
장성군	61	9	74	81	2.07
완도군	80	17	110	128	2.10
진도군	61	9	64	31	1.59
신안군	64	8	66	108	2.7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에서 성주군이 2.93%로 가장 높았고, 고령군이 1.05%로 가장 낮았다.

〈표 13-2-78〉 경상북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계	1,644	288	2,638	3,461	2.11
포항시	356	93	588	900	2.40
경주시	202	21	302	352	1.94
김천시	67	2	75	27	1.28
안동시	23	6	191	190	1.38
구미시	112	5	190	380	2.63
영주시	55	10	57	64	2.27
영천시	114	17	159	318	2.87
상주시	27	0	68	118	2.13
문경시	52	18	104	163	2.41
경산시	80	10	134	210	2.29
군위군	18	3	25	25	1.89
의성군	63	18	83	90	2.13
청송군	39	6	45	41	1.93
영양군	22	2	79	57	1.09
영덕군	27	0	30	41	2.27
청도군	31	2	36	31	1.79
고령군	47	3	59	11	1.05
성주군	73	23	77	128	2.93
칠곡군	89	15	127	119	1.81
예천군	30	18	84	124	2.43
봉화군	18	0	21	42	2.86
울진군	86	14	90	29	1.44
울릉군	13	2	14	1	1.15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김해시가 2.82%로 가장 높았고, 창녕군이 0.88%로 가장 낮았다.

〈표 13-2-79〉 경상남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계	1,906	505	2,170	1,347	1.76
창원시	498	173	686	153	1.30
진주시	128	11	135	48	1.39
통영시	76	16	84	99	2.29
사천시	57	0	65	86	2.20
김해시	290	78	281	428	2.82
밀양시	102	18	116	108	1.99
거제시	40	2	45	13	1.23
양산시	160	16	168	95	1.62
의령군	26	6	30	4	1.23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함안군	24	3	26	31	2.24
창녕군	19	0	25	3	0.88
고성군	27	7	30	9	1.46
남해군	94	42	79	75	2.59
하동군	102	50	108	53	1.93
산청군	115	58	134	32	1.60
함양군	60	10	67	35	1.58
거창군	51	10	52	15	1.47
합천군	37	5	39	60	2.6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중에서 서귀포시가 1.28%로 제주시 1.08%보다 높았다.

〈표 13-2-80〉 제주특별자치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긴급복지 지원실적 (B/A)+(D/C)+(A/C)
계	276	27	423	172	1.16
제주시	149	12	271	122	1.08
서귀포시	127	15	152	50	1.2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2.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가.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에서 동작구가 17.21%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1.90%로 가장 낮았다.

〈표 13-2-81〉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계	633	106	527	6,975	9.08
종로구	10	1	9	135	7.41
중구	10	3	7	107	9.35
용산구	13	3	10	117	11.11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성동구	13	0	13	176	7.39
광진구	16	5	11	144	11.11
동대문구	25	4	21	288	8.68
중랑구	21	0	21	184	11.41
성북구	26	2	24	448	5.80
강북구	24	11	13	318	7.55
도봉구	12	6	6	214	5.61
노원구	81	8	73	616	13.15
은평구	39	3	36	451	8.65
서대문구	23	2	21	168	13.69
마포구	30	8	22	246	12.20
양천구	33	6	27	299	11.04
강서구	11	0	11	579	1.90
구로구	25	11	14	328	7.62
금천구	39	4	35	491	7.94
영등포구	23	5	18	244	9.43
동작구	42	5	37	244	17.21
관악구	59	16	43	466	12.66
서초구	8	1	7	49	16.33
강남구	17	0	17	272	6.25
송파구	26	0	26	257	10.12
강동구	7	2	5	134	5.2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에서 사상구가 38.10%로 가장 높았고, 영도구가 5.04%로 가장 낮았다.

〈표 13-2-82〉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계	1,295	725	570	5,095	25.42
중구	32	21	11	124	25.81
서구	71	54	17	259	27.41
동구	54	40	14	311	17.36
영도구	12	6	6	238	5.04
부산진구	137	69	68	513	26.71
동래구	45	33	12	219	20.55
남구	71	24	47	297	23.91
북구	122	74	48	501	24.35
해운대구	178	69	109	515	34.56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사하구	90	69	21	469	19.19
금정구	113	90	23	297	38.05
강서구	16	10	6	104	15.38
연제구	43	21	22	239	17.99
수영구	56	26	30	239	23.43
사상구	232	107	125	609	38.10
기장군	23	12	11	161	14.2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에서 달성군이 20.00%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8.09%로 가장 낮았다.

〈표 13-2-83〉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계	283	87	196	2,402	11.78
중구	8	3	5	70	11.43
동구	56	29	27	373	15.01
서구	22	4	18	272	8.09
남구	28	9	19	337	8.31
북구	43	14	29	385	11.17
수성구	46	10	36	375	12.27
달서구	48	11	37	430	11.16
달성군	32	7	25	160	2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에서 남구가 19.39%로 가장 높았고, 용진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용진군은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와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및 수급 중지자의 탈수급자가 전혀 없었다.

〈표 13-2-84〉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계	455	249	206	3,138	14.50
중구	25	25	0	194	12.89
동구	22	16	6	173	12.72
남구	96	49	47	495	19.39
연수구	58	20	38	336	17.26
남동구	59	19	40	473	12.47
부평구	86	38	48	605	14.21
계양구	28	17	11	258	10.85
서구	75	59	16	546	13.74
강화군	6	6	0	58	10.34
옹진군	0	0	0	0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광산구가 19.17%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11.28%로 가장 낮았다.

〈표 13-2-85〉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계	516	207	309	3,174	16.26
동구	22	21	1	195	11.28
서구	136	30	106	821	16.57
남구	95	34	61	576	16.49
북구	134	74	60	909	14.74
광산구	129	48	81	673	19.1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대덕구가 27.59%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18.71%로 가장 낮았다.

〈표 13-2-86〉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계	227	50	177	1,038	21.87
동구	48	5	43	191	25.13
중구	55	29	26	265	20.75
서구	58	4	54	310	18.71
유성구	26	12	14	127	20.47
대덕구	40	0	40	145	27.5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울주군이 26.79%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16.22%로 가장 낮았다.

〈표 13-2-87〉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계	96	20	76	479	20.04
중구	22	1	21	108	20.37
남구	12	4	8	74	16.22
동구	11	2	9	60	18.33
북구	21	6	15	125	16.80
울주군	30	7	23	112	26.7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남양주시가 23.81%로 가장 높았고, 연천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연천군은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와 수급 중지자의 탈수급자가 전혀 없었다.

〈표 13-2-88〉 경기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계	697	373	324	4,859	14.35
수원시	49	18	31	396	12.37
성남시	49	27	22	382	12.83
고양시	36	8	28	213	16.90
부천시	73	33	40	532	13.72
안양시	19	11	8	129	14.73
안산시	69	62	7	441	15.65
용인시	30	14	16	154	19.48
의정부시	28	15	13	265	10.57
남양주시	50	30	20	210	23.81
평택시	22	4	18	186	11.83
광명시	31	19	12	159	19.50
시흥시	28	21	7	186	15.05
군포시	32	24	8	161	19.88
화성시	8	1	7	88	9.09
파주시	15	10	5	106	14.15
이천시	13	0	13	152	8.55
구리시	14	9	5	90	15.56
김포시	16	7	9	185	8.65
포천시	12	5	7	73	16.44
광주시	23	19	4	118	19.49
안성시	16	12	4	157	10.19
하남시	10	6	4	67	14.93
의왕시	2	0	2	26	7.69
양주시	23	6	17	113	20.35
오산시	13	6	7	80	16.25
여주군	4	0	4	49	8.16
양평군	1	0	1	37	2.70
동두천시	0	0	0	27	0.00
과천시	5	2	3	32	15.63
가평군	6	4	2	41	14.63
연천군	0	0	0	4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횡성군이 68.57%로 가장 높았고, 양양군이 2.70%로 가장 낮았다.

〈표 13-2-89〉 강원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계	279	141	138	1,463	19.07
춘천시	62	27	35	334	18.56
원주시	60	41	19	319	18.81
강릉시	28	18	10	179	15.64
동해시	7	4	3	80	8.75
태백시	5	5	0	65	7.69
속초시	35	10	25	129	27.13
삼척시	11	5	6	68	16.18
홍천군	11	10	1	35	31.43
횡성군	24	8	16	35	68.57
영월군	2	1	1	19	10.53
평창군	4	4	0	19	21.05
정선군	4	0	4	29	13.79
철원군	1	1	0	11	9.09
화천군	7	4	3	29	24.14
양구군	1	0	1	13	7.69
인제군	4	0	4	23	17.39
고성군	12	3	9	39	30.77
양양군	1	0	1	37	2.7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에서 괴산군이 39.13%로 가장 높았고, 청주시가 17.14%로 가장 낮았다.

〈표 13-2-90〉 충청북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계	171	74	97	789	21.67
청주시	30	9	21	175	17.14
충주시	30	5	25	151	19.87
제천시	35	17	18	128	27.34
청원군	13	11	2	56	23.21
보은군	7	5	2	23	30.43
옥천군	9	3	6	50	18.00
영동군	4	3	1	19	21.05
증평군	7	5	2	39	17.95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진천군	7	1	6	39	17.95
괴산군	9	3	6	23	39.13
음성군	15	8	7	58	25.86
단양군	5	4	1	28	17.86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에서 태안군이 34.62%로 가장 높았고, 부여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부여군은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와 수급 중지자의 탈수급이 전혀 없었다.

〈표 13-2-91〉 충청남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계	203	51	152	1,214	16.72
천안시	40	11	29	215	18.60
공주시	19	2	17	99	19.19
보령시	9	4	5	79	11.39
아산시	45	8	37	176	25.57
서산시	20	9	11	123	16.26
논산시	19	2	17	111	17.12
계룡시	8	3	5	27	29.63
당진시	2	0	2	51	3.92
금산군	8	0	8	65	12.31
부여군	0	0	0	28	0.00
서천군	9	5	4	73	12.33
청양군	1	1	0	29	3.45
홍성군	6	1	5	63	9.52
예산군	8	0	8	49	16.33
태안군	9	5	4	26	34.6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에서 부안군이 40.43%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가 9.48%로 가장 낮았다.

〈표 13-2-92〉 전라북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계	378	183	195	2,335	16.19
전주시	78	31	47	585	13.33
군산시	27	7	20	268	10.07
익산시	44	42	2	464	9.48
정읍시	53	10	43	272	19.49
남원시	19	15	4	120	15.83
김제시	50	38	12	243	20.58
완주군	17	4	13	99	17.17
진안군	8	1	7	36	22.22
무주군	7	4	3	36	19.44
장수군	14	5	9	42	33.33
임실군	12	7	5	39	30.77
순창군	10	5	5	34	29.41
고창군	20	7	13	50	40.00
부안군	19	7	12	47	40.4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에서 장성군이 37.14%로 가장 높았고, 여수시가 1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2-93〉 전라남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계	263	94	169	1,455	18.08
목포시	48	6	42	176	27.27
여수시	26	7	19	260	10.00
순천시	28	6	22	112	25.00
나주시	21	0	21	127	16.54
광양시	22	10	12	104	21.15
담양군	3	2	1	14	21.43
곡성군	5	0	5	39	12.82
구례군	9	4	5	79	11.39
고흥군	7	7	0	50	14.00
보성군	15	13	2	57	26.32
화순군	11	3	8	94	11.70
장흥군	4	4	0	30	13.33
강진군	6	2	4	36	16.67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해남군	5	3	2	25	20.00
영암군	6	0	6	42	14.29
무안군	8	4	4	26	30.77
함평군	10	8	2	76	13.16
영광군	7	4	3	39	17.95
장성군	13	10	3	35	37.14
완도군	1	0	1	4	25.00
진도군	7	1	6	25	28.00
신안군	1	0	1	5	2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에서 김천시가 45.83%로 가장 높았고, 예천군과 울릉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울릉군은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와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및 수급 중지자의 탈수급자가 전혀 없었고, 예천군은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및 수급 중지자의 탈수급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94〉 경상북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계	338	142	196	1,526	22.15
포항시	80	20	60	328	24.39
경주시	14	8	6	65	21.54
김천시	33	11	22	72	45.83
안동시	27	13	14	104	25.96
구미시	18	3	15	180	10.00
영주시	21	11	10	71	29.58
영천시	26	16	10	73	35.62
상주시	3	1	2	75	4.00
문경시	12	2	10	63	19.05
경산시	35	15	20	148	23.65
군위군	5	0	5	25	20.00
의성군	2	0	2	28	7.14
청송군	3	3	0	13	23.08
영양군	2	1	1	6	33.33
영덕군	7	3	4	84	8.33
청도군	4	2	2	13	30.77
고령군	8	7	1	41	19.51
성주군	7	3	4	16	43.75

칠곡군	22	18	4	65	33.85
예천군	0	0	0	8	0.00
봉화군	2	0	2	23	8.70
울진군	7	5	2	25	28.00
울릉군	0	0	0	0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고성군이 37.50%로 가장 높았고, 통영시가 10.57%로 가장 낮았다.

〈표 13-2-95〉 경상남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계	307	183	124	1,647	18.64
창원시	75	61	14	356	21.07
진주시	21	12	9	198	10.61
통영시	13	7	6	123	10.57
사천시	9	4	5	52	17.31
김해시	37	6	31	217	17.05
밀양시	17	9	8	105	16.19
거제시	11	6	5	52	21.15
양산시	36	15	21	152	23.68
의령군	2	2	0	8	25.00
함안군	9	5	4	53	16.98
창녕군	12	7	5	62	19.35
고성군	12	10	2	32	37.50
남해군	8	6	2	23	34.78
하동군	13	11	2	74	17.57
산청군	8	5	3	36	22.22
함양군	5	5	0	27	18.52
거창군	4	2	2	29	13.79
합천군	15	10	5	48	31.25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중에서 서귀포시가 25.42%로 제주시 15.15% 보다 더 높았다.

〈표 13-2-96〉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 수 (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계 (①+②)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 ①	수급 중지자 ②		
계	77	28	49	468	16.45
제주시	62	26	36	409	15.16
서귀포시	15	2	13	59	25.4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나.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에서 도봉구가 21.03%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가 4.51%로 가장 낮았다.

〈표 13-2-97〉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계	605	32	637	6,975	9.13
종로구	14	2	16	135	11.85
중구	6	0	6	107	5.61
용산구	15	2	17	117	14.53
성동구	20	0	20	176	11.36
광진구	11	0	11	144	7.64
동대문구	16	2	18	288	6.25
중랑구	11	0	11	184	5.98
성북구	36	0	36	448	8.04
강북구	22	1	23	318	7.23
도봉구	45	0	45	214	21.03
노원구	51	0	51	616	8.28
은평구	56	3	59	451	13.08
서대문구	13	0	13	168	7.74
마포구	27	1	28	246	11.38
양천구	32	2	34	299	11.37
강서구	33	4	37	579	6.39
구로구	27	1	28	328	8.54
금천구	20	7	27	491	5.50
영등포구	20	2	22	244	9.02
동작구	11	0	11	244	4.51
관악구	60	4	64	466	13.73
서초구	8	1	9	49	18.37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강남구	15	0	15	272	5.51
송파구	12	0	12	257	4.67
강동구	24	0	24	134	17.9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에서 서구가 34.36%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7.26%로 가장 낮았다.

〈표 13-2-98〉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계	983	40	1,023	5,095	20.08
중구	9	0	9	124	7.26
서구	87	2	89	259	34.36
동구	54	5	59	311	18.97
영도구	24	1	25	238	10.50
부산진구	90	8	98	513	19.10
동래구	25	0	25	219	11.42
남구	59	2	61	297	20.54
북구	98	7	105	501	20.96
해운대구	141	3	144	515	27.96
사하구	67	5	72	469	15.35
금정구	36	2	38	297	12.79
강서구	9	0	9	104	8.65
연제구	17	3	20	239	8.37
수영구	47	0	47	239	19.67
사상구	171	1	172	609	28.24
기장군	49	1	50	161	31.06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에서 북구가 18.18%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6.25%로 가장 낮았다.

〈표 13-2-99〉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계	256	17	273	2,402	11.37
중구	6	3	9	70	12.86
동구	33	5	38	373	10.19
서구	13	4	17	272	6.25
남구	28	1	29	337	8.61
북구	70	0	70	385	18.18
수성구	36	3	39	375	10.40
달서구	49	1	50	430	11.63
달성군	21	0	21	160	13.1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에서 계양구가 23.26%로 가장 높았고, 옹진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옹진군은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와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가 전혀 없었다.

〈표 13-2-100〉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계	408	19	427	3,138	13.61
중구	30	0	30	194	15.46
동구	36	0	36	173	20.81
남구	66	0	66	495	13.33
연수구	48	6	54	336	16.07
남동구	87	1	88	473	18.60
부평구	47	1	48	605	7.93
계양구	51	9	60	258	23.26
서구	37	1	38	546	6.96
강화군	6	1	7	58	12.07
옹진군	0	0	0	0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북구가 27.61%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5.13%로 가장 낮았다.

〈표 13-2-101〉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계	540	11	551	3,174	17.36
동구	10	0	10	195	5.13
서구	111	7	118	821	14.37
남구	116	1	117	576	20.31
북구	249	2	251	909	27.61
광산구	54	1	55	673	8.1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중구가 24.91%로 가장 높았고, 대덕구가 12.41%로 가장 낮았다.

〈표 13-2-102〉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계	201	11	212	1,038	20.42
동구	28	2	30	191	15.71
중구	65	1	66	265	24.91
서구	70	2	72	310	23.23
유성구	26	0	26	127	20.47
대덕구	12	6	18	145	12.4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남구가 25.68%로 가장 높았고, 울주군이 8.04%로 가장 낮았다.

〈표 13-2-103〉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계	60	10	70	479	14.61
중구	18	3	21	108	19.44
남구	19	0	19	74	25.68
동구	6	0	6	60	10.00
북구	13	2	15	125	12.00
울주군	4	5	9	112	8.0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구리시가 25.56%로 가장 높았고, 의왕시, 동두천시, 연천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연천군은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가 전혀 없었다.

〈표 13-2-104〉 경기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계	704	49	753	4,859	15.50
수원시	36	7	43	396	10.86
성남시	74	4	78	382	20.42
고양시	49	3	52	213	24.41
부천시	64	8	72	532	13.53
안양시	22	3	25	129	19.38
안산시	90	1	91	441	20.63
용인시	8	2	10	154	6.49
의정부시	33	1	34	265	12.83
남양주시	45	1	46	210	21.90
평택시	25	1	26	186	13.98
광명시	18	2	20	159	12.58
시흥시	28	3	31	186	16.67
군포시	25	0	25	161	15.53
화성시	18	2	20	88	22.73
파주시	26	1	27	106	25.47
이천시	22	0	22	152	14.47
구리시	22	1	23	90	25.56
김포시	25	0	25	185	13.51
포천시	8	5	13	73	17.81
광주시	22	1	23	118	19.49
안성시	12	0	12	157	7.64
하남시	2	0	2	67	2.99
의왕시	0	0	0	26	0.00
양주시	11	0	11	113	9.73
오산시	8	3	11	80	13.75
여주군	6	0	6	49	12.24
양평군	1	0	1	37	2.70
동두천시	0	0	0	27	0.00
파천시	3	0	3	32	9.38
가평군	1	0	1	41	2.44
연천군	0	0	0	4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양양군이 45.95%로 가장 높았고,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은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가 전혀 없었다.

〈표 13-2-105〉 강원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계	253	36	289	1,463	19.75
춘천시	91	1	92	334	27.54
원주시	53	2	55	319	17.24
강릉시	19	1	20	179	11.17
동해시	10	3	13	80	16.25
태백시	3	0	3	65	4.62
속초시	35	11	46	129	35.66
삼척시	8	3	11	68	16.18
홍천군	5	0	5	35	14.29
횡성군	8	0	8	35	22.86
영월군	0	0	0	19	0.00
평창군	0	0	0	19	0.00
정선군	5	4	9	29	31.03
철원군	0	0	0	11	0.00
화천군	0	0	0	29	0.00
양구군	1	0	1	13	7.69
인제군	1	2	3	23	13.04
고성군	5	1	6	39	15.38
양양군	9	8	17	37	45.95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에서 괴산군이 43.48%로 가장 높았고, 진천군이 5.13%로 가장 낮았다.

〈표 13-2-106〉 충청북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계	143	22	165	789	20.91
청주시	34	10	44	175	25.14
충주시	23	0	23	151	15.23
제천시	25	0	25	128	19.53
청원군	10	0	10	56	17.86
보은군	0	2	2	23	8.70
옥천군	15	1	16	50	32.00
영동군	4	0	4	19	21.05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증평군	14	2	16	39	41.03
진천군	2	0	2	39	5.13
괴산군	8	2	10	23	43.48
음성군	1	4	5	58	8.62
단양군	7	1	8	28	28.5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에서 논산시가 20.72%로 가장 높았고, 금산군이 3.08%로 가장 낮았다.

〈표 13-2-107〉 충청남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계	156	14	170	1,214	14.00
천안시	24	3	27	215	12.56
공주시	11	2	13	99	13.13
보령시	8	1	9	79	11.39
아산시	34	0	34	176	19.32
서산시	19	0	19	123	15.45
논산시	22	1	23	111	20.72
계룡시	2	0	2	27	7.41
당진시	6	0	6	51	11.76
금산군	2	0	2	65	3.08
부여군	0	2	2	28	7.14
서천군	6	1	7	73	9.59
청양군	3	1	4	29	13.79
홍성군	6	3	9	63	14.29
예산군	8	0	8	49	16.33
태안군	5	0	5	26	19.2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에서 장수군이 30.95%로 가장 높았고, 임실군이 7.69%로 가장 낮았다.

〈표 13-2-108〉 전라북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계	389	40	429	2,335	18.37
전주시	83	12	95	585	16.24
군산시	34	1	35	268	13.06
익산시	96	11	107	464	23.06
정읍시	55	5	60	272	22.06
남원시	20	0	20	120	16.67
김제시	50	7	57	243	23.46
완주군	12	0	12	99	12.12
진안군	3	0	3	36	8.33
무주군	6	0	6	36	16.67
장수군	11	2	13	42	30.95
임실군	2	1	3	39	7.69
순창군	5	0	5	34	14.71
고창군	8	1	9	50	18.00
부안군	4	0	4	47	8.5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에서 담양군이 50.00%로 가장 높았고, 구례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구례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은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가 전혀 없었다.

〈표 13-2-109〉 전라남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계	134	40	174	1,455	11.96
목포시	21	3	24	176	13.64
여수시	9	0	9	260	3.46
순천시	15	5	20	112	17.86
나주시	45	0	45	127	35.43
광양시	11	10	21	104	20.19
담양군	2	5	7	14	50.00
곡성군	5	0	5	39	12.82
구례군	0	0	0	79	0.00
고흥군	2	1	3	50	6.00
보성군	4	0	4	57	7.02
화순군	5	3	8	94	8.51
장흥군	0	0	0	30	0.00
강진군	7	5	12	36	33.33
해남군	1	1	2	25	8.00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영암군	0	5	5	42	11.90
무안군	3	0	3	26	11.54
함평군	1	0	1	76	1.32
영광군	1	2	3	39	7.69
장성군	1	0	1	35	2.86
완도군	1	0	1	4	25.00
진도군	0	0	0	25	0.00
신안군	0	0	0	5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에서 상주시가 32.00%로 가장 높았고, 군위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울릉군은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와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가 전혀 없었고, 군위군, 영양군, 봉화군은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가 전혀 없었다.

〈표 13-2-110〉 경상북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계	250	23	273	1,526	17.89
포항시	60	0	60	328	18.29
경주시	9	0	9	65	13.85
김천시	13	3	16	72	22.22
안동시	17	0	17	104	16.35
구미시	40	0	40	180	22.22
영주시	4	3	7	71	9.86
영천시	17	0	17	73	23.29
상주시	21	3	24	75	32.00
문경시	10	2	12	63	19.05
경산시	25	0	25	148	16.89
군위군	0	0	0	25	0.00
의성군	2	1	3	28	10.71
청송군	2	0	2	13	15.38
영양군	0	0	0	6	0.00
영덕군	6	0	6	84	7.14
청도군	2	0	2	13	15.38
고령군	7	3	10	41	24.39
성주군	1	2	3	16	18.75
칠곡군	8	3	11	65	16.92
예천군	2	0	2	8	25.00
봉화군	0	0	0	23	0.00
울진군	4	3	7	25	28.00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울릉군	0	0	0	0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양산시가 34.21%로 가장 높았고, 의령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의령군은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가 전혀 없었다.

〈표 13-2-111〉 경상남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계	202	49	251	1,647	15.24
창원시	52	1	53	356	14.89
진주시	20	1	21	198	10.61
통영시	12	0	12	123	9.76
사천시	0	2	2	52	3.85
김해시	1	36	37	217	17.05
밀양시	8	1	9	105	8.57
거제시	13	2	15	52	28.85
양산시	51	1	52	152	34.21
의령군	0	0	0	8	0.00
함안군	7	0	7	53	13.21
창녕군	3	0	3	62	4.84
고성군	1	0	1	32	3.13
남해군	5	0	5	23	21.74
하동군	13	1	14	74	18.92
산청군	3	2	5	36	13.89
함양군	3	0	3	27	11.11
거창군	3	2	5	29	17.24
합천군	7	0	7	48	14.5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가 유사하였는데, 서귀포시 18.64%, 제주시 18.09%이었다.

〈표 13-2-112〉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A)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A/B)×100
	취업자①	창업자②	A=①+②		
계	68	17	85	468	18.16
제주시	59	15	74	409	18.09
서귀포시	9	2	11	59	18.6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다.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

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강서구가 725,824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36,907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13-2-113〉 서울특별시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계	1,924,303	1,981,478	2,645,360	6,551,141
종로구	0	18,697	145,132	163,829
중구	1,067	0	36,597	37,664
용산구	157,634	11,808	32,362	201,804
성동구	0	87,810	374,798	462,608
광진구	0	3,360	72,685	76,045
동대문구	0	110,500	30,727	141,227
중랑구	0	573,967	32,932	606,899
성북구	0	11,204	35,832	47,036
강북구	0	34,256	34,588	68,844
도봉구	0	3,020	33,887	36,907
노원구	355,953	0	173,809	529,762
은평구	0	0	472,958	472,958
서대문구	16,159	88,920	78,367	183,446
마포구	329,526	45,225	63,026	437,777
양천구	0	68,641	74,676	143,317
강서구	220	582,119	143,485	725,824
구로구	243,476	42,269	208,866	494,611
금천구	0	26,409	80,000	106,409
영등포구	128,858	159,926	88,227	377,011
동작구	257,770	1,700	33,532	293,002
관악구	171,505	68,500	203,308	443,313
서초구	0	0	41,772	41,772
강남구	250	0	66,620	66,870
송파구	0	0	52,812	52,812
강동구	261,885	43,147	34,362	339,39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 사하구가 1,715,88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장군이 308,480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13-2-114〉 부산광역시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계	161,723	5,289,193	6,784,088	12,235,004
중구	25,686	89,746	279,243	394,675
서구	240	259,652	361,623	621,515
동구	7,220	234,894	257,799	499,913
영도구	0	279,189	328,734	607,923
부산진구	20,755	612,814	576,899	1,210,468
동래구	73,899	249,397	254,083	577,379
남구	9,880	268,637	150,083	428,600
북구	4,945	217,206	945,119	1,167,270
해운대구	2,000	583,601	420,529	1,006,130
사하구	2,996	1,055,483	657,409	1,715,888
금정구	0	452,177	419,750	871,927
강서구	0	38,000	494,299	532,299
연제구	997	154,699	465,597	621,293
수영구	8,650	419,222	448,883	876,755
사상구	4,455	275,251	514,783	794,489
기장군	0	99,225	209,255	308,48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 수성구가 653,15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183,987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13-2-115〉 대구광역시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계	6,060	2,768,026	397,700	3,171,786
중구	0	171,487	12,500	183,987
동구	0	306,640	12,500	319,140
서구	540	589,806	62,500	652,846
남구	4,280	276,077	12,500	292,857
북구	0	198,876	62,500	261,376
수성구	0	540,657	112,500	653,157
달서구	1,240	310,106	112,500	423,846
달성군	0	374,377	10,200	384,57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 중구가 1,169,769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진군이 0원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용진군은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이 전혀 없었다.

〈표 13-2-116〉 인천광역시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계	1,912,355	1,388,135	1,411,190	4,711,680
중구	696,332	84,807	388,630	1,169,769
동구	327,760	0	63,390	391,150
남구	62,666	124,815	212,436	399,917
연수구	0	182,176	104,807	286,983
남동구	0	361,809	137,215	499,024
부평구	480,121	33,018	325,978	839,117
계양구	0	352,242	78,978	431,220
서구	225,840	226,944	50,778	503,562
강화군	119,636	22,324	48,978	190,938
용진군	0	0	0	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북구가 1,732,05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가 60,510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13-2-117〉 광주광역시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계	662,030	1,963,838	623,208	3,249,076
동구	0	10,510	50,000	60,510
서구	597,555	296,394	189,702	1,083,651
남구	7,131	42,196	115,000	164,327
북구	35,128	1,583,418	113,511	1,732,057
광산구	22,216	31,320	154,995	208,53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동구가 667,70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가 40,000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13-2-118〉 대전광역시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계	2,380	881,440	887,707	1,771,527
동구	0	0	667,707	667,707
중구	0	283,850	90,000	373,850
서구	2,380	597,590	0	599,970
유성구	0	0	40,000	40,000
대덕구	0	0	90,000	9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동구가 1,147,82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가 379,239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13-2-119〉 울산광역시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계	347	1,857,473	1,007,339	2,865,159
중구	347	284,273	160,800	445,420
남구	0	467,716	10,800	478,516
동구	0	547,656	600,169	1,147,825
북구	0	324,839	54,400	379,239
울주군	0	232,989	181,170	414,15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성남시가 3,755,16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평군과 연천군이 2,000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13-2-120〉 경기도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계	3,945,544	8,837,837	4,045,225	16,828,606
수원시	48,684	427,621	608,234	1,084,539
성남시	2,627,347	738,809	389,011	3,755,167
고양시	0	340,924	214,624	555,548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부천시	108,298	560,326	197,673	866,297
안양시	1,070	332,729	159,341	493,140
안산시	3,655	208,336	874,286	1,086,277
용인시	9,644	33,078	63,293	106,015
의정부시	40,379	250,393	88,520	379,292
남양주시	955,696	472,091	92,601	1,520,388
평택시	6,672	349,929	45,853	402,454
광명시	0	133,080	16,673	149,753
시흥시	45,047	2,152,036	128,027	2,325,110
군포시	81,645	145,909	73,577	301,131
화성시	1,865	297,785	87,150	386,800
파주시	0	373,858	93,915	467,773
이천시	0	0	7,679	7,679
구리시	0	252,852	53,940	306,792
김포시	0	0	98,266	98,266
포천시	0	41,794	79,800	121,594
광주시	13,780	555,335	45,800	614,915
안성시	0	0	57,993	57,993
하남시	1,762	477,684	40,944	520,390
의왕시	0	0	5,000	5,000
양주시	0	373,079	213,096	586,175
오산시	0	154,387	47,563	201,950
여주군	0	78,877	244,330	323,207
양평군	0	74,125	12,603	86,728
동두천시	0	0	4,800	4,800
과천시	0	8,800	633	9,433
가평군	0	2,000	0	2,000
연천군	0	2,000	0	2,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정선군이 1,511,53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철원군과 양구군이 13,611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13-2-121〉 강원도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계	185,045	7,354,343	1,722,251	9,261,639
춘천시	3,748	456,074	170,696	630,518
원주시	0	35,000	77,611	112,611
강릉시	13,518	239,177	47,888	300,583
동해시	0	144,400	148,066	292,466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태백시	0	70,284	25,710	95,994
속초시	9,280	630,686	42,246	682,212
삼척시	0	636,177	50,990	687,167
홍천군	0	25,000	143,611	168,611
횡성군	12,846	113,464	492,410	618,720
영월군	47,165	806,034	342,611	1,195,810
평창군	770	496,296	50,822	547,888
정선군	97,718	1,390,267	23,550	1,511,535
철원군	0	0	13,611	13,611
화천군	0	603,946	20,611	624,557
양구군	0	0	13,611	13,611
인제군	0	511,791	27,205	538,996
고성군	0	669,137	14,391	683,528
양양군	0	526,610	16,611	543,22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 청주시가 856,58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동군이 15,000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13-2-122〉 충청북도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계	56,956	3,974,344	200,659	4,231,959
청주시	0	816,587	40,000	856,587
충주시	16,131	574,390	23,656	614,177
제천시	450	523,672	50,000	574,122
청원군	0	516,435	44,100	560,535
보은군	35,400	210,927	0	246,327
옥천군	0	307,796	11,102	318,898
영동군	0	15,000	0	15,000
증평군	0	145,100	5,000	150,100
진천군	0	175,506	12,026	187,532
괴산군	14	211,321	10,950	222,285
음성군	1,200	161,023	825	163,048
단양군	3,761	316,587	3,000	323,34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충청남도 15

개 지자체 중 천안시가 1,725,18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계룡시가 8,280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13-2-123〉 충청남도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계	29,581	2,906,269	768,482	3,704,332
천안시	0	1,560,107	165,080	1,725,187
공주시	13,509	79,294	14,130	106,933
보령시	320	30,000	82,456	112,776
아산시	0	24,099	62,658	86,757
서산시	0	0	13,560	13,560
논산시	0	0	10,080	10,080
계룡시	0	0	8,280	8,280
당진시	345	60,076	112,542	172,963
금산군	0	31,070	12,380	43,450
부여군	0	34,960	10,800	45,760
서천군	1,125	780,160	58,537	839,822
청양군	3,090	54,000	11,520	68,610
홍성군	11,192	22,521	143,450	177,163
예산군	0	112,960	12,570	125,530
태안군	0	117,022	50,439	167,46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전주시가 1,480,98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완주군이 104,163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13-2-124〉 전라북도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계	74,642	7,569,519	1,110,010	8,754,171
전주시	33,189	1,342,324	105,469	1,480,982
군산시	0	944,035	56,646	1,000,681
익산시	13,619	213,831	160,306	387,756
정읍시	0	229,220	26,989	256,209
남원시	0	423,601	137,419	561,020
김제시	0	856,773	59,669	916,442
완주군	27,834	34,200	42,129	104,163
진안군	0	569,190	43,549	612,739
무주군	0	448,827	168,039	616,866
장수군	0	177,000	81,299	258,299

임실군	0	272,675	72,269	344,944
순창군	0	1,109,402	39,309	1,148,711
고창군	0	498,450	73,889	572,339
부안군	0	449,991	43,029	493,02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목포시가 1,551,03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례군과 고흥군이 8,233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13-2-125〉 전라남도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계	32,999	7,272,573	856,450	8,162,022
목포시	0	1,542,786	8,247	1,551,033
여수시	0	326,599	8,233	334,832
순천시	10,645	86,649	8,233	105,527
나주시	0	202,628	12,233	214,861
광양시	0	501,948	55,043	556,991
담양군	0	397,180	218,553	615,733
곡성군	0	137,292	8,233	145,525
구례군	0	0	8,233	8,233
고흥군	0	0	8,233	8,233
보성군	0	359,145	8,233	367,378
화순군	0	440,510	18,233	458,743
장흥군	0	684,440	28,233	712,673
강진군	0	108,880	8,233	117,113
해남군	0	740,025	58,233	798,258
영암군	18,381	374,226	302,373	694,980
무안군	1,020	34,200	8,233	43,453
함평군	1,053	291,050	8,233	300,336
영광군	0	47,067	28,233	75,300
장성군	0	293,878	23,473	317,351
완도군	1,900	62,400	13,033	77,333
진도군	0	578,728	8,233	586,961
신안군	0	62,942	8,233	71,175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 포항시가 2,005,989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릉군이 0원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울릉군은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이 전혀 없었다.

〈표 13-2-126〉 경상북도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계	78,222	7,483,022	2,473,351	10,034,595
포항시	18,065	1,761,824	226,100	2,005,989
경주시	0	668,836	33,440	702,276
김천시	3,660	543,298	14,640	561,598
안동시	1,500	448,278	30,160	479,938
구미시	0	224,057	14,450	238,507
영주시	0	343,541	33,040	376,581
영천시	962	648,817	301,974	951,753
상주시	11,508	403,264	55,072	469,844
문경시	7,522	476,977	59,350	543,849
경산시	12,124	259,170	17,640	288,934
군위군	1,448	145,791	13,200	160,439
의성군	0	0	3,222	3,222
청송군	455	0	0	455
영양군	450	0	0	450
영덕군	1,614	104,796	204,519	310,929
청도군	4,384	31,430	49,314	85,128
고령군	0	120,223	715,200	835,423
성주군	280	314,457	533,200	847,937
칠곡군	0	155,125	81,080	236,205
예천군	13,902	278,563	38,200	330,665
봉화군	0	168,486	14,910	183,396
울진군	348	386,089	34,640	421,077
울릉군	0	0	0	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 창원시가 2,783,47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령군이 0원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의령군은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이 전혀 없었다.

〈표 13-2-127〉 경상남도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계	14,232	7,547,235	2,085,364	9,646,831
창원시	1,654	2,322,600	459,219	2,783,473
진주시	7,033	444,492	208,970	660,495
통영시	30	201,952	110,900	312,882
사천시	2,617	442,732	325,898	771,247
김해시	0	906,294	396,469	1,302,763
밀양시	0	384,724	39,200	423,924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거제시	0	49,200	40,344	89,544
양산시	0	708,243	99,200	807,443
의령군	0	0	0	0
함안군	1,398	382,430	46,862	430,690
창녕군	0	234,000	6,776	240,776
고성군	0	292,988	20,200	313,188
남해군	0	86,940	103,232	190,172
하동군	0	781,523	120,300	901,823
산청군	1,500	0	27,794	29,294
함양군	0	67,500	19,800	87,300
거창군	0	174,117	26,000	200,117
합천군	0	67,500	34,200	101,7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중 제주시가 744,382천원으로 서귀포시 622,494천원보다 많았다.

〈표 13-2-128〉 제주특별자치도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생산품우선 구매액	사업우선 위탁액	자체예산 지원액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계	0	786,908	579,968	1,366,876
제주시	0	389,564	354,818	744,382
서귀포시	0	397,344	225,150	622,49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3.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가.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강남구가 2.12%로 가장 낮았고, 중랑구가 19.89%로 가장 높았다.

〈표 13-2-129〉 서울특별시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 ①}×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 ③}×100
계	268.0	297.1	10.87	2,526,814	2,790,217	10.42
중로구	277.6	292.2	5.26	2,701,254	2,977,656	10.23
중구	276.3	306.7	11.00	2,841,348	3,205,950	12.83
용산구	279.2	299.6	7.31	2,693,198	2,807,629	4.25
성동구	265.7	296.5	11.59	2,401,145	2,742,204	14.20
광진구	250.3	291.9	16.62	2,529,772	2,851,457	12.72
동대문구	277.4	315.5	13.73	2,673,747	2,970,743	11.11
중랑구	276.9	328.2	18.53	2,606,692	3,125,204	19.89
성북구	266.3	295.6	11.00	2,415,911	2,690,228	11.35
강북구	278.4	308.9	10.96	2,480,624	2,747,632	10.76
도봉구	268.5	304.3	13.33	2,607,374	2,857,204	9.58
노원구	290.2	315.8	8.82	2,464,065	2,642,706	7.25
은평구	273.1	311.8	14.17	2,478,469	2,840,404	14.60
서대문구	244.1	268.8	10.12	2,366,567	2,620,351	10.72
마포구	256.3	288	12.37	2,387,439	2,687,221	12.56
양천구	247.1	276.5	11.90	2,273,186	2,673,141	17.59
강서구	282.4	321	13.67	2,586,107	2,896,939	12.02
구로구	256.3	264.1	3.04	2,469,751	2,529,208	2.41
금천구	272.7	308.8	13.24	2,522,632	2,844,616	12.76
영등포구	263.5	298.6	13.32	2,551,326	2,863,600	12.24
동작구	274.6	303.1	10.38	2,353,091	2,668,065	13.39
관악구	269.3	303.7	12.77	2,454,050	2,837,320	15.62
서초구	258.1	242.7	-5.97	2,609,161	2,381,347	8.73
강남구	280	298.1	6.46	2,777,083	2,836,041	2.12
송파구	251.7	287.7	14.30	2,410,406	2,595,978	7.70
강동구	262.9	298.8	13.66	2,515,950	2,862,573	13.78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 동구가 9.95%로 가장 낮았고, 중구가 21.45%로 가장 높았다.

〈표 13-2-130〉 부산광역시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 ①}×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 ③}×100
계	269.5	304.8	13.10	2,921,431	3,336,530	14.21
중구	279.6	328.1	17.35	2,985,604	3,626,089	21.45
서구	265.1	302	13.92	2,844,953	3,274,332	15.09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times 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times 100\}$
동구	287.5	322.8	12.28	3,078,224	3,384,519	9.95
영도구	319.7	365.9	14.45	3,397,126	3,947,176	16.19
부산진구	278.7	311.6	11.80	3,023,198	3,372,797	11.56
동래구	258.4	294.6	14.01	2,996,118	3,461,756	15.54
남구	274.8	311.1	13.21	2,931,811	3,372,740	15.04
북구	264.3	294.1	11.28	2,625,659	2,973,085	13.23
해운대구	279.3	311.8	11.64	2,979,084	3,445,776	15.67
사하구	271.4	305.4	12.53	2,906,016	3,297,333	13.47
금정구	258	293.3	13.68	2,834,647	3,225,860	13.80
강서구	237.6	271	14.06	3,140,573	3,549,892	13.03
연제구	245.4	276.3	12.59	2,668,223	3,003,982	12.58
수영구	257.1	291.4	13.34	2,593,742	2,879,817	11.03
사상구	259.2	295.5	14.00	2,852,319	3,331,682	16.81
기장군	276.3	302.3	9.41	2,885,591	3,237,637	12.20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 남구가 2.83%로 가장 낮았고, 동구가 13.52%로 가장 높았다.

〈표 13-2-131〉 대구광역시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times 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times 100\}$
계	261.9	282.7	7.94	2,510,417	2,711,271	8.00
중구	288.8	302.9	4.88	2,773,153	3,015,749	8.75
동구	291.9	326.5	11.85	2,621,502	2,976,012	13.52
서구	254.2	270.4	6.37	2,608,017	2,740,346	5.07
남구	263.5	273.4	3.76	2,453,417	2,522,881	2.83
북구	244.9	272.2	11.15	2,324,409	2,627,715	13.05
수성구	238.4	265.3	11.28	2,195,139	2,427,067	10.57
달서구	244.5	260.6	6.58	2,316,520	2,479,090	7.02
달성군	269.1	290.4	7.92	2,791,178	2,901,304	3.95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 강화군이 8.28%로 가장 낮았고, 옹진군이 34.66%로 가장 높았다.

〈표 13-2-132〉 인천광역시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times 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times 100\}$
계	256.2	290.6	13.42	2,389,672	2,790,100	16.76
중구	248.9	270.6	8.72	2,334,499	2,633,412	12.80
동구	284.8	330.8	16.15	2,602,299	2,954,496	13.53
남구	247.8	289.9	16.99	2,394,658	2,787,657	16.41
연수구	246.2	270.2	9.75	2,218,123	2,480,586	11.83
남동구	236.8	274.7	16.01	2,285,791	2,672,232	16.91
부평구	263.5	299.3	13.59	2,510,663	2,870,300	14.32
계양구	234	276.9	18.33	2,452,301	3,021,868	23.23
서구	231.1	267.9	15.92	2,627,671	3,067,239	16.73
강화군	275.7	300.7	9.07	2,301,317	2,491,793	8.28
옹진군	293.5	325.1	10.77	2,169,393	2,921,412	34.66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남구가 13.26%로 가장 낮았고, 서구가 22.02%로 가장 높았다.

〈표 13-2-133〉 광주광역시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times 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times 100\}$
계	209.1	233.6	11.72	2,142,546	2,487,453	16.10
동구	229.5	248.4	8.24	2,299,258	2,617,129	13.82
서구	199.8	231.3	15.77	2,009,240	2,451,711	22.02
남구	198.8	216.9	9.10	2,002,556	2,268,060	13.26
북구	208.8	239.5	14.70	2,112,485	2,475,140	17.17
광산구	208.6	231.9	11.17	2,289,193	2,625,224	14.68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 유성구가 7.64%로 가장 낮았고, 중구가 17.97%로 가장 높았다.

〈표 13-2-134〉 대전광역시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times 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times 100\}$
계	249.3	276.2	10.80	2,438,651	2,752,077	12.85
동구	276.2	313.2	13.40	2,581,849	2,918,868	13.05
중구	229.2	259.2	13.09	2,389,457	2,818,803	17.97
서구	238.5	260.2	9.10	2,296,049	2,564,607	11.70
유성구	252.6	269.9	6.85	2,414,223	2,598,725	7.64
대덕구	249.9	278.4	11.40	2,511,675	2,859,380	13.84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울산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동구가 7.07%로 가장 낮았고, 북구가 13.25%로 가장 높았다.

〈표 13-2-135〉 울산광역시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times 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times 100\}$
계	257.4	284.2	10.43	3,108,003	3,440,517	10.70
중구	251.9	278.7	10.64	2,981,713	3,342,316	12.09
남구	258.4	290.7	12.50	3,238,472	3,572,561	10.32
동구	271.1	302.3	11.51	3,067,462	3,284,258	7.07
북구	223.3	248.1	11.11	2,472,997	2,800,687	13.25
울주군	282.2	301.3	6.77	3,779,370	4,202,763	11.20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동두천시가 -14.87%로 가장 낮았고, 오산시가 29.15%로 가장 높았다.

〈표 13-2-136〉 경기도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times 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times 100\}$
계	268.60	293.90	9.42	2,627,237	2,920,097	11.15
수원시	261.4	302.4	15.68	2,539,497	3,000,974	18.17
성남시	296.6	328.9	10.89	2,681,851	3,006,405	12.10
고양시	278.5	300.9	8.04	2,623,608	2,864,337	9.18
부천시	275.3	302.6	9.92	2,921,573	3,321,764	13.70
안양시	261.3	280.3	7.27	2,759,297	2,897,180	5.00
안산시	251.7	290.1	15.26	2,630,894	3,074,825	16.87
용인시	266.9	288.9	8.24	2,632,068	2,948,980	12.04
의정부시	259.7	305	17.44	2,443,699	2,856,978	16.91
남양주시	270.1	309.3	14.51	2,836,777	3,264,557	15.08
평택시	256.9	291.4	13.43	2,561,969	2,952,031	15.23
광명시	286.4	310.8	8.52	2,514,559	2,909,088	15.69
시흥시	228.5	267.9	17.24	2,451,350	2,932,444	19.63
군포시	275.7	297.2	7.80	2,674,232	2,961,866	10.76
화성시	254.2	289	13.69	2,443,485	2,952,680	20.84
파주시	282.6	294.6	4.25	2,705,951	2,827,410	4.49
이천시	274.6	293.9	7.03	2,565,488	2,923,392	13.95
구리시	259.5	302.8	16.69	2,568,231	3,095,690	20.54
김포시	262	282.6	7.86	2,700,011	3,011,126	11.52
포천시	264.8	294.6	11.25	2,631,064	2,934,794	11.54
광주시	232.8	218.4	-6.19	2,326,988	2,095,382	-9.95
안성시	228.9	243.9	6.55	2,456,899	2,658,659	8.21
하남시	293.6	346.1	17.88	3,105,469	3,579,284	15.26
의왕시	264.4	296.6	12.18	2,889,211	3,191,958	10.48
양주시	240.6	260.7	8.35	2,225,812	2,440,544	9.65
오산시	225.5	278.9	23.68	2,340,476	3,022,624	29.15
여주군	261.9	284.7	8.71	2,729,160	3,068,631	12.44
양평군	314.5	339.9	8.08	2,980,602	3,204,785	7.52
동두천시	268.1	220.2	-17.87	2,737,270	2,330,140	-14.87
파천시	264.2	276.3	4.58	2,338,964	2,488,270	6.38
가평군	369.1	396.9	7.53	2,860,891	3,033,639	6.04
연천군	296.4	315.1	6.31	2,567,011	2,672,571	4.11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양구군이 0.17%로 가장 낮았고, 고성군이 19.19%로 가장 높았다.

〈표 13-2-137〉 강원도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 진천군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 ①}×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 ③}×100
계	272.1	294.1	8.08	253,821	2,790,982	9.98
춘천시	253.1	258.4	2.09	2,304,916	2,417,029	4.86
원주시	251.7	283.7	12.71	2,401,390	2,742,921	14.22
강릉시	257.1	294.1	14.39	2,517,339	2,856,357	13.47
동해시	289.9	328.6	13.35	2,989,147	3,258,766	9.02
태백시	269.6	297.2	10.24	2,466,307	2,880,546	16.80
속초시	292	325	11.30	2,577,590	2,856,551	10.82
삼척시	275.4	290.5	5.48	2,716,618	2,744,612	1.03
홍천군	270.4	282	4.29	2,767,612	2,856,978	3.23
횡성군	269.5	293.9	9.05	2,422,924	2,861,959	18.12
영월군	261.7	283.7	8.41	2,805,572	3,194,524	13.86
평창군	253.1	279.6	10.47	2,387,160	2,842,622	19.08
정선군	269	280.7	4.35	2,372,458	2,472,826	4.23
철원군	274	304.9	11.28	2,387,227	2,808,772	17.66
화천군	290.2	296.1	2.03	2,414,860	2,489,318	3.08
양구군	291.7	291.4	-0.10	2,899,451	2,904,362	0.17
인제군	274	280.2	2.26	2,553,613	2,673,048	4.68
고성군	282.8	307.9	8.88	2,474,297	2,949,155	19.19
양양군	271.9	315	15.85	2,222,289	2,427,321	9.23

이 6.12%로 가장 낮았고, 단양군이 15.07%로 가장 높았다.

〈표 13-2-138〉 충청북도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 ①}×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 ③}×100
계	284.9	314.6	10.44	2,775,338	3,116,827	12.30
청주시	242.5	277.5	14.43	2,295,407	2,636,896	14.88
충주시	267.3	304.1	13.77	2,670,269	2,950,646	10.50
제천시	257.8	279.5	8.42	2,699,773	3,085,598	14.29
청원군	264.6	301.2	13.83	2,805,226	3,118,174	11.16
보은군	310	342.6	10.52	3,308,192	3,802,064	14.93
옥천군	322.1	369.2	14.62	3,290,416	3,773,625	14.69
영동군	318.8	339.5	6.49	2,925,937	3,342,157	14.23
증평군	262.9	288.1	9.59	2,440,801	2,707,065	10.91
진천군	262.3	288.8	10.10	2,676,141	2,839,983	6.12
괴산군	293.8	310.4	5.65	2,791,383	3,073,503	10.11
음성군	350.4	384.1	9.62	2,677,368	2,938,781	9.76
단양군	266.3	290.7	9.16	2,723,146	3,133,427	15.07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 예산군이 -1.11%로 가장 낮았고, 부여군이 16.07%로 가장 높았다.

〈표 13-2-139〉 충청남도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 ①}×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 ③}×100
계	277.4	298.1	7.44	2,763,884	3,035,146	9.82
천안시	239.7	249.7	4.17	2,525,456	2,730,440	8.12
공주시	270.4	290.8	7.54	3,097,685	3,236,021	4.47
보령시	278.6	295.7	6.14	2,562,875	2,805,446	9.46
아산시	267.8	281.5	5.12	2,746,350	2,916,017	6.18
서산시	251.6	276.5	9.90	2,475,294	2,614,102	5.61
논산시	275.8	308.4	11.82	2,909,689	3,309,667	13.75
계룡시	209.8	233.1	11.11	2,012,930	2,179,137	8.26
당진시	265.3	292.3	10.18	2,622,472	3,020,385	15.17
금산군	301.3	330.5	9.69	3,208,966	3,565,307	11.10
부여군	303	328.7	8.48	3,086,818	3,582,808	16.07
서천군	315	340.9	8.22	2,911,529	3,356,029	15.27
청양군	308.3	332.6	7.88	2,970,494	3,354,523	12.93
홍성군	306.2	313.1	2.25	2,679,731	3,037,161	13.34
예산군	282.4	284.7	0.81	2,836,270	2,804,837	-1.11
태안군	286.4	312.6	9.15	2,811,706	3,015,310	7.24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고창군이 -6.27%로 가장 낮았고, 전주시가 19.96%로 가장 높았다.

〈표 13-2-140〉 전라북도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 ①}×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 ③}×100
계	272.9	295.0	8.09	2,811,629	3,124,772	11.14
전주시	210.6	242.9	15.34	2,172,907	2,606,671	19.96
군산시	259.8	287.5	10.66	2,563,996	2,760,510	7.66
익산시	267.1	283.8	6.25	2,543,983	2,736,153	7.55
정읍시	270.9	293.8	8.45	2,791,083	3,039,550	8.90
남원시	269.4	296	9.87	2,613,362	2,865,809	9.66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times 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times 100\}$
김제시	304.6	322	5.71	3,266,560	3,733,707	14.30
완주군	253.7	285.9	12.69	2,668,431	3,085,596	15.63
진안군	329.9	363.7	10.25	3,152,478	3,602,631	14.28
무주군	287.1	297	3.45	2,836,192	3,231,018	13.92
장수군	266.8	300.5	12.63	2,478,787	2,926,065	18.04
임실군	274.6	305	11.07	2,883,054	3,343,567	15.97
순창군	285.2	305.5	7.12	3,137,983	3,339,414	6.42
고창군	243.8	218.3	-10.46	2,810,304	2,634,157	-6.27
부안군	297.2	327.9	10.33	3,443,688	3,841,954	11.57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영광군이 6.72%로 가장 낮았고, 구례군이 22.12%로 가장 높았다.

〈표 13-2-141〉 전라남도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times 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times 100\}$
계	273.0	298.6	9.37	2,862,696	3,252,283	13.61
목포시	265.1	294.8	11.20	2,931,082	3,374,537	15.13
여수시	247.1	279.5	13.11	2,664,647	3,206,238	20.33
순천시	222.2	251.9	13.37	2,547,031	2,889,579	13.45
나주시	259.5	287.3	10.71	2,813,551	3,259,394	15.85
광양시	212	239.4	12.92	2,266,944	2,534,070	11.78
담양군	263.8	292.1	10.73	2,740,545	3,170,108	15.67
곡성군	288.2	319.6	10.90	2,768,303	3,176,339	14.74
구례군	271	307.7	13.54	3,137,336	3,831,379	22.12
고흥군	278	303	8.99	3,241,961	3,765,287	16.14
보성군	277.2	295.4	6.57	2,854,892	3,054,464	6.99
화순군	240.4	261.9	8.94	2,681,326	2,863,275	6.79
장흥군	287.9	309.8	7.61	2,795,473	3,046,075	8.96
강진군	278.6	297.9	6.93	2,786,649	3,155,961	13.25
해남군	298.3	329.6	10.49	3,273,253	3,719,653	13.64
영암군	279.7	296.7	6.08	2,944,595	3,378,311	14.73
무안군	266.5	290.4	8.97	3,031,857	3,347,988	10.43
함평군	273.5	292	6.76	2,765,882	3,038,772	9.87
영광군	281.5	303.7	7.89	2,993,949	3,195,220	6.72
장성군	291.6	312.4	7.13	3,093,812	3,523,381	13.88
완도군	332	352.8	6.27	2,862,735	3,194,183	11.58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2)-①)/$ $①\} \times 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4)-③)/$ $③\} \times 100$
진도군	294.9	324.1	9.90	2,810,486	3,360,282	19.56
신안군	296.7	326.7	10.11	2,972,993	3,465,728	16.57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 울릉군이 -11.27%로 가장 낮았고, 포항시가 16.39%로 가장 높았다.

〈표 13-2-142〉 경상북도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2)-①)/$ $①\} \times 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4)-③)/$ $③\} \times 100$
계	279.7	299.2	7.00	2,951,020	3,214,478	8.93
포항시	256.9	287.7	11.99	2,663,418	3,100,011	16.39
경주시	277.7	298.7	7.56	3,132,247	3,588,852	14.58
김천시	276.4	304.5	10.17	3,049,194	3,504,035	14.92
안동시	275.8	303.6	10.08	3,138,136	3,479,841	10.89
구미시	233.8	254	8.64	2,528,745	2,773,175	9.67
영주시	251.6	280.3	11.41	2,577,859	2,795,320	8.44
영천시	296.5	315.4	6.37	2,814,719	3,114,289	10.64
상주시	294.4	324.5	10.22	2,928,038	3,278,542	11.97
문경시	277.5	295.7	6.56	2,763,748	2,904,438	5.09
경산시	259.1	283	9.22	2,626,151	2,972,861	13.20
군위군	296.7	308.5	3.98	2,888,485	3,067,308	6.19
의성군	295.3	320.9	8.67	3,448,140	3,810,564	10.51
청송군	280.7	299.7	6.77	3,089,204	3,289,970	6.50
영양군	271.8	269.8	-0.74	2,886,345	2,859,856	-0.92
영덕군	311.7	339.7	8.98	3,113,235	3,530,554	13.40
청도군	334.3	358.6	7.27	3,716,159	4,051,703	9.03
고령군	272	274.4	0.88	2,768,882	2,852,465	3.02
성주군	281.1	290.7	3.42	3,173,163	3,370,380	6.22
칠곡군	292.4	314	7.39	2,917,796	3,116,001	6.79
예천군	279.7	305	9.05	3,209,479	3,548,014	10.55
봉화군	268.8	287	6.77	2,913,477	3,298,026	13.20
울진군	283.5	303.9	7.20	2,894,921	3,291,353	13.69
울릉군	264.4	262.4	-0.76	2,631,917	2,335,425	-11.27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 거창군

이 5.41%로 가장 낮았고, 양산시가 21.05%로 가장 높았다.

〈표 13-2-143〉 경상남도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times 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times 100\}$
계	273.7	298.9	9.22	3,133,762	3,516,365	12.21
창원시	273.5	300.4	9.84	3,327,567	3,776,204	13.48
진주시	238.2	269.2	13.01	2,778,443	3,159,970	13.73
통영시	263.6	294	11.53	3,038,045	3,435,489	13.08
사천시	283.5	317.8	12.10	3,461,647	3,921,347	13.28
김해시	257.9	290	12.45	3,190,961	3,660,475	14.71
밀양시	281.6	297.3	5.58	3,154,376	3,330,631	5.59
거제시	245.5	266.6	8.59	3,081,533	3,472,530	12.69
양산시	246.7	290.7	17.84	2,959,030	3,581,951	21.05
의령군	315.5	328.9	4.25	3,693,755	4,093,677	10.83
함안군	274.5	306.6	11.69	3,273,442	3,550,703	8.47
창녕군	296	320.5	8.28	3,617,690	4,045,309	11.82
고성군	284.7	315.1	10.68	3,276,064	3,925,363	19.82
남해군	270.2	293.5	8.62	3,245,297	3,549,104	9.36
하동군	268	290.8	8.51	3,077,766	3,531,621	14.75
산청군	290.6	311.2	7.09	2,802,694	3,116,472	11.20
함양군	286.5	304.3	6.21	2,591,104	2,824,306	9.00
거창군	251.7	267.2	6.16	2,768,532	2,918,324	5.41
합천군	298.1	316.2	6.07	3,069,766	3,401,093	10.79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중 제주시가 8.48%로 서귀포시 16.25%보다 크게 낮았다.

〈표 13-2-144〉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times 100\}$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times 100\}$
계	253.1	281.6	11.24	2,328,240	2,617,419	12.42
제주시	250.7	278.6	11.13	2,294,062	2,488,613	8.48
서귀포시	255.5	284.5	11.35	2,362,417	2,746,224	16.25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관악구가 -10.87%로 가장 낮았고, 강북구가 6.87%로 가장 높았다.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은 서초구가 -36.58%로 가장 낮았고, 용산구가 16.80%로 가장 높았다.

〈표 13-2-145〉 서울특별시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100	'11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100
계	1,072.4	1,058.7	-1.28	6,949,816.1	6,303,625.6	-9.30
종로구	1,100	1,020	-7.27	6,116,510	5,994,152	-2.00
중구	994	1,029	3.52	6,391,636	6,440,645	0.77
용산구	998	1,057	5.91	6,684,918	7,808,180	16.80
성동구	974	973	-0.10	6,693,029	5,357,603	-19.95
광진구	1,030	975	-5.34	6,510,805	5,391,360	-17.19
동대문구	1,173	1,230	4.86	6,669,263	7,162,022	7.39
중랑구	1,129	1,136	0.62	7,386,532	7,279,271	-1.45
성북구	1,080	1,099	1.76	6,452,066	6,004,591	-6.94
강북구	932	996	6.87	6,747,568	6,640,330	-1.59
도봉구	1,073	1,048	-2.33	6,831,961	5,036,306	-26.28
노원구	1,338	1,389	3.81	8,895,755	8,653,949	-2.72
은평구	991	944	-4.74	6,043,060	5,507,544	-8.86
서대문구	979	992	1.33	5,756,154	5,219,331	-9.33
마포구	1,034	992	-4.06	5,834,407	4,805,614	-17.63
양천구	1,049	992	-5.43	8,867,568	6,438,297	-27.40
강서구	1,063	1,057	-0.56	7,034,582	6,948,688	-1.22
구로구	1,093	1,012	-7.41	7,007,992	5,372,652	-23.34
금천구	1,057	1,095	3.60	7,043,515	6,997,172	-0.66
영등포구	1,084	1,144	5.54	7,026,243	7,533,559	7.22
동작구	1,211	1,148	-5.20	7,504,912	7,392,089	-1.50
관악구	1,067	951	-10.87	6,247,635	5,774,465	-7.57
서초구	1,085	1,004	-7.47	7,899,877	5,009,716	-36.58
강남구	1,154	1,069	-7.37	8,557,070	6,746,867	-21.15
송파구	1,117	1,174	5.10	6,940,657	6,365,098	-8.29
강동구	1,006	942	-6.36	6,601,688	5,711,140	-13.49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금

정구가 -20.44%로 가장 낮았고, 영도구가 3.10%로 가장 높았다.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은 사상구가 -45.84%로 가장 낮았고, 중구가 3.11%로 가장 높았다.

〈표 13-2-146〉 부산광역시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100	'11년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100
계	1,002.1	932.5	-6.94	8,585,849.6	6,272,921.4	-26.94
중구	929	924	-0.54	6,043,236	6,231,463	3.11
서구	1,018	990	-2.75	7,623,122	5,158,834	-32.33
동구	1,166	1,176	0.86	9,365,717	8,090,408	-13.62
영도구	1,129	1,164	3.10	10,842,298	9,379,491	-13.49
부산진구	1,147	1,034	-9.85	8,047,557	7,039,461	-12.53
동래구	918	856	-6.75	8,400,260	5,604,346	-33.28
남구	969	844	-12.90	8,995,551	6,070,331	-32.52
북구	1,074	995	-7.36	8,509,360	6,315,361	-25.78
해운대구	1,095	1,052	-3.93	8,632,867	6,712,786	-22.24
사하구	953	902	-5.35	6,776,924	4,727,552	-30.24
금정구	1,003	798	-20.44	9,640,562	5,334,687	-44.66
강서구	782	730	-6.65	6,406,120	5,414,527	-15.48
연제구	1,058	969	-8.41	7,648,896	6,189,508	-19.08
수영구	818	773	-5.50	11,390,320	6,888,525	-39.52
사상구	1,032	909	-11.92	11,414,244	6,181,645	-45.84
기장군	942	804	-14.65	7,636,559	5,027,817	-34.16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동구가 -9.76%로 가장 낮았고, 서구가 -2.90%로 가장 높았다.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은 동구가 -26.23%로 가장 낮았고, 중구가 -0.61%로 가장 높았다.

〈표 13-2-147〉 대구광역시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100	'11년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100
계	1,167.0	1,096.8	-6.02	7,687,317.1	6,766,235.0	-11.98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times 100\}$	'11년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times 100\}$
중구	1,085	1,025	-5.53	7,233,746	7,189,805	-0.61
동구	1,137	1,026	-9.76	7,926,212	5,847,212	-26.23
서구	1,102	1,070	-2.90	7,593,067	7,046,940	-7.19
남구	1,257	1,170	-6.92	8,471,383	7,757,997	-8.42
북구	1,129	1,080	-4.34	7,279,458	5,762,723	-20.84
수성구	1,176	1,104	-6.12	8,015,818	6,792,010	-15.27
달서구	1,204	1,136	-5.65	7,519,413	6,815,323	-9.36
달성군	1,246	1,163	-6.66	7,459,440	6,917,870	-7.26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용진군이 -17.28%로 가장 낮았고, 부평구가 5.52%로 가장 높았다.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은 용진군이 -55.51%로 가장 낮았고, 동구가 9.59%로 가장 높았다.

〈표 13-2-148〉 인천광역시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times 100\}$	'11년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times 100\}$
계	977.4	974.3	-0.32	6667641.3	5862774.6	-12.07
중구	950	932	-1.89	6,323,772	5,317,227	-15.92
동구	910	953	4.73	5,381,765	5,897,878	9.59
남구	1,054	1,046	-0.76	7,641,952	6,409,016	-16.13
연수구	1,007	1,005	-0.20	6,470,758	6,089,313	-5.89
남동구	913	854	-6.46	6,298,412	5,829,269	-7.45
부평구	1,123	1,185	5.52	7,587,855	7,138,882	-5.92
계양구	1,093	1,142	4.48	6,636,792	6,135,612	-7.55
서구	1,038	1,050	1.16	6,900,889	6,477,101	-6.14
강화군	841	877	4.28	5,606,906	5,851,107	4.36
용진군	845	699	-17.28	7,827,312	3,482,341	-55.51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서구가 -14.24%로 가장 낮았고, 남구가 -4.99%로 가장 높았다.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

군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은 서구가 -29.06%로 가장 낮았고, 남구가 2.09%로 가장 높았다.

〈표 13-2-149〉 광주광역시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times 100\}$	'11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times 100\}$
계	1025.4	934.8	-8.84	8708082.2	6917997.4	-20.56
동구	1,054	973	-7.69	8,910,583	6,782,340	-23.88
서구	976	837	-14.24	8,095,109	5,742,418	-29.06
남구	1,003	953	-4.99	7,122,048	7,270,596	2.09
북구	1,018	967	-5.01	9,528,857	7,387,074	-22.48
광산구	1,076	944	-12.27	9,883,814	7,407,559	-25.05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동구가 -6.40%로 가장 낮았고, 서구가 2.51%로 가장 높았다.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은 동구가 -14.21%로 가장 낮았고, 유성구가 1.78%로 가장 높았다.

〈표 13-2-150〉 대전광역시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times 100\}$	'11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times 100\}$
계	1,101.8	1,083	-1.71	7,602,660.8	7,201,533.4	-5.28
동구	1,125	1,053	-6.40	7,238,208	6,209,957	-14.21
중구	1,088	1,104	1.47	7,668,241	7,741,933	0.96
서구	1,116	1,144	2.51	8,334,563	7,357,289	-11.73
유성구	1,075	1,015	-5.58	7,244,306	7,373,440	1.78
대덕구	1,105	1,099	-0.54	7,527,986	7,325,048	-2.70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울주군이 -7.82%로 가장 낮았고, 북구가 0.45%로 가장 높았다.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

군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은 울주군이 -32.38%로 가장 낮았고, 남구가 -17.22%로 가장 높았다.

〈표 13-2-151〉 울산광역시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100	'11년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100
계	938.4	893.0	-4.84	8,425,929.6	6,210,062.6	-26.30
중구	1,054	995	-5.60	10,205,412	7,161,670	-29.82
남구	905	862	-4.75	8,000,618	6,622,714	-17.22
동구	913	857	-6.13	5,211,591	4,138,229	-20.60
북구	887	891	0.45	8,620,197	6,303,498	-26.88
울주군	933	860	-7.82	10,091,830	6,824,202	-32.38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포천시 가 -27.84%로 가장 낮았고, 하남시가 18.79%로 가장 높았다.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은 용인시가 -32.64%로 가장 낮았고, 의왕시가 6.49%로 가장 높았다.

〈표 13-2-152〉 경기도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100	'11년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100
계	1,047.0	1,013.7	-3.17	7,037,349.4	6,055,110.5	-13.96
수원시	1,283	1,249	-2.65	8,165,030	7,250,563	-11.20
성남시	1,170	1,090	-6.84	7,131,958	5,835,972	-18.17
고양시	1,171	1,120	-4.36	6,701,761	5,741,523	-14.33
부천시	1,125	1,061	-5.69	9,631,556	6,761,222	-29.80
안양시	1,100	1,124	2.18	6,887,949	6,235,320	-9.47
안산시	1,129	1,131	0.18	8,155,353	8,189,807	0.42
용인시	1,047	941	-10.12	7,431,542	5,005,600	-32.64
의정부시	1,072	1,016	-5.22	7,958,033	6,778,295	-14.82
남양주시	1,025	1,035	0.98	8,067,323	6,543,884	-18.88
평택시	948	932	-1.69	6,588,482	6,092,575	-7.53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100	'11년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100
광명시	1,164	1,075	-7.65	7,069,092	7,359,778	4.11
시흥시	1,003	1,006	0.30	6,344,454	6,153,657	-3.01
군포시	1,043	1,029	-1.34	7,279,447	5,340,900	-26.63
화성시	968	914	-5.58	6,720,558	5,807,642	-13.58
파주시	1,033	1,000	-3.19	6,186,407	6,233,618	0.76
이천시	983	908	-7.63	5,437,214	5,097,388	-6.25
구리시	1,072	1,034	-3.54	7,648,656	5,968,212	-21.97
김포시	1,121	1,001	-10.70	8,053,759	6,377,964	-20.81
포천시	1,243	897	-27.84	9,107,899	8,204,234	-9.92
광주시	892	901	1.01	4,686,880	4,899,698	4.54
안성시	984	1,001	1.73	7,180,992	6,863,005	-4.43
하남시	1,208	1,435	18.79	9,412,602	7,506,022	-20.26
의왕시	871	938	7.69	4,855,023	5,170,207	6.49
양주시	1,414	1,354	-4.24	8,704,028	6,515,110	-25.15
오산시	888	820	-7.66	8,458,632	5,752,481	-31.99
여주군	1,018	983	-3.44	6,564,219	5,373,234	-18.14
양평군	942	915	-2.87	6,051,556	5,101,844	-15.69
동두천시	948	940	-0.84	5,706,868	5,160,466	-9.57
과천시	714	669	-6.30	4,738,598	3,372,875	-28.82
가평군	885	854	-3.50	5,081,976	4,860,352	-4.36
연천군	992	1,053	6.15	6,149,984	6,154,978	0.08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정선군이 -16.42%로 가장 낮았고, 홍천군이 8.72%로 가장 높았다.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은 화천군이 -36.97%로 가장 낮았고, 태백시가 12.98%로 가장 높았다.

〈표 13-2-153〉 강원도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100	'11년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100
계	903.4	868.8	-3.84	6,379,201.3	5,495,601.3	-13.85
춘천시	1,051	1,054	0.29	8,855,487	6,546,861	-26.07
원주시	977	911	-6.76	6,748,541	6,178,871	-8.44
강릉시	958	855	-10.75	6,509,150	4,596,122	-29.39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100	'11년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100
동해시	921	922	0.11	6,438,987	5,972,772	-7.24
태백시	1,100	985	-10.45	5,601,933	6,328,843	12.98
속초시	912	940	3.07	6,240,660	5,124,479	-17.89
삼척시	895	883	-1.34	6,418,943	6,410,240	-0.14
홍천군	780	848	8.72	4,980,316	5,326,091	6.94
횡성군	817	773	-5.39	4,573,463	4,515,133	-1.28
영월군	854	877	2.69	6,287,432	5,583,183	-11.20
평창군	790	751	-4.94	3,886,887	3,905,376	0.48
정선군	865	723	-16.42	5,350,434	4,829,560	-9.74
철원군	949	983	3.58	7,846,704	6,319,934	-19.46
화천군	941	895	-4.89	7,991,119	5,036,697	-36.97
양구군	989	931	-5.86	8,165,219	6,140,009	-24.80
인제군	828	795	-3.99	6,520,253	5,815,609	-10.81
고성군	710	676	-4.79	5,759,510	4,966,747	-13.76
양양군	925	836	-9.62	6,650,586	5,324,297	-19.94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진천군이 -11.85%로 가장 낮았고, 증평군이 7.16%로 가장 높았다.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은 청원군이 -24.77%로 가장 낮았고, 단양군이 11.10%로 가장 높았다.

〈표 13-2-154〉 충청북도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100	'11년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100
계	991.9	971.9	-2.02	6,715,615.0	6,081,227.8	-9.45
청주시	1,035	1,048	1.26	6,864,739	6,843,544	-0.31
충주시	986	875	-11.26	5,908,533	4,620,757	-21.80
제천시	985	940	-4.57	6,162,472	4,857,536	-21.18
청원군	1,013	1,008	-0.49	7,165,710	5,391,032	-24.77
보은군	1,088	1,082	-0.55	6,579,178	7,236,196	9.99
옥천군	1,038	1,030	-0.77	9,285,284	7,594,335	-18.21
영동군	819	851	3.91	6,709,932	5,752,060	-14.28
증평군	852	913	7.16	6,300,812	6,013,125	-4.57
진천군	1,046	922	-11.85	7,502,094	5,804,307	-22.63
괴산군	1,019	969	-4.91	6,735,338	7,297,913	8.35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textcircled{2}-\textcircled{1})/\textcircled{1}\}\times 100$	'11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textcircled{4}-\textcircled{3})/\textcircled{3}\}\times 100$
음성군	1,086	1,056	-2.76	6,348,960	5,981,796	-5.78
단양군	936	969	3.53	5,024,328	5,582,132	11.10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천안시가 -11.10%로 가장 낮았고, 서천군이 3.19%로 가장 높았다.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은 보령시가 -31.17%로 가장 낮았고, 계룡시가 28.16%로 가장 높았다.

〈표 13-2-155〉 충청남도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textcircled{2}-\textcircled{1})/\textcircled{1}\}\times 100$	'11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textcircled{4}-\textcircled{3})/\textcircled{3}\}\times 100$
계	992.3	963.7	-2.89	7,132,232.9	6,176,327.9	-13.40
천안시	1,063	945	-11.10	8,431,177	7,347,510	-12.85
공주시	1,063	1,056	-0.66	7,113,644	6,179,965	-13.13
보령시	1,010	903	-10.59	7,193,187	4,951,092	-31.17
아산시	966	993	2.80	6,600,810	6,207,954	-5.95
서산시	994	935	-5.94	7,276,084	6,144,693	-15.55
논산시	1,055	1,031	-2.27	9,447,993	8,255,972	-12.62
계룡시	709	705	-0.56	3,427,063	4,392,275	28.16
당진시	929	896	-3.55	6,169,393	4,642,539	-24.75
금산군	1,080	1,071	-0.83	8,688,905	6,454,296	-25.72
부여군	961	967	0.62	6,067,443	6,428,374	5.95
서천군	1,066	1,100	3.19	10,856,263	7,872,575	-27.48
청양군	1,150	1,044	-9.22	5,800,580	6,420,174	10.68
홍성군	1,024	1,056	3.13	6,537,723	5,845,232	-10.59
예산군	886	826	-6.77	7,411,953	5,953,102	-19.68
태안군	929	927	-0.22	5,961,276	5,549,165	-6.91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무주군이 -15.04%로 가장 낮았고, 완주군이 -2.92%로 가장 높았다.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은 무주군이 -36.33%로 가장 낮았고, 고창군이

2.65%로 가장 높았다.

〈표 13-2-156〉 전라북도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times 100$	'11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times 100$
계	956.6	884.7	-7.51	7,154,780.1	5,891,504.4	-17.66
전주시	956	865	-9.52	9,137,068	6,023,027	-34.08
군산시	965	894	-7.36	7,070,049	6,399,758	-9.48
익산시	1,040	948	-8.85	8,037,008	6,556,448	-18.42
정읍시	989	914	-7.58	7,379,032	5,401,766	-26.80
남원시	1,031	957	-7.18	7,441,573	5,892,582	-20.82
김제시	1,021	965	-5.48	7,694,334	6,188,724	-19.57
완주군	926	899	-2.92	6,677,216	6,746,533	1.04
진안군	1,125	999	-11.20	7,401,543	7,038,889	-4.90
무주군	891	757	-15.04	6,188,451	3,940,256	-36.33
장수군	885	855	-3.39	5,436,488	4,635,601	-14.73
임실군	1,036	986	-4.83	8,754,942	6,030,532	-31.12
순창군	804	735	-8.58	6,319,963	5,753,076	-8.97
고창군	861	829	-3.72	6,083,647	6,245,060	2.65
부안군	862	783	-9.16	6,545,608	5,628,809	-14.01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영암군이 -15.39%로 가장 낮았고, 진도군이 4.67%로 가장 높았다.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은 나주시가 -32.15%로 가장 낮았고, 강진군이 17.47%로 가장 높았다.

〈표 13-2-157〉 전라남도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times 100$	'11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times 100$
계	906.8	867.0	-4.38	6,788,825.5	6,098,175.7	-10.17
목포시	1,063	1,013	-4.70	8,555,789	7,891,285	-7.77
여수시	1,021	966	-5.39	8,190,370	7,191,958	-12.19
순천시	856	790	-7.71	7,508,196	6,165,609	-17.88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100	'11년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100
나주시	1,044	913	-12.55	7,713,917	5,233,761	-32.15
광양시	845	805	-4.73	5,513,202	4,787,903	-13.16
담양군	829	759	-8.44	5,639,683	5,185,410	-8.05
곡성군	971	942	-2.99	6,562,720	5,299,327	-19.25
구례군	823	825	0.24	8,388,333	5,722,911	-31.78
고흥군	902	845	-6.32	7,677,616	8,060,162	4.98
보성군	906	854	-5.74	5,907,741	5,559,538	-5.89
화순군	871	778	-10.68	6,876,589	6,335,817	-7.86
장흥군	899	896	-0.33	6,317,211	6,665,450	5.51
강진군	996	962	-3.41	7,037,258	8,266,735	17.47
해남군	938	936	-0.21	6,900,673	5,984,422	-13.28
영암군	851	720	-15.39	5,536,600	5,038,907	-8.99
무안군	883	820	-7.13	8,050,889	5,697,130	-29.24
함평군	747	775	3.75	4,986,768	4,952,748	-0.68
영광군	890	835	-6.18	8,363,046	5,846,143	-30.10
장성군	899	851	-5.34	5,946,334	5,193,212	-12.67
완도군	979	991	1.23	6,744,994	6,878,872	1.98
진도군	835	874	4.67	5,277,543	5,593,085	5.98
신안군	901	925	2.66	5,658,689	6,609,481	16.80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영양군이 -15.82%로 가장 낮았고, 울릉군이 17.72%로 가장 높았다.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은 경산시가 -28.85%로 가장 낮았고, 울릉군이 32.57%로 가장 높았다.

〈표 13-2-158〉 경상북도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100	'11년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100
계	948.4	897.4	-5.38	6,691,631.9	5,997,476.3	-10.37
포항시	1,011	976	-3.46	6,603,701	6,059,553	-8.24
경주시	1,059	936	-11.61	7,921,296	6,365,103	-19.65
김천시	1,012	932	-7.91	7,253,195	6,531,565	-9.95
안동시	1,051	990	-5.80	7,446,247	6,563,796	-11.85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100	'11년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100
구미시	1,031	970	-5.92	7,807,078	7,369,777	-5.60
영주시	924	855	-7.47	6,324,500	5,139,460	-18.74
영천시	1,187	1,054	-11.20	8,937,847	8,253,232	-7.66
상주시	1,077	934	-13.28	7,662,679	6,613,531	-13.69
문경시	1,053	970	-7.88	8,416,978	6,964,342	-17.26
경산시	868	800	-7.83	6,418,813	4,567,255	-28.85
군위군	925	932	0.76	6,536,551	5,516,739	-15.60
의성군	888	849	-4.39	8,287,042	6,596,438	-20.40
청송군	874	862	-1.37	5,283,530	4,725,468	-10.56
영양군	866	729	-15.82	5,830,089	6,244,704	7.11
영덕군	992	1,009	1.71	6,177,784	6,095,567	-1.33
청도군	914	885	-3.17	5,754,858	5,253,888	-8.71
고령군	821	817	-0.49	5,944,765	4,939,911	-16.90
성주군	1,059	1,071	1.13	8,889,890	7,510,872	-15.51
칠곡군	1,096	1,035	-5.57	6,567,308	5,784,797	-11.92
예천군	818	779	-4.77	5,952,635	5,826,492	-2.12
봉화군	897	860	-4.12	5,090,715	4,903,686	-3.67
울진군	979	911	-6.95	6,704,841	7,338,092	9.44
울릉군	412	485	17.72	2,095,191	2,777,687	32.57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남해군이 -9.29%로 가장 낮았고, 김해시가 4.03%로 가장 높았다.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은 밀양시가 -21.30%로 가장 낮았고, 창녕군이 9.00%로 가장 높았다.

〈표 13-2-159〉 경상남도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 }×100	'11년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 }×100
계	936.1	903.9	-3.44	6,797,373.8	6,427,801.7	-5.44
창원시	1,072	1,024	-4.48	7,880,884	7,071,901	-10.27
진주시	952	897	-5.78	6,903,906	6,632,906	-3.93
통영시	1,046	985	-5.83	7,917,765	7,623,628	-3.71
사천시	952	870	-8.61	6,612,642	6,100,808	-7.74
김해시	1,067	1,110	4.03	8,199,029	8,849,746	7.94
밀양시	905	882	-2.54	7,630,773	6,005,572	-21.30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times 100\}$	'11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times 100\}$
거제시	832	800	-3.85	7,640,126	7,847,475	2.71
양산시	944	909	-3.71	7,806,123	6,371,679	-18.38
의령군	911	906	-0.55	6,004,057	6,177,576	2.89
함안군	900	918	2.00	5,435,913	5,450,183	0.26
창녕군	1,122	1,101	-1.87	6,482,462	7,065,621	9.00
고성군	811	751	-7.40	7,709,079	6,874,225	-10.83
남해군	915	830	-9.29	7,233,562	6,285,234	-13.11
하동군	851	815	-4.23	4,946,317	5,030,025	1.69
산청군	840	807	-3.93	5,099,255	4,939,884	-3.13
함양군	889	869	-2.25	4,635,095	4,592,558	-0.92
거창군	898	885	-1.45	7,575,089	6,238,955	-17.64
합천군	942	911	-3.29	6,640,652	6,542,454	-1.48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중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은 제주시가 2.00로 서귀포시 2.19%보다 다소 낮았다.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은 제주시가 -5.94%로 서귀포시 -3.01%보다 낮았다.

〈표 13-2-160〉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단위: 일, 원,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A)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B)		
	'11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①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②	$\{((②-①)/①)\times 100\}$	'11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③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④	$\{((④-③)/③)\times 100\}$
계	979.0	999.5	2.09	6,143,211.0	5,864,247.0	-4.54
제주시	999	1,019	2.00	6,418,705	6,037,663	-5.94
서귀포시	959	980	2.19	5,867,717	5,690,831	-3.01

주: 광역지자체의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합을 기초지자체수로 나눈 것임.

다.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종로구가 86.67%로 가장 낮았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노원구가 99.80%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38.77%

로 가장 낮았다.

〈표 13-2-161〉 서울특별시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100
계	10,806	11,101	97.34	1,934,674,897	2,667,240,437	72.54
종로구	208	240	86.67	49,267,520	62,524,420	78.80
중구	327	335	97.61	51,067,230	131,734,420	38.77
용산구	256	266	96.24	39,676,600	65,383,800	60.68
성동구	381	381	100.00	61,732,894	126,479,054	48.81
광진구	236	236	100.00	37,055,330	42,653,140	86.88
동대문구	621	650	95.54	82,717,460	88,534,324	93.43
중랑구	655	657	99.70	76,695,550	174,899,220	43.85
성북구	500	501	99.80	87,798,880	104,337,300	84.15
강북구	599	627	95.53	95,805,500	103,099,280	92.93
도봉구	284	295	96.27	39,145,980	44,569,580	87.83
노원구	945	979	96.53	174,364,140	174,710,120	99.80
은평구	605	607	99.67	94,802,100	167,408,920	56.63
서대문구	238	310	76.77	76,352,150	94,124,320	81.12
마포구	302	302	100.00	55,885,070	79,784,750	70.04
양천구	273	313	87.22	71,724,763	83,291,453	86.11
강서구	899	907	99.12	144,932,400	226,168,990	64.08
구로구	334	342	97.66	63,380,560	94,925,770	66.77
금천구	463	463	100.00	73,939,140	88,946,510	83.13
영등포구	574	574	100.00	86,457,750	111,896,040	77.27
동작구	407	407	100.00	54,915,670	62,872,556	87.34
관악구	486	486	100.00	113,103,670	132,517,870	85.35
서초구	178	178	100.00	37,178,690	39,888,460	93.21
강남구	432	435	99.31	96,686,730	125,945,130	76.77
송파구	333	337	98.81	113,441,040	179,331,500	63.26
강동구	270	273	98.90	56,548,080	61,213,510	92.3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 중구, 서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96.39%로 가장 낮았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사상구가 85.97%로 가장 높았고, 연제구가 41.90%로 가장 낮았다.

〈표 13-2-162〉 부산광역시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100
계	10,017	10,075	99.42	1,416,178,768	2,032,499,080	69.68
중구	202	202	100.00	23,308,890	49,871,300	46.74
서구	532	532	100.00	90,185,990	137,385,048	65.64
동구	615	638	96.39	52,445,790	81,749,430	64.15
영도구	717	718	99.86	109,540,170	160,099,600	68.42
부산진구	1,012	1,044	96.93	99,236,590	120,588,150	82.29
동래구	420	420	100.00	71,609,400	86,878,366	82.42
남구	549	549	100.00	58,770,810	94,160,850	62.42
북구	891	893	99.78	101,915,560	125,947,600	80.92
해운대구	1,130	1,130	100.00	138,947,410	193,703,118	71.73
사하구	1,032	1,032	100.00	165,173,780	250,868,168	65.84
금정구	549	549	100.00	54,291,740	66,112,800	82.12
강서구	185	185	100.00	24,130,400	51,312,180	47.03
연제구	517	517	100.00	58,789,348	140,293,190	41.90
수영구	400	400	100.00	34,245,810	46,161,540	74.19
사상구	843	843	100.00	295,386,520	343,573,240	85.97
기장군	423	423	100.00	38,200,560	83,794,500	45.5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 중구, 남구, 달성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달서구가 94.13%로 가장 낮았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서구가 97.28%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77.62%로 가장 낮았다.

〈표 13-2-163〉 대구광역시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100
계	5,603	5,698	98.33	990,517,284	1,122,931,614	88.21
중구	263	263	100.00	132,084,870	142,232,190	92.87
동구	881	893	98.66	137,940,450	142,128,460	97.05
서구	672	675	99.56	87,136,130	89,571,860	97.28
남구	488	488	100.00	100,887,050	113,701,840	88.73
북구	771	774	99.61	144,149,690	185,709,723	77.62
수성구	747	747	100.00	137,782,064	154,558,210	89.15
달서구	1,235	1,312	94.13	196,986,250	229,578,931	85.80
달성군	546	546	100.00	53,550,780	65,450,400	81.8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 중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계양구가 94.33%로 가장 낮았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옹진군이 94.81%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35.31%로 가장 낮았다.

〈표 13-2-164〉 인천광역시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 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 100
계	4,444	4,475	99.31	513,926,847	755,575,117	68.02
중구	211	211	100.00	22,116,470	62,640,590	35.31
동구	197	200	98.50	15,113,380	23,546,290	64.19
남구	723	723	100.00	104,560,450	136,081,770	76.84
연수구	416	416	100.00	45,084,830	56,567,220	79.70
남동구	732	733	99.86	103,174,157	183,973,317	56.08
부평구	1,079	1,079	100.00	120,090,280	157,715,630	76.14
계양구	449	476	94.33	30,600,360	45,044,820	67.93
서구	440	440	100.00	47,833,270	55,811,360	85.71
강화군	157	157	100.00	22,864,950	31,569,060	72.43
옹진군	40	40	100.00	2,488,700	2,625,060	94.8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가 100.00%를 보였고, 북구만이 88.43%이었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광산구가 96.43%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85.76%로 가장 낮았다.

〈표 13-2-165〉 광주광역시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 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 100
계	1,297	1,311	98.93	556,286,190	612,016,220	90.89
동구	405	405	100.00	55,533,260	62,845,860	88.36
서구	409	409	100.00	82,575,750	88,732,890	93.06
남구	158	158	100.00	56,838,330	66,279,390	85.76
북구	107	121	88.43	182,673,980	208,876,550	87.46
광산구	218	218	100.00	178,664,870	185,281,530	96.4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98.99%로 가장 낮았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유성구

가 94.78%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65.87%로 가장 낮았다.

〈표 13-2-166〉 대전광역시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100
계	2,570	2,580	99.61	420,158,298	553,645,760	75.89
동구	687	694	98.99	103,606,950	151,878,020	68.22
중구	479	482	99.38	68,247,200	103,605,960	65.87
서구	567	567	100.00	58,805,080	83,104,250	70.76
유성구	199	199	100.00	96,915,420	102,256,960	94.78
대덕구	638	638	100.00	92,583,648	112,800,570	82.0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가 100.00%를 보였고, 동구만이 99.37%이었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북구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울주군이 58.09%로 가장 낮았다.

〈표 13-2-167〉 울산광역시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100
계	1,297	1,298	99.92	161,972,250	204,139,037	79.34
중구	405	405	100.00	43,748,330	48,199,269	90.77
남구	409	409	100.00	53,990,220	64,172,590	84.13
동구	158	159	99.37	17,617,070	19,232,798	91.60
북구	107	107	100.00	10,699,670	10,699,670	100.00
울주군	218	218	100.00	35,916,960	61,834,710	58.0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평택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의왕시, 여주군, 과천시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양주시가 79.53%로 가장 낮았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시흥시가 99.78%로 가장 높았고, 수원시가 46.52%로 가장 낮았다.

〈표 13-2-168〉 경기도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 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 100
계	11,828	12,330	95.93	1,941,527,473	2,503,247,627	77.56
수원시	991	1,064	93.14	85,950,240	184,749,930	46.52
성남시	809	843	95.97	144,131,760	231,547,720	62.25
고양시	726	727	99.86	133,631,130	216,553,890	61.71
부천시	953	985	96.75	237,538,250	249,707,970	95.13
안양시	461	488	94.47	63,153,770	69,891,990	90.36
안산시	1,122	1,303	86.11	127,220,230	211,875,090	60.04
용인시	385	387	99.48	51,863,630	57,183,480	90.70
의정부시	172	191	90.05	149,421,530	152,701,370	97.85
남양주시	467	478	97.70	70,277,510	72,836,670	96.49
평택시	609	609	100.00	66,725,400	97,753,150	68.26
광명시	301	302	99.67	42,062,270	44,177,280	95.21
시흥시	222	244	90.98	69,764,240	69,919,120	99.78
군포시	214	214	100.00	34,211,570	44,300,660	77.23
화성시	394	394	100.00	37,584,350	48,371,317	77.70
파주시	464	467	99.36	88,229,720	92,630,410	95.25
이천시	247	247	100.00	24,835,270	50,672,920	49.01
구리시	216	216	100.00	37,769,600	64,158,930	58.87
김포시	273	286	95.45	39,694,390	44,398,225	89.41
포천시	383	386	99.22	41,390,800	44,536,220	92.94
광주시	192	193	99.48	45,658,490	45,974,170	99.31
안성시	373	373	100.00	47,420,900	51,970,900	91.25
하남시	229	249	91.97	45,090,140	46,541,440	96.88
의왕시	114	114	100.00	8,506,830	8,526,335	99.77
양주시	171	215	79.53	57,656,750	58,508,570	98.54
오산시	191	195	97.95	13,834,550	20,871,890	66.28
여주군	269	269	100.00	21,575,780	25,841,720	83.49
양평군	221	225	98.22	22,617,510	31,170,440	72.56
동두천시	262	267	98.13	38,285,460	40,806,030	93.82
과천시	32	32	100.00	8,875,050	8,999,670	98.62
가평군	155	156	99.36	30,737,480	44,483,860	69.10
연천군	210	211	99.53	55,812,873	71,586,260	77.9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정선군이 68.35%로 가장 낮았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평창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철원군이 45.72%로 가장 낮았다.

〈표 13-2-169〉 강원도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100
계	4,183	4,252	98.38	609,044,420	791,111,300	76.99
춘천시	745	751	99.20	128,129,790	135,840,180	94.32
원주시	712	713	99.86	91,658,740	136,088,760	67.35
강릉시	456	456	100.00	47,521,830	92,673,770	51.28
동해시	314	315	99.68	34,197,770	35,051,860	97.56
태백시	111	111	100.00	18,418,740	21,346,300	86.29
속초시	291	291	100.00	56,050,430	77,657,870	72.18
삼척시	255	255	100.00	30,978,100	33,602,630	92.19
홍천군	198	198	100.00	23,559,040	30,802,180	76.48
횡성군	171	171	100.00	25,089,630	29,767,310	84.29
영월군	145	155	93.55	28,336,770	28,371,330	99.88
평창군	78	78	100.00	12,105,820	12,105,820	100.00
정선군	108	158	68.35	10,227,610	10,415,410	98.20
철원군	135	135	100.00	25,172,460	55,063,640	45.72
화천군	118	118	100.00	21,750,200	21,832,520	99.62
양구군	101	101	100.00	19,088,400	19,248,600	99.17
인제군	85	86	98.84	12,940,690	21,467,190	60.28
고성군	78	78	100.00	14,776,120	18,897,020	78.19
양양군	82	82	100.00	9,042,280	10,878,910	83.1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청주시가 96.38%로 가장 낮았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보은군이 99.55%로 가장 높았고, 영동군이 41.83%로 가장 낮았다.

〈표 13-2-170〉 충청북도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100
계	3,328	3,359	99.08	573,412,400	726,634,210	78.91
청주시	745	773	96.38	114,379,670	136,336,430	83.90
충주시	558	558	100.00	139,609,550	191,653,410	72.84
제천시	500	500	100.00	79,207,310	102,576,770	77.22
청원군	238	238	100.00	21,883,560	25,457,530	85.96
보은군	106	106	100.00	35,905,900	36,068,110	99.55
옥천군	207	208	99.52	69,074,020	69,464,060	99.44
영동군	204	204	100.00	13,034,030	31,161,920	41.83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 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 100
증평군	92	92	100.00	8,574,650	8,976,730	95.52
진천군	161	161	100.00	19,909,900	44,666,000	44.58
괴산군	131	133	98.50	23,427,260	23,640,120	99.10
음성군	285	285	100.00	28,110,550	34,884,650	80.58
단양군	101	101	100.00	20,296,000	21,748,480	93.3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 13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당진시와 논산시가 각각 99.55%, 80.24%이었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청양군이 99.85%로 가장 높았고, 예산군이 38.70%로 가장 낮았다.

〈표 13-2-171〉 충청남도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 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 100
계	4,409	4,543	97.05	803,545,630	1,138,366,104	70.59
천안시	758	758	100.00	146,346,530	265,028,890	55.22
공주시	359	359	100.00	58,623,080	67,646,970	86.66
보령시	339	339	100.00	53,243,930	60,350,856	88.22
아산시	504	504	100.00	179,383,150	200,495,600	89.47
서산시	301	301	100.00	47,871,680	61,711,954	77.57
논산시	540	673	80.24	60,502,760	131,651,554	45.96
계룡시	15	15	100.00	3,521,210	3,551,140	99.16
당진시	220	221	99.55	34,967,340	43,319,040	80.72
금산군	162	162	100.00	35,106,230	39,941,280	87.89
부여군	268	268	100.00	40,107,490	45,779,540	87.61
서천군	222	222	100.00	34,608,990	44,489,410	77.79
청양군	76	76	100.00	23,518,540	23,553,120	99.85
홍성군	250	250	100.00	30,448,870	31,475,360	96.74
예산군	274	274	100.00	35,245,140	91,075,990	38.70
태안군	121	121	100.00	20,050,690	28,295,400	70.86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군산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완주군이 70.69%로 가장 낮았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임실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전주시가 58.91%로 가장 낮았다.

〈표 13-2-172〉 전라북도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 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 100
계	7,969	8,273	96.33	1,000,093,330	1,260,517,076	79.34
전주시	1,975	1,978	99.85	183,056,950	310,752,970	58.91
군산시	1,008	1,008	100.00	172,340,640	188,080,820	91.63
익산시	564	567	99.47	125,391,020	153,801,820	81.53
정읍시	1,093	1,094	99.91	69,067,700	79,900,900	86.44
남원시	542	599	90.48	138,376,770	186,703,266	74.12
김제시	857	865	99.08	96,383,420	99,875,020	96.50
완주군	328	464	70.69	33,849,590	37,570,580	90.10
진안군	185	185	100.00	12,571,190	12,575,000	99.97
무주군	106	106	100.00	11,499,960	13,155,990	87.41
장수군	124	124	100.00	17,377,390	17,465,060	99.50
임실군	226	226	100.00	18,399,450	18,399,450	100.00
순창군	153	153	100.00	25,622,570	37,284,930	68.72
고창군	393	408	96.32	54,272,020	56,542,320	95.98
부안군	415	496	83.67	41,884,660	48,408,950	86.5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20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순천시와 장성군이 각각 99.87%, 93.49%이었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영광군이 99.65%로 가장 높았고, 신안군이 62.77%로 가장 낮았다.

〈표 13-2-173〉 전라남도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 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 100
계	9,221	9,247	99.72	977,023,500	1,108,334,843	88.15
목포시	1,405	1,405	100.00	180,764,380	204,132,130	88.55
여수시	942	942	100.00	115,681,140	138,281,382	83.66
순천시	778	779	99.87	78,501,200	100,915,040	77.79
나주시	590	590	100.00	77,225,080	88,877,130	86.89
광양시	156	156	100.00	16,710,700	16,734,020	99.86
담양군	178	178	100.00	28,823,510	29,814,860	96.67
곡성군	196	196	100.00	17,610,860	19,779,500	89.04
구례군	158	158	100.00	16,144,830	18,491,650	87.31
고흥군	631	631	100.00	55,521,920	62,329,390	89.08
보성군	293	293	100.00	18,712,720	19,453,760	96.19
화순군	351	351	100.00	29,425,130	32,105,390	91.65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100
장흥군	288	288	100.00	32,949,740	33,750,740	97.63
강진군	235	235	100.00	21,219,350	22,331,240	95.02
해남군	579	579	100.00	27,212,760	32,443,980	83.88
영암군	292	292	100.00	21,314,350	21,553,860	98.89
무안군	326	326	100.00	26,111,890	28,550,240	91.46
함평군	280	280	100.00	34,813,190	35,035,040	99.37
영광군	350	350	100.00	26,370,280	26,461,940	99.65
장성군	359	384	93.49	53,285,950	53,504,910	99.59
완도군	297	297	100.00	37,518,180	47,108,121	79.64
진도군	256	256	100.00	35,338,120	35,631,940	99.18
신안군	281	281	100.00	25,768,220	41,048,580	62.7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 17개 지자체가 100.00%로 가장 높았는데, 이들은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등이다. 울릉군이 92.31%로 가장 낮았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울릉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성주군이 41.64%로 가장 낮았다.

〈표 13-2-174〉 경상북도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100
계	8,134	8,196	99.24	1,135,527,160	1,530,300,521	74.20
포항시	1,332	1,332	100.00	156,053,250	170,921,790	91.30
경주시	714	734	97.28	105,044,820	125,989,740	83.38
김천시	418	422	99.05	35,426,610	39,841,520	88.92
안동시	658	658	100.00	74,005,100	114,820,262	64.45
구미시	415	415	100.00	90,899,070	176,285,700	51.56
영주시	455	477	95.39	78,938,130	96,285,804	81.98
영천시	370	370	100.00	75,078,050	81,124,620	92.55
상주시	296	296	100.00	37,204,680	49,095,550	75.78
문경시	314	314	100.00	54,643,120	65,291,320	83.69
경산시	536	536	100.00	73,466,930	122,116,370	60.16
군위군	92	92	100.00	14,592,220	14,981,260	97.40
의성군	368	368	100.00	34,566,830	54,984,610	62.87
청송군	135	135	100.00	32,142,330	40,767,640	78.84
영양군	96	96	100.00	27,567,360	27,928,820	98.71
영덕군	240	240	100.00	33,969,780	34,909,800	97.31
청도군	178	178	100.00	55,393,560	72,579,930	76.32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 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 100
고령군	219	219	100.00	25,617,970	27,357,885	93.64
성주군	185	185	100.00	20,220,410	48,555,070	41.64
칠곡군	276	278	99.28	28,666,980	36,334,410	78.90
예천군	243	243	100.00	23,590,110	41,151,820	57.32
봉화군	201	201	100.00	19,254,870	19,259,880	99.97
울진군	381	394	96.70	35,503,390	66,035,130	53.76
울릉군	12	13	92.31	3,681,590	3,681,590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 13개 지자체가 100.00%로 가장 높았는데, 이들은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이다. 의령군이 97.74%로 가장 낮았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의령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통영시가 55.84%로 가장 낮았다.

〈표 13-2-175〉 경상남도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 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 100
계	8,391	8,398	99.92	1,612,842,140	1,866,102,073	86.43
창원시	1,967	1,968	99.95	208,365,700	316,985,883	65.73
진주시	579	579	100.00	279,382,150	280,518,560	99.59
통영시	470	470	100.00	48,709,180	87,233,430	55.84
사천시	378	379	99.74	310,753,340	317,542,000	97.86
김해시	1,426	1,426	100.00	231,437,880	294,316,380	78.64
밀양시	594	594	100.00	87,249,140	88,310,850	98.80
거제시	410	411	99.76	53,245,630	57,220,820	93.05
양산시	397	398	99.75	66,344,180	84,942,850	78.10
의령군	130	133	97.74	21,641,090	21,641,090	100.00
함안군	254	254	100.00	36,468,030	39,057,090	93.37
창녕군	315	315	100.00	53,167,270	56,882,720	93.47
고성군	259	259	100.00	15,174,620	16,410,830	92.47
남해군	295	295	100.00	41,808,900	41,842,680	99.92
하동군	158	158	100.00	35,886,210	35,946,660	99.83
산청군	147	147	100.00	30,791,520	30,812,490	99.93
함양군	174	174	100.00	27,579,180	29,953,100	92.07
거창군	200	200	100.00	37,060,010	37,078,890	99.95
합천군	238	238	100.00	27,778,110	29,405,750	94.46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모두 100.00%이었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제주시가 69.53%로 서귀포시 57.49%보다 높았다.

〈표 13-2-176〉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11년도 통보건수②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③/④)×100
계	1,223	1,223	100.00	176,549,560	270,988,482	65.15
제주시	748	748	100.00	119,587,760	171,910,442	69.53
서귀포시	475	475	100.00	56,961,800	99,078,040	57.4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제3절 복지서비스

1.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은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금천구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0.00%로 가장 낮았다. 특히, 중구는 당해연도 및 과년도 환수액이 전혀 없었다.

〈표 13-3-1〉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단위: 천원,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0.7+ (C/D)×0.3 }×100
계	44,288	103,719	4,639	13,796	39.98
종로구	2,067	4,856	91	365	37.28
중구	0	1,118	0	182	0.00
용산구	2,127	2,313	182	365	79.33
성동구	926	2,852	0	91	22.73
광진구	95	2,182	0	456	3.05
동대문구	1,602	3,451	0	0	46.42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중랑구	471	2,135	0	365	15.44
성북구	2,297	5,772	219	310	49.05
강북구	1,874	2,276	235	417	74.54
도봉구	951	4,483	0	255	14.85
노원구	2,167	5,648	926	1,473	45.72
은평구	2,003	2,438	274	274	87.51
서대문구	1,745	2,214	328	511	74.43
마포구	2,285	4,616	91	91	64.65
양천구	2,836	5,637	0	91	35.22
강서구	275	4,131	73	985	6.88
구로구	3,467	5,002	0	1,309	48.52
금천구	1,187	1,187	164	164	100.00
영등포구	1,982	2,172	164	164	93.88
동작구	2,720	5,121	164	711	44.10
관악구	1,936	6,805	1,035	1,528	40.24
서초구	1,728	4,022	91	182	45.07
강남구	1,724	10,072	91	2,905	12.92
송파구	3,599	9,050	91	182	42.84
강동구	2,224	4,166	420	420	67.3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은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 동구, 금정구, 기장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51.63%로 가장 낮았다.

〈표 13-3-2〉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단위: 천원,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계	30,471	37,497	2,662	4,025	76.73
중구	295	295	0	456	70.00
서구	2,853	3,228	0	91	61.87
동구	632	632	0	0	100.00
영도구	864	959	255	255	93.07
부산진구	2,677	2,772	274	274	97.60
동래구	1,360	1,695	91	91	86.17
남구	2,592	2,592	73	255	78.59
북구	1,646	3,188	0	0	51.63
해운대구	3,283	4,468	675	675	81.43
사하구	2,279	2,519	310	310	93.33
금정구	1,304	1,304	91	91	100.00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강서구	1,100	1,472	91	182	67.31
연제구	2,018	2,582	182	725	62.24
수영구	3,791	5,453	91	91	78.66
사상구	2,404	2,965	365	365	86.76
기장군	1,373	1,373	164	164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 달서구가 88.64%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36.65%로 가장 낮았다.

〈표 13-3-3〉 대구광역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단위: 천원,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계	23,307	32,014	2,406	4,031	68.87
중구	364	700	0	0	52.00
동구	3,652	4,209	91	456	66.72
서구	833	1,917	91	438	36.65
남구	4,908	5,448	273	365	85.50
북구	3,631	4,465	182	456	68.90
수성구	3,053	6,695	511	985	47.48
달서구	3,434	3,941	857	930	88.64
달성군	3,432	4,639	401	401	81.7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은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 중구, 동구, 계양구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남동구가 68.47%로 가장 낮았다.

〈표 13-3-4〉 인천광역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단위: 천원,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계	31,428	37,259	6,269	7,310	84.77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중구	2,047	2,047	0	0	100.00
동구	1,509	1,509	182	182	100.00
남구	2,879	3,987	857	948	77.67
연수구	4,068	4,254	748	1,186	85.86
남동구	5,298	8,158	1,021	1,331	68.47
부평구	6,040	6,806	242	274	88.62
계양구	3,003	3,003	1,167	1,167	100.00
서구	2,817	3,098	912	1,003	90.93
강화군	2,560	2,944	711	711	90.87
옹진군	1,207	1,453	429	508	83.4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은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광산구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78.56%로 가장 낮았다.

〈표 13-3-5〉 광주광역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단위: 천원,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계	13,323	14,230	1,058	1,241	91.11
동구	1,492	1,493	0	0	99.93
서구	3,560	3,633	91	274	78.56
남구	2,949	3,214	73	73	94.23
북구	3,014	3,582	620	620	88.90
광산구	2,308	2,308	274	274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은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동구가 98.23%로 가장 높았고, 대덕구가 80.47%로 가장 낮았다.

〈표 13-3-6〉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단위: 천원,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계	21,117	23,339	1,879	1,879	93.34
동구	7,168	7,354	438	438	98.23
중구	2,266	2,826	146	146	86.13
서구	6,122	6,591	565	565	95.02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유성구	3,204	3,299	347	347	97.98
대덕구	2,357	3,269	383	383	80.4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은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 중구가 95.63%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3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3-7〉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단위: 천원,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계	7,706	12,983	711	1,222	59.00
중구	1,427	1,522	182	182	95.63
남구	2,247	3,448	274	274	75.62
동구	1,387	1,478	91	438	71.92
북구	759	1,771	0	73	30.00
울주군	1,886	4,764	164	255	47.0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과천시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포천시가 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3-8〉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단위: 천원,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계	99,714	173,083	15,168	26,446	57.53
수원시	9,427	13,050	1,076	1,514	71.89
성남시	2,717	7,796	1,562	2,091	46.81
고양시	7,537	8,484	894	1,076	87.11
부천시	9,177	13,717	985	985	76.83
안양시	3,412	4,823	420	784	65.59
안산시	4,470	5,301	693	876	82.76
용인시	7,806	19,159	709	3,099	35.38
의정부시	1,694	3,826	73	255	39.58
남양주시	4,460	6,185	383	383	80.48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평택시	7,038	11,330	255	500	58.78
광명시	3,174	4,355	529	730	72.76
시흥시	1,676	2,047	73	73	87.31
군포시	1,782	3,419	420	438	65.25
화성시	6,838	8,485	1,277	1,350	84.79
파주시	2,026	6,126	1,803	2,351	46.16
이천시	3,790	5,592	0	638	47.44
구리시	2,626	2,720	347	347	97.58
김포시	3,635	5,219	181	400	62.33
포천시	0	3,763	0	693	0.00
광주시	1,936	2,679	461	1,354	60.80
안성시	2,232	3,939	73	565	43.54
하남시	2,324	2,748	1,149	1,149	89.20
의왕시	456	2,365	0	438	13.50
양주시	649	4,645	182	401	23.40
오산시	1,010	1,199	91	91	88.97
여주군	2,424	3,492	91	274	58.55
양평군	2,082	8,957	146	1,311	19.61
동두천시	1,739	3,714	930	1,022	60.08
과천시	678	678	0	0	100.00
가평군	365	1,755	365	1,003	25.48
연천군	534	1,515	0	255	24.6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은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홍천군이 93.97%로 가장 높았고, 속초시와 정선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3-9〉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단위: 천원,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계	20,562	47,280	1,548	5,526	38.85
춘천시	2,612	4,025	328	328	75.43
원주시	2,877	3,843	73	73	82.40
강릉시	1,052	2,151	310	1,386	40.95
동해시	2,098	2,738	0	693	53.64
태백시	1,460	1,887	182	620	62.97
속초시	0	2,418	0	182	0.00
삼척시	1,333	4,309	91	274	31.62
홍천군	1,295	1,415	309	310	93.97
횡성군	2,615	4,170	0	182	43.90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영월군	832	6,948	0	511	8.38
평창군	350	1,324	0	274	18.50
정선군	0	1,156	0	0	0.00
철원군	1,557	3,319	91	347	40.71
화천군	351	1,814	0	91	13.54
양구군	91	186	73	73	64.25
인제군	450	2,232	0	91	14.11
고성군	1,138	1,607	0	0	70.82
양양군	451	1,738	91	91	48.16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은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 영동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증평군이 47.52%로 가장 낮았다.

〈표 13-3-10〉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단위: 천원,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계	38,231	51,531	10,960	13,343	76.58
청주시	6,339	9,349	938	1,878	62.45
충주시	3,785	3,974	2,143	2,143	96.67
제천시	1,571	2,953	146	237	55.71
청원군	2,134	5,369	3,322	3,686	54.85
보은군	1,588	2,609	438	620	63.77
옥천군	867	1,151	602	784	75.76
영동군	1,951	1,951	164	164	100.00
증평군	445	999	109	201	47.52
진천군	8,745	9,657	748	748	93.39
괴산군	4,128	4,726	1,733	1,733	91.13
음성군	5,526	6,273	199	547	72.56
단양군	1,154	2,521	420	602	52.9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은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 서산시가 92.40%로 가장 높았고, 계룡시가 2.94%로 가장 낮았다.

〈표 13-3-11〉 충청남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단위: 천원,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계	47,614	82,724	6,049	9,490	59.41
천안시	3,950	14,212	1,147	1,566	41.43
공주시	5,532	9,190	91	91	72.14
보령시	2,564	4,233	0	347	42.40
아산시	5,875	6,435	437	703	82.56
서산시	5,885	5,980	1,258	1,605	92.40
논산시	3,358	8,889	438	803	42.81
계룡시	76	1,807	0	91	2.94
당진시	2,386	4,922	803	1,313	52.28
금산군	2,642	3,630	0	91	50.95
부여군	5,232	6,772	1,547	1,547	84.08
서천군	4,643	4,905	73	73	96.26
청양군	798	1,362	91	91	71.01
홍성군	2,826	3,380	0	0	83.61
예산군	1,479	1,601	164	164	94.67
태안군	368	5,406	0	1,005	4.7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은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순창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3-12〉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단위: 천원,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계	45,196	73,425	3,975	6,529	61.35
전주시	9,606	15,065	565	1,003	61.53
군산시	2,245	2,416	91	91	95.05
익산시	2,809	6,960	620	803	51.41
정읍시	4,279	4,582	37	219	70.44
남원시	3,092	4,628	0	164	46.77
김제시	3,737	4,878	912	1,094	78.64
완주군	3,839	4,853	0	73	55.37
진안군	3,264	5,303	91	255	53.79
무주군	0	914	0	146	0.00
장수군	1,562	2,818	455	893	54.09
임실군	5,553	7,189	967	967	84.07
순창군	1,255	1,255	73	73	100.00
고창군	2,416	8,812	73	657	22.53
부안군	1,539	3,752	91	91	58.7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은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장성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진도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3-13〉 전라남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단위: 천원,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계	64,304	84,556	4,198	7,056	71.08
목포시	2,229	4,448	164	255	54.37
여수시	6,464	8,093	73	73	85.91
순천시	7,351	7,445	201	474	81.84
나주시	6,210	7,344	1,061	1,605	79.02
광양시	1,146	1,426	91	91	86.26
담양군	3,440	3,534	529	529	98.14
곡성군	1,443	1,538	0	365	65.68
구례군	836	1,007	73	73	88.11
고흥군	2,326	3,372	91	492	53.83
보성군	628	1,287	73	73	64.16
화순군	3,751	4,028	91	182	80.19
장흥군	2,122	2,940	183	256	71.97
강진군	1,951	3,671	73	164	50.56
해남군	4,853	6,699	401	401	80.71
영암군	2,803	3,121	0	0	89.81
무안군	2,902	4,010	164	237	71.42
함평군	2,765	5,145	292	474	56.10
영광군	2,576	2,670	91	182	82.54
장성군	2,151	2,151	182	182	100.00
완도군	3,523	3,936	0	0	89.51
진도군	0	2,015	0	255	0.00
신안군	2,834	4,676	365	693	58.2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은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 군위군과 의성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상주시가 23.51%로 가장 낮았다.

〈표 13-3-14〉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단위: 천원,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계	74,639	103,149	4,993	10,064	65.54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포항시	7,492	12,020	91	274	53.59
경주시	3,843	4,583	73	255	67.29
김천시	3,095	4,640	273	273	76.69
안동시	7,098	7,283	401	857	82.26
구미시	6,077	11,557	401	1,660	44.05
영주시	3,024	3,100	182	401	81.90
영천시	8,054	10,953	401	401	81.47
상주시	1,666	4,961	0	1,058	23.51
문경시	1,737	2,200	73	73	85.27
경산시	2,582	5,911	800	891	57.51
군위군	1,925	1,925	73	73	100.00
의성군	2,131	2,131	328	328	100.00
청송군	2,049	2,067	91	164	86.04
영양군	770	1,145	55	55	77.07
영덕군	2,650	3,281	419	602	77.42
청도군	2,388	3,305	0	91	50.58
고령군	1,443	1,538	274	274	95.68
성주군	6,579	7,254	292	748	75.20
칠곡군	3,113	3,853	219	401	72.94
예천군	1,551	1,861	0	255	58.34
봉화군	2,543	3,860	91	91	76.12
울진군	2,753	3,478	456	839	71.71
울릉군	76	243	0	0	31.2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은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 통영시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함안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3-15〉 경상남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단위: 천원,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계	40,449	68,189	2,808	6,254	54.99
창원시	6,909	13,078	584	1,842	46.49
진주시	1,082	1,893	91	164	56.66
통영시	562	562	0	0	100.00
사천시	584	1,135	146	146	66.02
김해시	2,935	4,743	237	511	57.23
밀양시	4,917	6,883	91	91	80.01
거제시	2,265	3,025	0	0	74.88
양산시	2,686	3,316	164	255	75.99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의령군	1,120	1,120	237	255	97.88
함안군	0	2,229	0	0	0.00
창녕군	1,410	2,385	0	91	41.38
고성군	3,841	3,936	602	1,149	84.03
남해군	1,437	2,376	73	164	55.69
하동군	1,578	5,969	182	675	26.59
산청군	2,207	2,976	182	182	81.91
함양군	1,237	1,312	0	0	94.28
거창군	686	3,796	128	401	22.23
합천군	4,993	7,455	91	328	55.2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중 제주시가 78.61%로 서귀포시 70.68% 보다 높았다.

〈표 13-3-16〉 제주특별자치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단위: 천원, %)

	당해연도 부당수급 환수액(A)	당해연도 부당수급 발생액(B)	과년도 부당수급 환수금액(C)	과년도 부당수급 미환수금액(D)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A/B) \times 0.7 + (C/D) \times 0.3\} \times 100$
계	12,106	16,952	1,295	1,714	72.66
제주시	5,245	6,436	839	1,167	78.61
서귀포시	6,861	10,516	456	547	70.68

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종로구가 70.38%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가 4.98%로 가장 낮았다.

〈표 13-3-17〉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단위: 명, %)

	신규 수급자수(A)	수급 가능자수(B)	신규 수급률(A/B×100)
계	6,276	43,255	14.51
종로구	587	834	70.38
중구	61	682	8.94
용산구	101	1,086	9.30
성동구	103	1,196	8.61

	신규 수급자수(A)	수급 가능자수(B)	신규 수급률(A/B×100)
광진구	130	1,471	8.84
동대문구	169	1,594	10.60
중랑구	241	1,746	13.80
성북구	183	2,062	8.87
강북구	240	1,651	14.54
도봉구	237	1,568	15.11
노원구	678	2,643	25.65
은평구	897	2,218	40.44
서대문구	149	1,386	10.75
마포구	125	1,697	7.37
양천구	231	1,880	12.29
강서구	343	2,567	13.36
구로구	154	1,883	8.18
금천구	112	1,030	10.87
영등포구	216	1,681	12.85
동작구	169	1,691	9.99
관악구	225	2,141	10.51
서초구	80	1,606	4.98
강남구	109	2,155	5.06
송파구	443	2,770	15.99
강동구	293	2,017	14.5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 강서구가 121.24%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13.12%로 가장 낮았다.

〈표 13-3-18〉 부산광역시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단위: 명, %)

	신규 수급자수(A)	수급 가능자수(B)	신규 수급률(A/B×100)
계	3,488	13,253	26.32
중구	26	177	14.69
서구	335	465	72.04
동구	85	376	22.61
영도구	204	602	33.89
부산진구	293	1,473	19.89
동래구	177	1,058	16.73
남구	148	1,128	13.12
북구	253	1,102	22.96
해운대구	476	1,505	31.63
사하구	298	1,175	25.36
금정구	176	904	19.47
강서구	371	306	121.24
연제구	252	780	32.31
수영구	109	734	14.85
사상구	176	962	18.30
기장군	109	506	21.5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 달성군이 68.72%로 가장 높았고, 달서구가 11.44%로 가장 낮았다.

〈표 13-3-19〉 대구광역시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단위: 명, %)

	신규 수급자수(A)	수급 가능자수(B)	신규 수급률(A/B×100)
계	2,906	9,061	32.07
중구	48	351	13.68
동구	914	1,414	64.64
서구	164	789	20.79
남구	132	625	21.12
북구	573	1,412	40.58
수성구	318	1,583	20.09
달서구	245	2,142	11.44
달성군	512	745	68.72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 옹진군이 170.83%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8.44%로 가장 낮았다.

〈표 13-3-20〉 인천광역시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단위: 명, %)

	신규 수급자수(A)	수급 가능자수(B)	신규 수급률(A/B×100)
계	2,453	11,968	20.50
중구	72	408	17.65
동구	40	474	8.44
남구	234	1,790	13.07
연수구	204	1,055	19.34
남동구	286	2,048	13.96
부평구	497	2,591	19.18
계양구	201	1,209	16.63
서구	463	1,849	25.04
강화군	292	448	65.18
옹진군	164	96	170.8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동구가 134.09%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18.18%로 가장 낮았다.

〈표 13-3-21〉 광주광역시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단위: 명, %)

	신규 수급자수(A)	수급 가능자수(B)	신규 수급률(A/B×100)
계	1,762	5,022	35.09
동구	531	396	134.09
서구	188	1,024	18.36
남구	474	882	53.74
북구	267	1,469	18.18
광산구	302	1,251	24.1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대덕구가 44.47%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15.63%로 가장 낮았다.

〈표 13-3-22〉 대전광역시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단위: 명, %)

	신규 수급자수(A)	수급 가능자수(B)	신규 수급률(A/B×100)
계	1,501	6,079	24.69
동구	268	1,135	23.61
중구	189	1,209	15.63
서구	435	1,829	23.78
유성구	235	1,065	22.07
대덕구	374	841	44.4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 북구가 29.89%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8.66%로 가장 낮았다.

〈표 13-3-23〉 울산광역시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단위: 명, %)

	신규 수급자수(A)	수급 가능자수(B)	신규 수급률(A/B×100)
계	719	4,720	15.23
중구	81	934	8.67
남구	109	1,259	8.66
동구	78	631	12.36
북구	188	629	29.89
울주군	263	1,267	20.76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가평군이 52.89%로 가장 높았

고, 과천시가 3.59%로 가장 낮았다.

〈표 13-3-24〉 경기도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단위: 명, %)

	신규 수급자수(A)	수급 가능자수(B)	신규 수급률(A/B×100)
계	8,908	49,598	17.96
수원시	428	4,026	10.63
성남시	481	4,042	11.90
고양시	782	3,742	20.90
부천시	437	3,399	12.86
안양시	269	2,167	12.41
안산시	391	2,773	14.10
용인시	475	3,773	12.59
의정부시	191	1,810	10.55
남양주시	524	2,324	22.55
평택시	208	1,973	10.54
광명시	104	1,423	7.31
시흥시	221	1,425	15.51
군포시	136	1,065	12.77
화성시	609	1,908	31.92
파주시	447	1,658	26.96
이천시	404	1,013	39.88
구리시	85	752	11.30
김포시	206	1,411	14.60
포천시	169	762	22.18
광주시	310	1,242	24.96
안성시	315	931	33.83
하남시	107	657	16.29
의왕시	51	539	9.46
양주시	210	936	22.44
오산시	242	767	31.55
여주군	113	636	17.77
양평군	303	683	44.36
동두천시	180	439	41.00
과천시	11	306	3.59
가평군	403	762	52.89
연천군	96	254	37.8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양양군이 101.52%로 가장 높았고, 태백시가 13.82%로 가장 낮았다.

〈표 13-3-25〉 강원도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단위: 명, %)

	신규 수급자수(A)	수급 가능자수(B)	신규 수급률(A/B×100)
계	2,158	7,679	28.10
춘천시	405	1,329	30.47
원주시	415	1,663	24.95
강릉시	283	1,001	28.27
동해시	95	412	23.06
태백시	55	398	13.82
속초시	97	341	28.45
삼척시	45	338	13.31
홍천군	132	400	33.00
횡성군	41	294	13.95
영월군	63	249	25.30
평창군	51	216	23.61
정선군	72	244	29.51
철원군	33	200	16.50
화천군	40	86	46.51
양구군	34	104	32.69
인제군	118	135	87.41
고성군	45	137	32.85
양양군	134	132	101.5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 음성군이 211.75%로 가장 높았고, 증평군이 19.53%로 가장 낮았다.

〈표 13-3-26〉 충청북도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단위: 명, %)

	신규 수급자수(A)	수급 가능자수(B)	신규 수급률(A/B×100)
계	3,265	7,095	46.02
청주시	672	2,573	26.12
충주시	334	928	35.99
제천시	249	702	35.47
청원군	300	816	36.76
보은군	46	162	28.40
옥천군	257	273	94.14
영동군	52	244	21.31
증평군	33	169	19.53
진천군	79	321	24.61
괴산군	78	216	36.11
음성군	1,099	519	211.75
단양군	66	172	38.3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 논산시가 84.71%로 가장 높았고, 당진시가 11.49%로 가장 낮았다.

〈표 13-3-27〉 충청남도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단위: 명, %)

	신규 수급자수(A)	수급 가능자수(B)	신규 수급률(A/B×100)
계	3,142	10,134	31.01
천안시	436	2,460	17.72
공주시	494	757	65.26
보령시	349	537	64.99
아산시	301	1,372	21.94
서산시	202	794	25.44
논산시	543	641	84.71
계룡시	15	123	12.20
당진시	100	870	11.49
금산군	78	244	31.97
부여군	134	420	31.90
서천군	100	317	31.55
청양군	39	212	18.40
홍성군	182	461	39.48
예산군	118	559	21.11
태안군	51	367	13.9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 남원시가 85.64%로 가장 높았고, 완주군이 24.32%로 가장 낮았다.

〈표 13-3-28〉 전라북도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단위: 명, %)

	신규 수급자수(A)	수급 가능자수(B)	신규 수급률(A/B×100)
계	2,985	7,854	38.01
전주시	648	2,416	26.82
군산시	292	1,107	26.38
익산시	713	1,227	58.11
정읍시	267	523	51.05
남원시	328	383	85.64
김제시	178	455	39.12
완주군	144	592	24.32
진안군	35	126	27.78
무주군	43	105	40.95
장수군	45	114	39.47
임실군	46	142	32.39
순창군	79	144	54.86
고창군	97	239	40.59
부안군	70	281	24.9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목포시가 102.11%로 가장 높았고, 무안군이 6.50%로 가장 낮았다.

〈표 13-3-29〉 전라남도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단위: 명, %)

	신규 수급자수(A)	수급 가능자수(B)	신규 수급률(A/B×100)
계	3,193	8,420	37.92
목포시	872	854	102.11
여수시	463	1,073	43.15
순천시	261	988	26.42
나주시	176	700	25.14
광양시	64	509	12.57
담양군	84	222	37.84
곡성군	133	149	89.26
구례군	24	127	18.90
고흥군	82	321	25.55
보성군	65	168	38.69
화순군	52	304	17.11
장흥군	77	202	38.12
강진군	36	145	24.83
해남군	272	304	89.47
영암군	49	332	14.76
무안군	53	815	6.50
함평군	61	208	29.33
영광군	87	267	32.58
장성군	135	205	65.85
완도군	68	201	33.83
진도군	28	143	19.58
신안군	51	183	27.8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 안동시가 107.66%로 가장 높았고, 군위군이 15.18%로 가장 낮았다.

〈표 13-3-30〉 경상북도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단위: 명, %)

	신규 수급자수(A)	수급 가능자수(B)	신규 수급률(A/B×100)
계	4,021	11,635	34.56
포항시	390	2,229	17.50
경주시	256	1,246	20.55
김천시	162	683	23.72
안동시	900	836	107.66
구미시	232	1,201	19.32
영주시	264	530	49.81

	신규 수급자수(A)	수급 가능자수(B)	신규 수급률(A/B×100)
영천시	197	411	47.93
상주시	211	566	37.28
문경시	63	399	15.79
경산시	533	1,045	51.00
군위군	17	112	15.18
의성군	63	262	24.05
청송군	35	106	33.02
영양군	32	91	35.16
영덕군	49	169	28.99
청도군	52	247	21.05
고령군	142	161	88.20
성주군	56	247	22.67
칠곡군	122	433	28.18
예천군	154	256	60.16
봉화군	39	173	22.54
울진군	45	203	22.17
울릉군	7	29	24.1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 의령군이 116.23%로 가장 높았고, 밀양시가 15.53%로 가장 낮았다.

〈표 13-3-31〉 경상남도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단위: 명, %)

	신규 수급자수(A)	수급 가능자수(B)	신규 수급률(A/B×100)
계	3,682	13,677	26.92
창원시	729	4,386	16.62
진주시	295	1,419	20.79
통영시	141	485	29.07
사천시	181	464	39.01
김해시	389	2,010	19.35
밀양시	84	541	15.53
거제시	324	900	36.00
양산시	241	1,050	22.95
의령군	179	154	116.23
함안군	105	377	27.85
창녕군	100	308	32.47
고성군	172	271	63.47
남해군	113	250	45.20
하동군	109	244	44.67
산청군	182	163	111.66
함양군	178	162	109.88
거창군	81	256	31.64
합천군	79	237	33.3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가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서귀포시가 32.57%로 제주시 31.43%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표 13-3-32〉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단위: 명, %)

	신규 수급자수(A)	수급 가능자수(B)	신규 수급률(A/B×100)
계	886	2,792	31.73
제주시	643	2,046	31.43
서귀포시	243	746	32.5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2. 아동보호서비스

가.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중구가 200.00%로 가장 높았고, 18개 지자체는 100.00%이었다. 6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33〉 서울특별시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단위: 명, %)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계	38	36	105.56
종로구	0	0	—
중구	4	2	200.00
용산구	2	2	100.00
성동구	1	1	100.00
광진구	0	0	—
동대문구	0	0	—
중랑구	1	1	100.00
성북구	1	1	100.00
강북구	0	0	—
도봉구	0	0	—
노원구	1	1	100.00
은평구	4	4	100.00
서대문구	2	2	100.00
마포구	1	1	100.00
양천구	1	1	100.00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강서구	2	2	100.00
구로구	2	2	100.00
금천구	1	1	100.00
영등포구	5	5	100.00
동작구	4	4	100.00
관악구	2	2	100.00
서초구	1	1	100.00
강남구	1	1	100.00
송파구	0	0	—
강동구	2	2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서구가 166.67%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0.00%로 가장 낮았다. 3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34〉 부산광역시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단위: 명, %)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계	23	20	115.00
중구	0	0	—
서구	5	3	166.67
동구	1	1	100.00
영도구	1	1	100.00
부산진구	1	1	100.00
동래구	2	2	100.00
남구	1	1	100.00
북구	1	0	0.00
해운대구	2	2	100.00
사하구	1	1	100.00
금정구	4	4	100.00
강서구	2	2	100.00
연제구	1	1	100.00
수영구	1	1	100.00
사상구	0	0	—
기장군	0	0	—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6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2개 지자체(달서구와 달성군)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35〉 대구광역시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단위: 명, %)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계	19	19	100.00
중구	1	1	100.00
동구	5	5	100.00
서구	1	1	100.00
남구	5	5	100.00
북구	3	3	100.00
수성구	4	4	100.00
달서구	0	0	—
달성군	0	0	—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5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5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36〉 인천광역시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단위: 명, %)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계	7	7	100.00
중구	1	1	100.00
동구	1	1	100.00
남구	2	2	100.00
연수구	0	0	—
남동구	0	0	—
부평구	2	2	100.00
계양구	0	0	—
서구	0	0	—
강화군	1	1	100.00
옹진군	0	0	—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4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1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37〉 광주광역시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단위: 명, %)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계	9	9	100.00
동구	4	4	100.00
서구	0	0	—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남구	2	2	100.00
북구	1	1	100.00
광산구	2	2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대전광역시 지자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모든 지자체가 100.00%이었다.

〈표 13-3-38〉 대전광역시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단위: 명, %)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계	13	13	100.00
동구	5	5	100.00
중구	1	1	100.00
서구	5	5	100.00
유성구	1	1	100.00
대덕구	1	1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1개 지자체(울주군)만이 100.00%이었고, 4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39〉 울산광역시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단위: 명, %)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계	1	1	100.00
중구	0	0	—
남구	0	0	—
동구	0	0	—
북구	0	0	—
울주군	1	1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16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15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40〉 경기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단위: 명, %)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계	29	29	100.00
수원시	4	4	100.00
성남시	0	0	—
고양시	1	1	100.00
부천시	1	1	100.00
안양시	3	3	100.00
안산시	1	1	100.00
용인시	1	1	100.00
의정부시	1	1	100.00
남양주시	0	0	—
평택시	4	4	100.00
광명시	0	0	—
시흥시	1	1	100.00
군포시	0	0	—
화성시	0	0	—
파주시	3	3	100.00
이천시	0	0	—
구리시	0	0	—
김포시	0	0	—
포천시	1	1	100.00
광주시	0	0	—
안성시	1	1	100.00
하남시	0	0	—
의왕시	1	1	100.00
양주시	3	3	100.00
오산시	0	0	—
여주군	1	1	100.00
양평군	0	0	—
동두천시	2	2	100.00
파천시	0	0	—
가평군	0	0	—
연천군	0	0	—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5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13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41〉 강원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단위: 명, %)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계	9	9	100.00
춘천시	1	1	100.00
원주시	4	4	100.00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강릉시	2	2	100.00
동해시	0	0	—
태백시	0	0	—
속초시	0	0	—
삼척시	0	0	—
홍천군	1	1	100.00
횡성군	0	0	—
영월군	0	0	—
평창군	0	0	—
정선군	0	0	—
철원군	0	0	—
화천군	1	1	100.00
양구군	0	0	—
인제군	0	0	—
고성군	0	0	—
양양군	0	0	—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충청북도 12개 지자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6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6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42〉 충청북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단위: 명, %)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계	13	13	100.00
청주시	4	4	100.00
충주시	2	2	100.00
제천시	2	2	100.00
청원군	1	1	100.00
보은군	0	0	—
옥천군	1	1	100.00
영동군	0	0	—
증평군	0	0	—
진천군	0	0	—
괴산군	0	0	—
음성군	3	3	100.00
단양군	0	0	—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충청남도 15개 지자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8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7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43〉 충청남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단위: 명, %)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계	13	13	100.00
천안시	3	3	100.00
공주시	0	0	—
보령시	2	2	100.00
아산시	1	1	100.00
서산시	0	0	—
논산시	3	3	100.00
계룡시	0	0	—
당진시	0	0	—
금산군	1	1	100.00
부여군	1	1	100.00
서천군	0	0	—
청양군	0	0	—
홍성군	1	1	100.00
예산군	1	1	100.00
태안군	0	0	—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전라북도 14개 지자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6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8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44〉 전라북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단위: 명, %)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계	14	14	100.00
전주시	3	3	100.00
군산시	3	3	100.00
익산시	3	3	100.00
정읍시	1	1	100.00
남원시	0	0	—
김제시	0	0	—
완주군	1	1	100.00
진안군	0	0	—
무주군	0	0	—
장수군	0	0	—
임실군	0	0	—
순창군	0	0	—
고창군	3	3	100.00
부안군	0	0	—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전라남도 22개 지자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13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9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45〉 전라남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단위: 명, %)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계	20	20	100.00
목포시	4	4	100.00
여수시	2	2	100.00
순천시	2	2	100.00
나주시	2	2	100.00
광양시	0	0	—
담양군	0	0	—
곡성군	0	0	—
구례군	0	0	—
고흥군	0	0	—
보성군	0	0	—
화순군	1	1	100.00
장흥군	0	0	—
강진군	1	1	100.00
해남군	1	1	100.00
영암군	1	1	100.00
무안군	1	1	100.00
함평군	2	2	100.00
영광군	1	1	100.00
장성군	1	1	100.00
완도군	0	0	—
진도군	0	0	—
신안군	1	1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경상북도 23개 지자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11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12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46〉 경상북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단위: 명, %)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계	15	15	100.00
포항시	1	1	100.00
경주시	2	2	100.00
김천시	3	3	100.00
안동시	2	2	100.00
구미시	1	1	100.00
영주시	0	0	—
영천시	1	1	100.00

상주시	1	1	100.00
문경시	1	1	100.00
경산시	0	0	—
군위군	0	0	—
의성군	1	1	100.00
청송군	0	0	—
영양군	0	0	—
영덕군	1	1	100.00
청도군	0	0	—
고령군	0	0	—
성주군	1	1	100.00
칠곡군	0	0	—
예천군	0	0	—
봉화군	0	0	—
울진군	0	0	—
울릉군	0	0	—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경상남도 18개 지자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13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5개 지자체는 법정배치인원과 실 배치인원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47〉 경상남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단위: 명, %)

계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계	25	25	100.00
창원시	6	6	100.00
진주시	1	1	100.00
통영시	1	1	100.00
사천시	1	1	100.00
김해시	3	3	100.00
밀양시	3	3	100.00
거제시	2	2	100.00
양산시	1	1	100.00
의령군	1	1	100.00
함안군	0	0	—
창녕군	0	0	—
고성군	3	3	100.00
남해군	1	1	100.00
하동군	0	0	—
산청군	0	0	—
함양군	1	1	100.00
거창군	0	0	—
합천군	1	1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모두 100.00%이었다.

〈표 13-3-48〉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단위: 명, %)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율(A/B)×100
계	4	4	100.00
제주시	2	2	100.00
서귀포시	2	2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나.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은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에서 관악구가 9.93%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가 -19.76%로 가장 낮았다. 17개 지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49〉 서울특별시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단위: 원, %)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A-B) / B) × 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원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원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 (③/④)	
계	876,035,405	42,844	20,447.097	854,487,276	40,949	20,867.110	-2.01
종로구	5,141,800	241	21,335.270	5,327,000	237	22,476.793	-5.08
중구	17,459,300	813	21,475.154	16,557,000	780	21,226.923	1.17
용산구	42,473,950	2,033	20,892.253	38,615,500	1,938	19,925.439	4.85
성동구	31,785,800	1,239	25,654.399	31,648,500	1,222	25,898.936	-0.94
광진구	14,729,900	769	19,154.616	15,639,500	721	21,691.401	-11.69
동대문구	11,862,000	712	16,660.112	9,811,000	551	17,805.808	-6.43
중랑구	25,900,300	1,354	19,128.730	23,664,500	1,171	20,208.796	-5.34
성북구	37,724,300	1,686	22,375.030	37,707,000	1,600	23,566.875	-5.06
강북구	41,567,400	2,241	18,548.594	42,047,000	1,819	23,115.448	-19.76
도봉구	16,722,300	955	17,510.262	19,568,000	1,072	18,253.731	-4.07
노원구	48,472,911	2,062	23,507.716	46,430,500	2,015	23,042.432	2.02
은평구	64,066,300	3,517	18,216.179	52,640,500	2,984	17,640.918	3.26
서대문구	41,683,600	1,767	23,590.040	41,145,216	1,808	22,757.310	3.66
마포구	41,398,200	1,942	21,317.302	37,576,560	1,740	21,595.724	-1.29
양천구	24,539,700	1,541	15,924.530	28,236,500	1,661	16,999.699	-6.32
강서구	48,802,600	1,961	24,886.588	49,602,000	1,952	25,410.861	-2.06
구로구	38,099,300	2,155	17,679.490	40,281,000	2,261	17,815.568	-0.76
금천구	34,576,400	1,636	21,134.719	39,679,500	1,614	24,584.572	-14.03
영등포구	22,434,300	1,555	14,427.203	20,852,000	1,464	14,243.169	1.29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율((A-B)/B)×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③/④)	
동작구	60,771,200	2,813	21,603.697	62,141,500	2,836	21,911.671	-1.41
관악구	81,890,033	3,532	23,185.174	68,290,000	3,238	21,090.179	9.93
서초구	11,138,400	1,001	11,127.273	12,262,000	1,028	11,928.016	-6.71
강남구	20,843,000	1,023	20,374.389	19,714,000	996	19,793.173	2.94
송파구	37,758,211	1,622	23,278.798	43,788,000	1,820	24,059.341	-3.24
강동구	54,194,200	2,674	20,267.091	51,263,000	2,421	21,174.308	-4.2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은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 중에서 부산진구가 8.93%로 가장 높았고, 금정구가 -9.67%로 가장 낮았다. 5개 지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50〉 부산광역시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단위: 원, %)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율((A-B)/B)×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③/④)	
계	1,135,499,911	46,631	24,350.752	1,042,542,090	42,808	24,353.908	-0.01
중구	11,958,600	493	24,256.795	10,947,500	452	24,220.133	0.15
서구	241,496,600	9,023	26,764.557	278,862,500	10,582	26,352.533	1.56
동구	46,617,900	1,875	24,862.880	37,051,500	1,520	24,375.987	2.00
영도구	51,164,100	2,048	24,982.471	42,095,000	1,793	23,477.412	6.41
부산진구	70,339,200	2,892	24,321.992	53,207,500	2,383	22,327.948	8.93
동래구	77,771,200	3,066	25,365.688	70,992,800	2,816	25,210.511	0.62
남구	59,081,600	2,963	19,939.791	50,713,000	2,620	19,356.107	3.02
북구	63,871,011	2,567	24,881.578	46,973,500	2,024	23,208.251	7.21
해운대구	85,737,000	3,720	23,047.581	77,937,000	3,303	23,595.822	-2.32
사하구	89,420,000	3,610	24,770.083	69,567,000	2,858	24,341.148	1.76
금정구	105,376,400	4,674	22,545.229	109,841,700	4,401	24,958.350	-9.67
강서구	45,944,400	1,965	23,381.374	41,537,500	1,858	22,356.028	4.59
연제구	61,408,200	2,315	26,526.220	51,293,500	1,899	27,010.795	-1.79
수영구	50,217,900	1,973	25,452.560	46,453,000	1,812	25,636.313	-0.72
사상구	58,418,100	2,650	22,044.566	42,206,590	1,864	22,643.020	-2.64
기장군	16,677,700	797	20,925.596	12,862,500	623	20,646.067	1.35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은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 중에서 달성군이 5.70%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0.89%로 가장 낮았다. 1개 지자체가 전년

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51〉 대구광역시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단위: 원, %)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A-B) /B)×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①)	'12년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②)	A=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③)	'11년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③/④)	
계	633,494,411	25,300	25,039.305	482,085,000	19,865	24,268.059	3.18
중구	24,744,911	937	26,408.656	22,809,500	893	25,542.553	3.39
동구	92,819,900	3,795	24,458.472	79,059,500	3,347	23,621.004	3.55
서구	44,868,200	1,784	25,150.336	33,798,000	1,408	24,004.261	4.77
남구	113,627,500	4,262	26,660.605	96,437,500	3,585	26,900.279	-0.89
북구	71,505,000	2,890	24,742.215	57,897,000	2,451	23,621.787	4.74
수성구	116,529,400	5,375	21,679.888	92,604,000	4,366	21,210.261	2.21
달서구	119,735,500	4,372	27,386.894	66,251,500	2,482	26,692.788	2.60
달성군	49,664,000	1,885	26,346.950	33,228,000	1,333	24,927.232	5.7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은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 중에서 연수구가 34.53%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3.98%로 가장 낮았다.

〈표 13-3-52〉 인천광역시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단위: 원, %)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A-B) /B)×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③/④)	
계	662,517,400	26,054	25,428.625	473,753,200	20,809	22,766.745	11.69
중구	31,010,800	1,193	25,993.965	23,622,000	981	24,079.511	7.95
동구	28,161,400	1,105	25,485.430	22,310,500	973	22,929.599	11.15
남구	138,778,100	5,426	25,576.502	107,476,000	4,615	23,288.407	9.83
연수구	50,660,600	2,241	22,606.247	30,567,000	1,819	16,804.288	34.53
남동구	90,949,900	3,398	26,765.715	55,321,000	2,327	23,773.528	12.59
부평구	152,965,300	6,181	24,747.662	116,651,200	5,292	22,042.933	12.27
계양구	53,528,100	2,046	26,162.317	27,712,000	1,171	23,665.243	10.55
서구	60,310,300	2,356	25,598.599	38,306,000	1,556	24,618.252	3.98
강화군	54,282,300	2,025	26,806.074	50,287,500	1,986	25,320.997	5.87
옹진군	1,870,600	83	22,537.349	1,500,000	89	16,853.933	33.7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은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

서 북구가 12.22%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3.42%로 가장 낮았다.

〈표 13-3-53〉 광주광역시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단위: 원, %)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A-B) / B) × 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원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원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 = (③/④)	
계	469,353,481	19,056	24,630.220	351,103,500	15,245	23,030.731	6.95
동구	110,008,400	4,284	25,678.898	103,095,500	4,152	24,830.323	3.42
서구	64,409,081	2,784	23,135.446	46,861,500	2,145	21,846.853	5.90
남구	80,342,100	3,266	24,599.541	58,836,000	2,660	22,118.797	11.22
북구	130,969,100	5,169	25,337.415	82,860,500	3,670	22,577.793	12.22
광산구	83,624,800	3,553	23,536.392	59,450,000	2,618	22,708.174	3.65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은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동구가 19.83%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3.99%로 가장 낮았다. 1개 지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54〉 대전광역시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단위: 원, %)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A-B) / B) × 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원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원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 = (③/④)	
계	349,201,500	14,904	23,430.052	266,952,190	12,248	21,795.574	7.50
동구	100,584,900	4,045	24,866.477	77,486,090	3,734	20,751.497	19.83
중구	61,850,800	2,786	22,200.574	39,818,000	1,722	23,123.113	-3.99
서구	90,797,100	3,890	23,341.157	69,265,500	3,205	21,611.700	8.00
유성구	51,523,500	2,059	25,023.555	44,557,000	1,813	24,576.393	1.82
대덕구	44,445,200	2,124	20,925.235	35,825,600	1,774	20,194.814	3.6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은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 중에서 남구가 26.72%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0.26%로 가장 낮았다.

〈표 13-3-55〉 울산광역시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단위: 원, %)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A-B)/B)×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③/④)	
계	166,721,400	6,598	25,268.475	131,397,000	5,828	22,545.813	12.08
중구	19,970,100	785	25,439.618	16,822,000	663	25,372.549	0.26
남구	32,251,700	1,201	26,854.038	20,111,500	949	21,192.308	26.72
동구	22,576,400	909	24,836.524	18,069,500	744	24,286.962	2.26
북구	22,240,000	749	29,692.924	17,074,000	617	27,672.609	7.30
울주군	69,683,200	2,954	23,589.438	59,320,000	2,855	20,777.583	13.5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양평군이 24.93%로 가장 높았고, 여주군이 -5.32%로 가장 낮았다. 7개 지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56〉 경기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단위: 원, %)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A-B)/B)×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③/④)	
계	1,753,905,961	73,578	23,837.369	1,466,547,260	64,149	22,861.576	4.27
수원시	144,705,000	5,785	25,013.829	128,373,500	5,500	23,340.636	7.17
성남시	123,050,700	5,029	24,468.224	91,254,000	3,977	22,945.436	6.64
고양시	88,137,400	3,580	24,619.385	73,616,000	2,975	24,744.874	-0.51
부천시	111,281,011	5,078	21,914.339	99,868,500	4,868	20,515.304	6.82
안양시	119,558,300	4,840	24,702.128	103,089,000	4,464	23,093.414	6.97
안산시	144,365,000	5,575	25,895.067	100,492,000	4,068	24,703.048	4.83
용인시	71,349,400	2,733	26,106.623	61,627,000	2,414	25,528.998	2.26
의정부시	79,311,700	3,580	22,154.106	54,187,500	2,670	20,294.944	9.16
남양주시	65,391,100	2,848	22,960.358	44,726,000	2,079	21,513.228	6.73
평택시	119,508,000	4,877	24,504.408	109,479,400	4,371	25,046.763	-2.17
광명시	34,537,700	1,421	24,305.208	35,094,000	1,528	22,967.277	5.83
시흥시	53,609,700	2,214	24,213.957	39,683,500	1,746	22,728.236	6.54
군포시	26,743,300	1,152	23,214.670	24,356,500	1,069	22,784.378	1.89
화성시	39,618,100	1,635	24,231.254	45,295,500	1,931	23,457.017	3.30
파주시	79,938,700	3,665	21,811.378	72,516,000	3,479	20,843.921	4.64
이천시	25,912,700	1,193	21,720.620	21,259,500	1,004	21,174.801	2.58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A-B) / B) × 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원별 살가임자의 연간누계수 (②)	A =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원별 살가임자의 연간누계수 (④)	B = (③/④)	
구리시	17,800,300	740	24,054.459	17,284,000	767	22,534.550	6.74
김포시	27,246,600	1,120	24,327.321	17,468,000	783	22,309.068	9.05
포천시	41,163,500	1,721	23,918.361	40,863,500	1,648	24,795.813	-3.54
광주시	37,760,350	1,701	22,198.912	29,228,500	1,294	22,587.713	-1.72
안성시	35,469,400	1,969	18,013.916	36,174,000	1,987	18,205.335	-1.05
하남시	9,601,700	452	21,242.699	6,641,500	327	20,310.398	4.59
의왕시	28,216,300	1,034	27,288.491	25,531,000	936	27,276.709	0.04
양주시	49,174,400	1,973	24,923.670	37,101,000	1,665	22,282.883	11.85
오산시	26,977,000	1,078	25,025.046	27,681,500	1,069	25,894.761	-3.36
여주군	57,715,500	2,597	22,223.912	62,321,500	2,655	23,473.258	-5.32
양평군	15,623,500	572	27,313.811	9,598,000	439	21,863.326	24.93
동두천시	39,934,500	1,767	22,600.170	29,744,860	1,443	20,613.209	9.64
과천시	10,237,200	375	27,299.200	6,034,500	252	23,946.429	14.00
가평군	14,055,100	599	23,464.274	6,177,500	276	22,382.246	4.83
연천군	15,912,800	675	23,574.519	9,780,000	465	21,032.258	12.0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은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화천군이 16.95%로 가장 높았고, 인제군이 -4.59%로 가장 낮았다. 4개 지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57〉 강원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단위: 원, %)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A-B) / B) × 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원별 살가임자의 연간누계수 (②)	A =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원별 살가임자의 연간누계수 (④)	B = (③/④)	
계	721,413,822	29,111	24,781.485	637,945,000	26,836	23,771.985	4.25
춘천시	92,725,700	3,490	26,568.968	68,828,600	2,759	24,946.937	6.50
원주시	138,328,600	5,570	24,834.578	124,984,800	5,265	23,738.803	4.62
강릉시	101,036,000	4,026	25,095.877	89,491,500	3,500	25,569.000	-1.85
동해시	22,348,100	1,061	21,063.242	17,987,600	887	20,279.143	3.87
태백시	23,878,200	924	25,842.208	23,881,500	943	25,325.027	2.04
속초시	35,744,400	1,509	23,687.475	27,010,500	1,306	20,681.853	14.53
삼척시	59,994,200	2,274	26,382.674	58,686,000	2,257	26,001.772	1.46
홍천군	29,337,511	1,187	24,715.679	23,998,000	1,051	22,833.492	8.24
횡성군	24,611,400	1,213	20,289.695	23,867,000	1,326	17,999.246	12.73
영월군	33,937,900	1,385	24,503.899	36,293,000	1,462	24,824.213	-1.29
평창군	23,333,000	970	24,054.639	19,242,000	849	22,664.311	6.13
정선군	17,009,600	789	21,558.428	17,219,500	832	20,696.514	4.16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율((A-B) / B) × 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원별 살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원별 살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 = (③/④)	
철원군	18,184,811	804	22,617.924	15,917,000	687	23,168.850	-2.38
화천군	25,273,900	1,003	25,198.305	21,869,000	1,015	21,545.813	16.95
양구군	18,155,300	700	25,936.143	14,609,500	621	23,525.765	10.25
인제군	22,533,700	928	24,282.004	21,175,500	832	25,451.322	-4.59
고성군	8,396,600	309	27,173.463	8,928,500	353	25,293.201	7.43
양양군	26,584,900	969	27,435.397	23,955,500	891	26,886.083	2.0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은 충청북도 12개 지자체 중에서 청원군이 25.23%로 가장 높았고, 영동군이 -12.34%로 가장 낮았다. 2개 지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58〉 충청북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단위: 원, %)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율((A-B) / B) × 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원별 살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원별 살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 = (③/④)	
계	537,725,956	22,770	23,615.545	448,055,115	19,657	22,793.667	3.61
청주시	202,833,156	8,699	23,316.836	164,800,015	7,194	22,907.981	1.78
충주시	65,227,600	2,906	22,445.836	53,201,100	2,301	23,120.860	-2.92
제천시	52,210,700	1,996	26,157.665	44,091,000	1,721	25,619.407	2.10
청원군	38,666,800	1,608	24,046.517	30,223,500	1,574	19,201.715	25.23
보은군	13,716,600	521	26,327.447	11,982,000	494	24,255.061	8.54
옥천군	32,715,200	1,189	27,514.886	31,962,000	1,169	27,341.317	0.63
영동군	17,093,800	750	22,791.733	16,535,500	636	25,999.214	-12.34
증평군	8,500,200	334	25,449.701	4,628,000	187	24,748.663	2.83
진천군	23,367,000	977	23,917.093	18,863,500	863	21,858.053	9.42
괴산군	15,048,400	642	23,439.875	9,250,000	397	23,299.748	0.60
음성군	57,674,400	2,735	21,087.532	53,933,500	2,766	19,498.735	8.15
단양군	10,672,100	413	25,840.436	8,585,000	355	24,183.099	6.85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은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에서 금산군이 27.10%로 가장 높았고, 당진시가 -10.82%로 가장 낮았다. 3개 지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59〉 충청남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단위: 원, %)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A-B) / B) × 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원별 살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원별 살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 = (③/④)	
계	535,291,222	22,109	24,211.462	422,882,000	18,410	22,970.234	5.40
천안시	112,084,000	4,623	24,244.863	94,706,000	4,075	23,240.736	4.32
공주시	22,576,300	905	24,946.188	15,267,000	610	25,027.869	-0.33
보령시	50,662,400	2,049	24,725.427	29,782,000	1,470	20,259.864	22.04
아산시	57,325,311	2,524	22,712.088	46,245,500	2,071	22,330.034	1.71
서산시	34,103,900	1,360	25,076.397	23,934,500	979	24,447.906	2.57
논산시	62,322,600	2,718	22,929.581	51,358,000	2,447	20,988.149	9.25
계룡시	9,210,000	312	29,519.231	7,774,000	271	28,686.347	2.90
당진시	15,680,211	827	18,960.352	13,075,000	615	21,260.163	-10.82
금산군	22,977,000	829	27,716.526	17,795,000	816	21,807.598	27.10
부여군	43,469,700	1,955	22,235.141	39,188,000	1,581	24,786.844	-10.29
서천군	25,349,300	981	25,840.265	16,219,500	644	25,185.559	2.60
청양군	10,964,100	406	27,005.172	10,402,000	458	22,711.790	18.90
홍성군	26,330,800	984	26,758.943	20,698,500	827	25,028.416	6.91
예산군	27,791,100	1,053	26,392.308	24,807,500	974	25,469.713	3.62
태안군	14,444,500	583	24,776.158	11,629,500	572	20,331.294	21.86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은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에서 순창군이 14.99%로 가장 높았고, 김제시가 -11.46%로 가장 낮았다. 6개 지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60〉 전라북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

(단위: 원, %)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A-B) / B) × 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원별 살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원별 살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 = (③/④)	
계	781,174,560	32,639	23,933.777	697,265,713	29,543	23,601.723	1.41
전주시	185,908,800	7,785	23,880.385	144,128,000	6,330	22,769.036	4.88
군산시	117,324,560	5,228	22,441.576	115,689,713	4,822	23,992.060	-6.46
익산시	117,181,800	4,941	23,716.211	98,696,000	4,238	23,288.344	1.84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율((A-B) / B) × 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월별 살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월별 살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 = (③/④)	
정읍시	78,276,700	3,025	25,876.595	68,542,500	2,772	24,726.732	4.65
남원시	39,510,800	1,594	24,787.202	35,397,000	1,452	24,378.099	1.68
김제시	35,014,500	1,502	23,311.917	31,542,000	1,198	26,328.881	-11.46
완주군	49,411,700	2,070	23,870.386	46,182,000	1,916	24,103.340	-0.97
진안군	17,514,100	828	21,152.295	20,682,000	898	23,031.180	-8.16
무주군	22,149,200	895	24,747.709	22,060,000	856	25,771.028	-3.97
장수군	9,063,500	350	25,895.714	10,390,000	382	27,198.953	-4.79
임실군	15,213,500	606	25,104.785	13,771,500	565	24,374.336	3.00
순창군	10,889,500	391	27,850.384	7,460,000	308	24,220.779	14.99
고창군	74,815,900	3,048	24,545.899	76,309,500	3,526	21,641.946	13.42
부안군	8,900,000	376	23,670.213	6,415,500	280	22,912.500	3.3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은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에서 보성군이 13.68%로 가장 높았고, 진도군이 -26.42%로 가장 낮았다. 13개 지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61〉 전라남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단위: 원, %)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율((A-B) / B) × 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월별 살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월별 살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 = (③/④)	
계	950,463,100	41,245	23,044.323	814,946,050	34,768	23,439.544	-1.69
목포시	160,481,600	7,448	21,546.939	139,132,500	6,234	22,318.335	-3.46
여수시	108,098,400	4,349	24,855.921	88,279,000	3,592	24,576.559	1.14
순천시	110,481,900	4,479	24,666.644	107,304,000	4,175	25,701.557	-4.03
나주시	79,664,800	2,891	27,556.140	57,536,000	2,203	26,117.113	5.51
광양시	21,608,000	1,122	19,258.467	22,531,500	983	22,921.160	-15.98
담양군	14,003,800	583	24,020.240	9,282,500	425	21,841.176	9.98
곡성군	19,371,000	738	26,247.967	14,694,000	510	28,811.765	-8.90
구례군	7,092,300	341	20,798.534	6,479,000	244	26,553.279	-21.67
고흥군	41,075,600	1,667	24,640.432	29,181,000	1,238	23,571.082	4.54
보성군	32,704,600	1,331	24,571.450	21,008,500	972	21,613.683	13.68
화순군	34,784,100	1,266	27,475.592	26,405,500	989	26,699.191	2.91
장흥군	27,447,000	1,160	23,661.207	20,817,500	812	25,637.315	-7.71
강진군	27,750,100	1,228	22,597.801	29,164,500	1,195	24,405.439	-7.41
해남군	61,878,100	2,767	22,362.884	47,573,500	2,069	22,993.475	-2.74
영암군	33,047,700	1,450	22,791.517	32,857,800	1,483	22,156.305	2.87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율((A-B) / B) × 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원별 살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원별 살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 = (③/④)	
무안군	32,516,900	1,238	26,265.670	29,318,500	1,229	23,855.574	10.10
함평군	40,541,400	1,740	23,299.655	39,132,750	1,719	22,764.834	2.35
영광군	23,757,800	1,123	21,155.654	19,626,000	889	22,076.490	-4.17
장성군	21,675,500	1,267	17,107.735	17,433,000	878	19,855.353	-13.84
완도군	13,463,300	766	17,576.110	12,904,500	681	18,949.339	-7.25
진도군	17,968,700	1,125	15,972.178	20,470,000	943	21,707.317	-26.42
신안군	21,050,500	1,166	18,053.602	23,814,500	1,305	18,248.659	-1.0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은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에서 영천시 31.66%로 가장 높았고, 고령군이 -19.39%로 가장 낮았다. 9개 지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62〉 경상북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단위: 원, %)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율((A-B) / B) × 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원별 살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원별 살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 = (③/④)	
계	721,282,929	29,899	24,123.982	663,535,358	28,315	23,434.058	2.94
포항시	70,569,100	3,119	22,625.553	67,201,508	2,825	23,788.144	-4.89
경주시	97,588,300	3,743	26,072.215	96,522,000	3,676	26,257.345	-0.71
김천시	70,807,289	2,898	24,433.157	67,221,000	2,770	24,267.509	0.68
안동시	57,111,640	2,120	26,939.453	48,990,580	1,957	25,033.510	7.61
구미시	83,192,000	3,564	23,342.312	70,398,270	3,261	21,587.939	8.13
영주시	19,553,000	843	23,194.543	16,112,500	648	24,864.969	-6.72
영천시	25,733,200	1,123	22,914.693	15,716,000	903	17,404.208	31.66
상주시	32,018,100	1,612	19,862.345	31,077,000	1,672	18,586.722	6.86
문경시	39,139,700	1,368	28,610.892	36,441,000	1,378	26,444.848	8.19
경산시	31,809,900	1,375	23,134.473	24,392,000	1,189	20,514.718	12.77
군위군	9,690,500	382	25,367.801	10,524,000	422	24,938.389	1.72
의성군	29,021,900	1,173	24,741.603	25,491,000	1,129	22,578.388	9.58
청송군	14,541,600	576	25,245.833	14,907,000	590	25,266.102	-0.08
영양군	11,329,200	417	27,168.345	8,344,000	366	22,797.814	19.17
영덕군	26,227,200	1,130	23,209.912	29,487,000	1,295	22,769.884	1.93
청도군	12,916,300	694	18,611.383	15,911,500	806	19,741.315	-5.72
고령군	10,875,000	547	19,881.170	10,999,500	446	24,662.556	-19.39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A-B) / B) × 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③/④)	
성주군	23,918,100	911	26,254.775	22,907,000	916	25,007.642	4.99
칠곡군	16,701,100	743	22,477.927	14,400,000	646	22,291.022	0.84
예천군	5,775,000	213	27,112.676	5,878,000	200	29,390.000	-7.75
봉화군	11,177,100	423	26,423.404	6,421,000	251	25,581.673	3.29
울진군	20,084,200	871	23,058.783	22,723,500	919	24,726.333	-6.74
울릉군	1,503,500	54	27,842.593	1,470,000	50	29,400.000	-5.3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은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사천시가 8.42%로 가장 높았고, 함양군이 -11.15%로 가장 낮았다. 9개 지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63〉 경상남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단위: 원, %)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A-B) / B) × 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③/④)	
계	794,758,450	35,059	22,669.171	706,072,100	31,237	22,603.710	0.29
창원시	214,536,350	8,814	24,340.407	196,038,000	7,834	25,023.998	-2.73
진주시	75,004,300	2,901	25,854.636	63,263,500	2,401	26,348.813	-1.88
통영시	46,249,000	2,281	20,275.756	43,062,000	2,106	20,447.293	-0.84
사천시	35,364,500	1,530	23,114.052	28,013,000	1,314	21,318.874	8.42
김해시	99,457,800	4,367	22,774.857	83,519,300	3,887	21,486.828	5.99
밀양시	48,773,100	2,175	22,424.414	50,269,500	2,353	21,364.003	4.96
거제시	48,206,800	2,265	21,283.355	44,300,000	2,043	21,683.798	-1.85
양산시	46,541,400	2,279	20,421.852	34,896,500	1,747	19,975.100	2.24
의령군	6,934,500	440	15,760.227	7,122,300	405	17,585.926	-10.38
함안군	17,662,400	712	24,806.742	13,587,000	577	23,547.660	5.35
창녕군	12,637,300	566	22,327.385	11,479,000	516	22,246.124	0.37
고성군	30,238,600	1,526	19,815.596	32,186,500	1,587	20,281.348	-2.30
남해군	24,918,400	1,000	24,918.400	25,480,500	1,023	24,907.625	0.04
하동군	15,022,000	679	22,123.711	14,408,000	611	23,581.015	-6.18
산청군	14,659,300	592	24,762.331	12,471,000	504	24,744.048	0.07
함양군	15,493,900	1,053	14,714.055	16,825,500	1,016	16,560.531	-11.15
거창군	24,096,100	1,028	23,439.786	14,139,000	589	24,005.093	-2.35
합천군	18,962,700	851	22,282.844	15,011,500	724	20,734.116	7.4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은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 중에서 서귀포시가 3.80%로 제주시 1.86% 보다 높았다.

〈표 13-3-64〉 제주특별자치도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단위: 원, %)

	'12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A)			'11년 1인당 평균매칭 지원금(B)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A-B) /B)×100
	'12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①)	'12년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②)	A= (①/②)	'11년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 (③)	'11년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 (④)	B= (③/④)	
계	257,284,260	10,320	24,930.645	225,704,500	9,290	24,295.425	2.62
제주시	169,803,660	6,693	25,370.336	146,560,000	5,884	24,908.226	1.86
서귀포시	87,480,600	3,627	24,119.272	79,144,500	3,406	23,236.788	3.8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다.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은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중구와 성동구가 11.11%로 가장 낮았다.

〈표 13-3-65〉 서울특별시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계	166	71	180	56.84
종로구	2	0	0	100.00
중구	1	0	8	11.11
용산구	11	0	17	39.29
성동구	1	0	8	11.11
광진구	2	5	0	100.00
동대문구	3	3	0	100.00
중랑구	14	0	0	100.00
성북구	11	1	0	100.00
강북구	8	6	0	100.00
도봉구	7	0	0	100.00
노원구	11	0	1	91.67
은평구	10	2	44	21.43
서대문구	1	7	10	44.44
마포구	2	4	10	37.50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양천구	8	9	13	56.67
강서구	4	2	5	54.55
구로구	2	4	23	20.69
금천구	12	1	6	68.42
영등포구	8	0	0	100.00
동작구	9	0	4	69.23
관악구	5	14	21	47.50
서초구	4	5	0	100.00
강남구	2	2	5	44.44
송파구	8	6	0	100.00
강동구	20	0	5	8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은 중구, 북구, 사상구, 기장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14.71%로 가장 낮았다.

〈표 13-3-66〉 부산광역시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계	96	35	118	52.61
중구	1	0	0	100.00
서구	3	2	7	41.67
동구	2	5	3	70.00
영도구	1	3	5	44.44
부산진구	1	1	3	40.00
동래구	6	2	12	40.00
남구	13	4	2	89.47
북구	9	2	0	100.00
해운대구	19	0	15	55.88
사하구	14	0	11	56.00
금정구	5	0	9	35.71
강서구	5	0	29	14.71
연제구	0	4	18	18.18
수영구	12	5	4	80.95
사상구	5	0	0	100.00
기장군	0	7	0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은 달서구와 달성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중구와 동구가 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3-67〉 대구광역시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계	35	22	69	45.24
중구	0	0	0	0.00
동구	0	0	19	0.00
서구	7	0	5	58.33
남구	5	12	28	37.78
북구	5	2	9	43.75
수성구	5	0	8	38.46
달서구	11	6	0	100.00
달성군	2	2	0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은 중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동구와 옹진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3-68〉 인천광역시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계	129	10	70	66.51
중구	0	1	0	100.00
동구	0	0	8	0.00
남구	25	4	30	49.15
연수구	11	0	0	100.00
남동구	15	2	0	100.00
부평구	41	3	28	61.11
계양구	21	0	0	100.00
서구	14	0	0	100.00
강화군	2	0	4	33.33
옹진군	0	0	0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은 서구가 100.00%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47.37%로 가장 낮았다.

〈표 13-3-69〉 광주광역시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계	46	33	49	61.72
동구	22	0	17	56.41
서구	11	7	0	100.00
남구	3	8	9	55.00
북구	4	5	10	47.37
광산구	6	13	13	59.3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은 중구가 79.31%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29.63%로 가장 낮았다.

〈표 13-3-70〉 대전광역시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계	36	29	47	58.04
동구	1	7	19	29.63
중구	12	11	6	79.31
서구	16	6	16	57.89
유성구	3	5	3	72.73
대덕구	4	0	3	57.1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은 4개 지자체가 100.00%이었고, 울주군만이 57.14%로 가장 낮았다.

〈표 13-3-71〉 울산광역시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계	50	7	15	79.17
중구	7	3	0	100.00
남구	7	3	0	100.00
동구	12	0	0	100.00
북구	5	0	0	100.00
울주군	19	1	15	57.1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은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광명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구리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오산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안양시, 양평군, 과천시 가 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3-72〉 경기도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계	300	182	224	68.27
수원시	15	15	23	56.60
성남시	14	24	0	100.00
고양시	19	8	0	100.00
부천시	35	0	13	72.92
안양시	0	0	73	0.00
안산시	33	44	9	89.53
용인시	4	4	6	57.14
의정부시	13	9	23	48.89
남양주시	22	10	0	100.00
평택시	6	0	13	31.58
광명시	9	4	0	100.00
시흥시	6	3	5	64.29
군포시	0	11	0	100.00
화성시	39	11	0	100.00
파주시	22	1	10	69.70
이천시	0	1	0	100.00
구리시	6	1	0	100.00
김포시	0	1	0	100.00
포천시	8	3	10	52.38
광주시	0	5	0	100.00
안성시	0	12	10	54.55
하남시	9	1	0	100.00
의왕시	4	0	14	22.22
양주시	10	1	5	68.75
오산시	8	1	0	100.00
여주군	0	7	10	41.18
양평군	0	0	0	0.00
동두천시	1	0	0	100.00
과천시	0	0	0	0.00
가평군	12	0	0	100.00
연천군	5	5	0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은 강릉시 (75.68%), 원주시(82.00%), 춘천시(86.54%)를 제외한 15개 지자체가 100.00%의 높

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13-3-73〉 강원도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계	200	18	25	89.71
춘천시	40	5	7	86.54
원주시	37	4	9	82.00
강릉시	28	0	9	75.68
동해시	3	3	0	100.00
태백시	8	1	0	100.00
속초시	1	2	0	100.00
삼척시	18	0	0	100.00
홍천군	2	0	0	100.00
횡성군	11	0	0	100.00
영월군	4	2	0	100.00
평창군	3	1	0	100.00
정선군	6	0	0	100.00
철원군	7	0	0	100.00
화천군	7	0	0	100.00
양구군	8	0	0	100.00
인제군	9	0	0	100.00
고성군	2	0	0	100.00
양양군	6	0	0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충청북도 12개 지자체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은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증평군과 음성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3-74〉 충청북도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계	68	44	67	62.57
청주시	31	23	16	77.14
충주시	19	2	7	75.00
제천시	1	10	2	84.62
청원군	5	1	7	46.15
보은군	5	0	0	100.00
옥천군	0	4	8	33.33
영동군	1	1	2	50.00
증평군	0	0	0	0.00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진천군	3	0	0	100.00
괴산군	2	0	0	100.00
음성군	0	0	25	0.00
단양군	1	3	0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충청남도 15개 지자체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은 공주시, 서천군, 태안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계룡시가 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3-75〉 충청남도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계	102	32	67	66.67
천안시	22	19	20	67.21
공주시	6	0	0	100.00
보령시	5	0	8	38.46
아산시	17	9	7	78.79
서산시	7	4	7	61.11
논산시	8	0	10	44.44
계룡시	0	0	0	0.00
당진시	2	0	3	40.00
금산군	3	0	1	75.00
부여군	1	0	3	25.00
서천군	3	0	0	100.00
청양군	5	0	4	55.56
홍성군	6	0	2	75.00
예산군	15	0	2	88.24
태안군	2	0	0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전라북도 14개 지자체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은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장수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3-76〉 전라북도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	-----------	-----------	-------------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계	130	73	96	67.89
전주시	1	28	37	43.94
군산시	8	17	6	80.65
익산시	3	8	34	24.44
정읍시	5	0	12	29.41
남원시	16	5	0	100.00
김제시	6	0	0	100.00
완주군	12	3	7	68.18
진안군	3	6	0	100.00
무주군	12	0	0	100.00
장수군	0	0	0	0.00
임실군	13	0	0	100.00
순창군	1	6	0	100.00
고창군	14	0	0	100.00
부안군	36	0	0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전라남도 22개 지자체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은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구례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장성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3-77〉 전라남도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계	138	67	170	54.67
목포시	14	9	94	19.66
여수시	20	7	7	79.41
순천시	11	4	11	57.69
나주시	2	1	35	7.89
광양시	4	0	0	100.00
담양군	7	1	0	100.00
곡성군	9	0	0	100.00
구례군	0	0	0	0.00
고흥군	7	0	0	100.00
보성군	6	1	0	100.00
화순군	0	0	0	0.00
장흥군	17	7	0	100.00
강진군	0	0	4	0.00
해남군	0	0	4	0.00
영암군	1	2	1	75.00
무안군	1	0	2	33.33
함평군	4	0	3	57.14
영광군	6	35	0	100.00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장성군	0	0	2	0.00
완도군	8	0	0	100.00
진도군	14	0	0	100.00
신안군	7	0	7	5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상북도 23개 지자체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은 안동시, 영주시, 경산시,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칠곡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군위군과 예천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3-78〉 경상북도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계	132	26	94	62.70
포항시	5	9	13	51.85
경주시	22	0	15	59.46
김천시	4	0	24	14.29
안동시	4	2	0	100.00
구미시	11	3	5	73.68
영주시	2	2	0	100.00
영천시	7	2	6	60.00
상주시	34	0	6	85.00
문경시	4	0	6	40.00
경산시	4	2	0	100.00
군위군	0	0	0	0.00
의성군	9	0	2	81.82
청송군	2	1	0	100.00
영양군	1	0	0	100.00
영덕군	3	0	6	33.33
청도군	2	0	7	22.22
고령군	1	0	0	100.00
성주군	4	0	4	50.00
칠곡군	4	1	0	100.00
예천군	0	0	0	0.00
봉화군	2	0	0	100.00
울진군	4	0	0	100.00
울릉군	3	4	0	10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상남도 18개 지자체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은 통영시,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이 100.00%로 가장 높았고, 의령군과 합천

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3-79〉 경상남도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계	158	40	99	66.67
창원시	29	15	42	51.16
진주시	8	11	4	82.61
통영시	17	0	0	100.00
사천시	2	5	1	87.50
김해시	38	2	17	70.18
밀양시	6	0	7	46.15
거제시	9	4	9	59.09
양산시	15	0	1	93.75
의령군	0	0	6	0.00
함안군	2	0	0	100.00
창녕군	5	0	0	100.00
고성군	3	0	9	25.00
남해군	3	0	1	75.00
하동군	8	0	0	100.00
산청군	1	0	0	100.00
함양군	1	0	1	50.00
거창군	11	3	0	100.00
합천군	0	0	1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은 제주시가 66.67%로 서귀포시 56.67%보다 높았다.

〈표 13-3-80〉 제주특별자치도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율 (A+B)/(A+B+C)×100
계	43	12	32	63.22
제주시	27	11	19	66.67
서귀포시	16	1	13	56.6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3. 보육기반조성

가.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중구가 46.15%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가 32.33%로 가장 낮았다.

〈표 13-3-81〉 서울특별시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개, %)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B/A) + (C/A)] \times 100 / 2$
계	5,954	4,022	640	39.15
종로구	66	53	3	42.42
중구	52	41	7	46.15
용산구	116	64	11	32.33
성동구	154	102	12	37.01
광진구	204	149	12	39.46
동대문구	214	150	17	39.02
중랑구	262	182	24	39.31
성북구	314	227	40	42.52
강북구	197	136	26	41.12
도봉구	298	218	20	39.93
노원구	517	363	52	40.14
은평구	309	201	39	38.83
서대문구	157	96	19	36.62
마포구	190	121	27	38.95
양천구	309	219	38	41.59
강서구	373	245	43	38.61
구로구	326	212	51	40.34
금천구	194	129	22	38.92
영등포구	230	148	19	36.30
동작구	196	133	17	38.27
관악구	265	212	17	43.21
서초구	161	90	15	32.61
강남구	186	135	13	39.78
송파구	361	233	47	38.78
강동구	303	163	49	34.9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중구가 42.86%로 가장 높았고, 해운대구가 26.52%로 가장 낮았다.

〈표 13-3-82〉 부산광역시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개, %)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B/A) + (C/A)] \times 100 / 2$
계	1,739	975	154	32.46
중구	14	11	1	42.86
서구	42	28	4	38.10
동구	40	23	1	30.00
영도구	55	38	0	34.55
부산진구	150	101	4	35.00
동래구	114	57	11	29.82
남구	135	57	16	27.04
북구	196	110	20	33.16
해운대구	247	109	22	26.52
사하구	191	118	15	34.82
금정구	123	77	11	35.77
강서구	31	21	3	38.71
연제구	87	60	11	40.80
수영구	75	45	13	38.67
사상구	150	77	14	30.33
기장군	89	43	8	28.65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달성군이 37.40%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33.33%로 가장 낮았다.

〈표 13-3-83〉 대구광역시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개, %)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B/A) + (C/A)] \times 100 / 2$
계	1,561	857	244	35.27
중구	37	20	7	36.49
동구	192	110	30	36.46
서구	141	74	21	33.69
남구	66	43	6	37.12
북구	357	180	58	33.33
수성구	213	125	29	36.15
달서구	424	225	75	35.38
달성군	131	80	18	37.4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옹진군이 43.75%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31.98%로 가장 낮았다.

〈표 13-3-84〉 인천광역시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개, %)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B/A) + (C/A)] \times 100 / 2$
계	1,996	1,052	447	37.55
중구	86	37	18	31.98
동구	62	27	17	35.48
남구	249	135	58	38.76
연수구	189	84	52	35.98
남동구	344	198	73	39.39
부평구	391	236	84	40.92
계양구	263	149	49	37.64
서구	385	168	92	33.77
강화군	19	13	2	39.47
옹진군	8	5	2	43.75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동구가 39.77%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30.87%로 가장 낮았다.

〈표 13-3-85〉 광주광역시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개, %)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B/A) + (C/A)] \times 100 / 2$
계	1,205	645	174	33.98
동구	44	29	6	39.77
서구	247	130	32	32.79
남구	134	93	9	38.06
북구	332	171	34	30.87
광산구	448	222	93	35.16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동구가 37.33%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가 30.56%로 가장 낮았다.

〈표 13-3-86〉 대전광역시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개, %)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B/A) + (C/A)] \times 100 / 2$
계	1597	838	251	34.10
동구	225	136	32	37.33
중구	209	127	16	34.21
서구	541	268	106	34.57
유성구	427	183	78	30.56
대덕구	195	124	19	36.6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중구가 36.94%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29.76%로 가장 낮았다.

〈표 13-3-87〉 울산광역시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개, %)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B/A) + (C/A)] \times 100 / 2$
계	818	402	147	33.56
중구	111	73	9	36.94
남구	218	110	44	35.32
동구	126	44	31	29.76
북구	211	92	38	30.81
울주군	152	83	25	35.5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가평군이 41.43%로 가장 높았고, 파주시가 27.33%로 가장 낮았다.

〈표 13-3-88〉 경기도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개, %)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B/A) + (C/A)] \times 100 / 2$
계	11,816	5,510	2,302	33.06
수원시	1,072	396	267	30.92
성남시	659	358	109	35.43
고양시	1,035	442	192	30.63
부천시	602	328	104	35.88
안양시	509	301	95	38.90
안산시	733	335	142	32.54
용인시	1,001	332	267	29.92
의정부시	588	305	102	34.61
남양주시	649	343	123	35.90
평택시	377	177	71	32.89
광명시	347	195	58	36.46
시흥시	427	245	50	34.54
군포시	263	113	51	31.18
화성시	614	299	118	33.96
파주시	505	144	132	27.33
이천시	168	78	31	32.44
구리시	151	85	27	37.09
김포시	231	99	46	31.39
포천시	152	87	15	33.55
광주시	306	122	61	29.90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B/A) + (C/A)] \times 100 / 2$
안성시	248	122	43	33.27
하남시	147	88	15	35.03
의왕시	131	66	23	33.97
양주시	303	134	41	28.88
오산시	230	116	53	36.74
여주군	69	39	15	39.13
양평군	48	22	8	31.25
동두천시	128	64	25	34.77
과천시	53	36	6	39.62
가평군	35	21	8	41.43
연천군	35	18	4	31.4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영월군, 정선군, 양양군이 50.00%로 가장 높았고, 동해시가 26.87%로 가장 낮았다.

〈표 13-3-89〉 강원도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개, %)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B/A) + (C/A)] \times 100 / 2$
계	1,147	683	144	36.05
춘천시	218	133	23	35.78
원주시	347	177	41	31.41
강릉시	178	100	37	38.48
동해시	67	33	3	26.87
태백시	21	19	0	45.24
속초시	64	42	9	39.84
삼척시	42	27	6	39.29
홍천군	44	33	5	43.18
횡성군	26	20	4	46.15
영월군	15	15	0	50.00
평창군	17	8	4	35.29
정선군	10	9	1	50.00
철원군	26	15	4	36.54
화천군	18	10	4	38.89
양구군	13	7	0	26.92
인제군	18	16	0	44.44
고성군	13	11	1	46.15
양양군	10	8	2	5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충청북도 12개 지자체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진천군이 41.46%로 가장 높았고, 괴산군이 3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3-90〉 충청북도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개, %)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B/A) + (C/A)] \times 100 / 2$
계	1,133	625	162	34.73
청주시	631	320	125	35.26
충주시	128	73	6	30.86
제천시	66	45	5	37.88
청원군	116	62	14	32.76
보은군	10	8	0	40.00
옥천군	27	20	1	38.89
영동군	13	5	3	30.77
증평군	20	12	1	32.50
진천군	41	32	2	41.46
괴산군	10	5	1	30.00
음성군	56	33	4	33.04
단양군	15	10	0	33.3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충청남도 15개 지자체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청양군이 47.06%로 가장 높았고, 아산시가 23.67%로 가장 낮았다.

〈표 13-3-91〉 충청남도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개, %)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B/A) + (C/A)] \times 100 / 2$
계	1,788	832	326	32.38
천안시	599	320	107	35.64
공주시	82	38	9	28.66
보령시	59	35	5	33.90
아산시	452	108	106	23.67
서산시	130	51	33	32.31
논산시	96	53	21	38.54
계룡시	44	27	6	37.50
당진시	126	66	17	32.94
금산군	31	19	7	41.94
부여군	31	24	2	41.94
서천군	28	17	3	35.71
청양군	17	15	1	47.06
홍성군	41	29	5	41.46
예산군	30	19	2	35.00
태안군	22	11	2	29.55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전라북도 14개 지자체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장수

군과 임실군이 50.00%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이 29.17%로 가장 낮았다.

〈표 13-3-92〉 전라북도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개, %)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B/A) + (C/A)] \times 100 / 2$
계	1,575	927	259	37.65
전주시	695	377	126	36.19
군산시	206	110	47	38.11
익산시	264	150	46	37.12
정읍시	101	70	10	39.60
남원시	77	51	6	37.01
김제시	67	48	9	42.54
완주군	64	45	9	42.19
진안군	8	6	1	43.75
무주군	12	7	0	29.17
장수군	5	5	0	50.00
임실군	10	9	1	50.00
순창군	14	11	0	39.29
고창군	24	20	1	43.75
부안군	28	18	3	37.5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전라남도 22개 지자체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고흥군이 45.45%로 가장 높았고, 신안군이 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3-93〉 전라남도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개, %)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B/A) + (C/A)] \times 100 / 2$
계	1,160	663	142	34.70
목포시	219	108	32	31.96
여수시	139	90	15	37.77
순천시	225	125	27	33.78
나주시	47	29	6	37.23
광양시	128	73	24	37.89
담양군	13	9	0	34.62
곡성군	13	10	1	42.31
구례군	11	6	1	31.82
고흥군	22	19	1	45.45
보성군	14	7	1	28.57
화순군	75	46	10	37.33
장흥군	18	10	2	33.33
강진군	17	10	0	29.41
해남군	34	25	0	36.76
영암군	37	23	4	36.49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B/A) + (C/A)] \times 100 / 2$
무안군	54	24	8	29.63
함평군	13	11	0	42.31
영광군	18	11	3	38.89
장성군	15	8	4	40.00
완도군	24	15	2	35.42
진도군	11	4	1	22.73
신안군	13	0	0	0.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상북도 23개 지자체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영덕군과 봉화군이 50.00%로 가장 높았고, 청송군이 10.00%로 가장 낮았다.

〈표 13-3-94〉 경상북도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개, %)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B/A) + (C/A)] \times 100 / 2$
계	2,162	1,303	265	36.26
포항시	606	301	111	33.99
경주시	227	146	17	35.90
김천시	127	83	13	37.80
안동시	94	73	9	43.62
구미시	413	231	56	34.75
영주시	44	30	4	38.64
영천시	50	41	1	42.00
상주시	46	33	3	39.13
문경시	39	26	4	38.46
경산시	215	142	23	38.37
군위군	4	2	0	25.00
의성군	13	8	2	38.46
청송군	10	1	1	10.00
영양군	5	3	0	30.00
영덕군	15	14	1	50.00
청도군	16	10	2	37.50
고령군	18	10	0	27.78
성주군	21	18	1	45.24
칠곡군	144	93	12	36.46
예천군	18	15	1	44.44
봉화군	10	7	3	50.00
울진군	25	15	1	32.00
울릉군	2	1	0	25.0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상남도 18개 지자체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하동

군이 47.50%로 가장 높았고, 남해군이 19.44%로 가장 낮았다.

〈표 13-3-95〉 경상남도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개, %)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B/A) + (C/A)] \times 100 / 2$
계	3,397	1,631	505	31.44
창원시	1,74	525	165	32.12
진주시	324	163	68	35.65
통영시	101	47	18	32.18
사천시	130	63	23	33.08
김해시	915	428	102	28.96
밀양시	87	42	15	32.76
거제시	167	71	29	29.94
양산시	361	160	53	29.50
의령군	13	7	2	34.62
함안군	57	34	8	36.84
창녕군	23	10	8	39.13
고성군	25	11	0	22.00
남해군	18	7	0	19.44
하동군	20	14	5	47.50
산청군	17	6	3	26.47
함양군	17	9	3	35.29
거창군	34	25	0	36.76
합천군	14	9	3	42.86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제주시가 40.53%로 서귀포시 38.52%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표 13-3-96〉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개, %)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B/A) + (C/A)] \times 100 / 2$
계	552	367	75	40.04
제주시	417	277	61	40.53
서귀포시	135	90	14	38.5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나. 취약보육 실시율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노원구가

37.67%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가 29.37%로 가장 낮았다.

〈표 13-3-97〉 서울특별시의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② +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계	239,335	78,991.0	138,906	69,453	1,582	2,079	5,588	289	33.00
종로구	3,934	1,427.5	1,749	874.5	51	53	390	59	36.29
중구	3,300	1,102.5	1,609	804.5	52	72	174	0	33.41
용산구	5,111	1,631.5	2,699	1,349.5	29	87	166	0	31.92
성동구	6,863	2,227.5	4,455	2,227.5	0	0	0	0	32.46
광진구	8,361	3,134.0	4,788	2,394.0	58	105	538	39	37.48
동대문구	8,672	2,738.5	4,675	2,337.5	31	89	281	0	31.58
중랑구	10,847	3,586.0	7,172	3,586.0	0	0	0	0	33.06
성북구	11,103	3,785.5	6,679	3,339.5	69	113	235	29	34.09
강북구	9,056	2,730.0	5,460	2,730.0	0	0	0	0	30.15
도봉구	9,911	3,296.0	5,660	2,830.0	87	90	278	11	33.26
노원구	14,404	5,425.5	9,429	4,714.5	156	74	451	30	37.67
은평구	13,691	4,301.0	7,774	3,887.0	87	130	192	5	31.41
서대문구	6,791	2,032.0	3,496	1,748.0	56	64	164	0	29.92
마포구	8,120	2,687.5	5,375	2,687.5	0	0	0	0	33.10
양천구	11,864	3,643.0	6,374	3,187.0	154	102	191	9	30.71
강서구	14,285	4,705.0	8,128	4,064.0	79	148	392	22	32.94
구로구	12,599	4,077.0	6,816	3,408.0	116	231	302	20	32.36
금천구	7,724	2,555.0	5,110	2,555.0	0	0	0	0	33.08
영등포구	9,836	3,122.5	5,489	2,744.5	61	172	145	0	31.75
동작구	8,503	2,643.5	4,797	2,398.5	40	69	130	6	31.09
관악구	11,115	3,748.5	6,215	3,107.5	86	148	385	22	33.72
서초구	7,657	2,249.0	4,068	2,034.0	63	48	104	0	29.37
강남구	8,990	2,937.0	4,990	2,495.0	101	45	288	8	32.67
송파구	14,354	5,025.5	8,671	4,335.5	99	123	456	12	35.01
강동구	12,244	4,180.0	7,228	3,614.0	107	116	326	17	34.14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16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금정구가 37.43%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30.04%로 가장 낮았다.

〈표 13-3-98〉 부산광역시의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계	73,991	25,790.5	45,981	22,990.5	633	750	1,375	42	34.86
중구	931	284.0	456	228.0	33	6	17	0	30.50
서구	1,975	670.5	1,077	538.5	11	38	83	0	33.95
동구	1,941	620.5	1,047	523.5	3	33	61	0	31.97
영도구	2,441	779.5	1,383	691.5	10	34	44	0	31.93
부산진구	6,635	2,414.5	4,419	2,209.5	62	57	86	0	36.39
동래구	5,579	1,891.5	3,441	1,720.5	66	35	70	0	33.90
남구	5,931	1,964.0	3,502	1,751.0	64	83	64	2	33.11
북구	7,078	2,625.0	4,790	2,395.0	88	65	69	8	37.09
해운대구	9,103	3,134.0	5,732	2,866.0	45	71	138	14	34.43
사하구	8,551	2,922.5	5,141	2,570.5	58	87	204	3	34.18
금정구	4,812	1,801.0	3,010	1,505.0	37	50	201	8	37.43
강서구	1,819	546.5	999	499.5	16	31	0	0	30.04
연제구	3,928	1,354.5	2,501	1,250.5	37	28	39	0	34.48
수영구	3,356	1,198.5	2,087	1,043.5	62	41	52	0	35.71
사상구	5,693	2,144.5	3,819	1,909.5	10	66	159	0	37.67
기장군	4,218	1,439.5	2,577	1,288.5	31	25	88	7	34.1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8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달성군이 36.63%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30.86%로 가장 낮았다.

〈표 13-3-99〉 대구광역시의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계	66,795	23,029.0	39,450	19,725.0	778	716	1,693	117	34.48
중구	1,594	496.5	877	438.5	9	12	34	3	31.15
동구	9,147	3,006.0	5,418	2,709.0	48	78	168	3	32.86
서구	6,156	1,969.5	3,131	1,565.5	50	149	197	8	31.99
남구	3,578	1,104.0	1,762	881.0	99	37	78	9	30.86
북구	14,133	4,925.0	8,688	4,344.0	200	122	259	0	34.85
수성구	9,358	3,204.0	5,424	2,712.0	125	43	286	38	34.24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달서구	16,660	6,064.5	10,265	5,132.5	187	170	527	48	36.40
달성군	6,169	2,259.5	3,885	1,942.5	60	105	144	8	36.6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10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연수구가 37.06%로 가장 높았고, 옹진군이 26.10%로 가장 낮았다.

〈표 13-3-100〉 인천광역시의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계	79,751	26,767.5	47,527	23,763.5	543	877	1,556	28	33.56
중구	2,931	1,011.0	1,768	884.0	22	26	79	0	34.49
동구	2,070	748.5	1,373	686.5	14	23	25	0	36.16
남구	10,828	3,372.0	5,952	2,976.0	68	136	191	1	31.14
연수구	7,316	2,711.0	4,662	2,331.0	72	72	234	2	37.06
남동구	14,947	5,131.0	9,190	4,595.0	103	140	289	4	34.33
부평구	15,168	5,120.5	8,867	4,433.5	115	163	399	10	33.76
계양구	10,639	3,255.0	5,950	2,975.0	68	104	103	5	30.59
서구	14,563	5,034.5	9,097	4,548.5	69	175	236	6	34.57
강화군	994	307.0	524	262.0	10	35	0	0	30.89
옹진군	295	77.0	144	72.0	2	3	0	0	26.1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5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서구가 38.08%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30.93%로 가장 낮았다.

〈표 13-3-101〉 광주광역시의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	(①)×0.5 (②)					
계	53,378	17,804.5	31,001	15,500.5	423	475	1,312	94	33.36
동구	2,321	718.0	1,182	591.0	47	32	44	4	30.93
서구	9,501	3,618.0	6,108	3,054.0	98	61	400	5	38.08
남구	6,007	2,066.0	3,488	1,744.0	75	75	171	1	34.39
북구	14,844	4,800.0	8,362	4,181.0	62	123	362	72	32.34
광산구	20,705	6,602.5	11,861	5,930.5	141	184	335	12	31.8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대전광역시 5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서구가 38.42%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34.38%로 가장 낮았다.

〈표 13-3-102〉 대전광역시의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계	48,432	17,936.5	30,809	15,404.5	249	394	1,818	71	37.03
동구	8,564	2,944.0	4,996	2,498.0	39	102	300	5	34.38
중구	7,077	2,564.5	4,409	2,204.5	61	59	239	1	36.24
서구	14,748	5,666.5	9,771	4,885.5	67	82	583	49	38.42
유성구	11,589	4,288.0	7,658	3,829.0	44	53	350	12	37.00
대덕구	6,454	2,473.5	3,975	1,987.5	38	98	346	4	38.33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울산광역시 5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북구가 37.16%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33.03%로 가장 낮았다.

〈표 13-3-103〉 울산광역시의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계	33,800	11,974.5	21,269	10,634.5	366	430	532	12	35.43
중구	5,338	1,763.0	3,198	1,599.0	46	75	43	0	33.03
남구	8,581	2,984.0	5,388	2,694.0	37	101	150	2	34.77
동구	5,872	2,026.5	3,659	1,829.5	58	88	51	0	34.51
북구	7,527	2,797.0	4,936	2,468.0	136	67	119	7	37.16
울주군	6,482	2,404.0	4,088	2,044.0	89	99	169	3	37.09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연천군이 40.67%로 가장 높았고, 양평군이 29.24%로 가장 낮았다.

〈표 13-3-104〉 경기도의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계	392,515	137,216.0	238,868	119,434.0	2,239	4,367	10,656	520	34.96
수원시	33,786	12,271.0	22,034	11,017.0	140	296	775	43	36.32
성남시	22,850	7,505.0	13,294	6,647.0	187	278	384	9	32.84
고양시	27,841	10,521.0	18,058	9,029.0	215	196	970	111	37.79
부천시	21,421	7,618.0	12,840	6,420.0	170	318	695	15	35.56
안양시	16,381	4,969.0	9,938	4,969.0	0	0	0	0	30.33
안산시	24,023	9,007.5	14,539	7,269.5	206	511	968	53	37.50
용인시	32,539	11,261.0	20,728	10,364.0	204	202	460	31	34.61
의정부시	14,951	5,658.0	9,386	4,693.0	84	106	693	82	37.84
남양주시	22,911	7,604.5	13,507	6,753.5	80	163	604	4	33.19
평택시	14,485	4,883.0	8,618	4,309.0	48	186	335	5	33.71
광명시	10,841	3,918.5	6,935	3,467.5	37	115	298	1	36.15
시흥시	14,660	5,028.5	8,315	4,157.5	79	273	512	7	34.30
군포시	8,888	3,320.0	5,714	2,857.0	76	75	312	0	37.35
화성시	21,993	7,993.0	14,052	7,026.0	105	242	591	29	36.34
파주시	15,410	5,164.5	9,273	4,636.5	53	185	270	20	33.51
이천시	8,112	2,492.0	4,244	2,122.0	32	102	211	25	30.72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구리시	5,245	1,931.0	3,324	1,662.0	53	47	169	0	36.82
김포시	9,690	3,614.0	6,434	3,217.0	37	125	235	0	37.30
포천시	5,409	1,923.0	2,736	1,368.0	48	107	389	11	35.55
광주시	11,579	3,656.0	6,296	3,148.0	81	185	234	8	31.57
안성시	7,703	2,682.5	4,545	2,272.5	51	103	252	4	34.82
하남시	4,860	1,600.5	2,877	1,438.5	21	57	84	0	32.93
의왕시	5,124	1,750.0	3,080	1,540.0	51	29	129	1	34.15
양주시	9,255	3,093.5	5,271	2,635.5	36	128	252	42	33.43
오산시	7,641	2,928.0	5,034	2,517.0	75	78	248	10	38.32
여주군	3,117	954.5	1,725	862.5	7	62	21	2	30.62
양평군	2,543	743.5	1,203	601.5	11	54	77	0	29.24
동두천시	3,958	1,364.5	2,199	1,099.5	28	44	186	7	34.47
과천시	2,367	741.5	1,101	550.5	18	14	159	0	31.33
가평군	1,646	496.0	808	404.0	3	62	27	0	30.13
연천군	1,286	523.0	760	380.0	3	24	116	0	40.6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영월군이 36.23%로 가장 높았고, 철원군이 24.70%로 가장 낮았다.

〈표 13-3-105〉 강원도의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계	46,007	14,429.0	24,332	12,166.0	211	754	1,125	173	31.36
춘천시	9,299	2,932.5	4,953	2,476.5	41	121	261	33	31.54
원주시	11,072	3,935.5	6,469	3,234.5	76	160	394	71	35.54
강릉시	6,854	2,044.0	3,428	1,714.0	47	48	198	37	29.82
동해시	2,843	899.0	1,576	788.0	15	15	81	0	31.62
태백시	1,309	307.5	581	290.5	0	17	0	0	23.49
속초시	2,818	847.0	1,474	737.0	8	14	67	21	30.06
삼척시	1,543	464.0	840	420.0	12	22	6	4	30.07
홍천군	1,715	512.0	902	451.0	2	50	9	0	29.85
횡성군	1,115	360.5	539	269.5	2	78	11	0	32.33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영월군	668	242.0	312	156.0	0	35	51	0	36.23
평창군	869	236.5	417	208.5	1	20	0	7	27.22
정선군	752	252.0	354	177.0	0	40	35	0	33.51
철원군	1,727	426.5	763	381.5	3	34	8	0	24.70
화천군	665	216.0	416	208.0	1	7	0	0	32.48
양구군	726	177.5	295	147.5	2	28	0	0	24.45
인제군	877	247.5	463	231.5	0	16	0	0	28.22
고성군	685	181.5	299	149.5	1	31	0	0	26.50
양양군	470	147.5	251	125.5	0	18	4	0	31.3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충청북도 12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옥천군이 36.12%로 가장 높았고, 청원군이 27.48%로 가장 낮았다.

〈표 13-3-106〉 충청북도의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계	51,467	16,147.5	26,921	13,460.5	244	887	1,520	36	31.37
청주시	24,889	7,827.5	13,297	6,648.5	145	174	827	33	31.45
충주시	5,968	1,994.0	3,114	1,557.0	32	116	286	3	33.41
제천시	3,364	1,189.5	1,817	908.5	3	76	202	0	35.36
청원군	6,343	1,743.0	3,094	1,547.0	37	110	49	0	27.48
보은군	541	176.5	287	143.5	0	33	0	0	32.62
옥천군	1,210	437.0	676	338.0	16	63	20	0	36.12
영동군	867	273.0	464	232.0	4	31	6	0	31.49
증평군	1,452	427.0	712	356.0	2	27	42	0	29.41
진천군	2,415	719.0	1,174	587.0	1	88	43	0	29.77
괴산군	621	187.5	309	154.5	1	32	0	0	30.19
음성군	3,065	916.0	1,616	808.0	3	92	13	0	29.89
단양군	732	257.5	361	180.5	0	45	32	0	35.18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충청남도 15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계룡시가 39.72%로 가장 높았고, 태안군이 26.20%로 가장 낮았다.

〈표 13-3-107〉 충청남도의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계	67,626	22,038.0	37,274	18,637.0	414	1,403	1,506	78	32.59
천안시	19,655	6,601.5	11,941	5,970.5	127	195	278	31	33.59
공주시	2,947	1,021.5	1,673	836.5	35	106	44	0	34.66
보령시	2,673	912.5	1,449	724.5	20	60	105	3	34.14
아산시	14,266	5,024.0	8,264	4,132.0	76	197	580	39	35.22
서산시	5,800	1,697.5	3,025	1,512.5	27	104	54	0	29.27
논산시	4,116	1,242.5	1,895	947.5	25	159	111	0	30.19
계룡시	1,503	597.0	918	459.0	6	6	126	0	39.72
당진시	6,630	1,882.0	3,270	1,635.0	39	167	41	0	28.39
금산군	1,402	425.0	644	322.0	5	98	0	0	30.31
부여군	1,613	500.5	773	386.5	5	109	0	0	31.03
서천군	1,347	438.0	654	327.0	11	43	57	0	32.52
청양군	591	230.5	353	176.5	2	27	25	0	39.00
홍성군	2,094	656.5	1,013	506.5	23	59	68	0	31.35
예산군	1,573	438.0	768	384.0	3	39	12	0	27.84
태안군	1,416	371.0	634	317.0	10	34	5	5	26.2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전라북도 14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정읍시가 38.96%로 가장 높았고, 장수군이 28.32%로 가장 낮았다.

〈표 13-3-108〉 전라북도의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계	60,401	21,450.0	34,270	17,135.0	362	1,284	2,500	169	35.51
전주시	23,509	8,529.5	14,309	7,154.5	106	169	1,010	90	36.28
군산시	9,807	3,131.0	5,344	2,672.0	84	131	215	29	31.93
익산시	9,493	3,567.5	5,607	2,803.5	99	180	485	0	37.58
정읍시	3,876	1,510.0	2,098	1,049.0	22	110	280	49	38.96
남원시	3,095	1,026.5	1,467	733.5	18	107	167	1	33.17
김제시	2,382	907.0	1,326	663.0	15	103	126	0	38.08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완주군	3,186	1,034.5	1,619	809.5	9	111	105	0	32.47
진안군	426	152.5	211	105.5	1	46	0	0	35.80
무주군	610	187.5	279	139.5	0	34	14	0	30.74
장수군	475	134.5	191	95.5	0	39	0	0	28.32
임실군	538	189.0	258	129.0	3	57	0	0	35.13
순창군	651	238.5	311	155.5	0	61	22	0	36.64
고창군	1,250	436.0	620	310.0	4	90	32	0	34.88
부안군	1,103	406.0	630	315.0	1	46	44	0	36.8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전라남도 22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완도군이 38.80%로 가장 높았고, 영광군이 27.39%로 가장 낮았다.

〈표 13-3-109〉 전라남도의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계	56,481	18,329.0	29,290	14,645.0	547	1,609	1,504	24	32.45
목포시	10,493	3,333.0	5,764	2,882.0	118	72	256	5	31.76
여수시	8,604	2,529.0	4,186	2,093.0	152	149	135	0	29.39
순천시	9,262	3,018.0	4,994	2,497.0	77	165	269	10	32.58
나주시	2,197	830.5	1,121	560.5	31	120	113	6	37.80
광양시	6,583	2,083.0	3,474	1,737.0	67	97	182	0	31.64
담양군	739	267.5	395	197.5	0	47	23	0	36.20
곡성군	707	234.0	350	175.0	0	50	9	0	33.10
구례군	574	184.5	277	138.5	1	18	27	0	32.14
고흥군	1,255	424.5	567	283.5	3	121	17	0	33.82
보성군	802	301.0	372	186.0	2	62	51	0	37.53
화순군	2,525	922.5	1,311	655.5	3	63	201	0	36.53
장흥군	784	279.0	412	206.0	0	42	28	3	35.59
강진군	978	288.5	437	218.5	15	55	0	0	29.50
해남군	1,750	611.0	882	441.0	16	108	46	0	34.91
영암군	2,003	660.5	1,015	507.5	39	77	37	0	32.98
무안군	2,083	703.0	1,218	609.0	16	50	28	0	33.75
함평군	655	219.0	310	155.0	0	64	0	0	33.44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 (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영광군	1,296	355.0	576	288.0	1	58	8	0	27.39
장성군	905	259.0	402	201.0	0	56	2	0	28.62
완도군	1,129	438.0	654	327.0	4	47	60	0	38.80
진도군	660	223.5	325	162.5	0	59	2	0	33.86
신안군	497	165.0	248	124.0	2	29	10	0	33.20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상북도 23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상주시가 45.96%로 가장 높았고, 울진군이 26.13%로 가장 낮았다.

〈표 13-3-110〉 경상북도의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계	77,010	28,699.5	46,919	23,459.5	698	1,800	2,556	186	37.27
포항시	17,127	7,030.0	11,512	5,756.0	207	215	751	101	41.05
경주시	7,531	2,673.0	4,302	2,151.0	128	246	139	9	35.49
김천시	3,564	1,510.0	2,266	1,133.0	66	102	203	6	42.37
안동시	3,870	1,184.0	2,056	1,028.0	5	113	38	0	30.59
구미시	15,533	5,936.5	10,313	5,156.5	147	161	464	8	38.22
영주시	2,642	847.5	1,397	698.5	11	97	41	0	32.08
영천시	2,177	795.5	1,149	574.5	9	97	115	0	36.54
상주시	1,696	779.5	1,143	571.5	4	91	106	7	45.96
문경시	1,481	550.5	881	440.5	0	50	57	3	37.17
경산시	8,579	3,182.0	5,334	2,667.0	78	123	296	18	37.09
군위군	205	67.0	78	39.0	2	26	0	0	32.68
의성군	796	250.5	341	170.5	2	51	27	0	31.47
청송군	362	113.5	185	92.5	1	20	0	0	31.35
영양군	224	65.0	90	45.0	0	20	0	0	29.02
영덕군	761	217.0	346	173.0	1	38	5	0	28.52
청도군	618	244.0	350	175.0	1	54	14	0	39.48
고령군	831	279.5	425	212.5	1	36	26	4	33.63
성주군	728	258.0	352	176.0	1	63	18	0	35.44
칠곡군	5,384	1,860.0	3,100	1,550.0	29	55	196	30	34.55
예천군	961	320.0	470	235.0	2	83	0	0	33.30
봉화군	517	162.0	248	124.0	1	26	11	0	31.33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울진군	1,322	345.5	531	265.5	2	29	49	0	26.13
울릉군	101	29.0	50	25.0	0	4	0	0	28.71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경상남도 18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함안군이 44.83%로 가장 높았고, 하동군이 30.86%로 가장 낮았다.

〈표 13-3-111〉 경상남도의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계	108,931	40,783.0	67,222	33,611.0	735	1,884	4,235	318	37.44
창원시	34,134	13,116.0	21,500	10,750.0	258	368	1,669	71	38.43
진주시	12,501	4,459.0	6,814	3,407.0	85	259	633	75	35.67
통영시	4,505	1,490.0	2,656	1,328.0	11	72	79	0	33.07
사천시	4,980	1,608.0	2,874	1,437.0	29	96	46	0	32.29
김해시	21,454	8,630.5	14,695	7,347.5	163	241	781	98	40.23
밀양시	2,817	1,189.0	1,686	843.0	17	102	225	2	42.21
거제시	7,750	2,584.0	4,742	2,371.0	72	113	28	0	33.34
양산시	10,411	3,889.0	6,676	3,338.0	67	126	290	68	37.35
의령군	471	188.5	257	128.5	0	26	34	0	40.02
함안군	1,711	767.0	1,146	573.0	9	56	125	4	44.83
창녕군	1,187	406.5	675	337.5	4	51	14	0	34.25
고성군	1,393	454.5	715	357.5	1	45	51	0	32.63
남해군	831	286.5	385	192.5	3	55	36	0	34.48
하동군	1,058	326.5	475	237.5	3	57	29	0	30.86
산청군	750	242.0	354	177.0	3	62	0	0	32.27
함양군	777	340.0	430	215.0	0	50	75	0	43.76
거창군	1,590	586.5	833	416.5	9	64	97	0	36.89
합천군	611	219.5	309	154.5	1	41	23	0	35.92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평가 산출식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서귀포시가 43.97%로 제주시 33.90%보다 높았다.

〈표 13-3-112〉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A)	취약보육 이용 아동수(B)							(B/A) ×100
		계(B)= ②+③+ ④+⑤+⑥	영아보육 이용 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③)	다문화 유아 보육 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수 (⑤)	휴일 보육 이용 수 (⑥)	
			실제 이용수 (①)	조정계수 적용 이용수 (①)×0.5 (②)					
계	26,894	9,784.0	14,460	7,230.0	206	319	1,588	441	36.38
제주시	20,278	6,875.0	11,062	5,531.0	177	205	827	135	33.90
서귀포시	6,616	2,909.0	3,398	1,699.0	29	114	761	306	43.97

주: 광역지자체 실적은 기초지자체 실적의 합.



제14장 복지정책평가 8개년 성과와 정책제언

제1절 복지정책평가 8개년 성과

제2절 정책제언

제1절 복지정책평가 8개년 성과

1. 복지종합평가의 전반적 결과

복지종합평가의 전반적 결과를 전체 지자체의 평균점수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2006년 56.67점→2007년 63.15점→2008년 64.50점→2009년 67.70점→2010년 67.12점→2011년 65.66점→2012년 68.81점→2013년 71.7점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연도별로 다소의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평가결과는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3년의 평가결과는 복지종합평가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70점대에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그림 3-1 참조).

전체 지자체 평가결과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향상되었지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는 현저하였다. 즉, 100점 기준 2006년의 격차는 30.95%pt이었고, 2013년에도 34.17%pt로 격차가 오히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평가결과의 향상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력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14-1〉 지자체간 복지종합평가결과의 격차

(단위: 점)

영역	2006			2013		
	최고	최저	격차(최고-최저)	최고	최저	격차(최고-최저)
총점	72.13	41.18	30.95	90.37	56.20	34.17

주: 100점 기준 환산

자료: 2006년 및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재분석.

2. 복지기반조성의 성과

전국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선택형+지역개발형)의 배정액은 2011년 1,865억 8,820만 5천원에서 2012년 1,878억 91만 5천원으로 증가하였고, 집행액은 같은 기간에 1,682억 2,556만 7천원에서 1,748억 3,180만 7천원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예산 집행률은 2011년 90.16%에서 2012년 93.09%로 다소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14-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선택형+지역개발형)의 배정액, 집행액, 집행률
(단위: 천원, %)

	2011	2012
배정액	186,588,205	187,800,915
집행액	168,225,567	174,831,807
집행률	90.16	93.09

자료: 2012~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2010년 86명, 2011년 57명, 2012년 119명으로 최근에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지자체 수를 고려한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은 2010년 37.39%에서 2012년 51.97%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민간상근간사의 역할을 고려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4-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

(단위: 개, %)

	2010	2011	2012
배치 지자체 수	86	57	119
지자체 수(B)	230	230	229
배치율	37.39	24.78	51.97

자료: 2011~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민간복지자원의 하나인 기부식품의 총액은 2008년 370억 6,797만 6천원→2009년 520억 5,800만 5천원→2010년 603억 1,967만원→2011년 782억 2,237만 6천

원→2012년 928억 7,827만 8천원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기부식품 총액의 증가로 인하여 배분식품, 기부식품 이용자 및 제공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통계활용이 가능한 2010~2012년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배분식품 등 총액은 2010년 624억 897만 2천원→2011년 865억 4,746만 8천원→2012년 1,044억 8,080만 4천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기부식품 이용자수는 217,710명→256,958명→301,795명으로 증가하였고, 기부식품 제공건수는 3,158, 968건→4,074,378건→5,503,030건으로 증가하였다.

〈표 14-4〉 기부식품 총액 및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건)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기부식품 총액	37,067,976	52,058,005	60,319,670	78,222,376	92,878,278
기부식품 이용실적					
- 배분식품 등 총액	-	-	62,408,972	86,547,468	104,480,804
- 기부식품 이용자수	-	-	217,710	256,958	301,795
- 기부식품 제공건수	-	-	3,158,968	4,074,378	5,503,030

주: 당해연도의 통계는 익년도에 다소 변경(증가)되는 경우가 있음.

자료: 2009~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3. 기초생활보장의 성과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수는 2008년 184,289명→2009년 226,145명→2010년 224,889명→2011년 113,677명→2012년 136,679명으로 다소 등락을 보였다. 총 수급자 대비 신규 수급자수는 2008년 12.76%→2009년 15.22%→2010년 15.42%→2011년 7.74%→2012년 9.83%의 변화를 보였다.

〈표 14-5〉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수 및 발굴실적

(단위: 명, %)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신규수급자 수	184,289	226,145	224,889	113,677	136,679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12.76	15.22	15.42	7.74	9.83

주: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은 “(신규 수급자수/총 수급자수)*100”로 산출

자료: 2009~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재분석.

2011~2012년 기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수는 2011년 879,663가구, 2012년 6,128,161가구로 증가하였고,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는 같은 기간에 238,904건에서 700,370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점관리 소득 감소건수도 같은 기간에 640,759건에서 676,270건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4-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건, 가구)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수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 감소건수
2011	879,663	238,904	640,759
2012	6,128,161	700,370	676,270

자료: 2012~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재분석.

긴급복지지원 총 결정가구수는 2008년 27,426가구→2009년 93,693가구→2010년 45,223가구→2011년 41,924가구→2012년 38,838가구로 2009년 이후 감소하였다. 따라서 긴급지원 신청건수와 비교한다면 지원결정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14-7〉 긴급복지지원실적 결정가구수

(단위: 가구)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긴급지원 신청건수	-	-	55,607	57,812	45,429
총 결정건수	27,426	93,693	45,223	41,924	38,838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	-	-	-	-	13,971
타 지원 연계건수	-	-	21,553	48,435	45,722

주: 당해연도의 통계는 익년도에 다소 변경(증가)되는 경우가 있음.

자료: 2009~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재분석.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은 2009년 684억 991만 4천원→2010년 579억 3,710만 2천원→2011년 526억 7,964만 1천원→2012년 1,065억 4,640만 4천원으로 변화하였다. 이 중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 지원액은 2009년 73억 645만 5천원→2010년 30억 7,348만 6천원→2011년 116억 7,885만 9천원→2012

년 275억 9,835만 2천원으로 최근에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자활을 위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표 14-8〉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지표	2009	2010	2011	2012
생산물 우선구매액	24,349,288	3,354,724	6,511,004	9,086,419
사업 우선위탁액		18,957,939	34,489,778	69,861,633
자체예산 지원액	7,306,455	3,073,486	11,678,859	27,598,352
무상임대	36,754,171	32,550,953	—	—
계	68,409,914	57,937,102	52,679,641	106,546,404

자료: 2010~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취업성공패키지 포함)의 취·창업인원은 2008년 2,169명→2009년 2,645명→2010년 3,303명→2011년 4,817명→2012년 5,782명으로 빠른 속도의 증가를 보였다.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 대비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취·창업률은 2008년 7.93%→2009년 8.63%→2010년 10.65%→2011년 12.81%→2012년 15.19%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취·창업률은 2008~2012년 기간에 약 2배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 14-9〉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취·창업인원 및 취·창업률

(단위: 명, %)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	27,350	30,660	31,009	37,609	38,057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취·창업인원	2,169	2,645	3,303	4,817	5,782
- 취업자	—	2,163	2,956	4,399	5,352
- 창업자	—	482	347	418	430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취·창업률	7.93	8.63	10.65	12.81	15.19

자료: 2009~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취업성공패키지 포함)의 탈수급자수는 2008년 2,021명→2009년 2,446명→2010년 2,804명→2011년 4,040명→2012년 6,218명으로 빠른

속도의 증가를 보였다.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 대비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자수인 탈수급률은 2008년 7.39%→2009년 7.35%→2010년 9.08%→2011년 10.74%→2012년 16.34%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률은 2008~2012년 기간에 2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 14-10〉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자수 및 탈수급률

(단위: 명, %)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	27,350	33,271	30,896	37,609	38,057
탈수급자수	2,021	2,446	2,804	4,040	6,218
- 자활(이행)특례상향 이동자		1,096	1,446	1,795	2,713
- 수급중지자		1,350	1,358	2,245	3,505
탈수급률	7.39	7.35	9.08	10.74	16.34

자료: 2009~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전체 수급권자의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는 2007년 46.4일→2008년 47.8일→2009년 57.7일→2010년 63.3일→2011년 286.5일→2012년 295.3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또한 전체 수급권자의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는 2007년 2,329,103원→2008년 2,489,922원→2009년 2,415,074원→2010년 2,824,652원→2011년 2,942,829원→2012년 3,046,203원으로 상승하였다.

의료급여 대상 중 집중관리대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의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는 전체 수급권자의 평균 의료급여일수 보다 현저히 높았다. 그렇지만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즉, 2008년 1,129.7일→2009년 1,100.5일→2010년 1,008일→2011년 990.2일→2012년 952.0일로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는 2009~2011년 기간에는 증가하였다가 2012년에는 감소하였다. 즉, 2009년 6,702,457원→2010년 6,908,471원→2011년 7,081,220원→2012년 6,142,461원이었다.

〈표 14-11〉 전체 수급권자 및 사례관리대상자의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단위: 일,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급여일수	46.4	47.8	57.7	63.3	286.5	295.3
	1인당 평균 진료비	2,329,103	2,489,922	2,415,074	2,824,652	2,942,829	3,046,203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 급여일수	-	1,129.7	1,100.5	1,008	990.2	952.0
	1인당 평균 진료비	-	-	6,702,457	6,908,471	7,081,220	6,142,461

주: 당해연도의 통계는 익년도에 다소 변경(증가)되는 경우가 있음.

자료: 2008~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4. 복지서비스의 성과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수는 2011년 62,231명, 2012년 51,345명이었다. 수급가능자수 대비 수급자수의 비율인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은 2011년 22.53%, 2012년 24.19%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14-12〉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단위: 명, %)

	신규 수급자수(A)	수급가능자수(B)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A/B)×100
2011	62,231	276,267	22.53
2012	51,345	212,242	24.19

자료: 2012~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10인 이상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 직업훈련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토록 되어 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법정배치인원은 2010년 236명, 2011년 233명, 2012년 247명이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실배치인원은 2010년 144명, 2011년 227명, 2012년 252명이었다. 따라서 법정배치인원 대비 실배치인원의 비율인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은 2010년 61.02%→2011년 97.43%→2012년 102.02%로 크게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14-13〉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단위: 명, %)

	실배치인원(A)	법정배치인원(B)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A/B)×100
2010	144	236	61.02
2011	227	233	97.43
2012	252	247	102.02

자료: 2011~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지원금(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적립액)은 2010년 8,183,993,044원, 2011년 9,685,273,352원, 2012년 11,346,123,768원으로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수는 2010년 363,178명, 2011년 419,957명, 2012년 478,117명으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은 2010년 22,534원→2011년 23,063원→2012년 23,731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14-14〉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단위: 원, 명)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①)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②)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①/②)
2010	8,183,993,044	363,178	22,534
2011	9,685,273,352	419,957	23,063
2012	11,346,123,768	478,117	23,731

주: 당해연도의 통계는 익년도에 다소 변경(감소)되는 경향이 있음.

자료: 2011~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은 영유아보육시설은 2008년 5,380개소, 2009년 7,555개소, 2010년 5,797개소, 2011년 6,515개소, 2012년 6,237개소였다. 전체 평가인증 보육시설은 2010년 23,250개소로 가장 많았고, 2012년에는 21,332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5〉 평가인증 영유아보육시설

(단위: 개)

	전체 보육시설 수(A)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B)	당해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C)
2008	33,164	9,925	5,380
2009	33,499	17,479	7,555
2010	35,551	23,250	5,797
2011	37,825	18,591	6,515
2012	39,600	21,332	6,237

자료: 2009~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취약보육은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 영유아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휴일보육 등을 의미한다. 취약보육서비스 중에서 영아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시간연장형 보육이었으며, 최근에는 다문화 영유아보육이 장애아보육을 상회하고 있다. 취약보육서비스 이용 아동은 2008년 535,092명, 2009년 614,908명, 2010년 749,320명, 2011년 1,348,729명, 2012년 1,482,814명이었다.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 대비 취약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비율인 취약보육시설 이용률은 2008년 47.12%→2009년 52.34%→2010년 58.54%→2011년 60.47%→2012년 63.96%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표 14-16〉 취약보육시설 이용 아동

(단위: 명, %)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	1,135,503	1,174,907	1,279,909	1,348,729	1,482,814
취약보육시설 이용 아동	535,092	614,908	749,320	815,597	948,419
- 영아보육 이용수	501,888	572,532	686,255	739,332	874,499
- 장애아보육이용수	15,530	12,086	12,045	11,768	10,230
- 다문화 영유아보육이용수	-	10,020	11,100	16,808	20,028
-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수	17,630	19,796	36,619	44,914	41,064
- 휴일보육 이용수	44	474	3,301	2,775	2,598
취약보육시설 이용률	47.12	52.34	58.54	60.47	63.96

자료: 2009~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제2절 정책제언

1. 평가방식에 대한 정책제언

2013년 복지종합평가는 2009~2012년에 실시된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의 시도 합동평가 자료 중 복지분야 자료에 근거하여 시·군·구별로 분석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복지분야에 대한 평가지표의 충분성과 질적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2012년과 마찬가지로 2013년에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민관협력 등), 조례제정, 지역복지실행계획, 주요 분야별 사업 등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평가가 다원화되었음은 복지종합평가에서의 ‘종합’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평가지표에 의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되었던 2006~2008년 기간에 실시되었던 평가방식이 안전행정부의 시도 합동평가에 흡수되어 간접평가로 변경되면서 지표의 충분성에서의 문제점과 질적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의 의미를 되찾아 진정한 ‘종합평가’가 되고 지역사회복지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한다.

첫째, 지역사회복지종합평가는 안전행정부 합동평가의 복지평가, 복지재정 및 복지인력 평가, 자체 특화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중점사업 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한다.

이는 [그림 14-1]과 같이 제시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김승권 외, 2012 참조).

“안전행정부 합동평가의 복지분야 평가”는 현재의 복지종합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며, 이 평가는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서 30%의 비중을 둔다. “복지재정 및 복지인력 평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계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 평가는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서 10%의 비중을 둔다.

“자체 특화사업 평가”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특화사업으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하며, 필요시 현장평가를 병행한다. 지나치게 많은 자체 특화사업이 제출될 수 있으므로 한 지자체 당 가장 우수한 자체 특화사업으로 최고 3개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산사업 뿐만 아니라 비예산사업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서 30%의 비중을 둔다.

“보건복지부 중점사업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 중에서 각 분야별 1개의 중점 복지사업(전체 6개 이내)을 결정하여 제출된 서류 또는 사통망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필요시 현장평가를 병행한다. 이 평가는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서 20%의 비중을 둔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전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매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년도의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적용토록 한다. 예를 들면, 한 지자체에 평가대상년도에 평가를 받은 시설이 3개가 있다면, 이들 시설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다만, 평가대상시설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4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손익(損益)이 없도록 한다.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서 10%의 비중을 둔다.

[그림 14-1]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방식



둘째,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자체 특화사업 평가”와 “보건복지부 중점사업 평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를 평가하고, 중앙에서는 시도별 1~2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하여 직접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체 지자체에 적용토록 한다.

“자체 특화사업 평가”와 “보건복지부 중점사업 평가”는 질적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 결과의 신뢰도 확보와 평가수행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기초 지자체(최고 30여 기관)를 대상으로 직접 평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선정된 기초 지자체에 대한 평가결과는 선정되지 않은 기초 지자체의 광역 지자체 평가결과에 반영한다. 이와 같은 평가방식은 광역 지자체의 평가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광역 지자체에 평가업무를 위임하는 전제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2. 평가지표에 대한 정책제언

가. 복지기반조성 영역의 정책제언

복지기반조성 영역의 민간복지자원 및 지역사회서비스 기반확충과 관련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민간복지자원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의 재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구 만명당 법정민간복지종사자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업안정성(이직률) 및 급여수준,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충분성, 사회복지생활시설 설치율 등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지표는 지역복지협의체의 민간 상근간사 배치율과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기부식품 증가율 및 이용실적)에 의해 평가되었다.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이들 세부지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 않게 또는 이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간복지자원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지표로서 민간간사의 상근자격 및 공개채용 여부, 민간상근간사의 역할 충실도, 인구 만명당 법정민간복지종사자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업안정성(이직률) 및 급여수준,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충분성, 사회복지생활시설 설치율 등을 제안한다. 특히, 인구 만명당 법정민간복지종사자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업안정성(이직률) 및 급여수준,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충분성, 사회복지생활시설 설치율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민간상근간사의 배치 여부에 의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민간상근간사의 자격 및 공개채용 여부, 역할 강화, 신분안정 등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3년 민간상근간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급간사이어야 하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민생안정요원, 자활근로요원, 주민생활지원협의회 간사는 제외하며, 기간제 근로자(1년 미만의 경우)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배치된 것으로 인정된다(단, 사무보조' 명목으로 채용한 경우는 불인정).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로 임명하고,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겸임시는 인정되지만, 사회복지협의체 간사로 임명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겸임시는 불인정된다. 2012.7.1 이후 채용하여 2013년까지 6개월 이상 계속 채용사실 확인시 인정된다. 그렇지만 민간상근간사의 자격 수준 및 공개채용 여부, 역할 충실도, 신분안정 등 질적 측면, 역할 강화, 사기진작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한 아쉬운 측면이 있다.

셋째, 세부 평가지표인 기부식품에 대한 평가기준을 “인구 1인당 기부식품 모금 및 이용 금액”으로 함으로써 지자체의 인구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부 평가지표로서 기부식품을 선정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적 및 이용의 증가율에 의한 평가는 피평가기관에 심한 부담감을 주게 되며, 심지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즉, 전년도 기부식품 모집 및 이용이 우수한 지자체에게는 불합리하며, 평가지표에 적응하기 위해 기부식품의 모집 및 이용을 특정연도에 집중시키는 부작용도 발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인구규모 편차가 매우 큰 현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당해연도의 금액이 아닌 최근 3년간 평균 변화율에 의해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많은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사업과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을 (선택형, 개발형)과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과 지자체의 역할의 증대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평가지표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지역단위의 특화사업과 민관협력사업의 중요성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복지가 적극 고려되어야 하고, 증대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복지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정책제언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기초보장, 자활사업, 의료급여와 관련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향후 기초보장제도 개편 속에서 자활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근로능력 가구들의 탈수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자활사업 평가시 이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전산망 확충과 소득 및 자산조사 등이 강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수급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평가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난 3년간 신규수급자수(744명)에 비해 금번 평가의 신규수급자 규모가 감소(597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초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 취지를 고려할 경우 신규수급자 발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급가구들이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위해 도입된 제도가 이행급여 특례제도이지만 아직 그 규모나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긴급복지제도의 평가에서 의료지원이외 다른 지원건수에 대한 비중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 혹은 수급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자산조사 과정을 거치며 일정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긴급복지제도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주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랜 기간 기초보장제도 평가의 주요항목으로서 평가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긴급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대부분의 긴급지원이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지원이외의 생계 및 주거 등에 대한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를 생각하고 수급자들의 권리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이 개발되고 함께 평가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들은 수요자 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평가지표로 구성되고 이를 평가해 왔다.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긴급복지지원 실적 정도가 기초보장 수요자 발굴에 중심을 둔 지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초보장제도의 기본 취지는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권리성 측면에서 신규수급자 발굴과 더불어 신청자 및 탈락자 규모, 기존 수급에서 탈락이후 다시 수급자로 들어온 규모,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급여이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제도적 측면, 수급자들에 대한 상담,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등에 대한 것들이 지표로서 포함되어 활용됨으로써 수급자들의 권리성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일선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경제의 주요한 한 축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크므로 이와 관련된 평가지표들이 자활사업 평가지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활사업은 기초보장제도의 주요한 한 축으로서 수급자 및 그 가구들이 지속빈곤에 빠지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여전히 목적에 비해 그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평가결과와 사례를 통해 보면 전반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점수는 향상 되고 있지만, 규모면(수급자 참여와 인프라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일을 통한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자활사업을 새롭게 개편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신정부들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존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협동과 협력 중심이 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향후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도 변화를 연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 평가지표이외에 추가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자활사업 속에 어떻게 활용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분석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즉 단순 취·창업률,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이외에 사회적 경제로서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실적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제안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정부의 일방적 지원을 통해서는 탈수급과 일자리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복지 확대를 위해 자활 기관들의 적극적 참여와 프로그램 개발속에서 이를 지방정부가 지원해주는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낮은 자활사업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대도시의 기존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개선이 요구된다.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는 오랜 기간 큰 변화 없이 주요 평가지표로서 탈수급률, 취·창업률, 자활공동체 지원 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어 왔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보면, 자활사업의 실적은 향상되고 있지만 그 참여규모는 여전히 낮다는 점과 일자리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치 갖추어진 도시지역의 자활사업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섯째, 의료급여 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평가에서 대도시가 농어촌 지자체들에 비해 낮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강화되어야 하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비해 대도시의 지자체들이 의료급여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의료시설 및 인력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의료 접근성측

면에서 농어촌에 비해 유리하다는 점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관리가 농어촌에 비해 도시 지역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평가에서는 농어촌 지자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평가에서 대도시가 농어촌 지자체들에 비해 낫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반면에 다시 검토해 보면 농어촌의 입내원일수와 진료비 증감률이 낫다는 점은 농어촌의 수급자들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를 포기하고 생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전체 평가체계에서 의료급여의 평가 비중을 높이고, 평가내용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는 기초보장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던 과거 시기와 달리 기초보장제도내에서 핵심적인 급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과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 접근과 평가가 보건의료측면이라는 점에서 복지평가에서는 그 중요성이 다소 낮게 검토되고 지표수 기초보장제도 및 자활사업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급여의 기초보장제도내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에 대한 평가내용과 그 비중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복지서비스 영역의 정책제언

복지서비스 영역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복지서비스 중요성과 투입재정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수를 증대하여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2013년 복지서비스 영역의 지표는 노인장애인복지서비스, 아동보호서비스, 보육기

반 조성 등 3개 불과하다. 또한 노인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세부지표는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개정법 시설·인력 기준 충족률(광역 지자체 대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 관리의 적절성 비율,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이고, 아동보호서비스의 세부지표는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과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율)와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이며, 보육기반조성의 세부지표는 영유아보육시설 평가 인증률과 취약보육 실시율에 국한되어 있다.

그렇지만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주민의 서비스 욕구를 고려하면 전체 평가체계에서 비중이 높지 않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비중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표수의 증가와 가중치의 상향조정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세부 평가지표는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노인보호(시설보호 및 장기요양보호)와 관련된 평가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2013년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세부 평가지표는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개정법 시설·인력 기준 충족률과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이었다. 과연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할 지표로서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노인복지를 위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소득보장, 시설보호, 장기요양보호일 것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기초연금(2014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됨), 노인보호에 대한 평가지표가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복지서비스 평가지표는 전체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 지표이어야 하며, 재가장애인서비스 수준관련 지표, 장애인 자립생활 및 고용관련 지표, 장애인 재활관련 지표, 장애인 이동권 보장관련 지표 등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2013년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세부 평가지표는 장애인연금 신규수급률 뿐이다. 물론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소득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제도만을 평가지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는 회의적이다. 전체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 지표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재가장애인서비스 수준관련 지표, 장애인 자립생활 및 고용관련 지표, 장애인 재활관련 지표, 장애인 이동권 보장관련 지표 등이 평가지표로서 활용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요보호 및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서비스의 평가지표는 전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포괄적 평가지표로 대체되어야 하며, 특히 아동권리 증진의 실천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2013년 아동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세부 평가지표는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과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율)와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이다. 이들 지표는 모두 요보호아동 또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표이며, 전체 아동의 삶의 질을 위한 지표는 배제되어 있다. 더군다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법정 배치인원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것이며, 관련 시설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 평가지표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아동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포괄적 지표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증진을 위한 아동권리교육과 아동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지표가 제외되어 있음은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한 지표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육서비스의 재정투입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가중치를 높이고, 평가지표의 산출방식을 개선해야 하며,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를 중요시하는 평가지표와 아동 안전과 관련된 평가지표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세부 평가지표는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과 취약보육 실시율이다. 그렇지만 무상보육 실시로 인하여 지자체의 전체 복지재정에서 보육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가중치 10.7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

다(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12.4, 아동보호 서비스 11.2,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 11.1,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10.5). 또한 서비스의 질이 높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많은 학부모들이 “여전히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즉,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보육시설 및 등·하원 시의 안전도 평가지표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 김승권 외(2006).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7).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10). 2009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11a). 2010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11b).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lberta ministry(2010). Health and Wellness Annual report.
- Ontario ministry 홈페이지 <http://www.mah.gov.on.ca> 에서 2013년 11월 21일 인출.

